연구보고서 14-11-2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4. 10.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 · 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0.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 구 진

〈연구 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한 선 희 본 부 장

〈참여연구자〉

권 민 경 연 구 원

김 덕 연 연 구 원

박 주 원 연 구 원

목 차

Ⅰ. 연구목적 ····· 1

Ⅱ. 연구방법 및 내용 ····· 3

Ⅲ. 관세행정 구제제도 ····· 4

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 4

2. 체약상대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 14

가. 영미권 ····· 14

(1) 미국 ····· 14

(2) 캐나다 ····· 31

(3) 호주 ····· 41

나. 유럽권 ····· 53

(1) 독일 ····· 57

(2) 네덜란드 ····· 73

(3) 영국 ····· 78

(4) 슬로바키아 ····· 83

(5) 폴란드 ····· 91

(6) 스위스 ····· 97

다. 아시아권 ····· 104

(1) 중국 ····· 108

(2) 인도 ····· 118

(3) 인도네시아 ····· 130

(4) 베트남 ····· 136

Ⅳ.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 142

1.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 142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 165

가. 영미권 ····· 166

(1) 미국 ····· 166

(2) 캐나다 ····· 185

(3) 호주 ····· 233

나. 유럽권 ····· 245

(1) 독일 ····· 245

(2) 네덜란드 ····· 257

(3) 영국 ····· 264

(4) 슬로바키아 ····· 305

(5) 폴란드 ····· 313

(6) 스위스 ····· 322

다. 아시아권 ····· 327

(1) 중국 ····· 327

(2) 인도 ····· 335

(3) 인도네시아 ····· 344

(4) 필리핀 ····· 355

Ⅴ. 결론 및 시사점 ····· 367

[부록] 기업의 FTA 사후검증 대비 현황 ·····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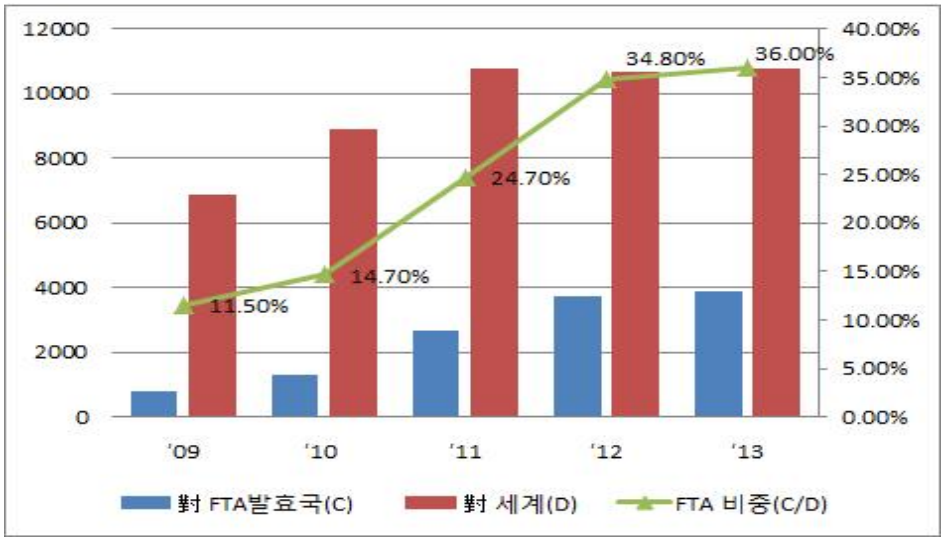
Ⅰ. 연구목적

□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4년 FTA 이행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현재 총9개의 FTA협정이 발효 중으로 점차 수출입 현장에서 FTA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교역 비중이 2009년 11.5%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36%에 달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호주, 캐나다, 중국, TPP등 FTA 확대에 따라 FTA 교역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FTA 교역비중 변화]



FTA 교역비중의 뚜렷한 증가와 더불어 협정별 FTA 활용도 역시 점차 증가하고있다. 2012~2013년 2년간 FTA 활용률은 수출 평균 64.8%, 수입 68%로 나타났다. 2013년은 전년대비 수출 4.2%, 수입 2% 증가하여 수출입 모두 FTA 활용이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단위: %)

FTA체결국	2012		2013		전년대비 증감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칠레	75.2	97.9	78.8	98.5	3.6	0.6
EFTA	79.8	61.9	80	41.4	0.2	−20.5
아세안	37.7	73.8	38.7	75.6	1	1.8
인도	36.2	52.7	42.9	61	6.7	8.3
EU	81.4	66.8	80.8	67.8	−0.6	1
페루	78	92	91.8	97.9	13.8	5.9
미국	68.9	61	76.1	67.3	7.2	6.3
터키	−	−	70	69	−	−
FTA 전체	62.7	67	66.9	69	4.2	2

FTA 활용증가에 따라 원산지검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요청은 2011년 84건, 2012년 222건, 2013년 29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FTA 원산지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수입국세관의 검증 역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협정별 연도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

(단위: 요청 건)

협 정	2011	2012	2013
한−EFTA	24	10	7
한−ASEAN	19	31	45
한−EU	41	181	238
한−터키	−	−	1
합 계	84	222	291

자료: 관세청 2014.6.3. 보도자료

원산지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수입국 세관의 검증강화는 대체로 특혜관세의 적용과 관련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수입국) 또는 수출자와 수입국 과세관청(혹은 간접검증을 담당한 수출국 세관)간 분쟁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 사후검증 확대에 따라 EU 및 미국등 주요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에서 필요한 FTA 원산지검증 업무의 효율화 및 FTA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FTA 원산지검증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수입국 세관 또는 수출자와 수입국세관이 된다. 따라서 수출입 당사자 모두가 원산지검증에 의한 분쟁당사자로서 해당국가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행정구제절차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절차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상대국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상대국의 행정구제제도 활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FTA 교역확대로 인하여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FTA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분쟁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셋째, 원산지분쟁을 대비함에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개별 서류들의 보관 실태를 파악하고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한 원산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토록 한다.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상대국은 원산지검증 요청 빈도 및 FTA 교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미국, 스위스, EU(수출실적 상위 5개국), 아세안(수출실적 3개국)과 향후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캐나다, 호주로 정한다.

Ⅲ. 관세행정 구제제도

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1) 관세 행정구제제도 의의

□ 행정구제제도의 개념

행정구제제도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산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행정구제제도에는 그 구제의 시점에 따라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가 있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구제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여부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쟁송구제와 신청과 무관하게 구제받는 직권구제로 나뉜다. 또한 사후구제제도는 그 내용에 따라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로 나뉘기도 한다.

행정쟁송제도는 그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세법상의 행정구제제도는 그 심판기관이 해당세관이나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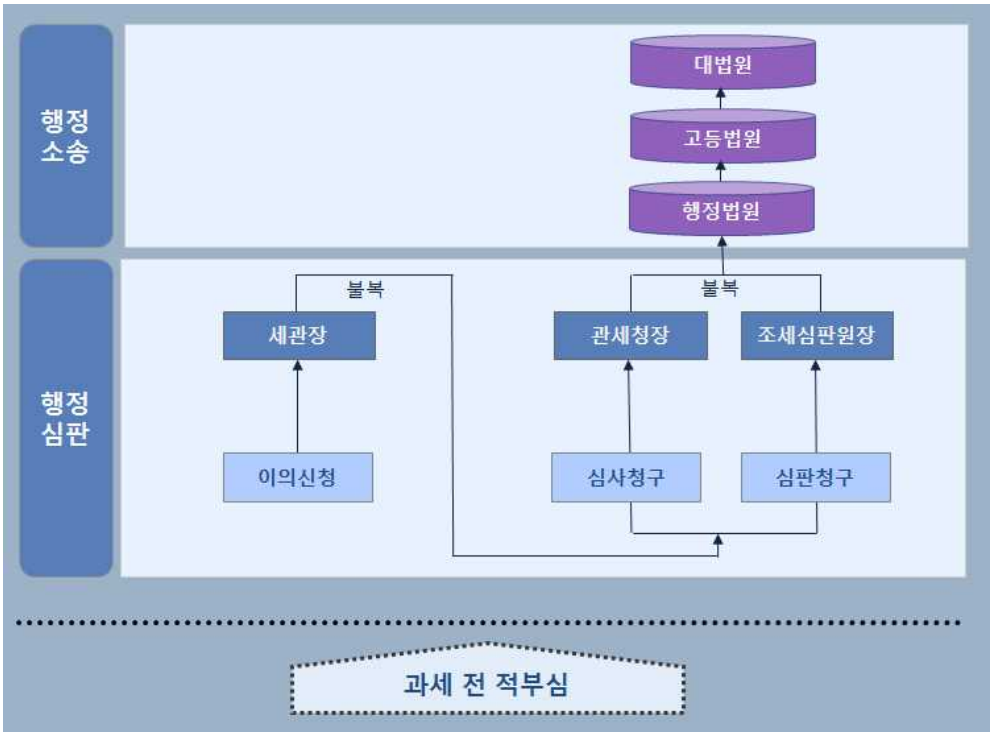
□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종류

관세법상의 행정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 세가지가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즉 처분을 하였거나, 처분을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처분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심사청구는 감독처 즉, 당해 세관장의 감독기관인 관세청장에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그 불목을 제기하는 쟁송을 말한다.

관세법과는 별도로 감사원법에 의하여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감사원법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법에 의

한 심사청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절차]



(2)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 의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한 경우 또는 과세표준·세율·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이 통지내용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한다.

□ 세관장 통지의무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나열된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부도 · 휴업 ·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 즉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2)]

---

1) 관세법 제118조 1항

따라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3)]

1. 관세청장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청구절차 및 결정

부족한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 즉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이러한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관세법 제124조)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18조 3항)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2) 관세법 제118조 2항
3)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행정심판제도

□ 행정심판의 종류

관세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는 관세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의한 내국세의 불복체계와 별 차이가 없다. 관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4], 심사청구[5], 심판청구[6], 감사원 심사청구[7]의 네 가지이다.

-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것인가는 불복하는 사람의 임의 선택사항이나, 일단 불복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관세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8]

관세법에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행

---

4) 관세법 제132조(이의 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5)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7)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8) 이것은 감사원심사규칙(제6조제1항)에 '행정심판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제기된 심사청구를 기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관세불복청구의 당사자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다.[9)]

행정심판의 제기대상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다.

- 여기에서 위법(違法)이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부당(不當)이란 행위나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할 때는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는 뜻이다

□ 청구기간 및 절차

행정심판은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다 같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기타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10)]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사회통념상 해당 통지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던 날임. 과세처분의 경우 당사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날이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이나 임시고용원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도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11)]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는 내용증명을 위시한 등기우편과 배달증명 등으로 송달된 경우만 인정된다.[12)]

---

9) 관세법 제119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관세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③ 납세보증인 등임(관세법시행령 제143조).

10) 대법원 1998.3.13.선고 97누8236판결.

11) 대법원 1999.12.28.선고 99두9742판결 및 대법원 1999.3.18.선고 96다23184판결. 그러나 당사자의 사업장 소속 직원이 아닌 빌딩 관리인 등이 받아서 전달하였다면 실제 전달된 날을 송달된 날로 봄. 대법원 1980.10.14.선고 80누297판결.

12) 대법원 1992.3.27.선고 91누3819판결 및 대법원 1993.5.13.선고 92다2530판결 등.

불복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 내에 재결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세관장의 과세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불복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법이 정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리를 거쳐야 한다. 불복청구형태별 재결청과 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불복청구 형태별 재결청과 심리기관]

불복청구 종류	제기기간	재 결 청	심리기관(소관위원회)	재결기한
이의신청	90일 이내	처분청인 세관장	이의신청심의위원회[13]	30일 이내
심사청구	90일 이내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90일 이내
심판청구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3월 이내

자료 : 관련법령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가지가 있다. 요건심리란 이의신청 등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본안심리는 불복청구의 본안에 대해 실제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에는 불고불리의 원칙,[1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5] 자유심증주의, 서면 및 구술심리주의, 비공개주의 등의 심리원칙이 적용된다.

-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6]

13) 2011년 12월의 관세법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세관에 설치되는 관세심사위원회가 심리기관이 된다.
14) 불복청구를 한 사항에 대해 심리 및 결정을 할 때는 그 청구에 국한한다는 원칙.
15) 불복청구를 심리해 결정함에 있어 불복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에 근거가 있다.
16) 대법원 2007.11.16.선고 2005두10675판결.

□ 행정심판의 결정 및 효력

- 행정심판 결정의 종류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이루어진다.

① 각하(却下): 요건심리결과 불복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불복제기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② 기각(棄却) : 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해당 청구를 수리하여 본안심리결과 그 불복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정.

③ 인용(認容) : 본안심리결과 불복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

- 행정심판 결정의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청구가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재결은 확정되며, 이 경우 발생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기속력(羈束力) : 기속력은 구속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불복청구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정의 내용을 존중하여 처분청이 그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임.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17]을 기속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18] 비록 재결에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었어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별개로 하고 기속력은 발생한다고 본다.[19]

- 행정청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재결의 기속력은 청구인과 참가인에게만, 그리고 해당 불복청구건에 국한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

17) 여기에서 관계행정청이란 처분청 및 그와 일련의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과 해당 처분에 관계가 있는 행정청이다.
18) 행정심판법 제37조 및 43조.
19)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127 판결.

라도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해 다른 세관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까지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또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성격상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한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해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20)]

② 형성력 :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에 의해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는 원처분의 해당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으며,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변경재결에 의해 원처분이 취소되고 그에 갈음하는 별도의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도 새로운 처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취소효과가 발생하며,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21)]

③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결정이 있은 경우 해당 결정 또는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음 심급의 불복청구를 포기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내용을 다른 쟁송에 의해 다툴 수 없는 것이 불가쟁력임.

- 불가쟁력은 행정법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불복제기기간 등이 정해진데서 오는 절차법적 효력이고, 불가변력이란 행정심판의 결정은 일반행정행위와는 달리 쟁송절차에 의해 행해진 판단행위이므로 일단 결정을 한 이상 재결청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2)]

---

20) 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94 판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21)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466 판결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
22) 대법원 1974.12.10.선고 73누129판결.

□ 행정심판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이에 불복하는 자는 사법심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23]에 제소하거나, 고등법원에 항소, 나아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차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임.[24] 불복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심판 재결 혹은 미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제기한 불복	다음단계 쟁송제기가 가능한 시기	제기 가능한 쟁송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후 30일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②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 후 90일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② 재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심판청구	① 심판청구 후 90일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②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25]	행정소송

자료 : 관련법령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해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기관과 기관간의 다툼인 기관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하지만 불복청구인이 재결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처분청도 다음 심급(審級)으로 항소 또는 상소가 가능하다.

- 즉, 제소자와 피제소자 모두 조세사건의 제1심인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인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3)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타 지방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행정법원과 같은 심급이 된다.
24) 항소(抗訴)와 상고(上告)를 합해 상소(上訴)라 한다.
25) 감사원법 제46조의 2.

2. 체약상대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가. 영미권

(1) 미국

(가) 미국의 관세제도 개괄

□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내의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26])이다. 동 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미국에 수입되는 매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이고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의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CBP는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품의 가격의 적절성, 원산지 위반여부 등 대한 서류조사와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를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수입이 자유화 되어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 관세법의 변천과정

CBP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관세청은 1789년 미국 연방의회법(The Fifth Act of Congress) 제5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기관 중의 하나이다. 이 부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나 재화, 상품,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관리한다.

---

26) www.cbp.gov CBP는 Washington D.C.에 본부가 있고 3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기관의 수장(관세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음.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 CBP는 국경의 안전을 제공하며, 무역과 관련하여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 100개 이상의 미국 정부기관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며, 무역에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내려진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CBP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일은 1994년 국회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한 부분으로 세관현대화법[27](Customs Modernization Act or Mod Act)을 통과시킨 것이고, 이것은 1930년 관세법을 수정한 것이다.[28].

2002년 2월 시행된 세관현대화법은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당사자는 수입할 때 "합리적인 관리(reasonable care)"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관리“요건을 갖추기 위해 2002년 이전 관세청이 수입자에게 제공하던 수입가능여부, 관세율, 재화의 가치,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자가 CBP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고[29] CBP로 하여금 수입자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와 기록을 제공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수입자가 수입을 할 때 합리적인 관리를 하여 법을 준수하였더라도 해당관청과 관세 및 세율,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 관세 및 비관세 종류

○ Column 1(NTR) 및 특혜관세율

Normal Trade Relations(舊 MFN(Most Favored Nation))세율 → 칼럼 1의 General란에 명기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칼럼1의 Special 란에 속한 국가들과 칼럼 2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General란의 관세율에 적용을 받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은 칼럼 2 하단의 ‘Preferential (duty-free or reduced rate) tariff program applicability to this HTS item’에서 ‘KOREA FTA Preference’란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

27) 과거에 NAFTA 실행법의 6장으로 존재하였음
28) Public Law(미공법: 1954년) 103-182, 107 Stat. 2057(103-182로 입법된, 법령집107, 쪽번호)
29) 19 U.S.C. §1484(2009) (United States Code 미연방법: Title 19 Section 1484 - Customs Duties)

○ Column 2(Non-NTR)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로 테러국가 등 적성국가에 적용되며 현재는 쿠바, 북한, 라오스 등이 해당된다.

○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30]

미국은 무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관세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수입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서(Petition)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무역위원회가 적정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난 이후 청문회(Hearing)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과하게 된다.

○ 비관세: 기타비용

미국 세관은 관세 이외에도 부두사용료(HMF), 화물하역료(MPF)등을 부과하고 있다.

□ 미국 관세율 확인방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31]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율 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32]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6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0) 상계/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www.usitc.gov/trade_remedy/731_ad_701_cvd/investigations/active/index.htm
31)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usitc.gov
32) http://dataweb.usitc.gov/scripts/tariff_current.asp

□ 수출입관련 기관

미국의 공공기관 중 수출·입과 관련된 기관은 다수이지만 다음의 상무부, 무역위원회, 식약청, 환경청, 소비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등이 비교적 무역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CBP가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중앙에서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CBP의 구성요소로는 Ports of Entry[33], CBP Officers, Import Specialist[34], Field Operations Offices[35], Regulatory auditors,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FP&F) officer 등이 있다.

(나) 미국의 행정구제제도

□ 개요

수입자가 CBP의 일선세관이나 본청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인 구제절차와 사법적인 구제절차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CBP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납세자(또는 수입자)불복은 먼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고,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36]에 제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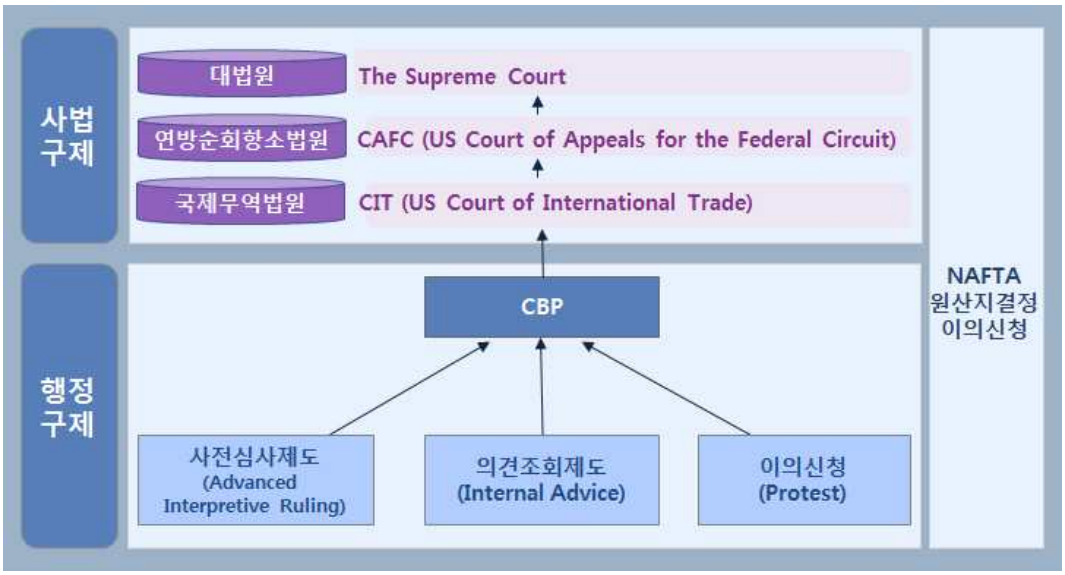
한편 북미자유협정의 원산지 관련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 행정 및 사법구제제도와 관련한 독립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만

33) 327개가 있으며 화물통관과 구입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4) 관세사 역할을 수행한다.
35) 미국에 20개가 있으며 327개 공항과 항만에 있는 세관을 지휘·감독하고 본청과 연결하는 일종의 본부세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36) 1909년에 만들어졌으며 1926년에 미국관세법원으로 1981년 현재의 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 명칭이 정해짐. 이 법원의 판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임. 부장판사를 통해 배정된 한사람의 판사가 법정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3명의 판사가 배정될 수 있다. 이 법정은 법정에 오기 전에 따라야 하는 자체적인 규정된 절차와 관례가 존재한다. 미국 내의 모든 곳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반드시 뉴욕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다. 적용되는 법은 Title 28 U.S.C. Organization, section 251-258; Jurisdiction, sections 1581 to 1585; and Procedures, sections 2631 to 2647. 홈페이지 주소 http://www.cit.uscourts.gov/

일반적 구제제도절차와 유사하다.

수입자나 수입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확실한 세율 및 규정에 대한 판단을 원하거나 수입자에게 물리하게 기존에 내려진, 혹은 내려질 CBP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입자들이나 이해관계인을 돕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로는 사전심사제도, 의견조회제도, 이의신청제도가 있고 이들과 관련한 CBP의 법규나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미국 관세행정 구제절차]



□ 사전심사제도(Advanced Interpretive Rulings)

사전심사제도는 미국으로 수입될 물건들에 대해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정보나 CBP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37]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38] 이 제도는 해당 수입물품이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CBP나 무역법정에서 비슷한 경우로 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진 것과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

37) e-ruling도 가능함(CBP Web site).

38) 19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미연방정부기관규정 및 법규) § 152 subpart C.에 의거하여 수입자는 구속력 있는 해석을 받을 수 있다. Ruling을 하기 위해서는 i) 상당한 액수의 과세가 발생하거나, ii) 적절한 법의 적용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 있어야 한다.

미국 관세청 품목분류과(뉴욕소재)는 대부분 세번분류, 원산지표시 및 NAFTA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며 법무관실(워싱턴 D.C소재)은 위에서 열거된 사항 이외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 뉴욕사무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워싱턴 D.C.의 법무관실로부터 번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욕사무실의 결정은 모든 세관에 구속력을 가진다.

유권해석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인은 품목분류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GRI) 및 각종 주, 과거의 유권해석사례, 소송사례의 사실관계, 최근의 NAFTA 원산지규정 변동사항, 관세관련 사례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CROSS)[39] 등을 사전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관세평가의 경우 관세평가사전(Valuation Encyclopedia), 비관세규정에 대해 관련된 법령(평가, 수입신고, 환급, 운송인 등)을 검토하고 당해 건이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신청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때 사안이 어느 곳(CBP, CIT, C.A.F.C.)에 계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만약 판정의 결과가 급한 경우 신속성을 요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한 사전심사 판정이 가능하다.

당해 건과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면 CBP는 서면으로 합당한 이유와 함께 구속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판정의 결과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서면으로 결과를 제공한다. 구속력이 있는 판정이 이루어진 결과는 90일내에 CBP의 CROS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신청인이 CBP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CIT로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수입 후 새로운 법적사실과 주장을 첨부하여 해당세관에 재판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판정이 본청에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법적사실과 주장을 첨부하여도 재심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이다.

일선세관에서는 30일, 본청에서는 90일내에 답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판결이 이루어진 구속력이 있는 사안은 모든 세관에 통보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

39) http://rulings.cbp.gov/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관련 판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임.

□ 의견조회제도(Internal Advice)

수입항의 세관직원은 현재 수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본청(Regulation and Ruling Unit)에 서면으로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자의 경우 일선세관을 통해 본청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세관 및 수입자는 각자의 의견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청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세관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본청의 결정은 효력을 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본청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해당 수입품의 수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 올 때, ② 관세법을 유효하게 집행하는 것이 모순을 유발하는 경우, ③ 제시된 질문이 19 C.F.R. §174 조항에 따라 관련된 자로부터 연관되어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판정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회람되고 공식화되며 그에 대한 결정은 90일 이내에 본청의 세관게시판에 고시된다.

□ Modification and Revocation of CBP Decisions

관련자의 요구 혹은 CBP의 발의로 과거에 내려진 CBP의 해석상의 판정(§177), 내부적인 지침(§177),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174)을 포함한 모든 결정이 현재의 CBP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CBP는 그 결정에 대해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그리고 수정된 결정은 60일 내에 관련자에게 통보되고 60일 이후에는 관세청 관보에 고시되며 관련이 있는 자들은 고시에 대한 견해를 3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시 후 30일이 지난 후 본청은 수정되거나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을 관세청 관보에 고시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던 자들에게 수정된 결정이 통보된다.

수정되거나 철회된 결정에 대한 효력은 최종적으로 공개된 때부터이나 CBP는 효력 적용일을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Protests)

이의신청은 연방법의 가장 오래된 행정절차이다. 세관이 관세율 및 관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산절차를 거친 후에 수입자는 CBP의 불리한 결정에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신청서(CBP form 19: 세관서식 19)를 6부[40](원본과 5

장의 사본) 작성하여 정산일로부터 180일[41]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시간 내에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며 신청인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대상]

① 수입신고 또는 그것의 수정신고 또는 정산 또는 재정산

a. 당해물품의 평가가격

b. 품목분류, 세율, 납부해야할 관세액

c. 원산지 통관관세

d. 특별조항 적용 가능성(미국제품 재수입, 일반특혜관세제도, 관세환급, CBI[42], NAFTA 및 다른 자유무역협정 등)

e. CBP의 결정이나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모든 이슈.

② CBP의 사법권으로 부과된 모든 종류의 강제징수금이나 벌금

③ 수입신고 및 인도에서 제외된 품목

④ 반환요구품목[43]

⑤ 19 U.S.C. §1520(d)에 의해 재정산이 거절된 품목

⑥ 환급이 거절된 품목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19 U.S.C. §1514에 따라 품목분류, 관세율, 총세액외에 CBP의 세부 결정내용 등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상이 된 결정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가 제기된 판결에 대한 수입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판정에 대한

40) CBP의 경우 6장을 권고한다.
41) 메일이나 Fax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착분에 한한다. 2006년 이전에는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음.
42) Caribbean Basin Initiative: 1983sus 미국 위회에서 통과된 카리브지역 경제회복법에 의해 1995년까지 효력을 지닌 계획.
43) 19 U.S.C. § 1337에 의해 항소할 수 있는 결정은 제외한다.

설명이 수입세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수입자는 이의신청을 할 때 추상적인 주장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자료와 법적논리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미 제출된 신청 외에 추가적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원래 날짜의 18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한다.

CBP 양식 19의 옵션 5번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불리한 결정을 내린 일선세관직원이 아닌 본청세관직원에 의해 추가적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추가적인 심사신청이 있다면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전에 이번 사항이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나 CIT로 부터의 판정, 혹은 부정적인 행정적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적인 심사에 대한 신청은 거부되고 19 C.F.R. §174.24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CBP의 추가적인 심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추가적인 심사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이루어지면 본청으로 보내져 판정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실적인 자료와 법적인 주장을 완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CBP 양식 19에 참고자료가 있다고 표시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만약 신청인 새로운 정보와 추가적인 법적 논리가 있다면 CBP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시 주의사항**

이의신청인은 수입신고날짜, 정산일, 이의신청날짜, 이의신청에 대해 본청 심사관과의 상담 가능성 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이의신청이 거부된 결과에 의한 미국국제무역법원에 대한 항소여부 가능 날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CBP가 수입할 때 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세 납부고지서를 송부할 것이지만 추가적인 관세(이의신청 기간 이자 포함)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할 필요는 없고 만약 이의신청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CIT에 항소할 경우 항소하기 전 그때까지의 모든 관세, 벌금, 이자 등을 모두 납부해야만 해야만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추가적인 심사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본부세관직원에 대한

면담기회가 주어지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심사에 대한 본부세관의 구속력 있는 판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시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모든 결정이 분명하고 최종적일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선세관의 세관직원들이 불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CBP 19 양식에 승인 및 거부의 결정을 내리거나 만약 판정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CBP의 회신은 판정결과로 고려할 수 없고, CIT의 항소대상이 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그리고 수입 세관과 CBP 본청과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자는 미국법(19 U.S.C. §1515(d))에 의해 일선세관의 이의신청 거부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의 일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일부분이 거부되었다면 이의 신청자는 CIT에 항소할 수 있으나 패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CBP가 2년이 넘도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CBP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국제무역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본청에서 담당하는 이의신청**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수입신고지 세관, 즉 처분청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음의 경우는 본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44)]

① 종전에 결정 내려진 유권해석과 불일치한 경우

② 관세청 및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은 법 또는 사실에 관한 문제인 경우

③ 과거에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수입자가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또는 법적 쟁점사안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④ 본청 법무관실에서 내부지침요청 형태로 답변을 거부한 사안인 경우

44) 심갑영(2010), 미국에서의 우리기업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연구

위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본청에서의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재심요청서를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관실의 결정내용은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된다. 이의신청인에게는 60일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관련 판결부분(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에 게시 된다. 단, 당해 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전에 이루어진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결정요청 또는 세관 내부의 자체적인 질의회신요청에 따라 내려졌던 사안인 경우는 재심사가 거부된다. 위의 사항에 불복할 경우 미국국제법원에 18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세관의 결정이 정산시점에서 최종적인 반면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적이 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입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관세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고서 정산은 사안이 해결될 때 까지 중지될 수 있고 이는 수입자, 관세사 등 관련인에게 통보된다.

□ 국내 이해관계인의 청원(Domestic Interested Party Petitions)

○ 미국 생산자협회의 이의신청권한(516 청원서)

대부분의 세관분쟁은 세관의 관세평가액 혹은 관세율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미국 관세법은 미국의 생산자, 공급자, 도소매인, 협회 등에서 잘못 결정된 품목분류나 세율, 평가액 등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생산자협회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19 U.S.C. §1304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이해관계인청원서 혹은 “516” 청원서라고 하여 협회의 이의신청권한을 명문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법은 국내의 생산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수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제출된 서류는 본청에 있는 법과 규칙에 관련된 판정관(변호사)에 의해 심사되며 상품의 종

류, 청원자의 신상내용, 입증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청원 후 관련내용이 관보에 공지되고 이러한 내용은 이후 CIT나 C.A.F.C.에 항소할 때 쓰일 수 있다.

(다) 미국의 사법 구제제도

수입자나 수입의 이해관계인은 행정적인 방법을 통한 구제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사법적인 방법을 통해 판정을 재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세와 관련한 행정구제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는 우선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미연방순회항소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을 통해 항소할 수 있고, 동 법정에서의 판결도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소할 수 있다.

□ 국제무역법원의 사법재판(Judicial Review from CIT)[45]

CIT는 미국헌법 3조에 의해 만들어진 연방법원(Article III court)으로 1980년 미국관세법원법(The Customs Court Act of 1980)에 의해 전 미국연방관세법원을 개조하여 미국제무역법원으로 발족하였다. 이 법원은 미국대통령이 지명한 부장판사(Senior Judge)를 포함한 9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현재 뉴욕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무역과 관세에 관련된 재판만을 담당하고 있다.

○ CIT 사법재판 대상

수입자는 일선세관에서의 정산 후 결정세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관서식 19에 따라 정산일로부터 18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청구를 세관에서 각하한다면 국제무역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또한 세관에 이의신청이 될 수 없는 사항까지도 CIT에 항소가 가능하다. CBP에서도 관세를 되찾거나 불법적인 수입에 대한 벌금부과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CIT에 제소할 수 있다.

CIT는 일선세관으로부터 연방법원에 제기된 CBP의 사법적인 몰수절차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모든 CBP의 판정에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CIT는 CBP가 개입되지 않은 국제무역위원회나 미국

45) CIT의 rules 과 forms은 http://www.cit.uscourts.gov/Rules/new-rules-forms.htm에 있다.

상무부 등에서 제기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결정에 대한 행정적인 항소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정인 CIT는 연방민사소송법과 연방증거규칙에 따르고 있으며 CIT의 제소절차에 특별하고 까다로운 면을 가지고 있어 항소하는 과정에서 CIT의 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CIT의 법정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혹은 합법적으로 내려진 CBP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CBP와 관련된 대부분의 CIT의 재판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불리하게 내려진 CBP의 결정에 대한 항소, 이의신청할 수 없는 CBP의 결정에 대한 항소, 관세, 벌금, 혹은 확정손해배상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항소 등 CIT에 대한 많은 항소 이유가 있지만 CBP으로부터의 이의신청 거부가 CIT에 항소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다. CIT의 소송절차에서 CBP는 미국 법무부 등 다양한 미국 기관을 대표한다.

○ **CIT 사법재판 절차**

미국연방법전 제28장 1581(a)조에(28 U.S.C. §1581(a))의해 CBP의 이의신청 거부에 대한 CIT의 독점적인 사법권을 부여하고 CIT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1581(a)조에 의해 수입자는 이의신청을 거부한 일선세관의 세관장 및 뉴욕에 있는 관세청의 국제무역소송법원 담당 자문보 앞으로 이의신청이 거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CIT 서식 1)를 제출[46]하여야 한다.

이 때 수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나 관세 등은 1581(a)조에 의해 CBP에 납부되어야 한다. 같은 물품이 다른 날짜에 수입되어 이의신청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180일 이내에 있어야 함) 한 번의 재심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다.

수입자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미국연방법전 제28장 1581(h)조(28 U.S.C. §1581(h))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CBP의 결정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거부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하지

46)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된 정보는 http://www.cit.uscourts.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1581(a)조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기존의 수입 후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수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

미국연방법전 제28장 1581(i)조(28 U.S.C. §1581(i))에 따라 CIT에서는 수입, 관세, 수수료, 금수조치, 법적용 등에 대해 CBP의 제소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자가 다른 사법적인 수단이 허용되지 않을 때 1581(i)조에 의해 항소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의신청의 경로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법의 적용에 대한 합법성여부에 대한 이슈가 될 때 법원은 소송을 유지시킬 수 있다.

미국연방법전 제28장 1582조(28 U.S.C. §1582)에 따라 CIT에서 관세 및 벌금(과실이나 중과실 또는 수입세관이 관여한 사기 또는 수입담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징수하려는 정부와의 소송이 가능하다. 미국법무부는 CBP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피고 측에서는 반대변론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시작한다.

CIT에서 재판이 개시되고 일선세관의 관련 세관직원이 소환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세관직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국제무역법원에 송부되어야 한다.[47].

- 소비용 또는 기타 신고서
- 상업송장
- 특별세관송장
- 이의신청서 사본
- 이의신청서 전부 또는 일부 각하내용 사본
- 수입자의 전시물
- 수입된 물품의 공식 샘플
- 공식적인 물품에 대한 실험실 분석내용
- 해당 물품에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요약서
- 갖추어야 되는 자료 중 누락된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

국제무역법원에 사건을 제출함에 있어서 법무부가 사용하는 사실동의서에

47) 심갑영(2010), 미국에서의 우리기업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연구

대해 뉴욕소재 법무부 민사과 국제무역 담당 검찰총장보에 의하여 세관직원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CIT로부터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만약 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CIT가 판결한 대로 판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판결문에 따라 재정산되어야 한다.

법무부 민사과 검찰차장보로부터 해당 세관부서장이 서명하고 CIT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건이송명령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CIT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신고건은 재정산 될 수 있다.

□ 연방순회항소법원(Judicial Review from C.A.F.C. Appeals of CIT Decisions)

미연방순회항소법정은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고 1982년 연방법원개선법(The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의 가결에 의해 발족하였으며 미국관세법원(Court of Customs) 및 특허항소법원(Court of Patent Appeals)과 결합되었다.

본 법원은 13개의 항소법원 중 무역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맡는 특별한 법원이며 미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이 법원에 대한 항소는 모든 연방지역법원, 연방청구법원, 국제무역법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의 행정기관의 결정사항, 특허항소, 상표권 심판항소위원회, 무역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순회항소법정은 미국연방법전 28장 1295(a)(5)조(28 U.S.C. 1295(a)(5))에 의해 CIT에서 결정된 모든 판정에 대한 항소를 심사하는 사법권이 있다. CIT의 판결이 내려진 후 원할 경우 60일 이내에 순회항소법정에 항소하여야 하고, 이때 순회항소법원은 CIT의 사실에 기반을 둔 판결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만을 심사 한다. 이때에는 항소통보서가 관세청 국제무역소송법원 책임 자문관 앞으로 송부된다.

연방순회법정에서 CIT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동의서에 기초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CIT로부터 판결문을 받자마자 바로 재정산 될 수 있다. 연방순회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CIT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재정산되어야 한다.

□ 대법원(Appeals of CAFC Decisions-The Supreme Court)

미국연방법전 제28장 U.S.C. §1251(28 U.S.C. 1251)와 U.S.C. Amendment(개정) 11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사법부로써의 권한은 헌법, 미국의 법, 조약 등과 관련된 모든 사건, 미국이 당사자가 되고 2개 이상의 주가 개입되는 논쟁사안, 한 개의 주와 또 다른 주의 시민 간에 발생하는 논쟁사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연방민사소송법과 연방증거규칙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 NAFTA하에서의 행정 및 사법구제제도

미국세관규칙 3810-009A에 따라 원산지에 관련한 행정 및 사법구제제도의 절차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48].

NA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미국의 수입자와 캐나다 및 멕시코의 수출자는 19 C.F.R. §174 12에 따라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NAFTA 규칙은 수출국의 생산자의 독립적인 이의신청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19 C.F.R. §174.12(a)(5)는 19 C.F.R §181 부칙 G에 의해 원산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자의 경우 19 C.F.R §174.11에 의해 광범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유지되고 있다.

NAFTA하에서의 구제절차와 관련된 규칙은 19 U.S.C. §1514, 19 C.F.R §174, NAFTA 조항 510, NAFTA 이행법 관세조항 2장 208절 (공법 103-182)이 있다.

NAFTA의 원산지 관련 이의신청절차는 미국연방법전 제19장 제1514조(19 U.S.C. §1514)에[49] 의해 미국의 수입자와 캐나다 및 멕시코의 수출자가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함으로 원산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수입통관정산 후 19 C.F.R.에 따라 90일이 지난 후[50]부터 할 수 있다.

미국세관은 캐나다나 멕시코의 수출상들에게는 따로 정산날짜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미국의 수입자나 수입대리인 으로부터 획득하여야 하거

48) 1999년 6월 22일
49) 19 C.F.R. § 181.75(b)(iv) 참고
50) 90일 전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세관의 정산관련 게시판에서 얻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세관서식 19호에 영어로 작성되거나 19호 서식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같은 크기의 서류에 “이의신청”이 명기되어 수입세관의 세관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같은 품목이 여러 번에 걸쳐 수입되었다면 한 번의 이의신청으로 여러 번에 걸쳐 수입되었던 같은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

19 C.F.R. §174.13에 표시된 정보 외에 캐나다 생산자나 수출상의 경우 캐나다 국세청이 발급한 수출입 등록번호, 멕시코의 경우 생산자나 수출상의 멕시코정부세금등록번호(RFD)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산지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의 대응은 세관규칙 099 3550-065에 규정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51] 원산지결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통합되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수출자, 생산자 혹은 수입자등 이의신청을 한 모두로부터의 요구가 있다면 세관은 여러 개의 이의신청을 하나의 원산지결정으로 통합하고 사업적인 기밀사항에 관계없이 각각에게 결정을 통지한다.[52]

관련자들 모두가 통합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세관은 내부적으로 원산지 결정에 대해 통합하여 처리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원산지 결정의 내용을 각각의 이의 신청인들에게 비밀로 통지한다.[53]

세관에서 생산자나 수출상의 이의신청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정부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에게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관세를 환급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면 기각통지가 된 후 180일 이내에 국제무역법정에 민사소송의 형태로 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51) 514 이의신청으로 불리기도 함
52) 19 C.F.R. §174.15(b)(1)
53) 19 C.F.R. §174.29

(2) 캐나다

(가) 캐나다 관세제도 개괄

□ 캐나다 관세국경과리청(CBSA) 개요

캐나다 관세·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은 조세징수, 통상행정, 국경수비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NA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및 WTO협정에 근거하여 국경 및 무역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3년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과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으로 분리되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이하 CBSA라고 함)은 관세청 업무를 비롯하여 국경관리, 항만, 철도, 국제우편 관리 및 식품검열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캐나다 관세국경 조직 변화]



CASA는 약 13,000명의 구성원을 가지 대규모 조직으로 119개 국경출입국 및 13개의 국제공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아부처 및 주정부 조직을 대신하여 90여개의 법령과 다양한 규정의 집행 및 무역협정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CBSA는 또한 금지품목 및 관리대상 품목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유산부(Cdnadian Heritage), 환경부(Environment Canada),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보건당국(Health Canada), 식품검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우편국(Canada POst), 곡물위원회

(Canada Grain Commission),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기관별 특정관리 품목의 수출입절차를 책임지고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주요업무]

△ 사람, 상품, 동식물 등의 캐나다 유출입 관리

△ 캐나다에 위협이 되는 사람에 구류, 테러, 전쟁, 범죄 등에 연루된 인의 캐나다 입국시 추방

△ 비합법적인 물품의 반입·반출의 금지

△ 식품안전, 동식물 건강, 자원보호

△ 무역협정, 무역규정 등의 부합을 통한 캐나다 기업활동 및 경제이익 촉진

△ 수입품에 적용되는 덤핑, 보조금으로부터 캐나다 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 시행

△ 공정메커니즘 및 불공정 무역관행 메커니즘에 관한 업무

△ 다양한 국제포럼 및 국제기구에서의 캐나다 이해관계 보호

△ 수입품에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출입 통관 관련 법률

통관절차 관련 법령에는 관세법(Customs Act), 관세율법(Customs Tariff), 캐나다가 칠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등과 체결한 FTA 이행법(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nad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소비법(Excise Act),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 및 특별수입규제법(Special Import Measure Act)등이 있다.

우선 캐나다 관세법은 198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사람과 물품의 이동관리 및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캐나다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9년도 개정안에서는 CBSA의 해상/항공 위험에 대한 관리 및 안보 강화 및 무역확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관세법은 크게 7부로 나뉘어 제1부(Part Ⅰ)에는 보증금(security), 양식(forms), 중개인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Part Ⅱ)에서는 수입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2부에는 수입자, 물품신고(report of goods), 관세, 과세가격 결정, 운송, 보세창고 및 반출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Part Ⅲ)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4부(Part Ⅳ)는 과세경감 및 환급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부(Part Ⅴ)는 수출통관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제6부(Part Ⅵ)는 집행절차, 제7부(Part Ⅶ)는 향후 규정이 추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관세법 개괄]

구분	주요내용
Part Ⅰ	일반(General)
Part Ⅱ	수입(Importation)
Part Ⅲ	과세가격 결정(Calculation of duty)
Part Ⅳ	과세 경감 및 환급(Abatements and refunds)
Part Ⅴ	수출(Exportation)
Part Ⅴ.1	과세부과(Collection)
Part Ⅵ	집행(Enforcement)
Part Ⅵ.1	형사처벌(Enforcement of criminal offences other than offences under this act)
Part Ⅶ	규정(Regulations)

이밖에 관세법 집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감면(Abatement of duties payable regulations), 관세환급(Goods imported and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등 다수의 규정이 포함된다.

한편 캐나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 정책, 절차 조항들을 한데 묶어 D-memoranda[54]로 발간하여 수출입 관련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54)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menu-eng.html

[D-memoranda 구성내용]

분류	주요내용
D1	일반(General)
D2	해외여행(International Travel)
D3	운송(Transportation)
D4	보세창고, 면세점 등(Warehouse, Duty free shop, Ships Stores)
D5	국제우편(International Mail)
D6	환급(Refunds)
D7	관세환급(Drawbacks)
D8	임시수입 및 세금감면(Remissions and Temporary Importation)
D9	수입금지(Prohibited Importations)
D10	품목분류 및 상품(Tariff Classification/Commodities)
D11	일반관세 정보(Tariff Classification information)
D12	선착화물(Pre-arrival Commercial)
D13	과세가격(Valuation)
D14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SIMA)
D15	특별수입규제조치법 및 조사(SIMA/Investigations)
D16	부가세(Surtax)
D17	통관절차 및 회계(Accounting and Release Procedures)
D18	소비세(Excise Goods)
D19	여타 정부기관 관련 법 및 규정(Acts and Regulations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D20	수출(Exportation)
D21	국외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D22	벌금제도(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 캐나다 사법체계 개관

캐나다의 법체계는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과 그 외 각종 관습법, 판례로 되어있다. 캐나다는 퀘벡 주가 성문법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관습법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습, 관행, 통례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연방법원, 주(지방)법원으로 분류되며 대법원은 주법원 및 연방법원의 상고심으로 민·현사상 최고심에 해당한다. 연방법원은 연방 제정법률, 형평법 등에 대한 분쟁을 다루며 주정부 간의 분쟁,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지식재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관할한다. 지방법원의 경우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주'에 따라 그 명

칭이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조직은 거의 유사하다.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10개의 주정부(Province)와 3개의 특별 지역 정부(territories)로 나뉜다. 각 주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나 주 의회에는 상원이 없는 단원제로 되어 있다. 주정부의 주요 구성기구에는 주 총독, 주 의회, 주 수상, 내각, 지방법원 등이 있다. 캐나다 헌법상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부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투자, 무역, 화폐, 금융, 운송, 통신 등 연방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캐나다의 연방제도는 지방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방헌법상의 의무를 가 주의회가 거부할 수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영어와 프랑스어 2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각 주정부는 이 공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캐나다 관세행정 구제제도

캐나다의 관세행정 구제절차는 행정구제의 사전단계로 사전심사제도가 있다. 이후 세관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review of determination)를 CBSA에 할 수 있고 CBSA의 결정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심사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캐나다의 관세행정구제절차]



행정기관인 CBSA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국제무역재판소(CITT)에 항소할 수 있다. 국제무역재판소의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연방항소법원(FCA)항소 할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최종심에 해당한다.

1) 사전심사제도

캐나다 관세법 제43,1조에 따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사제도[55]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제도는 상품의 수입전에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상품의 품목분류, NAFTA 제509조 상의 사전심사제도, CCFTA(캐나다 칠레 자유무역협정) 제E-09조 상의 사전심사제도, CCRFTA(캐나다 코스타리가 자유무역협정 제 Ⅴ.9조 상의 사전심사제도, CEFTA(캐나다 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C 제28조2항상의 사전심사제도, CPFTA(캐나다 페루 자유무역협정) 제419조 상의 사전심사제도에 적용된다.

사전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사람은 결정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56]

---

55) 관세법 제43.1조 제1항 Any officer, or any officer within a class of officer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shall, before goods are imported, on application by any member of a prescribed class that is made with-and in the prescribed form containing the prescribed information, give an advance ruling with respect to
(a) whether the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and are entitled to the benefit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b) in the case of goods exported from a NAFTA country, from Chile, from Costa Rica, from an EFTA state or from Peru, any matter,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c), concerning those goods that is set out in paragraph 1 of Article 509 of NAFTA, in paragraph 1 of Article E-09 of CCFTA, in paragraph 1 of Article V.9 or paragraph 10 of Article IX.2 of CCRFTA, in Article 28(2) of Annex C of CEFTA or in paragraph 1 of Article 419 of CPFTA, as the case may be; and
(c)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s.
제2항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respecting advance rulings, including regulations respecting
(a) the application of an advance ruling;
(b) the modification or revocation of an advance ruling, including whether the modification or revocation applies retroactively;
(c) the authority to request supplementary information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and
(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issuance of advance rulings may be declined or postponed.

56)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2항 (2) A person may request a review of an advance ruling made under section 43.1 within ninety days after it is given to the person.

2) 관세행정 구제제도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관세청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심사청구(review of determination에 대해 규정하고 제67조 내지 제70조에서 항소절차(Appeal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관세법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판단, 품목분류, 관세가격, 수입품의 표시 등에 대한 세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관세행정구제 대상[57]

- 수입상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표시등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58]

- 사실관계에 대해 관세청의 오해가 있는 경우,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이 있는 경우 기타 심사를 요청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심사는 관세청장에 의한 결정의 재심요청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정보는 수입이 금지된 무기 또는 장비, 음란물이나 혐오선전물로 분류되어 금지된 품목, 특별 수입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심사청구 방법 How to request a review

이의제기하고자하는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분쟁의 통지에 더 많은 기간이 허여될 수 있다. 분쟁고지에 대한 기간연장에 적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Memorandum D11-6-9에 나열되어 있다.

참고로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한다.[59]

---

57) 캐나다 관세법 제58조 3항 A determination made under this section is not subject to be restrained, prohibited, removed, set aside or otherwise dealt with except to the extent and in the manner provided by sections 59 to 61.

58)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1항 An officer, or any officer within a class of officer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may (a) in the case of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57.01 or 58, re-determine the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value for duty or marking determination of any imported goods at any time within

59)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2항 A person may request a review of an advance ruling made under section 43.1 within ninety days after it is given to the person.

심사청구의 방법은 문서에 의한 제출 및 처리에 의한 부담을 줄이고자 CBSA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CBS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B2서류(조정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결정사항과 Memorandum D11-6-7 부록에 나열된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의 분쟁해결방법이 규정된 정보들을 포함한 통지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 분쟁의 통지는 직접, 팩스, 택배, 일반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수 있다.

분쟁의 내용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므로 효율적인 구제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담당부서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태평양지역, 프레리 지역(Prairie Region), 광역 토론토 지역(Greater Toronto Area (GTA) Region)이 포함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CBSA 토론토 지역구제부서(Toronto-Regional Recourse Division)에 청구하여야 한다.

- 남부온타리오(Southern Ontario Region), 해밀턴(Hamilton), 윈저(Windsor), 런던(London), 포트에리(Fort Erie) 지역이 포함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CBSA 해밀턴 지역구제부(Hamilton – Regional Recourse Division)에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 북부온타리오(Northern Ontario Region), 퀘벡(Quebec), 대서양(Atlantic Region) 지역이 포함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CBSA 퀘벡 지역구제부(Quebec-Regional Recourse Division)에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CBSA의 어떠한 사무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절한 부서에 직접제출할 경우 심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므로 심사청구 해당 지역 사무소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심사절차의 과정 What to expect: the review process

CBSA 행정구제 담당부서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또는 표시 분쟁 등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심사를 수행한다.

분쟁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통지를 받게 된다.

담당자는 심사대상 결정의 근거와 심사청구자의 지위들을 고려하여 심사청구 담당자에게 심사청구자의 요구를 수락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해당 심사 담당자는 관세청창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임된 권한을 갖는다. 심사결정을 위해 담당자는 증거, 관련쟁점, 관련법과 정책, 기타 추가적인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제공된다.

심사결과 심사청구 요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요청내용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심사청구 요청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는 제시된 결정과 이유에 대해 권고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최종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대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관련정보 Related information**

○ NAFTA 원산지 분쟁의 심사청구(For reviews of disputes on NAFTA origin)[6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간 관련정보에 대해 ㄴ구속력있는 결정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미국관세국경관리청과 공유한다. 이때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기업의 기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후속조치

-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61]

---

60)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2항 An officer who makes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57.01(1) or 58(1) or a re-determination or further re-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without delay give notice of the determination, re-determination or further re-determination, including the rationale on which it is made, to the prescribed persons.

61) 캐나다 관세법 제67조 1항A person aggrieved by a decision of the President made under section 60 or 61 mayappeal from the decision to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by filing a notice of appealin writing with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time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CBSA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항소 할 수 있다. 이때 관세청의 심사결정 통지서에는 관세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심사청구자가 항소 가능한 기간과 해당 재판소가 명기된다. 항소기간은 심사결정을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 연방항소법원에 항소(Ferderal Court of Appeal)[62]

국제무역재판소의 항소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소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Ferderal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62) 캐나다 관세법 제68조 제1항 Any of the parties to an appeal under section 67, namely,
(a) the person who appealed,
(b) the President, or
(c) any person who entered an appearanc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67(2),
may,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date a decision is made under section 67, appeal therefrom to the Federal Court of Appeal on any question of law.
제2항 The Federal Court of Appeal may dispose of an appeal by making such order or finding as the nature of the matter may require or by referring the matter back to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for re-hearing.

(3) 호주

(가) 호주 조세체계

□ 조세개념 및 조세체계

호주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력을 얻어 2008년 8월에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호주의 조세체계 및 공적 이전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기존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제도를 분석하여 공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책자는 호주의 조세체계 및 공적 이전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이며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 책자를 바탕을 하여 호주의 조세체계를 설명하도록 한다.

호주 재무부는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에서 호주의 각급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 최소한 125개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99개 세목은 연방정부 세목이고, 25개는 주정부 세목이다. 주 산하의 지방정부 세목은 1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세목이 많은 것은 조세를 경제적인 개념에서 분류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헌법에 의하면 조세는 "정부 및 공공 목적으로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 벌금, 부당징수가 아닌 것"을 말한다(Commonwealth Constitution, s51(ii)). 즉, 조세는 정부가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IMF나 UN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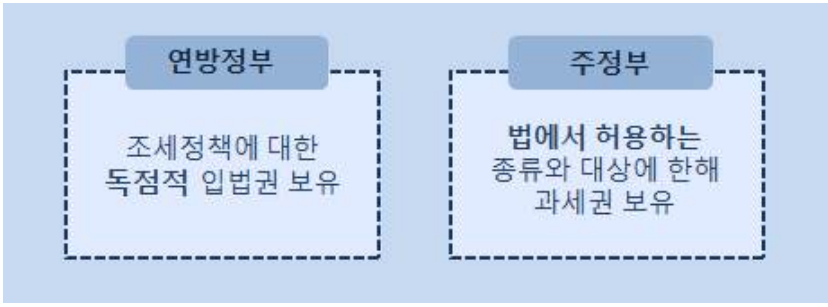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125개의 세목 수는 호주의 통계청(ABS) 분류에 따른 것이다. 세목 수는 많지만 대부분 작은 세목이어서 세수입 규모로 볼 때 큰 세목 10개가 세수입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세수규모에 따라 10개 세목의 순위를 매겨보면, 개인소득세(personal tax)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법인세(company tax),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연료세(fuel excise), 급여세(payroll taxes), 등록인지세(conveyance stamp duties), 지방정부 레이트(local government rates),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토지세(land taxes) 순이다10). 기타 115개 세목에는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비롯하여 도박세(gambling taxes), 보험세(insurance taxes), 주류소비세(beer and spirits excise), 관세(customs duties),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원유소비세(crude oil excise), 농업 부담금(agricultural levies) 등이 포함된다.

□ 조세 관련법률 체계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가 존재하며 주정부의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헌법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게만 배타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였는데, 무역과 상업·조세·국방·외교·이민 및 시민권 분야가 그러한 분야들이다.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입법권을 가지는데, 연방정부의 법률과 주정부의 법률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는 연방의 법률을 따른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조세정책에 대한 독점적인 입법권을 가진다. 주정부는 법에 의해 허용된 종류와 대상에 한하여 과세권을 가진다. 소득세의 경우 주정부도 과세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과세할 여지가 없고, 재화·수출·수입·연방정부 재산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급여세(payroll tax)·재산세·금융거래세·자동차등록세·천연자원세·도박세·각종 인지세 등이다.



모든 세목에 고루 적용되는 사항들을 국세기본법에 정리하고, 각 세목별로 독특한 내용들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목별 법률에 포괄하여 담으며, 필요한 경우 그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호주는 판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인지 세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나) 호주 관세제도 개괄

□ 일반사항

호주로의 수입품들은 모두 Tariff Act 1995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관세청의 수입 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 수입품목을 관세율 품목 목록에 맞추어 정확하게 분류해야한다. 수입업자는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한 수입 업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수입품목 신고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입품목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관세 서비스 브로커를 고용하는것이 권고된다. 브로커들은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서 자격증을 부여받은 수입품 세관 신고에 관한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이나 지역 전화번호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미래의 수입 결정을 내려야 할때에는 호주 관세청에서 제공되는 관세 어드바이스 서비스(Tafiff Advice servie provided)가 유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수입품을 관세율 품목에 맞추어 분류해주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미래의 수입 품목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시 사용할 수있으며, 이미 수입이 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보통 신청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30일정도가 걸리며, 서비스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드바이스 는 특정 제조업자로부터 수입된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서만 주어지며, 일단 어드바이스 가 결정되면 수입업자는 그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 어드바이스 신청을 원하거나 이 서비스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면 된다.[63]

- e-mail: tariffclassfication@customs.gov.au
- 전화번호: +61-1800-053-016

63) http://www.customs.gov.au/tariff/default.asp

□ 관세율 확인 방법

일반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Working Tariff 상 스케쥴 3에서[64] 세번별로 확인 할 수 있다.

호주는 현재까지 뉴질랜드, 미국, 태국, 칠레등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 이거나 유예를 해주고 있다. 다만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Schedule 5(미국), Schedule 6(태국), Schedule 7(칠레), Schedule 8(뉴질랜드)을 참조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관세율표 보는 법 (예: 6202.12호 제품. 면 재질 오버코트 등)

6202.12.00 ……품목명(면 재질 오버코트 등)…… 17.5%, DC 12.5%
FROM 1 January 2010 …10%, DC 5%
FROM 1 January 2015 … 5%

상기 사항을 해석 하면, 기본 관세율은 17.5% 이며, DC(개발 도상국)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2010년 1월부터 10%의 일반 관세가 적용되며, DC 국가에 대해서는 5%의 관세가 적용된다. 2015년부터는 모두 5% 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 표 하단에 하기의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Unless otherwise indicated NZ, PG, FI, DC, LDC and SG rates are Free
Unless otherwise indicated general rate applies for CA
Unless indicated in Schedule 5, rates for US originating goods are Free
Unless indicated in Schedule 6, rates for TH originating goods are Free
DCS denotes the rates for countries and places listed in Part 4 of Schedule 1 to this Act
DCT denotes the rates for HK, KR, SG and TW
If no DCT rate shown, DCS rate applies. If no DCT or DCS rate shown, general rate applies

이를 정리 하여 보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피지, 개발도상국, 최빈국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캐나다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가 적용되며, 미국 및 태국산 제품에 대해서

64) http://www.customs.gov.au/tariff/tariff2012.asp

는 원칙적 무관세이나 schedule 5와 6을 참조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DCS는 스케쥴 1, 파트 4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데, DCT는 홍콩,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국가 및 이에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 한다. 만약 DCT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DCS 관세율이 적용 되며, DCT 및 DCS 관세율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관세가 적용 된다.

특별 관세 및 어떤 나라에 어떤 범주의 관세가 부과 되는 지에 대한 목록은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65]

원산지 규정에 의해 한국 제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또는 DCT 관세율이 적용된다. 호주는 운임(해상, 항공) 및 보험료를 포함 하지 않는 FOB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다시 관세가 부과된 제품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다.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 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es) 가 부과 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가 부과 된다. 참고로 부가 가치세는 향후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다) 호주의 관세행정구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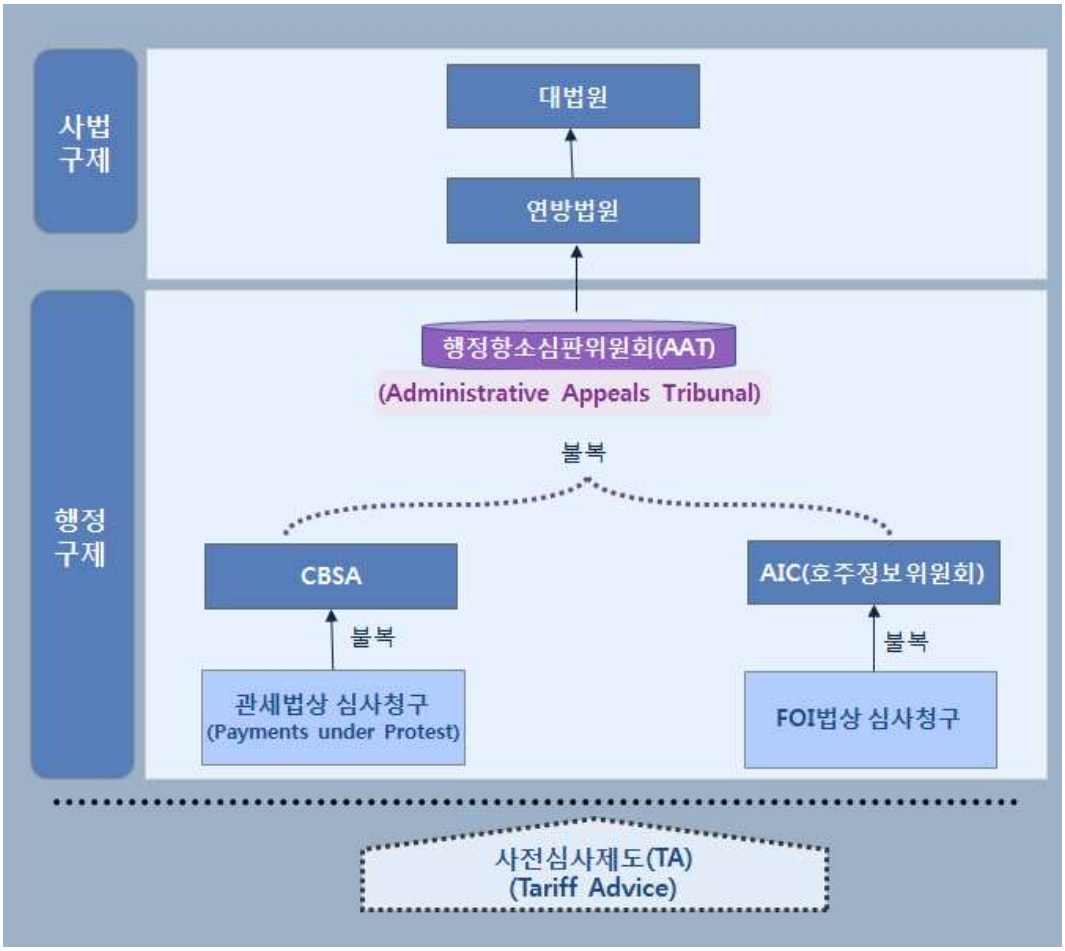
호주의 관세행정구제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행정구제절차와 사법구제절차로 양분된다. 행정구제절차는 상품의 수입 전 사전적제도로서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고 사전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호주 관세청인 CBSA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수입 후 세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의심사청구를 CBSA에 제기할 수 있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달리 관세법상의 심사청구 외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호주정보자유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구제절차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항소위원회(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항소 할 수 있다.

65) http://www.centurycustoms.com.au/images/cms/List%20of%20Countries%20that%20receive%20pref%20duty%20rates.pdf

[호주의 관세행정구제 절차]



□ 사전심사제도[66]

수입자가 품목분류 및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을때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처리해주는 Customs Information and Support Centre (CI&SC)로 연락하거나 이메일(information@customs.gov.au.)을 통해 문의하도록 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특정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비용은 관세청이 부담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66) http://www.customs.gov.au/tariff/tariff-advice.asp

수입자가 이미 이전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거나 관세청의 공식의견으로 품목분류가 이미 된 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방법은 관세청 전자시스템인 TAPIN을 통해 Tariff Advice (TA)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media, publications and forms' 페이지에서 Tariff Advice Application Form B102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보자유법(FOI법[67])에 따른 심사청구

○ 심사의 권리

FOI법은 행정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심사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호주정보위원회(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의 부록 B에서 FOI fact Sheet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결정에 대한 심사

- 내부 심사

FOI법은 당신의 요청에 따라 문서에의 접근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내부 심사를 요구할 권리나 문서에의 부분적 접근이용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내부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수여한다.

내부 심사는 1차 결정과 관계가 없는 선임 담당관에 의해 수행된다. 내부 심사 요청을 위하여 특별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지만 결정이 심사되어야 하는 이유를 신청서에 포함시킨다면 의사 결정자가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요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행정항소심판위원회(AAT)가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67) The object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FOI Act) are to give the Australian community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the Commonwealth Government by: requiring agencies to publish information providing for a right of access to documents
This right of access is subject to certain exemptions contained in Part IV of the FOI Act.
You also have a right to ask for information that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olds about you to be amended if it is incomplete, out of date, incorrect or misleading.
All decisions made under the FOI Act must be made by an authorised decision maker.

내부 심사 신청은 다음 주소로 우송되어야 한다:

FOI Coordinator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ustoms House, 5 Constitution Avenue, CANBERRA CITY ACT 2601

- 정보위원회

심사신청은 다음 결정들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정보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a) 문서에의 접근이용을 거부하는 결정
(b) 문서에의 접근이용을 거부하는 내부 심사에 대하여 관세 및 국경 보호청에 의해 내려진 결정
(c) 문서에의 접근이용을 거부하는 결정에 관한 내부 심사에 대한 신청을 하는 추가 기간을 거부하는 결정

정보 위원회로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신청이어야 하며 통지가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통지가 전자통신을 통해 보내질 전자 주소를 기록함) 관세 및 국경 보호청에 의해 내려진 결정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 감독관에 의한 심사 신청은 현재의 전화번호부에서 명시된 정보 위원회 주소로 선불우편으로 보내거나 paragraph (a)에서 언급된 정보 위원회에 의해 명시된 전자주소로 전자통신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 행정항소심판위원회(AAT[68])의 재심

정보위원회의 내부심사 결정에 이의가 경우에는,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정보 접근에 대한 당사자의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거나 기간내에 심사에 대한 당신의 요청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AAT)에의 항소는 심사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결정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된 시간의 만료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항소에는 공탁

68)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비 지불이 동반되어야 한다. 공탁비는 상황에 따라 환급가능하다.

○ 옴부즈만제도의 이용

당사자의 요청이 처리된 방식에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호주연방 옴부즈만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심사청구의 불만을 조사하고 적절할 경우 권고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호주연방 옴부즈만에의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다음 주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 Commonwealth Ombudsman, GPO Box 442,CANBERRA ACT 2601

□ 호주 관세법상 행정구제 절차

호주 관세법 제8장 제4부 관세분쟁(Dispute as to duty) 이하 제167조(Payments under protest)가 관세분쟁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이하에서는 관세납부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세관당국과, 주법원 또는 연방법에 제기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9]

호주 관세법은 반덤핑 관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장B 제9부에서 별도의 심사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70]

○ **행정항소심판위원회 개요**

---

69) 호주 관세법 제167조 (Payments under protest)
(1) If any dispute arises as to the amount or rate of duty payable in respect of any goods, or as to the liability of any goods to duty, under any Customs Tariff, or under any Customs Tariff or Customs Tariff alteration proposed in the Parliament (not being duty imposed under the Customs Tariff (Anti-Dumping) Act 1975), the owner of the goods may pay under protest the sum demanded by the Collector as the duty payable in respect of the goods, and thereupon the sum so paid shall, as against the owner of the goods, be deemed to be the proper duty payable in respect of the goods, unless the contrary is determined in an action brought in pursuance of this section.
(2) The owner may, within the times limited in this section, bring an action against the Collector, in any Commonwealth or Stat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the recovery of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um so paid.

70)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호주 정부 부처, 부서, 기관 및 일부 기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결정들을 심사하는 기구이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노포크 섬 정부에 의해 내려진 결정도 역시 심사한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며 결정이 유지되어야 할지 아니면 변경되어야 할지를 판정한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 결정을 한 자나 조직과는 무관하다.

○ **행정항소심판위원회의 주요 관할업무**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호주연방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들을 심사할 수 있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호주 시민권
· 호주연방 노동자의 보수
· 국가장애인보장제도
· 사회보장금 및 가족 지원금
· 조세
· 군인 연금

행정항소심판위원회이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은 위에서 열거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이 심사할 수 있는 결정들에 대한 리스트인 소위 Jurisdiction List는 AAT websit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노포크 섬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한 리스트도 포함하고 있다.

○ **행정항소심판위원회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행정항소심판위원회이 심사할 수 없는 결정은 아래와 같다

· 호주 정부나 노포크 섬 정부에 의해 내려진 모든 결정
· 주 법률이나 준 주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
· 지방정부에 의해 내려진 결정.

법률상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결정을 심사할 수 있다.

○ **심사청구 방법**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작성한다. 작성된 신청서나 서류는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한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웹사이트 www.aat.gov.au에서 입수 가능하다. 또는 신청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서를 입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된 신청서를 행정항소심판위원회로 제출한다. 신청서를 보낼 때 신청자가심사받기를 원하는 결정서 사본도 첨부할 수 있다.

- 편지 작성

신청서를 편지로 쓰는 경우 편지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행정결정을 받은 날짜, 불복사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행정 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결정을 내린 담당자 또는 기관명과 행정결정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 제한기간**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 신청 시 시한은 해당 행정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8일 이내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심사 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심사 신청의 시한은 3개월이다. 이러한 심사청구 시한은 해당 행정결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득이 심사청구 기한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시한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한은 연장되지만 모든 경우에 시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한연장 청구는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당사자가 편지형식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편지형식일 경우에는 심사청구 기한 만료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 이후 절차**

심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소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들에 대하여 알려주는 서한을 발송한다. 또한 행정결정 당사자인 해당 기관에도 심사청구가 접수되었음을 고지한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후, 행정결정을 내렸던 부서로부터 우편으로 문서들을 받게 된다. 이 문서들은 결정에 관련된 문서이며 (T 는 Tribunal (재판소)를 의미함) 문서라고 불린다.

○ **심사의 단계**

대다수의 경우, 심사의 첫 번째 단계는 협의이다. 협의는 심사청구자와 행정결정 기관의 대표자와 함께 AAT에 의해 수행되는 비공식 회의이다. 이 협의에서 심사청구자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판결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협의는 행정항소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보통 6~10 주가 소요된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되도록 심사청구의 양당사자가 해결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2차 협의 또는 조정이나 중재를 진행하고 대다수의 사건들은 이 단계에서 종결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항소심판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판결을 한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의 절차와 심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나, 사건을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심사청구 후 결정의 효력**

행정항소심판위원회에 의해 심사되는 동안 결정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지속된다. 일부의 경우들에서는 행정항소심판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행정항소심판위원회가 결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는 website (www.aat.gov.au)에서 입수 가능하며 신청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서를 입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유럽권

(1) EU의 관세행정구제제도

(가) EU의 법체계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 공동체의 주요기관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그리고 감사원(Court of Auditors)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①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② 공동체입법, ③ EU법원의 판례, ④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②의 공동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1.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2.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

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등을 직접 구속한다.

4.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5.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1992년 7월 2일 체결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이 1993년 1월 11일 발효됨에 따라 EU회원국의 관세법은 각 회원국 국내법 대신 EU공동체법에 근거하여 입법된 EU공동체관세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EU는 1994년 1월 1일 EU관세법전 집행명령[71]을 포함하여 EU관세법전[72]으로써 EU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관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관세법은 EU공동체의 대외무역에 관한 통일적인 법전에 근거하여 현대적이고 배타적인 법체계를 의미한다.

EU관세법전은 EU회원국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법원(法源)이 되며, 이 관세법전을 통하여 EU공동체 및 각 회원국 차원에서 제정·공포되는 집행법규가 보충된다. EU관세법전은 전체 253개 조문에서 EU관세법의 원칙적 규정만을 내포하고 있고, 개별규정은 특히 관세법전에 상응하여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집행명령(DVO)상의 915개 조문 및 113개 부속서에서 찾을 수 있다.

(나) EU관세법상 권리구제

EU관세법전에서 제8장 권리구제(Rechtsbehelf) 법규는 EU관세법의 주요한 개혁으로 평가된다. 처음으로 EU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기초적인 권리구제시스템으로 규정되었고, 모든 회원국에서 항고 및 제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경제관계인의 지위는 현저하게 강화되었음.

---

71) VO[EWG] 2454/93, ABl. EG 1993 Nr. L 231/1 - VSF Z 0205
72) Zollkodex)(VO[EWG] 2913/92, ABl. EG 1992 Nr. L 302/1 - VSF Z 0200

EU관세법전 제243조 제2항 a호에 따라 권리구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각 회원국의 관세행정청에 제기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의 권리구제는 EU관세법전 제243조 제2항 b호에 따라 재판소 또는 이와 동등한 특별한 기관인 독립적인 법원에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별적 규정을 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율하도록 함에 따라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Abgabenordnug)을 개별적 규정으로 마련한다. 따라서 EU관세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에 적용되며, EU관세법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개별문제로서 항고 내지 제소 권능 및 집행의 중지에 대한 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관세행정상 권리구제의 권능

누구든지 EU관세법의 적용영역에서 행해진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해 권리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구제의 청구인은 자신이 그 결정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EU관세법의 적용영역에서 관세당국에게 어떤 결정을 구하였으나 EU관세법전 제6조 제2항[73]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을 받지 못한 자 또한 권리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구제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결정을 행하였거나 부작위소송의 대상인 결정을 청구받은 회원국에 제기할 수 있는데, 최초의 단계에서는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소송의 대상인 결정을 행한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회원국의 효력있는 국내법에 따라 법원 또는 이와 동등한 특별한 기관인 독립적인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2) 권리구제대상의 집행정지

권리구제의 제기로 인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관세당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결정의 적법성에 근거있는 의문을 갖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73)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되었다면 그 결정은 관세당국에 서면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유효한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관세당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당국이 기간을 엄수하여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은 초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당국은 신청인에게 그 이전에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간경과의 사유 및 관세당국이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기한의 통보로 알림.

집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결정이 수입조세 또는 수출조세의 징수를 발생시킨다면 담보제공과 연계하여 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나 이 담보제공이 납세의무자의 상황을 근거로 동일한 요구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유형의 심각한 어려움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3) 회원국의 규율제정 권한과 사물관할

EU의 각 회원국은 권리구제절차의 개별적인 규정을 제정·공표할 수 있는 규율 제정권한을 가진다.

EU관세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은 관세당국이 형벌법규 및 질서위반법규의 원칙에 따라 행한 결정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해 제기된 권리구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 독일

(가) 독일의 관세제도 개괄

□ 개요

독일의 관세행정기관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위연방재무행정청(Oberste Bundesbehörde)으로 연방재무성(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이 있고, 중급재무행정청(Bundesoberbehörde)으로 연방재무국(Bundesfinanzdirektion)이 있으며, 지역재무행정청(Örtliche Behörde)으로 본부세관(Hauptzollamt) 및 세관(Zollamt)가 있다. 아울러 중급 관세수사기관으로 관세범죄청(Zollkriminalamt)과 지역관세수사기관으로 관세범죄수사세관(Zollfahndungsamt)이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다.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독일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74]

74)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 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 관세율 검색방법

ㅇ 품목별/코드별 관세율 찾기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

영어로 언어 설정이 가능하며, Goods Code 에 HS 코드를 입력하고 Country of origin 에는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EU 로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 Country of origin 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되며, 그 외 국가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1년 7월 1일 한-EU FTA 협상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 또는 순차적인 철폐의 경우 아래에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 확인이 편리하다.

(나) 독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독일 관세당국의 조세확정에 대해 납세자는 한 달 이내에 본부세관(Hauptzollamt)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본부세관은 이를 심사한 후 항소권리고지(Rechtsbehelfsbelehrung)와 함께 재결을 선고하며, 본부세관의 재결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재정고등법원(Finanzgerich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의 관세행정 구제절차]



□ 이의신청(항소)의 대상

EU관세법령 및 독일의 국내관세법령에 따라 관세행정당국이 행하는 행정처분(Maßnahme)에 대해 여러 가지 권리구제(Rechtsmittel)가 가능한데, 관세 등의 부과처분이나 통관의 중지 내지 보류(Zurückhaltung)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Einspruch) 뿐만 아니라 압류(Beschlagnahme) 및 몰수(Einziehung) 처분에 대한 항소(Rechtmittel)의 제기도 가능하다.

압류 및 추징처분에 대한 항소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본래 의미의 관세행정구제절차에서 이의신청(상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일조세기본법을 적용하는 조세부과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분, 연방재무행정청 또는 州재무행정청이 독일조세기본법상 조세부과 문제 이외의 사항에 관한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처분, 독일세무사법[75] 제164a조에 따른 독일조세기본법의 적용과 관련한 공법상 항소 문제, 그 밖에 법률상 재판 이외의 권리구제가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으면서 재무행정청이 집행하는 행정처분

- 둘째, 전술한 독일조세기본법을 적용하는 조세부과 문제 등과 관련한 재무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에 대한 통보없이 적정한 기간 내에 재무행정청의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독일조세기본법을 적용하는 조세부과 문제의 적용범위에는 조세환급을 포함한 조세행정 또는 그 밖의 국경에서 상품의 이동에 대한 금지 및 제한에 대한 연방재무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재무행정청이 행하는 조세법규의 적용·집행과 관련된 문제이고, 여기에는 재무전매[76]의 문제도 조세부과의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변경한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의 변경이 행정처분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법규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사유에서 행해졌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독일조세기본법 제171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77]확정(Grundlagebescheid)에 대한 취소소송은 세액결정(Folgebescheid)의 취소청구가 아니라

75) 독일은 관세행정과 국세행정을 재무행정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사도 포함하는 재무행정 전문자격사법임.
76) 독일에서 주류 및 담배의 전매는 관세행정의 소관임.
77) 조세의 확정에 필요한 과세물건의 확정, 과세표준결정 또는 여타의 행정처분을 기속하는 조세부과결정을 말한다.

바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조세기본법상 조세형벌법규 및 질서위반금법규에 따라 재무행정당국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며, 독일조세기본법 제367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무행정당국의 결정,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무결정, 독일조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연방 또는 州 최상위재무행정당국의 행정처분, 독일세무사법 제2장 제2절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급재무국(Oberfinanzdirection)이 행한 결정, 독일세무사법 제2장 제2절 및 제6절의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세무사회가 행한 결정은 이의신청의 제척대상이 된다.

□ 이의신청(항소)의 제기권자

재무행정당국의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능을 갖는데, 특히 과세요건의 획일적이고 개별적 확정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능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리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권을 갖는 기업의 대표가 없는 경우 후술하는 이의신청권수임자

- 둘째, 전술한 대리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가 없는 경우 조세부과의 대상자인 사원(Gesellschafter), 공동사원(Gemeinschafter), 합동권리자(Mit- berechtigte)

- 셋째, 전술한 대리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가 있는 경우 조세부과의 대상자인 퇴사한 사원, 공동사원, 합동권리자

- 넷째, 조세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총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액에 관련되는 각 자

- 다섯째,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문제의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조세부과에 의하여 해당 문제와 관련이 있는 각 자

여기에서 전술한 대리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는 독일조세기본법 제183조 제1항 제1문 또는 1986.12.9.의 조세기본법 제180조 제2항에 따른 과세요건의 개별적 확정에 관한 명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수령대리권자

(gemeinsame Empfangsbevollmächtigte)를 말하고, 만일 과세요건확정의 이해관계자들이 위임하는 공동수령대리권자 없다면 독일조세기본법 제183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에서 의제하거나 같은 법 제183조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에 따라 또는 앞의 명령 제6조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에 따라 재무행정청이 지정하는 공동수령대리권자가 대리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에게 주어지는 이의신청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

- 이것은 수령대리권자의 이의신청권능에 재무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변을 위임한 조세확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술한 규정은 이해관계자가 조세확정 통지 또는 수령대리권자의 이의신청권능에 대해 수령대리권자 지명에 대한 최고를 통고 받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과세표준가격의 확정결정, 기초세액결정 또는 기초세액의 분할이나 할당 결정이 권리승계자에게 그것에 대한 통지 없이(독일조세기본법 제182조 제2항, 제184조 제1항 제4문, 제185조 내지 제190조)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권리승계자는 그 권리순위자에게 부여된 청구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포기와 철회

독일조세기본법을 적용하는 조세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관세행정당국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후 한 달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납세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무행정청에 납세신고가 접수된 후 한 달 이내에, 종래까지 납부한 조세액을 낮추어 납세신고 또는 환급청구에 대하여 재무행정청의 동의가 통지된 후 한 달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조세기본법을 적용하는 조세문제와 관련한 관세행정당국의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이 취해진 이후 취소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취소는 납세신고를 제출한 때 해당 조세가 납세신고액과 차이 없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의사표시될 수 있으며, 그 취소 이후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과세요건에 대해 독일조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계약 이후의 양해절차(Verständigungsverfahren) 또는 중재절차(Schiedsverfahren)에 대해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취소가 적용되는 과세요건은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의 취소는 해당 재무행정청에 대해서 문서 또는 의사록에 의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취소를 위한 더 이상의 의사표명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기된 이의신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통보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데, 과세요건이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따른 합의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대해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은 이것에 대해 한정하여 철회되고, 철회는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상실의 효과를 가지게 되며, 나중에 무효

□ 이의신청의 제기방식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거나 의사록(Niederschrift)에 의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문서에 누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지가 나타난다면 충분하고, 전보에 의한 신청도 허용되며, 이의신청의 부정확한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의 확정 또는 과세액의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세부과결정의 통지에 대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로 소관 재무행정청을 위해 행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역시 소관 재무행정청에 제출될 수 있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항소장은 그 이의신청이 기간경과 이전에 소관 재무행정청에 이송된다면 전술한 방법에 따라 소관 재무행정청에 접수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제기 시 이의신청의 대상되는 행정처분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야할 범위와 해당 행정처분의 정지를 청구(제안)하였는지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논거가 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방법이 제출되지 않으면 아니한다.

□ 이의신청의 심사 및 항소절차에 참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재무행정청은 해당 이의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특히 법규에서 정한 형식과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요건의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각하될 수 있다.

관세행정구제절차에서 관계인(Beteiligte)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와 관세행정구제절차에 참가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관세행정구제절차의 참가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을 할 권한이 있는 재무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해당 재결에 의해 조세법률에 따른 법률상 이해에 관련되는 제3자를 구제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는데, 특히 납세의무자와 함께 조세법률에 따라 보증한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고, 참가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에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어떠한 조세가 여타 조세권자를 위해 관리된다면 그 조세권자는 자신의 이해가 그 재결에 의하여 관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행정구제절차에 참가될 수 없다.

-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제3자가 해당 재결이 자신들에 대하여 단지 통일적으로 결정을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권리구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일조세기본법 제352조에 따른 권능이 없는 합동권리자(Mitberechtigte)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 권리구제절차에 참가하는 자는 독일조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제3자 참가규정에 따라 50명이 넘는 다수의 사람들이 권리구제절차에 참가가 고려된다면, 재무행정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참가를 신청한 사람만 참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이 연방공고로 통지되고 그 밖에 해당 재결이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로 확장하여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표되는 경우에 명령의 개별적 통지는 생략될 수 있다.

- 이때 그 기간은 최소한 연방공고로 공표된 이후 3개월에 달하여야 하며,

기간 지체에서 기인된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독일조세기본법 제110조의 원상복귀 규정이 적용되고, 재무행정청은 특정한 정도로 식별할 수 있게 관련된 사람

□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취소소송이 청구된 행정처분의 집행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데, 특히 조세의 징수는 정지되지 않고, 과세요건 결정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것에 기인되는 세액결정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을 행한 재무행정청은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데, 독일조세기본법 제367조 제1항 제2문에서 정한 바대로 효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거나 그 집행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우월적인 공공이익의 요구에 의하지 않는 지나친 어려움으로 부당한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여야 하다.

- 그 행정처분이 이미 집행되었다면 '집행의 정지'에 '집행의 취소'가 대신하게 되며, 조세부과의 처분 시 확정조세에 대한 집행의 정지 및 취소는 부과되는 조세공제액, 부과되는 법인세 그리고 선납세액의 확정에 한정하여 감소시키고, 이것은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 또는 취소가 본질적인 손실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는 담보제공과 연계하여 행해질 수 있다.

과세요건 결정(Grundlagenbescheid)의 집행이 정지되는 한 세액결정의 집행도 정지될 수 있는데, 세액결정의 처분은 허용된 채로 지속될 수 있으며, 세액결정의 정지 시 과세요건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때 담보제공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담보제공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영업의 금지 또는 직업행사의 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그 행사에 아무런 장해를 받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행한 재무행정청은 그것이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특별한 명령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장해효를 제거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이익이 성문규정으로 근거하여야 한다.

□ 권리구제 절차의 중지 및 정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계쟁중인 법적다툼의 대상을 형성하거나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확정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좌우된다면 재무행정청은 여타의 법적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또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이의신청의 재결을 중지할 수 있다.

재무행정청은 권리구제절차의 중지가 중요한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규범의 합헌성을 이유로 또는 법적문제로 그 절차가 EU법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연방고등재정법원에 관련되거나 해당 이의신청이 그 법원들에 의해 지지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는 정지된다.

- 이것은 독일조세기본법 제165조 제1항 제2문 제3호에 따른 잠정적 조세확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고위 재무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사정이 비슷한 사례의 특정한 그룹에 대한 공지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 절차가 같은 법, 같은 항, 같은 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한해 정지 명령된다.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인이 이를 청구하거나 재무행정청이 이것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속행된다.

권리구제절차의 중지 또는 정지에 대한 신청이 거부되거나 권리구제절차의 중지 또는 정지가 무효로 선언된다면 거부 또는 무효선언에 대한 위법성은 이

□ 과세자료의 통보 및 참가인의 변론

권리구제절차의 참가인에게 과세자료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신청에 의해 또는 과세자료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공된다.

이의신청인의 신청으로 재무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선고에 앞서 사실증인 및 법적증인을 변론하여야 하고,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 참가자는 재무행정청이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변론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재무행정청은 이의신청인의 청구 없이도 이들과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 참가인을 변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0명 이상 다수의 권리구제절차 참가인들의 변론에 대해 재무행정청은 그 변론을 생략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절차 참가인이 재무행정청이 결정한 적정한

기간 내에 공동의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이들을 사실증인 및 법적증인으로 변론시켜야 한다.

권리구제 참가인들은 대리위임권을 갖는 자를 통하여 대리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들은 재무행정청이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변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론을 위한 출석은 독일조세기본법 제328조에 따라 강요될 수 없다.

□ 기간의 설정과 절차규정의 적용

재무행정청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에게 기간 설정의 법적효과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 첫째, 이의신청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에 고려되거나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의 제출기간

- 둘째, 일정한 해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해명기간

- 셋째, 이의신청인이 그것에 대해 의무가 지워지는 한도에서 증거수단의 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기간

설정된 기간을 지나서 행해진 진술 또는 제출된 증거수단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독일조세기본법 제367조 제2항 제2문의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의 변경은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0조의 원상복귀가 상응하게 적용된다.

재판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는 그 밖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 또는 이의신청인이 청구하는 특정한 행정처분의 발령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독일조세기본법 제93조 제5항, 제96조 제7항 제2문 및 제98조 내지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권리구제절차 참가인 및 그 전권위임자, 소송보조인(같은 법 제80조)에게 증거수집(조사)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짐.

취소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되었다면 새로운 행정처분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 첫째, 독일조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정정된 경우;

- 둘째, 새로운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효력이 없어진 행정처분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항소권리고지(Rechtsbehelfsbelehrung)와 함께 권리구제절차 참가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독일조세기본법 제122조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행정처분을 행사한 재무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의 결정을 통하여 재결하고, 해당 조세사건에 대해 추가로 다른 재무행정청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면 그 다른 재무행정청이 재결하며, 독일조세기본법 제26조 관할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을 행한 재무행정청은 그 사건을 전체 범위로 새롭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행정처분은 그 근거의 통보와 함께 불리한 재결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이것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재결은 재무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요구된다.

어떤 행정기관이 소관 재무행정청을 위해 법률상 규정을 근거로 행사했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면 소관 재무행정관청이 그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을 하며, 또한 소관 재무행정청을 위해 처분한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시정할 권한이 있다.

(다) 독일의 재무행정소송제도

□ 독일 사법체계 개괄

독일은 연방 헌법법원, 연방 상급법원 및 각 주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연방 상급법원은 행정법원, 연방 노동법원, 연방 사회법원, 연방 재정법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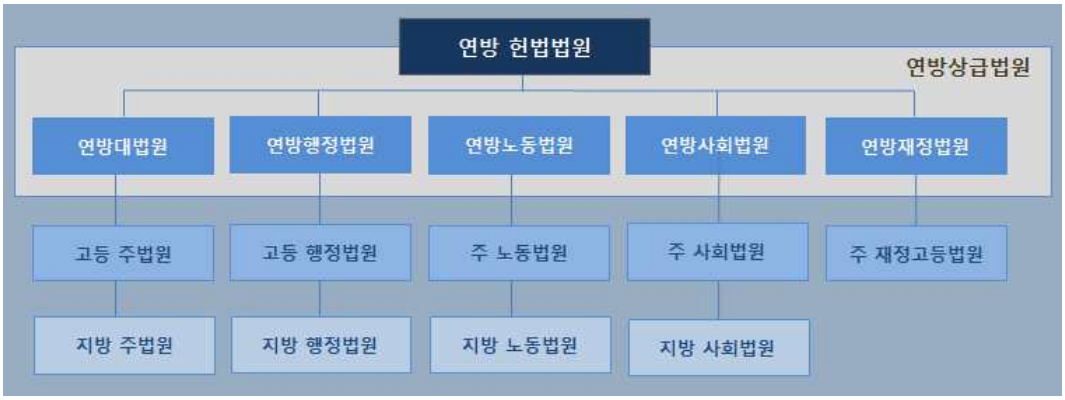
연방 헌법법원는 기본법 제92조에 의거해 설치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 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각 부는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에서 각각 4명씩 선출한다. 법관의 임기는 12년이며, 재선은 불가하다.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고등 주 법원(Oberlandesgericht) - 지방 주 법원(Landesgericht)는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하며,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 및 형사재판을 관할한다. 헌법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법관은 종신제이다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주 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지방 노동법원(Arbeitgericht)는 카셀(Kassel)에 소재하며,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한다.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고등 행정법원(Oberverwaltungsgericht)-지방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는 베를린(Berlin)에 소재하며, 사회법원, 재정법원 및 연방헌법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한다.

연방 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주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지방 사회법원(Sozialgericht)는 카셀(Kassel)에 소재하며,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한다. 연방 재정법원(Bundesfinanzhof)-재정법원(Finanzgericht)는 뮌헨(München)에 소재하며,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한다.



□ 재무행정소송의 주체

독일재정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은 뮌헨에 위치하고 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州에 3개의 재정고등법원(Finanzgericht)이, 바이엔(Bayern)州에 2개의 재정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12) 각 州에 한 개씩의 재정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재정고등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되고 그 이하의 하급법원은 없다.

연방재정법원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권이 행사되나, 구두변론 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에서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권이 행사되고, 재정고등법원 합의부의 재판권은 3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78]에 의하여 행사된다.

- 명예판사는 직업판사가 아닌 이른바 소인판사로서 구두변론과 합의에 있어 직업판사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합의부에서 사건이 단독판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에는 명예판사가 참여하지 않으며,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권이 행사되더라도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예판사의 참여 없이 직업판사에 의하여만 재판권이 행사된다.

독일의 재무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라는 개념 대신에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관계인(Beteiligte)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당사자격인 원고(Kläger)와 피고(Beklagte) 외에 소송참가인(Beigeladene) 및 공익의 대리인[79](Vertreter des Öffentlivhen Intresse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 재무행정소송상 취소소송

취소소송(Anfechtungsklage)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등 기타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무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내용 또는 근거가 변경되거나 보완된 경우

78) 명예판사는 법원장이 의장직을 맡고 주정부에 의하여 선정된 행정공무원, 주의회 등에 의하여 선출된 7인등 9인으로 구성된 명예판사선거위원회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되며, 그 자격은 독일인으로서 30세에 도달되어야 하고 선출 전 1년 이내에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79)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법관 자격을 가진 자를 재무행정소송에서의 공익의 대리를 위하여 상설적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연방재정법원에는 '연방대리인'(Oberbubdesanwalt)이 있고, 하급법원에는 '공익의 대리인'이 있다.

에는 그와 같이 재무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보완된 형태로서의 행정처분이 최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재무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어진 후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고, 연방이나 州의 최고 재무행정청이 행사한 행정처분의 경우, 재무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변경된 재결 또는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재무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무행정심판의 재결이 교부된 후 1개월 이내에, 재무행정심판의 제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고지 후 1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고, 재무행정심판의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3개월이 기다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무행정심판의 재결이 행하여지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동안 소송절차가 정지될 수 있고, 정지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될 수 있다.

□ 재무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은 재무행정청에 신청한 특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재무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상태에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 만약 신청한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금전의 지급이나 사실행위이라면 의무이행소송이 아니라 일반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작용 중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이행소송은 행정처분 이외의 나머지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재무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즉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의 제기가 필요하고 재무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제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고지 후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신청한 후 또는 재무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충분

한 이유 없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즉 부작위의 경우에는 재무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3개월이 기다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 또는 재결이 행하여지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기간 동안 절차를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원고가 구하는 행정처분이 그 기간 내에 발하여지면 법원은 본안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 재무행정소송상의 가구제(假救濟)제도

재무행정청 또는 법원은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진지한 의심이 존재하거나 그 집행이 관계자에 대하여 지나친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어려움이 우월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따라 집행의 정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방재정법원은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 실현이 좌절되거나 본질적으로 곤란하여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면 분쟁대상과 관련하여 假命令을 할 수 있는데, 가명령은 분쟁이 있는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임시적인 상태를 규율하기 위하여도 본질적인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들로부터 필요하다고 보이면 허용된다.

□ 재무행정소송상 재판의 종류와 강제집행

재판의 종류로서 판결, 결정, 명령과 판결에 갈음한 형식의 재판으로서 '법원의 권고'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는데, 사건이 특수한 사실상 법률상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실관계가 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구두변론 없이 '법원의 권고'라는 재판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그의 선택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구두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권고'는 판결로서 효력이 있고, 당사자의 불복으로 적시에 구두변론이

신청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동일한 행정작용이 20개를 초과하는 절차의 대상일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으로써 그 가운데 적당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절차만을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 이러한 시험적 절차(Musterverfahren)에서 진행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정지되어 있는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비교하여 사실상 법률상 아무런 본질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료하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부의 구성원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으로써 재판할 수 있고, 시험적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이 정지된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의무이행소송의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재무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재무행정청에 대하여 10,000 Euro까지의 강제금을 결정으로써 경고할 수 있고, 효과 없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제금을 확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강제금은 반복적으로 경고되고 획정되며 집행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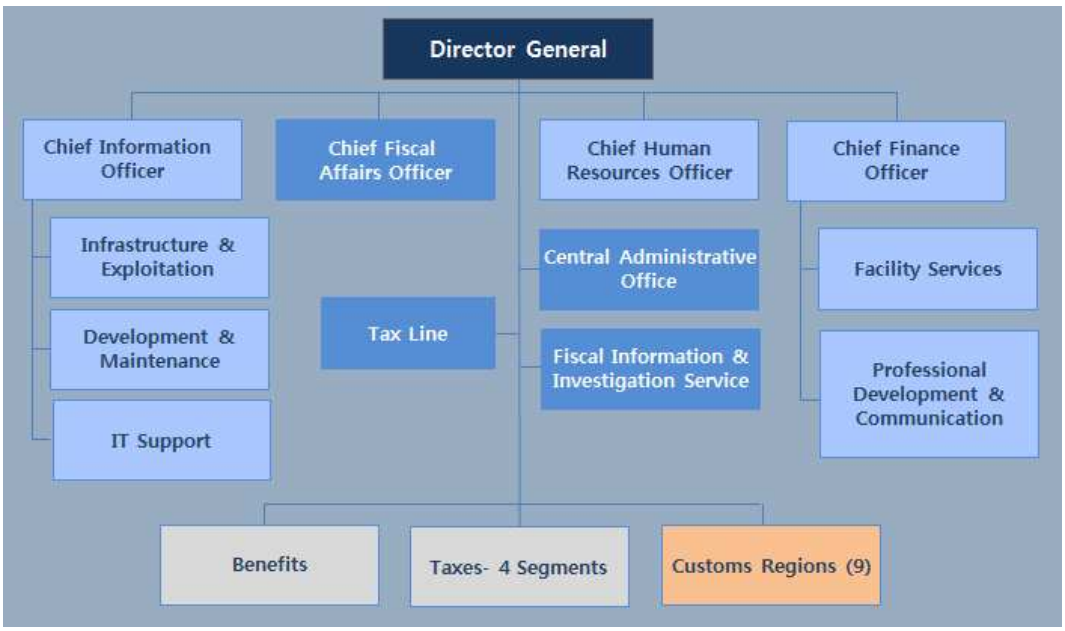
(2) 네덜란드

(가) 관세제도 개괄

□ 개요

네덜란드 세무 및 관세행정조직(NTCA: Netherlands Tax and Customs Adiministration)은 중앙행정부(Central Office)가 세무 및 관세와 관련된 전반을 관장한다. Tax Line은 개인 및 내국보험, 관세, 자동차세 등의 문의사항을 담당하는 NTCA의 일부에 속한다.

[네덜란드 세무 및 관세행정 조직도]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 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 받기 원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80]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관세액은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네덜란드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와 소비세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www.belastingdienst.nl).

2011년 1월 1일부터 EU에서의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확인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EU내 사업자가 자국이 아닌 타 국가와의 수출입을 하기 위해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번호로 이전의 VAT 번호와 유사하나 EOIR(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에는 앞에 국가를 표기한 약어가 있다.

(예) 네덜란드 NL000000000. 독일 DE000000000)

EOIR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ex.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지사의 경우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관세율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로 EU회원국의 관세율을 제공하는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TARIC)을 이용하거나 네덜란드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조회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다.

ㅇ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TARIC)

- “Tariff Rates” 클릭하면 해당 품목 관련 한국이 별도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Restriction”을 클릭하면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80) Belastingdienst/Douane/Rotterdam Rijnmond(Team Bindende Tariefinlichtingen), Postbus 3070, 6401 DN, HEERLEN, The Netherlands

확인이 가능하다.

ㅇ네덜란드 관세청 제공 관세 조회 시스템(http://gebruikstarief.douane.nl/)

- CN코드 트리에서 해당 품목의 CN코드 찾아서 클릭한 후, Invoer/Doorvoer 탭을 클릭하면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 관세율은 KR 열의 Tarief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 네덜란드의 관세행정구제제도[81]

□ 정부결정에 대한 이의 및 항소의 개요

네덜란드 정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당신의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에 반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경우), 당신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나아가 이의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최고 행정 법원 관할 부서(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정기한의 도과

만일 정부가 법정 기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인은 정부에 소위 채무불이행 통지(ingebrekestelling)를 발송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통지를 발송하면 정부는 2주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예기한을 가지게 된다. 이 유예기간도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행정법원에 즉시 항소할 수 있다. 이때 이의나 항소절차에는 변호사 고용의무가 없다.

□ 이의신청

당사자는 결정을 받거나 결정이 발표된 때로부터 6주 이내에 문제의 결정을 내린 정부기관에 이의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정부기관은 이의신청서에 대한 제출일이 경과된 때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결정기간은 12주이다. 두 기간 모두 6주 연장이 가능하다.

81) 네덜란드 관세챙정 구제절차는 네덜란드 관세청이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벌칙

정부가 규정된 기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벌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이 벌금을 지불받기 위해 결정 기한 초과 벌금 양식 을 사용할 수 있다. 결정 기한 지연의 경우에 대비하여 조세 및 관세 행정당국은 자체의 벌금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 항소

항소신청는 일반적으로 지방 행정 법원에 제출하지만 때때로 예외도 존재한다. 문제가 되는 해당 행정결정은 결정에 대한 항소 관할이 어디인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항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6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항소를 제출할 시, 항소인은 법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법원은 판결을 서면으로 발행한다.

(다) 네덜란드의 사법체계

네덜란드 사법체계는 11개 지방법원(District Courts), 4개 지역[82]의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3개의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s),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특별재판소는 The Central Appeals Tribunal, 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이다.

The Central Appeals Tribunal은 Utrecht에 소재하고 사회 안전보장과 민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항소법원이다. 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은 Hague에 소재하고 무역 및 산업에 대한 행정 고등법원(Administrative High Court for Trade and Industry)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사회경제 분야의 행정법상 분쟁을 특별히 담당한다. 또한 경쟁법이나 통신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명시된 분쟁을 다루기도 한다.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은 헤이그에 소재하는 네덜란드 일반사법의 최고행정법원이다. 동 법원은 네덜란드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일반인, 협회, 법인 등의 항소에 대응한다. 또한 행정

82) 1. Hague 2. Amsterdam in the west, 3. Arnhem-Leeuwarden in the east and in the north ,4.'s-Hertogenbosch in the south.

분쟁은 사인과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상호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네덜란드 사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대법원은 웹사이트 Rechtspraak.n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사법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사법체계와 행정법체계가 그것이다.

일반체계상 대법원(Hoge Raad)은 형사법, 조세법, 민사법 등을 다룬다. 일반법시스템의 법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으로 존재하고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사안을 판단하는 법원으로 kantongerechten이 있고 이외에 지방법원(rechtbanken), 항소법원(gerechtshoven)이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법원구성을 가지고 있다. 주의회: Raad van State (Council of State)-행정사법부: Afdeling bestuursrechtspraak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중앙항소재판소: Centrale Raad van Beroep (the Central appeals tribunal)[83], 통상산업항소재판소: College van beroep voor het bedrijfsleven (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 가 그것이다.

83) 사회안전보장과 민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항소법원이다.

대법원은 모든분야의 행정법적 문제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일반행정과 관련한 1심법원은 지방법원rechtbanken), 조세와 관련한 1심법원은 항소법원(gerechtshoven), 특정한 경제행정법관련 1심법원은 로테르담법원(Rotterdam rechtbank)이 1심법원이 된다.

(3) 영국

(가) 영국의 관세제도 개괄

□ 개요

영국의 조세담당기관은 종전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를 관장하는 내국세입청(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 the Board)과 관세와 소비세등 간접세를 관장하는 관세소비세청(The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5년 4월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RMC)로 단일화 되었다.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일단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한 수 영국 정부기관 사이트인 https://www.gov.uk/trade-tariff/sections에 접속하여 상단에 위치한 Search Tariff 칸에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상품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영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84]

□ 사전심사 요청(Requests to HM Revenue and Customs):BTI & BOI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영역이지만 영국관세청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관련법령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세청에 사전심사(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를 요청할수 있다.

BTI는 EU 공동체 관세법[85]과 이행법[86]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BTI의 결정은 서면으로 제공되고 6년간 EC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가진다. BTI 신청서류는 품목분류 서비스 담당부서에서 획득할 수 있다.

특히 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 원산지정보에 대한 사전심사 역시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BOI는 특혜 또는 비특혜관세를 판단하는 원산지결정으로 BOI결정 역시 그것이 이슈가 된 날로부터 3년간 EC회원국에 법적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출입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 Notice 600, EC의 BOI 정보는 Notice 8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Notice는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www.hmrc.gov.uk or)에서 HMRC VAT 코너에서 확인 할 수 있고 Helpline(0845 010 9000)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 관세행정구제(Customs Appeals)

1994 재정법(Finance Act 1994)은 대부분의 관세문제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84) 영국의 관세행정구제절차는 영국관세청(HRMC)상 행정구제절차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www.hmrc.gov.uk/complaints-appeals/how-to-appeal/index.htm

85)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86)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세관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30일의 기간동안 해당결정에 대한 질의를 관세청에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당사자의 질의를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린다.

[영국의 관세행정 구제절차]



관세청의 위와 같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 첫 번째는 해당 결정을 내린 담당자와 독립적인 담당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재심사 요청 또는 조세재판소에의 항소는 해당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한다. 관세청에 재심사 요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은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하고 이 기간은 특정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관세청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요청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MRC1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한 재심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재심사결정에도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독립기관인 조세재판소(Tax Tribunal)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조세재판소는 사법부의 일부로서 관세청과 독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초심 심판소(Tax Tribunal (First-tier)) 나 상급 심판(Tax and Chancery (Upper Tribunal))[87]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초심 심판 관할이고 상급 심판은 특별히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만을 관할한다. 초심 심판이나 상급 심판에서 허용할 경우 초심 심판에서 결정된 사건에 대한 법률심(point of law)을 상급 심판에 제기할 수 있다.

한정적이긴 하나 처음부터 상급 심판이 관할하는 사건도 있다. 그 대상은 복합사건(complex), 고액사건(large financial sum), 어느 일방 당사자의 불합리한 행위사건(either party has acted unreasonably) 등임.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소에 의해 결정된다.

심판소 결정사항에 대해 불복할 경우 사법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그리고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3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왕국(United Kingdom)으로서 3국은 각기 다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내국세의 위원회 결정이나 간접세의 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3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각 사법제도에 따라 법원판결을 받은 후,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 영국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상원(House of Lord)에 상고하여 최종심을 받는 독특한 구조이다

  ① 잉글랜드 및 웨일즈 : The Court of Appeal in England and Wales

  ② 스코틀랜드 : 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

  ③ 북아일랜드 : The Court of Appeal Northern Ireland

87) http://www.justice.gov.uk/tribunals/tax-and-chancery-upper-tribunal

□ 기타 조치

- 중재절차의 활용

관세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나 항소절차외에서 중재자를 통한 중재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면 관세청과 독립된 추천에 지정되는 중재자에 의하여 진행된다. 중재절차의 구체적 방법은 중재사무소가 발행한 'How to complain about Customs and Excise' (AO2)라는 리플렛을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은 별도의 중재사무소를 두어 해당사무소로부터 행정사항에 대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88]

- 옴부즈만 절차 활용[89]

영국은 행정사항과 관련하여 중재절차 외에 옴부즈만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기간의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고 사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옴부즈만은 영국정부와 별개의 독립성을 가지고 중재사무소에 대한 불만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88) www.adjudicatorsoffice.gov.uk.
89) www.ombudsman.org.uk.

(4) 슬로바키아

(가) 슬로바키아의 관세제도 개괄

□ 수출입제도

○ 수입관리제도

1991년의 무역자유화 조치시행 이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

○ 수입허가

일반 부문(General)과 세부 부문(Specific)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일반 부문의 100여개 품목에 대해 대외무역부의 허가서가 필요하며, 잔여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추천서가 부가적으로 요구됨. 환경과 수입쿼터 등을 고려하여 인가된다.

세부 부문은 3개 품목군(의약품, 무기, 코콤대상품)으로 구분되며 경제부의 추천서가 부가적으로 필요하고, 환경, 보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가된다.

○ 수입쿼터

수입쿼터의 결정은 경제부에서 관할하며,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

- CEFTA(중부유럽 자유무역 협정) 가입

CEFTA는 코메콘 붕괴 이후의 대서방 교역의존도 급증에 따른 상호간 교역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말 체결되어 1993년부터 발효하였다. 1996년 1월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6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0년까지의 단계적인 관세감면 일정을 수립.시행하고, 2003년부터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EU와의 준회원국협정체결

1992년 3월 대EC 무역분야 준회원국협정의 발효로 EU시장에 대한 수출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1994년 2월부터는 준회원국협정이 포괄적으로 발효되어 EU와의 연계가 보다 공고히 되고 있다.

-기타 무역협정체결 현황

·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1992년 12월 발효

· 루마니아와의 자유무역협정 : 1995년 1월 발효

□ 관세제도 및 표준규격제도

○ 관세제도

슬로바키아는 2011년 실시된 세무네트워크 개혁의 일환으로 세무 및 관세 사무소의 조정이 있었다. 그 결과 관세청(Customs Directorate)과 국세청(Tax Directorate이 재정부서(Financial Directorate)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행정의 부서구성은 슬로바키아 재정부 하에 1개 세무서(고액 납세자대상), 8개 세무사무소와 지점, 9개 세관, 1개 형사사무서가 존재한다.[90]

관세기준은 HS 상품분류법을 적용하고 종가세가 대부분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관세, GATT협정관세, 특혜관세이다. 일반관세는 자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적용하고 GATT 협정관세는 GATT 회원국에 부여하는 세율이다. 특혜 관세는 최혜국 관세율의 50%로 1996년 1월 CEFTA에 가입하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관련 내국세는 수입세와 부가세가 있다. 수입세눈 소비재 수입시 적용하며 세율은 7.5%이고 부가세는 23%이다.

관세환급 제도는 공장 합리화를 위한 시설재 수입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

90)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출용 원재료 환급 (수출증명서 필요),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재 수입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표준규격제도

수입품 표시제도는 내용물, 사용법, 품질보증서, 기타 관련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해야 하는 제도로 슬로바키아 국내법에 근거한다.

표준제도의 골격은 EU 기준에 의거하고 있는데, 표준-규격청(The Slovak Office of Standards and Metrology)에서 강제 및 자발적 인증제도를 주관하며 20개 시험소가 운영중이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식료품, 주방용품, 의약품, 가전제품, 엔지니어링제품, 농기계, 플라스틱, 세제, 화장품, 스포츠용품 등이고 자발적 인증은 생산자나 수입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하다.

(나) 관세법상 관세행정 구제절차

○ 슬로바키아 관세법 제85조[91] 행정절차

슬로바키아 관세법에 따르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 슬로바키아 관세법에 규정한대로 따르고 관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EU법[92]이나 슬로바키아 의회에 의해 제정된 특별법[93]에 따라 적용된다.

세관이나 관세청의 결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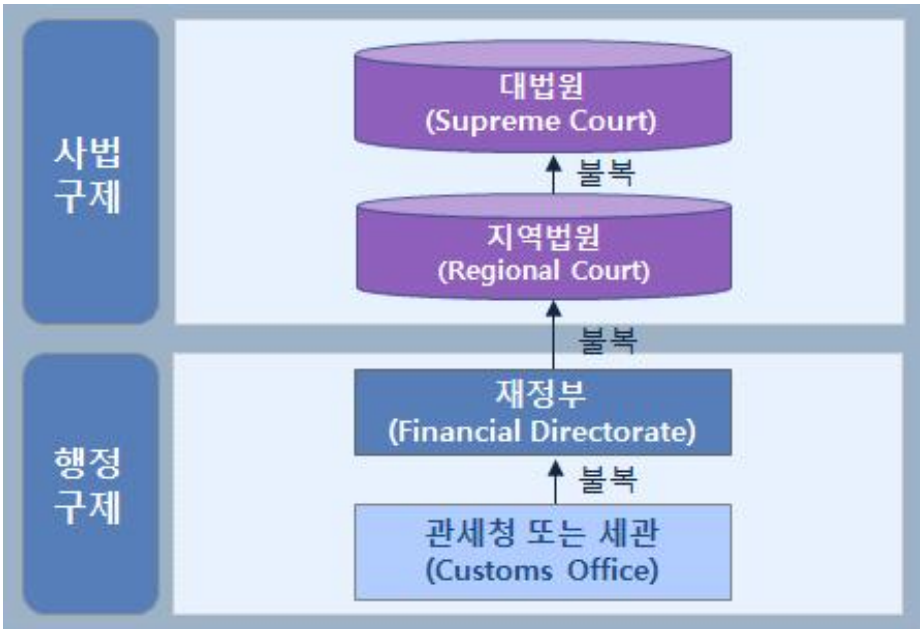
91) (1) A general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proceedings is applied to the proceedings pursuant to this Act or pursuant to a specific regulation of the Union unless this Act, a special act, or a specific regulation of the Union stipulated otherwise.
2) Unless this Act stipulates otherwise,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the Customs Office or Customs Directorate has no dilatory effect. The Customs Office or Customs Directorate can recognize the dilatory effect of an appeal, if it is required by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 person that is affected by a decision and if execution of a decision is not aggravated by it or if general interest does not prevent it.
(3) A timely filed appeal against this decision on imposition of sanction for a customs offence or violation of customs law and against a decision on the seizure has dilatory effect.

92) Council Regulation (EC) No. 2913/92

93) the National Council of the Slovak Republic Act No. 511/1992 Coll.,

그리고 세관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슬로바키아 재정부(The Financial Directorate of SR)가 60일이내에 사전검토 및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기간은 재정부의 결정에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때 연장기한의 제한은 없다. 재정위원회는 Act No. 333/2011 Coll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주로 내국세 및 관세와 기타 재정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구로 Banská Bystrica에 소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관세행정구제 절차]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관세청이나 세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때에는 항소로 인하여 본래의 결정이 지연되지 않는다.

제1항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 당해법(관세법)과 당해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EU의회규정 상의 특정규정, 그리고 특별법(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의회규정), 그외 EU 의회규정상 달리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제2항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청이나 세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지연효과를 갖지 않는다. 관세청 또는 세관은 항소에 대항 지연효과를 인식할 수 있고, 결정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누리는 자에 의해 필요한 경우와 결정의 이행으로 인해 그 이행이 악화되지 않거나 , 일반적 이익이 결정의 이행을 막지 않는 경우

제3항 관세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제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적시에 제출된 항소는 지연효과를 가진다.

(다) 슬로바키아의 행정소송 체계[94)]

□ 행정소송의 전제조건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통상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사법적 심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절차적 부작위에 의한 경우나 행정기관의 불법적 침해행위로 부터의 보호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통한 구제수단을 모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단을 활용 한 후에도 불복의사가 있는 경우에 사법심사가 진행 될 수 있다.

□ 행정소송의 권리

행정소송 신청인은 행정적 절차에서 행정 기관의 결정 혹은 행위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법인이다. 행정 절차의 위법한 부작위에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법인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 앞서 진행된 행정절차를 담당한 행정기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주(州) 행정기관, 지역 혹은 지방 자치 정부 조직, 전문인 이익조합 등이 개입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제기 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행정결정의 통지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를 제기하고자하는 해당 행정결정의 통지가 있은 후 2개월내에 제기되어야한다.

94) 유럽행정사법위원회(ACA)의 슬로바키아 행정사법제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행정소송 절차의 당사자로서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당사자는 법원에 본인이 당사자 이익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해당 주장을 검토한 후에 해당행정기관에게 결정의 송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결정의 송부는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검사는 검사의 불복을 거부한 최종결정이 있던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단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부작위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침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와 위법침해가 계속 되는 동안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사법심사 제외 대상 행정행위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 특별히 명시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에서 제외 되는데, 그러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a) 행정기관의 예비적 결정 및 절차수행에 관한 절차규정,

b) 그 자체로 전문직, 고용, 기업적 혹은 기타 경제적 활동에 대한 법적 장애를 의미하지 않는 한, 오직 개인의 건강 혹은 사물의 기술적 조건의 평가에만 근거하여 내려진 결정.

c) 그 자체로 전문직이나 고용의 수행에 대한 법적 장애를 의미하지 않는 한, 법인 혹은 자연인의 전문적 자격의 부인 혹은 인정의 철회에 관한 결정.

d) 별도의 입법으로 그 사법 심사가 제외된 행정 기관의 결정.

법은 “민감한” 사안의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법원은 또한 비밀 사안에 관련된 결정을 심사할 수 있으며 비밀정보에 접근하기도 한다. 법은 또한 과세연기 및 체납 세액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결정을 사법 심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 행정소송의 심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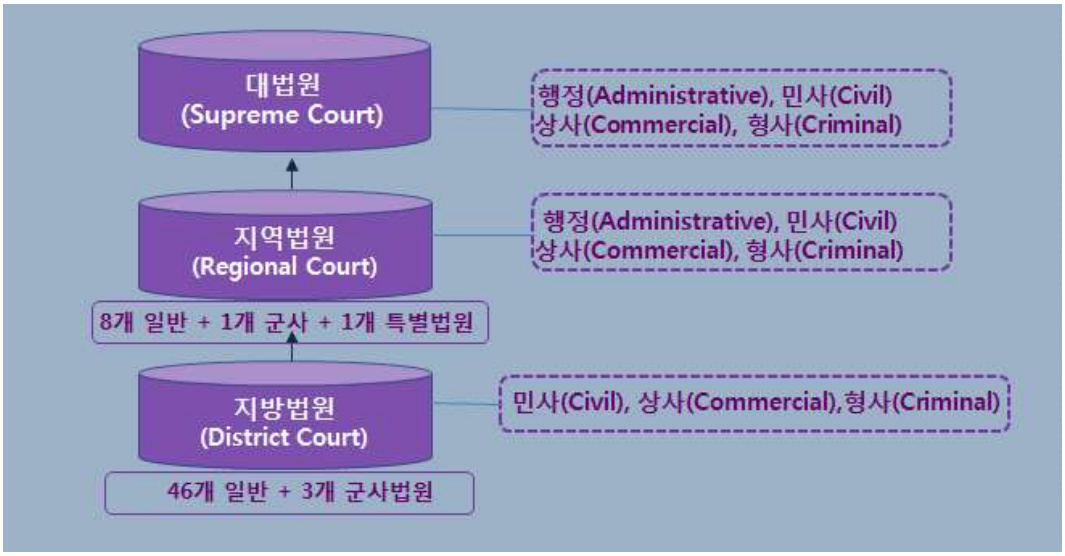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1심법원으로서 사법심사는 지역법원(regional court)이 담당한다. 이러한 지역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2심법원으로서 대법원(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라) 슬로바키아의 사법체계

□ 일반 재판기관

슬로바키아의 사법제도에는 3단계의 심급으로 구분된 한 계통의 사법조직만 존재한다. 1심 재판기관은 1심 법원 또는 지방법원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1명의 판사와 2명의 시민, 또는 단독판사로 구성된 민사, 형사, 상사부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슬로바키아 사법부 구성]



항소 재판기관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재판장, 배석판사, 1명의 비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부가 존재한다. 고등법원은 또한 행정청의 결정을 통제하는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이 통제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에 관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확정 또는 취소함으로써 그 적법성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행

한 1심으로서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상고 재판기관으로, 슬로바키아의 최고심급 법원이고, 파기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판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이 행한 항소심으로서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의 부에서 관할한다.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수개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행정기관, 자치기관, 법률에 의해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공법인의 결정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과 의무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국가적인 사안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특별 재판기관이다. 헌법법원은 법률의 헌법 및 국제조약과의 합치성을 통제한다. 헌법법원은 또한 선거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최고반역죄로 기소된 경우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기소장을 심사한다.

□ 군사법원과 특별법원

슬로바키아의 사법제도는 지방군사법원, 항소사건과 군인의 중죄사건을 관할하는 재판기관인 최고군사법원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단계에서는, 형사사건과 법률이 정한 다른 소송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이 존재한다.

(5) 폴란드

(가) 폴란드의 관세제도 개괄

□ 폴란드의 관세행정 조직 체계

○ EU의 통관행정 조직

폴란드는 2004년 7월부터 EU 회원국으로써 EU 집행위의 절차 및 관세 법령을 따르고 있다. EU는 EU 집행위(Commission) 관세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과 27개 회원국 세관당국의 2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EU 집행위 관세총국에서 EU 회원국의 수출입 통관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Director-General 산하 5명의 Director로 구성되어 있다. Directorate A는 통관정책 및 전자세관, 통관규정 및 세관 간 일치, 통관절차, 품목분류, 관세율 및 감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Directorate B는 IPR(지식재산권) 및 위험관리 및 보안, 원산지, 국제협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중앙정부로서 통관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세관당국 간 이견 조정, 통관행정 발전방향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통관의 신속성, 정확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EU 전체의 관세법령뿐 아니라, 개별 회원국 세부적 업무처리 절차 및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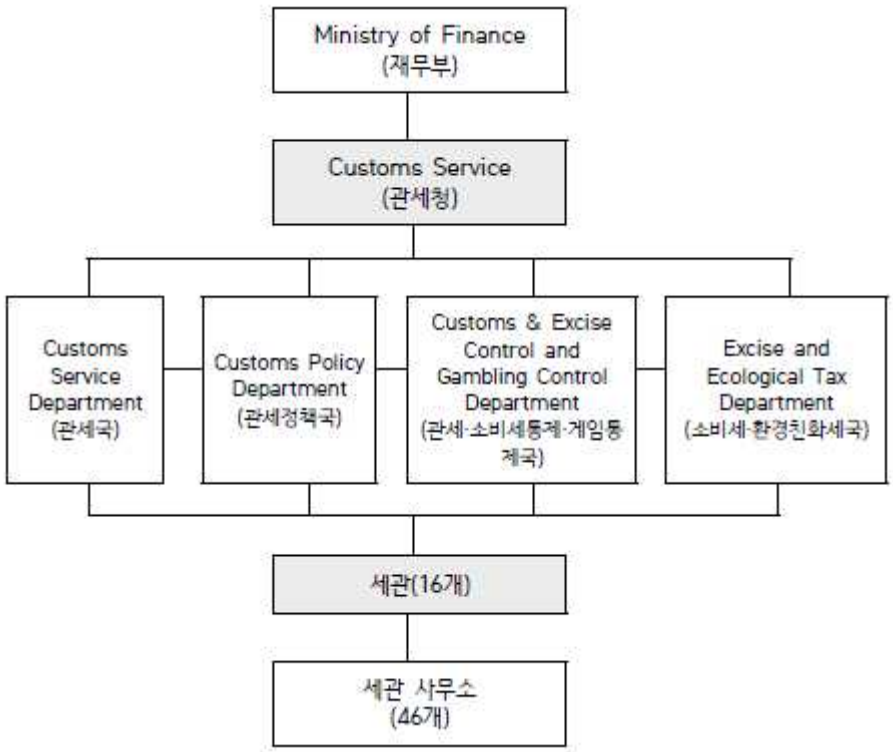
○ 폴란드 통관행정 조직

기존의 관세 책임을 지고 있던 관세 중앙위원회가 2002년 5월 1일자로 활동을 중지하여 중앙 정부 사무소를 구성하는 관세 책임은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폴란드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재무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국제 상업교류 대상 관세 통제, 국경에서 부과된 관세 및 조세평가 및 징수(수입 VAT, 소비세) 밀수입 대응 및 관세 사기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관세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국가산업 보호 및 자연환경, 소비자, 사회, 문화등을 보호하는 업무와 지역 내 통제업무 및 관세청 협력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폴란드 관세청은 관세국(Department of Customs Service), 관세정책국(Customs Policy Department), 관세·소비세통제·게임통제국(Customs & Excise Control and Gambling Control Department), 소비세·환경친화세국(Excise and Ecological Tax Department)의 4개 관련부처로 구성된다.

관세정책국이 관세법을 입안하고, 관세청은 관세국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아직무를 수행한다. 관세국에서는 조직, 예산, 인사, 통계 및 관세 서비스 촉진 관련 이슈를 관할하며 도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전자세관의 이행을 감시한다.

관세·소비세·게임 통제국에서는 관세법, 소비세, 도박세, 석유비의 범위를 통제하며 감사 및 감찰, 범죄 및 범법행위 처리, 국세범죄 처리를 감독하고 통제한다. 소비세·환경친화세국에서는 소비세, 환경세, 기타 유사 조세정책을 수행하며 소비세 상품과 승용차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세와 관련한 IT시스템 운영과 적용을 독립적으로 감독한다.

16개 세관(Customs Chambers)이 무역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세관의 세관장이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관 하위에 세관 사무소(46개) 및 출장소(160개)가 해당 지역 및 국경지대의 세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의 효율성 확보, 지역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 위기관리 능력, 세관의 전산화 및 현대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인 Action Strategy of Polish Customs 2010-2015를 발표하였다.

폴란드의 재무부가 수입 허가와 금지 그리고 쿼터와 규제를 관할하지만 다른 정부부처 또한 특별한 사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담배는 농산부가, 상공·해양 그리고 토지 교통에 관한 부분은 교통부, 천연자원의 수출입은 환경보호부가 관할하고 해당 제품에 수입허가서를 발부한다.

폴란드 관세청은 공식 관세브라우저(ISZTAR)가 있으며 관세브라우저는 세관행정 및 무역업체들에 국제무역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브라우저는 TARIC(EU 품목분류번호)이 제공하는 정보(제품의 명칭, 관세율,제약, 관세쿼터, 관세 상한 및 보류)뿐 아니라 국내 정보(VAT, 소비세, 제약, 비관세 조치) 또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기관과 모든 관련기관에 상품의 총 매출액과 관련된 세부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TARIC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지 않은 일부 국가의 비관세 조치도 관세브라우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폴란드 세관은 수입 신고를 간편화하기 위한 전산화된 세관 신고 시스템인 CELINA를 운영하고 있다. CELINA를 통한 수입 신고 정보는 EU 내 IT시스템과는 개별적으로 처리되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와 규정은 폴란드 세관 홈페이지17)에서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통한 수출 신고는 불가능하다.

□ 각종 수입 허가제도

○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BTI) 및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

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공식적 품목분류 통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보되는 품목분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시점까지는 기통보된 품목분류가 적용되므로 관세 추징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IT 상품은 첨단화, 복합, 다기능화 되고 있어 품목분류상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BTI를 통해 관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는 Council Regulation (EEC) 2913/92 of 12와 Commission Regulation (EEC) No.2454/93 of 2에 의거하여 BTI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상기 관세법령에 규정된 서면양식으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복합품목분류표 외에 주해서를 운용하여 품목분류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해설서는 2011년 5월 6일자 관보에 개재된 Explanatory notes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uropean Union이다.

Council Regulation (EEC) Non 2658/87에 의하면 EU 회원국의 요청 또는 관세총국의 판단 등에 의해 총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세규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 27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여 복합품목분류표의 제·개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관 당국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as soon as possible) 품목분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접수일 이후 3개월 내 정보 제공을 못할 경우, 지연사유 및 통지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BTI는 동일한 조건하에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며, 효력 범위는 동 정보의 소지자에 대해서만, 또한 정보가 제공된 날 이후에 세관 절차를 완료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당국을 구속할 수 있다. BTI는 교부된 날로부터 6년간 유효하나, 만일 신청자에 의해 부정확 혹은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무효가 된다.

27개 회원국의 관세수입 75%가 EU 집행위 예산으로 산입되어 품목분류 시 상황 변화 고려보다는 관세수입 확보 목적으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므로 업체에는 유리하지 않은 입장이다.

(나) 폴란드의 관세행정 구제절차[95]

□ 폴란드 조세행정 절차 개요

폴란드 조세 당국의 기본적인 업무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와 지불 의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납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산된다. 납세자는 해당 조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신고서가 제출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하며 조세당국에 세금을 송금할 의무를 가진다.

조세당국은 예방조치로서 또는 세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감사(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때 부정한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세금 절차가 개시되어 납세기간 (세금 연체)을 명시하거나 초과지불을 확인하여 조세 평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범주의 조세채무(예 상속세와 증여세)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납세기간을 결정하는 세금사정결정을 내리기 위해 직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소득 신고 후) 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요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세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절차나 과오납 지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조세당국은 세금의 강제적 징수에도 책임을 진다. 이대 조세당국은 조세집행당국을 의미한다.

□ 과세결정 불복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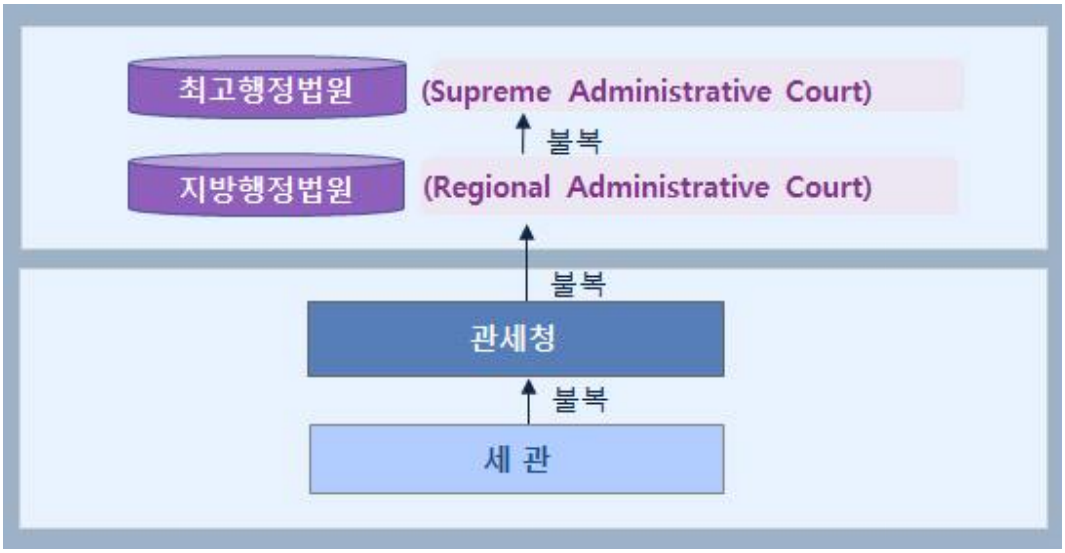
이해 당사자들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공식기록 파일을 접근 이용하고 법률적 및 사실적 주장들을 제시하고 소송의 결과에 (수집된 증거)대하여 언급하는 등 세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과세결정에 대한 이의는 결정의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하여 가능하다. 항소가 제출되면 사건은 재심사되며 조세당국에 의해 제2심으로 결정된다. 항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당국의 제2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인은 30일 이내에 지방 또는 주 행정 법원(regional (provincial) administrative cour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조세당국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95) 폴란드의 행정구제제도는 EU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세연맹(Confederation fiscale Europeenne) 웹 사이트(http://www.cfe-eutax.org/taxation/administration-of-taxes/poland)의 폴란드 조세행정절차 설명을 참고 하여 작성하였다.

지방 행정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인은 최고 행정 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에 고소를 (변호사나 세무전문가에 의해 서명된) 제출함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중지 법원이다.

[폴란드 관세행정 구제절차]



최종 과세 결정에 대한 행정적 이례적 조치는 결정의 취소, 수정, 무효 및 소송의 재개이다. 관할권이 없는 당국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이 결정이 내려지거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결정은 무효가 된다.

사건에 대한 사실이 그릇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거나 납세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이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재개가 가능하다.

제1심의 국가 조세 당국 (제1 권한자)은 세무서장과 세관장이다. 이때 제1심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조세당국에는 시장이 포함 될 수 있다. 이후 항소단계에서는 국세청창과 관세청장이 피항소인이 된다. 지방정부 항소 단체는 제2심의 지방정부 조세당국이다.

(6) 스위스

(가) 스위스의 관세제도 개괄

□ 개요

스위스 관세제도는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 모든 주(칸톤)에 적용 되고 있다. 관세법은 1925년에 제정된 후 2007년 5월에 82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EU 관세 제도에 맞게 정비되었다. 스위스 관세제도는 총 6,863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관세율은 EC 및 EFTA 관세율, 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관세율, 최저개도국 특혜관세율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 체제를 도입하여 총 8단위 세 번을 운영하고 있다. 앞의 6자리는 HS 6단위 세 번이며 끝의 두 자리는 스위스 자체 설정 2단위 세 번이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유일하게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동일한 과세대상 품목군에 있어 고가의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값싼 제품에 대해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품목의 100kg 단위로 부과된다. 부과되는 관세는 높은 편은 아니나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보다 현저하게 높다. 평균 MFN 관세율은 8.1%이며 무관세는 전체 관세품목의 18.4%에 적용된다. (농산물 관세품목의 20.2%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됨)

1925년 설정된 스위스 관세법은 2006년 11월에 완전 개정되어 EU 관세법에 유사해 졌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 절차가 범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되었다. 동 개정 관세법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 관세율 종류

○ 일반특혜 관세제도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당초 1972년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2013년 9월 기준). 일반 특혜관세제도(GSP)의 원산지규정은 당초 UNCTAD에

서 정한 원칙에 준하여 수출국 내의 완전 생산품 또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수입 원재료 등 사용 비중이 50% 이하 또는 수입원재료와 완제품의 HS 관세분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을 적용하며, 입증자료로서 Form A <우편일 경우는 APR>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6년 7월부터 공여국 원재료 기준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내 원재료, 반제품을 사용한 개도국 수출상품의 가공도 산출 시 해당 원재료, 반제품 사용 분을 합산하여 개도국의 GSP수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단 HS 25-97 공산품에만 적용).

스위스는 1981년 제정된 일반특혜관세연방법(Zollpraeferenzenbeschluss)에 따라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키프로스, 아랍에미리트 연방,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바하마, 버뮤다, 카이만 제도, 포크랜드제도 등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남아공, 에리트리아, 가자 및 서안지구, 미크로네시아 연맹과 CIS의 일원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트루 메니스탄 공화국 등을 GSP 수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2014년 6월 기준 총 130개국이 GSP 수혜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7개국은 최빈국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관세 면제/감면/환급제도

관세면제는 샘플, 전시품(박람회 참가 시), 스위스 내 일정기간 전시하는 예술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으나 부가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제기구 및 외교관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가 될 수 있다. 스위스 연방 재정부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특정 용도를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세감면법령 제 5조에 근거). 농업용이 아닌 사료는 스위스로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나 농업용 사료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스위스 연방관세청(Eidgenössisches Finanzdepartment)에서는 수입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는 ‘www.tares.ch’이며, 수입국 별 HS코드로 수입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독어,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

어로 HS코드 별 관세는 검색 가능하며 이때 관련 근거규정은 불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관세조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① www.tares.ch 홈페이지 접속

② 관세율 조회 사이트에서 국가 및 HS코드 입력하여 조회

③ 관세율 조회 중간 결과화면에서 HS코드 세부내역을 다시 선택하여 검색

④ 관세율 최종 조회 화면

한국의 제품 대 스위스 수출 시 HS코드 8543.1000의 관세율은 100kg 당 0CHF이다. 한편 일반 관세율은 100kg 당 15CHF이다

(나) 스위스의 관세행정 구제절차[96]

□ 스위스의 조세불복제도 개괄

이하의 내용은 세계각지에 4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 로펌 EVERSHEDS가 발표한 주요국가의 조세불복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조세불복절차는 대체로 내국세에 대한 것과 관세에 대한 것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만 기본적인 절차와 불복단계별 체계는 조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세불복 체계는 관세행정상 불복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세무 당국[Steueramt]

스위스의 세무 당국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다. 연방 수준(직접세,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 결제와 유사한 인지세 및 부가가치세), 주립 및 공동 수준(직접적인 주립세 및 공동세, 부동산 이익으로부터의 세금, 상속 및 증여세)

96) 스위스의 관세행정구체절차에 대해서는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 상의 내용과 스위스 관세법의 해당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심사 [Vergleich]

스위스에는 합의를 위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도 없다. 그러나, 어떠한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납세자들은 과세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상황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는 30 일 이내로 세무 당국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의제기는 서면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고 과세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와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 당국은 서면으로 통지를 발행하여야 한다.

○ 조세법원 [Steuerrekursgericht]

법원은 주로 납세자들부터 항소를 결정하는 독자적인 법률심사를 하는 기구이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원이 달라진다. 주립 조세 법원은 (연방, 주와 공동세)직접세와 관련된 항소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

연방 행정 법원은 분할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연방 원천 징수세액과 관련된 항소와 특정상황에서의 예상된 세금에 관한 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절차[Verfahren]

만약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법정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 신청서에 대한 이유들을 밝혀야 한다. 입증 사항은 납세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평가 및 판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판결[Entscheid]

보통 조세 법원은 판결을 문서로 처리하나 매우 드물게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두 청문회가 열린다. 항소제기기간은 제한이 있고 해당법원이 항소제기기간에 대해 안내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세법원의 판결은 30일 이내로 전달된다.

○ 비용[Kosten]

비용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해 나눠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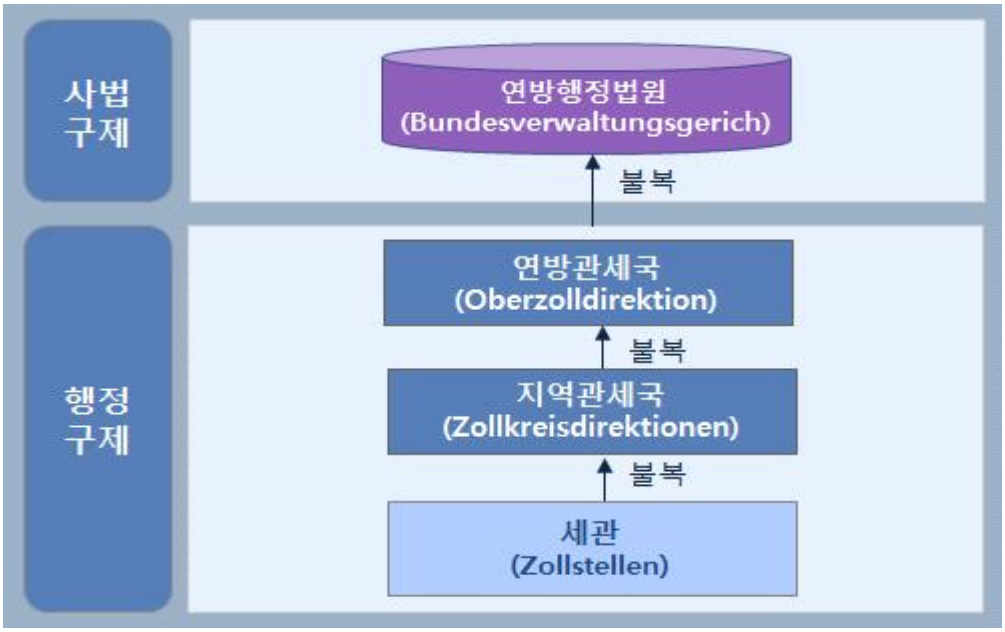
○ 항소[Beschwerde]

주립 조세법원으로부터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의 행정 법정에 제기된다. 주립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 진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행정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스위스 관세법상 구제절차

수입자는 관세청의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간략이 소개하고 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수입물품의 과세액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District Directorate of Customs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관세청이 제공하는 이의신청서에 서명을 하여 불응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이의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송부 할 수 있다.

[스위스 관세행정 구제절차]



스위스 관세법은 총9장 1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관세법 제7장 116조는 이의제기 절차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97]

제116조에 따르면 세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역관세국에 항소할 수 있다. 지역관세국의 첫 번째 항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 관세국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행정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벌어지는 연방 관세국의 법정 소송에서 세관 당국은 소송 대표성을 가진다.

판결에 대한 1차 항소의 마감일은 평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또한 항소 절차는 일반적 연방행정 규정을 따른다.

특히 제132조 5항[98]에 따라 법적 효력이 미결인 상태인 세관의 통관에 대한 항소는 책임 지역관세국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결정에 대한 항소는 제 116조에 따라 관세청 소청위원회(Zollrekurskommission)에 대한 항소로 받아들여진다.

(다) 스위스의 사법체계

스위스의 법원조직은 연방대법원과 하급심인 주법원(州法院)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법사항은 주법원에서 결정된다. 연방법원은 각주 지방법원의 최종심 또는 연방하급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 및 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할 뿐이며, 연방법원이 사법기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원으로는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는 38명의 연방대

---

97)스위스 관세법 제116조

1 Gegen Verfügungen der Zollstellen kann bei den Zollkreisdirektionen Beschwerde geführt werden. 1bis Gegen erstinstanzliche Verfügungen der Zollkreisdirektionen kann bei der Oberzolldirektion Beschwerde geführt werden.

2 Die Zollverwaltung wird im Verfahren vor dem Bundesverwaltungsgericht und dem Bundesgericht durch die Oberzolldirektion vertreten.

3 Die Frist für die erste Beschwerde gegen die Veranlagung beträgt 60 Tage ab dem Ausstellen der Veranlagungsverfügung.

4 Im Übrigen richtet sich das Beschwerdeverfahren nach den allgemeinen Bestimmungen über die Bundesrechtspflege.

98) 스위스 관세법 제132조 5항 Beschwerden gegen Zollabfertigungen der Zollämter, die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i den Zollkreisdirektionen hängig sind, werden von der zuständigen Zollkreisdirektion entschieden; Beschwerden gegen diese Entscheide unterliegen der Beschwerde an die Zollrekurskommission nach Artikel 116.

법관과 31명의 보조법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정부 결정 및 법령에 대한 국가 제소를 판결하고, 민사 및 형사사항에 대한 항소를 하며, 직접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방 대 주정부 또는 주정부 대 주정부 간의 분쟁에 대한 유일한 판결기관이다.

연방형사법원은 2000년 3월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4년 4월 개원하였으며, 연방법에 따르는 모든 형사사건의 일심법원이 된다.

연방행정법원은 형사법원과 같이 2000년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었고 2007년 개원하였다.

다. 아시아권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 ADB)이 2014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조세행정에 대한 비교분석 보고서[99]는 환태평양지역의 조세분쟁과 관련한 행정심사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보고서의 조세분쟁에 대한 행정심사시스템 검토 부분을 발췌, 간략히 요약 정리하여 주요 환태평양 국가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행정심사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조세행정상 재심절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 절차와 체계는 국가별로 고유하게 운영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분업 역시 다양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의) 과세결정(tax assessment)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taxpayer)가 조세행정기관(tax administaration)에 이의제기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최초 과세결정이 이루어진 조세행정기관에서 이를 재심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국가는 예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태국은 이의제기가 조세행정기관이 아닌 각 부처별 항소위원회(Commission of Appeal)에서 이루어지며, 중국에서는 조세와 관련한 행정재심은 최초 결정보다 한 단계 상위조직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22개 국가 중 10개의 국가가 행정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 2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심절차에 대한 조직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필리핀의 경우 2심 담당은 조세행정기관(tax administration) 내 부서에 의해 실시된다. 일본의 'The National Tax Tribunal'은 조세행정기관 내 특별 조직으로, 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대만의 경우 재무부의 부속기관으로써 재심기관(review organization)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2심을 담당한다.

---

99) ADB, *A Comparative Analysis of Tax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014, p.59~66.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조세행정심사제도 운영현황]

국가	이의제기 절차 존부	2심 행정심사의 존부	행정심사 의무여부	특별조세법원 또는 조세심판소 존부
호주	O	X	X	X
중국	O	X	O	X
인도	O	X	X	O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인도네시아	O	X	X	O (Tax Court)
일본	O	O (National Tax Tribunal)	O	X
대한민국	O	O (Tax Tribunal)	O	X
말레이시아	O	O (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O	X
뉴질랜드	O	O (Adjudication Unit, Inland Revenue)	O	O (Taxation Review Authority)
필리핀	O	O (Appellate Division, Bureau of Internal Revenue)	O	O (Court of Tax Appeals)
싱가포르	O	O (Boards of Review)	O	X
태국	X	O (Commission of Appeal)	O	O (Tax Court)
브루나이	O	X	X	X
캄보디아	O	X	X	X
홍콩	O	X	O	X
라오스	O	X	X	X
몰디브	O	O (Tax Appeals Tribunal)	O	X
몽골	O	X	O	X (Administrative Courts)
미얀마	O	O (Revenue Appellate Tribunal)	O	X
대만	O	O (Petitions and Appeals Committee)	O	X (Administrative Courts)
타지키스탄	O	X	O	X (Economic Courts)
키르기스스탄	O	X	X	X
파푸아 뉴기니	O	O (Review Tribunal)	O	X

출처 : ADB,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심의 절차에서 이러한 자체조직들은 재판관들이 판사와 같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납세자와 조세행정기관이 각각의 논의를 동등한 위치에서 전달하는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한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를 종종 택하고 있다. 이러한 2심제도는 납세자에게 조세와 관련한 분쟁사례가 공정한 제3자에 의해 심판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재판에 비해 절차나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행정심사(Administrative review)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신속한 조세분쟁해결에 기여한다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행정심판은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밟기 전 요구되는 과정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조세행정기관의 심사가 요구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의무화하는 것은 조세분쟁의 기술적 전문성과 확대경향에 따라 1심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안의 사실판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시행되었다. 흥미롭게도, 행정심사가 의무적이지 않다고 답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조세분쟁사례에 특화된 조세재판소(tax court) 또는 준사법적 성격의 재판소(quasi-judicial Tribunal)를 두고 있다.

반면, 행정심사가 의무적인 국가들의 경우 행정심사 의무화는 사법적 구제수단을 위한 납세의무자들의 선택의 폭을 매우 좁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일본정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그들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있는데, 조세분쟁에서의 행정심사 의무사항들은 합리적인것으로 평가된 반면, 현재의 2단계 행정심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신속한 절차(예를 들어 지방 또는 지역 조세기관(office)으로의 이의제기와 국가 조세심판소의 심사)가 제안되었다. 또한 2010년 뉴질랜드는 내국세 세무청(Inland Revenue)은 분쟁 대상 조세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행정분쟁해결절차에 납세자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함에 동의하였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5개 국가는 조세관련사례(tax cases)에 특화된 조세재판소 또는 준사법적 성격의 재판소를 두고 있다. 인도의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과 뉴질랜드의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모두 법무부 소속기관들이다. 호주의 경우 납세자가 호주조세기관(Austrailian Taxation Office)의 이의제기절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무장관직하 행정심판소의 외부심사(external review)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항소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가 오직 조세분쟁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조세관련 사례를 다루는 별도 부서(Tax Appeals Division)를 따로 두

고 있으며, 사실상 2012년과 2013년 동안 행정항소재판소에 제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신청(application)이 조세관련심사(tax-related review)로 2013년 행정항소재판소에 제기된 전체 사례의 27%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행정심판 건수]

국가	2010			2011		
	완결	미결	미결사건 비중(%)	완결	미결	미결사건 비중(%)
호주	21,807	4,450	20	24,513	4,693	19
중국	–	–	–	–	–	–
인도	–	–	–	–	–	–
인도네시아	12,524	9,580	76	16,310	9,384	58
일본	7,590	3,856	51	8,463	3,580	42
대한민국	5,940	653	11	5,905	534	9
말레이시아	113	24	21	101	19	19
뉴질랜드	86	21	24	90	16	18
필리핀	33	51	155	34	66	194
싱가포르	–	–	–	–	–	–
태국	–	–	–	–	–	–
브루나이	–	–	–	–	–	–
캄보디아	–	–	–	–	–	–
홍콩	68,525	25,826	38	66,186	26,689	40
라오스	–	–	–	–	–	–
몰디브	4	1	25	12	0	0
몽골	161	44	27	149	41	28
미얀마	35	0	0	3	1	33
대만	10,052	5,578	55	9,075	4,970	55
타지키스탄	13,588	–	–	14,300	–	–
키르기스스탄	196	14	7	196	9	5
파푸아 뉴기니	57	281	493	217	336	155

출처 : ADB,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는 자료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
※ 호주는 원산지관련 이의제기건수 포함

(1) 중국

(가) 중국의 관세제도 개괄

□ 2014년 수출입 관세제도 조정 관련 이슈

2013년 12월 11일 중국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관세실시방안(2014年 關稅實施方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수출입관세 조정 목적은 중국 공산당 제 18기 3중전회에서 표명한 안정적 경제성장, 경제구조조정, 개혁 촉진 및 관세에 대한 예측성, 정확성, 과학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1) 2014년 관세실시방안 내용

2014년 관세실시방안에서는 수출입관세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수입관세조정 분야는 크게 최혜국 관세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특혜세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관세 실시 방안 세부 내용]

□ 수입관세 조정

ㅇ 최혜국 세율

- 밀 등 8개 종류, 47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 쿼터제를 지속하면서 품목별 세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
- 관세 할당액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면화에는 활준세(滑准稅)를 적용하고, 요소(尿素), 복합비료, 제2인삼암모늄 등의 3종류 화학 비료 수입에는 1%의 임시할당 관세율을 부과
- 냉동닭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부과
- 47종 상품에 계속 종량세와 복합세를 실시하고 현재 세율을 유지하며 그 중 1개 냉동 닭발 품목, 4개 필름 품목의 종량세 세율을 조정하고 방송용 테이프 레코더 등 5개 품목의 복합세 세율을 조정
- 10개 비전세목(非全稅目)정보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
-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재 세율 유지

ㅇ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 연료유 포함 767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5%)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관세율을 적용

- 혜택 품목에는 항공기용 피스톤엔진, 핸드폰, 태블릿 PC 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흥산업 설비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천연 목초, 고주파 생명탐지기 등이 포함

ㅇ 특혜세율

- 유럽연합이 정한 최빈국 국가목록에 명시된 바누아투, 적도기니를 포함한 총 40개 국가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적용

ㅇ 협정세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인 품목 1,888개에 대해서는 아태무역협정세율 적용

-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품목 중 특혜원산지 기준을 제정한 홍콩의 1,791개 품목, 마카오의 1,321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타이완 지역인 621개 품목에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적용

ㅇ 보통세율

- 보통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

□ 수출관세 조정

ㅇ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

ㅇ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일부 화학비료에 특별수출관세를 징수

□ 세칙세목 조정

ㅇ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했고 조정 후 2013년판의 세칙세목 총수는 8,277개로 지정

자료: 중국 재정부 자료 자체정리

2) 2014년 최혜국 관세율 이하로 관세율이 책정된 품목 및 관세율

*자기류 주방용품, 전자레인지, 식품 분쇄기·믹서기 관세율

ㅇ 기존 최혜국 관세율 15%, 15%, 10%에서 각각 10%, 8%, 6%로 인하

* 피스톤 항공엔진, IT 제품모듈, 구급장비에 대한 관세율

ㅇ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모듈의 잠정관세율은 4%

ㅇ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의 부품관세율은 기존 최혜국관세율 12%에서 2%로 인하

* 현악기, 금속 관현악기 및 기타 관악기의 관세율과 건반악기 관세율

ㅇ 현악기, 금속 관현악기 및 기타 관악ㅇ기의 최혜국 관세율이 17.5%에서 1%로 인하

ㅇ 건반악기는 기존 30% 최혜국관세율에서 15%인하

* 농구, 축구, 배구 트레드밀(treadmill), 기타 운동기구 및 재활치료 기계와 각종 미술작품 등에 대한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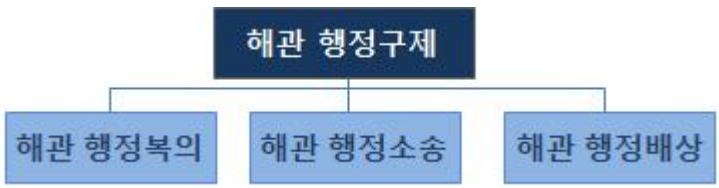
ㅇ 기존 최혜국관세율 12%에서 6%로 인하

(나)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중국에서는 관세행정구제제도를 해관행정구제제도라고 부르는데, 해관행정구제제도에는 해관행정복의와 해관행정소송 및 해관행정배상제도가 있다. 해관행정구제제도는 관세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해관과 납세의무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고 납세의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국 관세행정구제의 종류]



이 제도는 해관의 행정효율을 확보하고 불법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거나 이를 저지하는데 기여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행정소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해관행정구제제도는 정부행정행위를 규범화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서 민주 법률체제의 발전 하에서 정부 해정명령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종류

중국의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와 해관간에 납세분쟁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관에 행적복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행정 구제절차]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해관에서 내리는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해관에서 발급한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해관총서에서 재심의를 하여 내리는 경의사항에 또 다시 불복하게 되면 재심의결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해관법 제64조)[100] 이상과 같이 중국의 해관행정구제제도는 행정적인 구제제도로서 행정재심(복의)신청과 재심신청(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며, 사법적인 구제제도로서는 인민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100) 제64조(납세쟁의) 납세의무인이 세관과 납세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마땅히 세금을 납부하고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行政復議)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결정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해관에 재심신청(稅關)

만일 해관에서 확정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및 감면, 관세추징 및 환급 등에 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먼저 해관이 심사·확정하여 부과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 후 해관이 관세납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해관에 재심(復議)신청 즉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해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11) 재심을 접수한 해관은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재심결정서(納稅爭議復議決定書)를 재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관총서에 재심신청(海關總署)

만일 납세의무자가 해관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계속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해관총서는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재심결정서를 해당 해관과 재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2)

③ 인민법원에의 소송

납세의무자가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3) 해관총서가 최초 해관의 징수결정과 동일한 재심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해관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제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소(應訴)는 해당해관이 하게 된다. 그러나 해관총서가 해관의 징수결정과 상이한 재심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관총서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이 경우 응소는 당해관이 아닌 해관총서에서 하게 된다.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특징은 첫째, 사전적인 행정구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는 관세행정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관세행정구제의 주체가 주로 해당 국가세무행정기관이라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토대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납세의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권리구제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이다101)

101) http://baike.baidu.com/view/2743263.htm

(다) 중국의 해관행정복의 제도

□ 해관행정복의의 의의와 구성

중국 해관법에서는 한국의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제도를 '행정복의(行政复议)' 혹은 '해관행정복의(海關行政复议)'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국가의 국민, 법인 또한 기타 조직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기관(피신청인)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처분기관이 법에의하여 다시 심의결정을 내리는 행정구제행위를 말한다. 중국 해관법상 해관행정복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납세분쟁에 대한 복의이며 둘째는 납세자가 경제적인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복의이다[102)]

□ 해관행정복의의 성격과 특징

중국의 해관행정복의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黃天华, 2009). 첫째, 해관행정복의의 신청인은 국가의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이고, 피신청인(처분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해관(세관장)이다. 둘째, 해관행정복의는 2단계의 복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본래의 징세 해관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첫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게 되면 최고 해관총서에게 다시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 결의에 대하여 불복이 있게 되면 이때 납세자는 비로소 사법수단을 통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셋째, 행정관할권 원칙에 의거하여, 여타의 다른 일반적인 행정복의제도는 보통 행정행위를 행하는 부서의 상위기관을 복의기구로 정할 수 있으나, 해관행정복의제도의 경우는 그 원래의 징세기관을 제1단계 복의기구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 해관행정복의의 담당기관

중국 해관법과 행정복의법(行政复议法)에 따라 해관행정복의기관은 해관을 벗어난 조직이 아니고 해관부서 내부에 법을 집행하며 감독하는 기구이다. 즉,

102)http://baike.baidu.com/view/136578.htm

전문적으로 법률체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며 해관행정복의제도를 실시하는 주요관리부서이다.

해관행정복의의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행정복의법 제1장 제3조) 첫째, 복의신청을 접수한다. 둘째, 관련된 조직이나 일반인들을 조사하여 자료들을 심사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셋째, 행정복의 사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며 행정복의의 결정을 입안한다. 넷째, 해관 및 업무 관련자가 행정복의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관할하거나 이의 규칙에 따라 처리 제안을 제출한다. 다섯째, 법에 의하여 해관복의결정을 강제로 집행한다.

□ 해관행정복의 범위

중국의 해관법과 행정복의법의 규칙에 따른 해관행정복의의 범위는 첫째, 신청인이 해관에서 징수하는 벌금, 화물과 운송공구를 몰수하는 처분, 불법으로 소득을 몰수하는 처분, 특정한 세 감면혜택을 일시정지나 취소, 통관수속을 취급하는 자격을 일시정지나 취소, 세관 신고원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는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둘째, 신청인이 해관에서 내는 관련 인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셋째, 신청인이 해관에서 화물을 구류, 재산을 동결, 장부를 봉인하여 보관 등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넷째, 신청인이 해관에서 화물을 반송하는 명령을 내릴 때 불복하는 경우 다섯째, 해관에서 보증금이나 담보물을 수취하는 것을 불복하는 경우 여섯째, 해관이 불법으로 체납금이나 감독비용을 수취 등 행동을 불복하는 경우 일곱째, 해관이 통관에 관련 수속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여덟째, 해관에게 합법적인 직책을 이행하는 신청을 했지만 해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아홉째, 해관의 행동이 불법적으로 자기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경우 등이다.(행정복의법 제2장 제6조)

□ 해관행정복의 참여자

해관행정복의의 참여자는 해관행정복의에 참석하는 복의신청인, 복의피신청인, 제3자, 복의대리인을 말한다. 첫째, 복의신청인은 해관이 행하는 행동에 불복하거나 이해하지 못 할 때, 자기 명의로 관련 복의기관에 이 복의를 신청하는 자이다. 이는 해관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복의결정을 다시 요청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만약에 복의를 신청하는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의 친척이 복의신청인을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복의를 신청하는 법인이 통합이나 분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를 대신하여 법적인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둘째, 복의피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이다. 셋째, 제3자는 복의신청인과 복의피신청인 외에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행정기구에서 복의참석 허락받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넷째, 복의대리인은 해관행정복의 절차에 피대리인의 명의로 행정복의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행정복의법 제2장)

□ 해관행정복의 방식과 내용

○ 해관행정복의 방식

행정복의법 제13조는 해관복의신청인이 해관에게 복의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호림, 2011). 다만 구두진술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관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구두신청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 기록을 현장에서 바로 복의신청인에게 제시하여 확인 사인이나 도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복의법 제2장)

○ 해관행정복의 내용

서면방식으로 신청하든지 구두진술로 신청하든지 해관행정복의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행정복의법 제2장) 이는 첫째, 복의신청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소속과 연락방식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면 법인이나 조직의 명칭, 주소, 조직대표자의 이름하고 직업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둘째, 해관행정복의 사건을 일으킨 행정기관의 명칭과 주소이다. 셋째, 해관복의신청의 주요 사유와 이유 및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날짜 등이다.

□ 해관행정복의 신청과 접수

○ 해관행정복의 신청

중국의 해관행정복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청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미 지난 일수 더하고 만 30일 이내에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8) 또한 해관행정복의의 신청인은 법에 따라

해관에서 내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을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행정복의법 제2장) 이때 신청인의 행정복의신청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게 되면 복의기관이 이를 접수하지 않게 된다.[103]

○ 해관행정복의 접수

신청인이 해관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해관은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접수의 요건이 맞으면 접수등록을 해 주어야 하며 접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건이 해관의 접수범위나 법정 신청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신청인이 이미 인민법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게 복의신청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이 이미 입안된 경우에는 해관이 접수를 거절할 수가 있다. 복의신청을 접수하지 않게 되면 해관은 그 이유를 설명한 재정서를 만들어야 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재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黃天华，2009).

□ 해관행정복의 심사

심사는 해관이 복의신청 사건에 대해 그 진실성과 정확성 및 합법성 등을 조사하여 심리하는 과정인데, 해관복의심사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과 업무들이 이루어진다. 한다. 첫째, 복의신청사건이 복의요건에 맞으면 해관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심사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해관이 신청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행정복의법 제2장)

또한 피신청인에게 일정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고지하는데, 만일 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 이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둘째, 해관행정복의 인원과 기타 복의 참석자를 확인한다. 셋째, 복의신청 사건의 수리범위를 심사하고 심사방식을 확정한다. 넷째, 심사를 실시한다. 그 중에 서류 열람, 증거 확인, 법률문제의 심사, 복의결정 등의 과정들이 포함되게 된다.

103) 신청인은 복의기관이 사건을 접수받은 후 복의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그 복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철회신청은 반드시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해관행정복의 결정과 통지

○ 해관행정복의 결정

중국의 해관행정복의 제도하에서 행정복의기관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건이 아주 크며 복잡하거나 제3자 참석 또한 신청인이 다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한 결 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의 결정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이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의(결정)의 내용은 첫째, 원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둘째, 원래 처분을 보충하는 결정 셋째, 일정 기한 이내에 원래 처분을 받아 이행시키는 결정 넷째, 원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하는 결정(피신청인에게 다시 올바른 복의 결정임) 다섯째, 피신청 해관이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배상을 이행하는 결정(행정복의법 제2장) 등이다.

○ 해관행정복의 결정통지

해관이 그 해관복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법적인 요구에 따라 '해관복의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 결정서는 법에 따라 직접 신청인에게 통지(송달)되어야 한다. 만일 직접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 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통지하거나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에 방법으로도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고방법으로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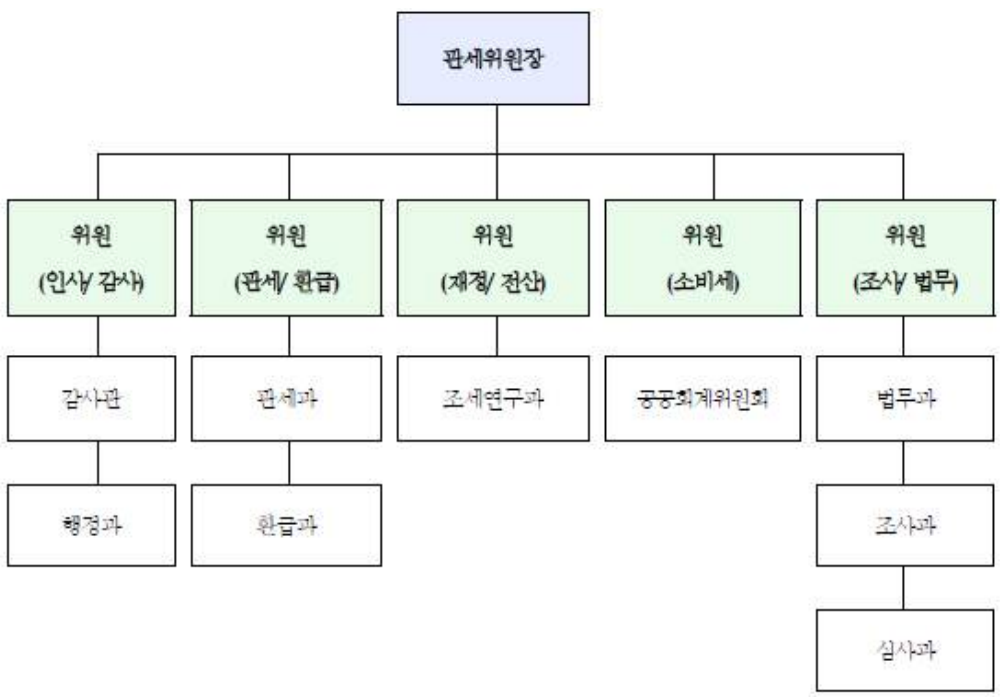
(가) 인도의 관세제도 개괄

□ 관세행정 조직 개괄

인도 관세청 조직의 공식명칭은 관세소비세 중앙위원회(CBEC: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이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조세청(Department of Revenue)의 구성 조직이다.

관세소비세 중앙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관세 및 중앙소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정책 입안 밀수단속, 관세·소비세 및 마약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이며, 세관, 중앙소비세 부서, 중앙재정 통제분석소를 포함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인도 관세청의 조직도]



인도관세청은 별도의 전문분야별 위원을 두고 있다. 1인의 위원장(chief Commissioner)아래 총 3개(일반, 심판, 항소)의 위원회로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존재한다. 이때 항소위원은Commissioner of Customs로부터 임명 받은자를 의미

한다. 참고로 세관의 조직구성에 대하여 인도관세법 제2장 3조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a) Chief Commissioners of Customs

(b) Commissioners of Customs

(c) Commissioners of Customs (Appeals)

(d) Deputy Commissioners of Customs

(e) Assistant Commissioners of Customs

□ 관세의 종류 및 산정 방식

인도의 관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도의 총관세는 기본 관세(Basic Duty)와 상계 관세(Counteravailing Duty), 특별 부가 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 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의 의미이며 2007년 4월을 기해 기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상계 관세(혹은 부가관세라고도 함)는 내국 물품세(excise duty)와 동일한 명목으로 부과되며 2013-14 회계연도에 10%로 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4월을 기해 기존 16%에서 14%로 세율이 축소되었다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내국 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2009년 2월을 기해 8%로 다시 인하된 바 있으며, 2010-11회계연도 출구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다시 10%로 인상 조치 되었다. 이후 2012-13회계연도에 12%로 인상되었지만, 2013-14 회계연도에 다시 10%로 조정되었다.

특별 상계 관세는 2006년 4월에 특별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도록 확대 적용된 세목인데 2007년 10월 인도 정부가 특별 상계 관세(보통의 경우 4%)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실제 철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 특별 상계 관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는 10%, 상계 관세는 12%, 특별 상계 관세는 4% 또한 교육 특별세는 3%이다. 이 경우 총 관세는 이들의 단순 합산인 29%(=10%+12%+4%+3%)가 아니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104)]

□ 주요관세 특혜 제도

o 특별 경제 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가장 대표적인 관세 특혜 제도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 요건(외화 수취액 > 외화 지출액)을 갖추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o 수출 촉진용 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도입 기업

수출 촉진용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해당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관세 면제 조건은 해당 제품의 정상 관세액의 8배를 8년 내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일정부분 이상 수출을 할 경우 그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o 특혜무역협정

인도는 각종 특혜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와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정상 관세보다 낮은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인도의 자유무역협정은 스리랑카와의 FTA가 유일하며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등 주변 최빈국에 대한 특혜무역협정이 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각국이 FTA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체결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장됨으로써 이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104) 2013년 기준 인도 관세 산정 방식
1. CIF 가격 - 물품 가격, 보험, 운임 포함 (실제 부과기준은 1%의 하역비를 추가한 금액)
2. BCD(Basic Custom Duty), 기본관세 - (현재기준 10%)
3. Additional Duty(CVD), 상계관세 - (현재기준 12%)
4. Customs Education Cess(EC), 교육세 - (현재기준 3%)
5. Special Additional Duty(SAD), 특별상계관세 - (현재기준 4%)
6. ADC - BCD와 CIF의 합에 상계관세를 적용

※ 최종 관세율 합 =BCD+ADC+EC×(BCD+ADC)+SAD×{BCD+CIF+ADC+3%×(BCD+ADC)}

한편 ASEAN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FTA가 논의되면서 인도가 소외 당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도는 태국, 싱가포르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였고, 2009년 UPA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8월에 한국과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2010년 1월에는 ASEAN과의 상품분야 FTA를 각각 체결 한데 이어 2011년 2월에는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CEPA, CEC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기체결 FTA	협상중 FTA	검토중 FTA
-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인도-ASEAN FTA - 인도-MERCOSUR PTA - 인도-네팔 Treaty of Trade - 인도-부탄 TA - 인도-스리랑카 FTA - 인도-싱가포르CECA -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 인도-칠레 PTA - 인도-한국 CEPA - 인도-일본 CEPA - 인도-말레이시아 CECA - 인도-아프리카 TA	- BIMST-EC - 인도-EFTA TIA - 인도-EU FTA - 인도-GCC FTA - 인도-SACU PTA - 인도-모리셔스 CECPA - 인도-태국 CECA - 인도-이스라엘 FTA - 인도-인도네시아 CECA - 인도-캐나다 FTA - 인도-호주 CECA	- IBSA (FTA)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 뉴질랜드 (FTA) - 대만 (FTA) - 러시아 (CECA) - 스위스 (FTA) - 우루과이 (FTA) - 이란 (FTA) - 이집트 (FTA) - 중국 (FTA) - 터키 (FTA) - 파키스탄 (FTA) - 미국 (FTA)

□ 관세율의 확인

기본 관세율은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계 관세 역시 C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계 관세는 국내 제조 물품에 부과 되는 국내 물품세(Excise Tax)와 동일한 개념이다.

□ 관세 지원 제도

o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감면(ZERO 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ZERO EPCG 제도에 따른 관세 감면을 신청한 제조 또는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를 일부면세 또는 무관세이다. 2013-14회계연도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면세 또는 무관세의 감면혜택이 주

어진다. 이 자본재를 이용하여 수출품목을 생산해야 하며 관세 감면금액의 최소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완료 해야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이행되지 않은 수출의무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세 납부와 함께 종결될 수 있다. 관세는 관세 절감분의 2배가 넘지 않는다.

ZERO EPCG 신청은 인도 상공부 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www.delhi.nic.in)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Infodrive 웹사이트[105]에서 조회 할 수 있다.

o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면제(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DFIA)

DFIA는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and Output Norms, SION)에 따른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제도이다. 즉 SION으로 미리 규정된 품목에만 면세 수입이 가능하며 규정되지 않은 품목은 설령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SION 리스트는 DGFT(dgftcom.nic.in)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수입 원재료 대비 최소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 DFIA 신청을 위해서는 인도 상공 부를 통해 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o 서비스분야 관세면제(Served from India)

인도의 서비스문화 향상을 통해 서비스수출이 촉진되도록 기존의 서비스분야 관세면제 자격증명(DFEC) 제도를 개선하여 Served from India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 제도에 의한 관세면제 혜택은 자영 식당업의 경우 20%, 호텔업의 경우 5%이며, 호텔 및 식당은 이러한 관세면제 혜택을 식품류 및 주류 수입 시 사용 가능하다.

o 수출 간주(Deemed Export Schemes)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s),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혹은 소프트웨어 파크 (STP, Software Technology Park)등에 입주한 기업과 여타 인도 국내기업간의 거래는 수출입거래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105) www.infodriveindia.com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각종 수출 촉진전용공단에 위치해 있어도 외환 순취득 조건 등의 입주조건을 준수하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o 수출유공업체의 등급분류(Status Holder)

수출유공업체의 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에 따라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우수수출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세면제, 통관절차의 신속화, 은행보증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o 관세 환급(Duty Drawback Scheme)

대부분의 관세 지원제도가 관세 면제 또는 관세 경감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유일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법에 의거 운송서류, 수출면장 등을 제출하면 수출품에 관련된 원재료 수입 시 지불한 관세 및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서는 www.cbec.gov.in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CBEC(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 제출한 후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이다.

관세의 일종인 특별 부가관세 SAD(Special Additional Duty)는 수입자가 부가세 납부 기업이면 환급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 환급절차의 복잡성으로 실제 환급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동 제도(SAD 부과)를 철폐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며, 불가 시환급절차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o 관세 권리 장부 제도(DEPS, Duty Entitlement Passbook Scheme)

신청한 수출기업에 대해 개별 장부를 부여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완제품 수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를 플러스(+)로 기록하여 장부상에 잔고가 충분히 있다면 그 만큼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달러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관세를 6달러 납부하였다면 장부에 -6으로 기재하고 추후 국내 원자재를 포함 하여 가공 후 6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30달러의 완제품을 수출하였다면 +6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로써 장부 상 잔고는 0이 되어 관세 납부가 면제된다. 이 예에서는 편의

상 최소 발생 부가가치를 20%(수출액의 20%만 잔고로 누적)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DEPS 역시 인도 상공부 무역국(DGFT, dgftcom.nic.in)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증가율이 20%이상인 기업에 대해 수입액의 5% 관세면제 혜택을 주는 Target Plus제도가 있다.

o 수출용 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나 그 업체의 협력업체는 EHTP허가를 받으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 받는다. EHTP는 SEZ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준비된 정책이다. 신청업체는 수출전문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해당업체가 SEZ지역 또는 수출전문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인도 내수를 위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담당부처는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 Noida이며 소요기간은 60일 정도 걸린다. 담당부처인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신청사의 책임자를 면접한다. 면접 시 향후 사업계획을 심사하며 이 면접에서 통과 하면 최종 승인을 받는다.

최종 승인을 통과하면 Green card를 발급받는다. 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후 Excise Department에 Excise permission을 신청한 후 발급받는다. 그린카드와 Excise permission을 받으면 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나) 인도의 관세행정 구제제도[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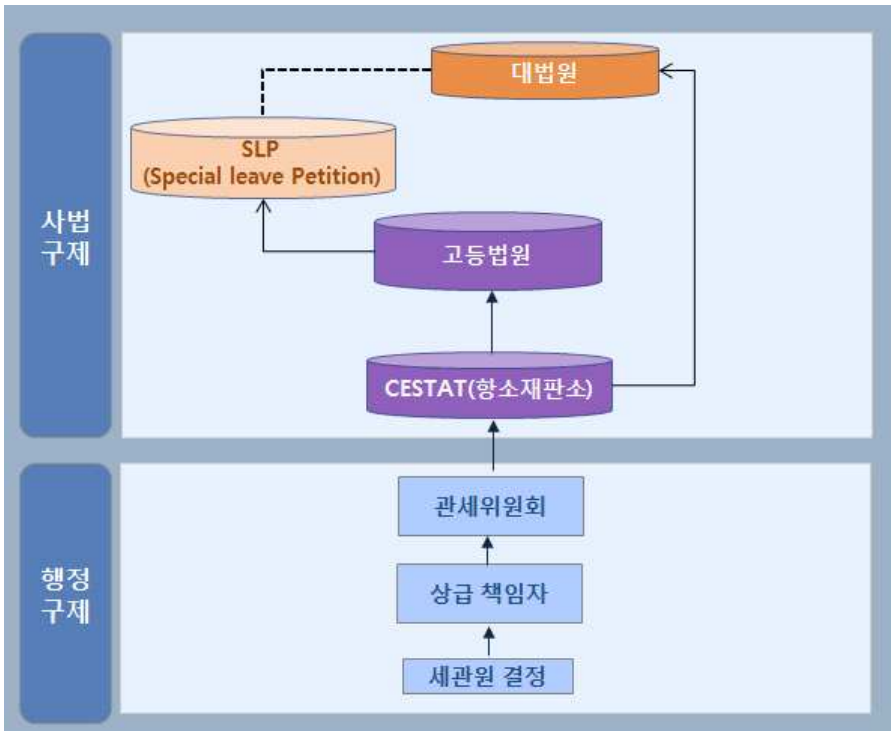
□ 개요

다른 세무 관계 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도 심사(review)와 항소(appeal)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법심사, 분쟁해결에 대해 세부규정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각종 항소 기관으로는 항소위원회(Commissioner (Appeal)), 재심사 권한기관(Revision Authority), 관세 및 소비세 항소재판소(Customs Excise and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 CESTAT),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등이 있다.

106) 인도의 관세행정 구제제도는 인도의 수출입 포탈(India's Premier Export Import Portal)인 ieport.com 웹페이지 상 2012년 인도 관세 매뉴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항소는 관세법에 규정된 심사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친후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항고 방법 이외 위원회 조정 해결 방식의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도 별도 운영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1962년 관세법 XV 및 XIVA 장에 수록되어 있다.

[인도의 관세행정구제절차]



□ 관세청의 임명위원에 대한 항소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지정된 금전상의 한도액 및 여타 기준에 따라 감독/사정관 등급 이상의 모든 담당관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세관 직원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각기 해당 사례별로 1962 관세법 제128조 (해당 명령에 의해 피해 받은 당사자의 항소) 또는 제129(D)(4) [명령 심의에 관한 부서 차원의 항고]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 세관원 보다 상급의 임명위원이 담당하게 된다.

세관원의 명령/결정 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 차원의 항고 신청 절차는 동법 129D(2)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임명위원이 동 명령의 적법성 및 적

절성과 관련하여 모든 판결 사항을 심리한다.

만일 이 심리 과정을 통해 해당 판결/결정 사항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담당 위원은 직접 소속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여 항소위원회 앞으로 해당 사안을 항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은 판결 사항 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위원의 명령에 의한 항고 신청서는 담당 위원이 상기 명령 발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될 것이다.

○ 항소기한 및 서류제출 방법

임명위원에 대한 항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그에 대한 항고 대상 명령 전달일로부터 60일이다. 다만 항고인이 60일 이내 항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항소서류 제출절차는 관세법 Section 128상의 CA-1서류와 Section 129D(4)의 CA-1서류로 진행한다. 일단 항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항고인에 대해 변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항소) 심의관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 최대 3차례까지 이 변론 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

심사위원은 가능한 모든 경우 항소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항고 건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항고인, 판정 당국, 관할 지역 내 수석위원 및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앞으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은 1982 관세법 128부 및 128 A와 관세항소규칙에 기술되어 있다.

□ 관세 및 소비세 항소재판소(CESTAT)에 항소

관세 및 소비세 항소재판소는 1980 관세법 제129(1)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된다. 동 재판소가 담당하는 항소대상은 관세법 제129A(1) 근거하여 세관직원 또는 관세법 제129(D)(4)에 근거한 임명위원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소는 원장, 선임 부원장과 부원장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법률전문가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다. 재판소의 업무는 다양한 지부를 두어 담당하고 있는데, 델리에 위치한 특별 지부와 지역별 지부(델리, 뭄바이, 콜커다, 방갈로르, 첸나이)가 있다. 특별지부는 관세 및 소비세의 세율과 평가, 과세결정의 목적

등과 관련한 문제를 담당한다. 특별지부는 최소 2인의 멤버로 구성되고 각각 법률과 조세전문가를 두어야한다. 지역지부는 특별지부의 사법심사 범위안에서 특별지부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을 담당한다.

수화물의 수출입, 지상에 양륙되지 않거나 짧은시간 양륙된 수입품, 관세환급에 대한 결정은 동 재판소의 항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소는 관련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이나 또는 몰수된 물품 가액 내지 관련 관세 차액이 Rs.50,000/-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목적상 관세율이나 관세평가 산정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 재판소에 항소하기 위해 항소대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이후의 항소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 임명위원 결정에 대한 심사

관세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1인의 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당결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심사한다. 위원회의 명령으로 직접 항소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항소명령은 조사대항 결정이 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행되어야 한다. 항소는 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위원회 위원에 의하여 제기된다.

□ 고등법원에의 항소

○ 고등법원 항소 대상

2003년 7월 1일 이후 관세율 또는 관세평가 결정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 항소재판소(CESTAT)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안이 관세율 또는 관세평가액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 관세율 및 관세평가 관련 항소재판소 결정- **대법원**

▶ 관세율 및 관세평가 비관련 항소재판소 결정-**고등법원**

○ 항소 기한 및 절차

고등 법원 항소제기 기간은 18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항소 제기 대상 명령이 관세청장 (Commissioner of Customs)에 의하여 발급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소기간이 종료된 후라고 할 지라도 그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항소신청을 수락할 수가 있다.

고등 법원은 상고 사안에 법률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고등 법원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중대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서도, 해당 사건에 그러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시 청취할 수가 있다. 고등 법원은 CESTAT가 결정하지 못한 사안, 또는 잘못 결정한 사안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

□ 대법원에 상고

관세와 관련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를 관세법 제 130E[107]에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1. 2003년 7월 1일 이전에 CESTAT가 발급한 명령에 대해 CESTAT의 의뢰가 있는 경우, 또는 제130A에 근거하여 세관장이 신청한 사안에 대한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2. CESTAT의 결정이 관세율 또는 관세평가와 관련된 민사소송과 관련된 항소인 경우

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항소)의 기한은 명령을 받은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107) 130E. Appeal to Supreme Court:
An appeal shall lie to the Supreme Court from-
(a) any judgement of the High Court delivered on a reference made under section 130 in any case which, on its own motion or on or oral applicatio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party aggrieved, immediately after the passing of the judgement, the High Court certifies to be a fit one for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r
(b) any order passed by the Appellate Tribunal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determination of any question having a relation to the rate of duty of customs or to the value of goods for purposes of assessment.

보통 항소인은 대법원 항소 제기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등 법원으로는 항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항소인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인도 헌법 제136조에 의거한 Special Leave Petition[108]에 의해 고등 법원을 대상으로 해당 명령 및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다. SLP의 제기 기한은 고등 법원 명령의 일자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상기의 기간은 법원을 대상으로 명령서의 인증 사본 발급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법원에 이해 사본이 발급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정부부처 상호간 분쟁의 해결

중앙 정부 부처(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간, 또는 정부 부처와 공공부문 약정 (Public Sector Undertaking)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앞서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분쟁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실무 조직(field formation)에서는 분쟁 위원회(Committee on Disputes)의 허가 없이도 중재관/법원을 통한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08) 인도 헌법 제136조에 따라 인도대법원의 권한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Special Leave Petition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재판소나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항소하고자 하는 인은 대법원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대법원의 일부권한을 부여받은 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의 관세제도 개괄

□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 한, 중, 일 등과 FTA가 체결 되면서 중-아세안FTA(2006년), 한-아세안FTA(2007년), 일-아세안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되었다.

□ **관세율**

①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② 품목별 평균 관세율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번 FTA 체결로 대(對)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④ 실질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써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

환하여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 척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⑤ 관세율 조회 방법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이트[109]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관세 조회가 가능하다.

□ **관세평가제도**

①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8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ㅇ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 관세율 ×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② 관세부과 기준가액

FOB가격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이다.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가격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109) http://www.tarif.depkeu.go.id/Tarif/?menu=info&mode=text

□ **관세 환급제도**

①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유예가 가능하므로 (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재료 수입 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유예 통관이 된다. (수출 신고시 완전 해제)

②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 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재료로써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환급대상 제외 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③ 환급절차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Form E)

ㅇ 수입증빙 서류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환급 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 환급승인 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

ㅇ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이 3부 작성

- 원본: 신청인

- 1부: 국영은행

- 1부: 예산국장에 송부

ㅇ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인도네시아에서 관세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산지 규정**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 수출 시 GSP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또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통관서류로서의 원산지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ASEAN FTA가 발효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원산지증명서(AK-FTA양식)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FTA내 수입 원산지증명 절차 변경 법안(SE-01/BC/2010)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의 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한국에서 Invoicing을 발행하는 경우 AKFTA 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 **참고사항**

한-아세안 FTA 당사국인 인도네시아는 FTA 협정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해 2012.1.1 자로 관세인하의무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인니측에 이행의무를 촉구해온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세인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재무부 장관령 118/PMK 01/2012, 7.10 자)를 완료하였다.

대상품목은 민감품목 중 120개 세 번(HS 10단위 기준)이 20%로 세율인하가 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30%)

- 플라스틱판(25%)

-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40%)

- 승용차(40%), 화물자동차(40%), 엔진을 갖춘 새시(40%), 차체(40%)

- 모터사이클(30%)

(나) 인도네시아의 관세행정 구제절차 110)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관세 담당관에 의해 결정된 품목분류 또는 관세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코자 하는 당사자는 수입 관세 납부 예정액에 대한 담보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상기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오직 관세 담당 심의관(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에 대해서만 서면상의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DG 측에서 60일 이내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이의 제기 사항이 공식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아울러 관련 담보가 현금 형태로 납부된 상태에서 60일 이후 담보 반환권이 행사된 경우, 정부 당국은 최대 24개월 동안 월리 2%의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 과징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특정 벌과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코자 하는 당사자는 행정상의 벌금 금액에 대해 담보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오직 DG에 대해서만 서면상의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10) 인도네시아의 관세행정 구체절차는 아세안연합 웹페이지상의 인도네시아 자료를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indonesia-3)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경우 DG 측에서는 상기 이의 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동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DG 측에서 상기 이의 제기 사항을 기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가 현금으로 전환됨으로써, 납입 대상 수입 관세액을 대납 처리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동 이의 제기 사항이 공식 수락된 경우에는, 관련 담보를 반환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DG 측에서 60일 이내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이의 제기 사항이 공식 수락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관련 담보를 반환 조치해야 한다. 만일 관련 담보가 현금 형태로 납부된 상태에서 60일 이후 담보 반환권이 행사된 경우, 관련 정부 당국은 최대 24개월 동안 월리 2%의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이의제기 후 결정에 대한 항소

세관 또는 DG에 의해 결정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코자 하는 당사자는 수입 관세 납부 후 동 결정 내지 평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세 항소 기구(Customs and Excise Appeal Institution)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기관의 결정 사항이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4) 베트남

(가) 베트남의 관세제도 개괄

□ 관세법 및 관세 코드

베트남의 관세관련 법은 관세청법(Luat Hai Quan)과 수출입세법(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이 있다. 이외에 다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존재하고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세청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에 많이 존재 한다.

[베트남의 법령체계]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하였다.

□ 관세율 종류

Ordinary Import Tax Rate(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 국가 포함)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별 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로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 실효 특혜 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 및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가 이에 해당

□ 특혜(MFN)관세율 적용대상 국가(163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불가리아, 칠레, 쿠바,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타,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페루, 북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맨,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국, 일본 등 163개국

□ 베트남과 AFTA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의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

감하여, 1987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개방 정책을 단행하였다. 경제 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되었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에 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수입 관세를 0~5%까지 인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5년간 관세를 인하한 실적은 미미하였으나, 2003년도에 그 동안 고율 (30~100%)의 관세를 부과하였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전환 하 는 등 실질적인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① 오프라인을 통해 알아보는 법

매년 발간되는 OFFICIAL GAZETTE을 구입해서 알아 볼 수 있다.

ㅇ 자료명: 2011 EXPORT IMPORT TARIFF

ㅇ 발행처: Labor Publishing House

ㅇ 가격: 498,000VND (베트남 국내 서점에서 구입 가능)

②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는 법

베트남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www.customs.gov.vn)에서 각 품목의 관세율을 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불안전하고, 영문웹사이트 업데이트가 늦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용하기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③ 수입관세 산정 방식

A = 제품가격

IT = 수입관세 = A * 수입세율

*SCT = 특별소비세 = (A + IT)*특별소비세율

VAT = 부가세 = (A+IT+(SCT))*부가세율

제품수입 납부 금액 = A+IT+(SCT)+VAT

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따라 적용됨

(나) 베트남의 행정 구제절차[111)]

□ 행정적 예방조치 사용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

법령 No16/CP의 제18조 내지 제22조는 베트남 정부의 관세관리상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칙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법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 예방조치 사용결정에 대하여 해당결정을 한 세관의 책임자에게 직접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접수할 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인에게 서면문서로 답변 할 책임이 있다. 세관의 항소검토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자가 항소를 담당한 자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 행정벌 결정에 대한 항소

○ 항소기한

행정 처벌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그의 법정 대리인은 관세에의 행정적 위반에 대한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적 위반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렸던 책임자에게 1차적으로 항소를 할 권리가 있다.

행정 처벌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일차 항소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차 항소를 담당한 자의 직속상관에게 항소를 하

111) 베트남의 행정구제절차는 아세안연합 홈페이지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viet-nam-2)에 소개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거나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차 항소 및 그 이상의 항소에 대한 기한은 결정을 내린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벽지나 산악지역의 경우, 기한은 이보다 연장될 수 있으나 결정을 내린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항소담당 기관**

- 1차 항소: 1차 단계에서 항소 처리 담당기관은 관세에 대한 행정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처벌에 관한 결정을 내린 자가 된다.

- 2차 항소: 기술 관세 팀장(the Head of the Technical Customs Team)에 의한 결정에 대한 2차 항소 담당기관은 기술국의 최고 책임자(Chief of Technical Bureaus) 또는 세관 검문소장(Chief of Customs Checkpoints)이다.

기술국의 최고 책임자 또는 세관 검문소장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관한 2차 항소 처리 당국은 주 또는 시의 세관장(Directors of Provincial or City Customs Departments)이거나 결정이 조사 집행 팀과 밀수방지부서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에는 조사 및 밀수방지부서장(Director of Investigation and Anti-smuggling Department)이 항소처리 담당기관이 된다.

이후 주 및 시의 세관장과 조사 및 밀수방지부서장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항소는 관세청장에게 한다.

- 고등 항소: 관세청장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항소는 국가 감찰관(State Inspector General)이다. 다만 관세청장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법률 및 조세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항소 처리 당국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이며 재무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 **항소처리 담당기관의 책임**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항소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항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항소처리 기한**

- 1심에 해당하는 항소의 처리기한은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이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기한은 이보다 연장될 수 있으나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히 교통이 불편한 벽지나 산악지역의 경우 1차 항소를 처리하는 기한은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이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기한은 이보다 연장될 수 있으나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심 이상의 항소 처리 기한은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이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기한은 이보다 연장될 수 있으나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심 항소기한 역시 특별히 교통이 불편한 벽지나 산악지역의 경우 2차 항소를 처리하는 기한은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기한은 이보다 연장될 수 있으나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의 관세행정 구제절차]



Ⅴ.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1.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가. 관세청 심사청구 사례

2014년 9월 말 현재까지 관세청에 제기된 "원산지" 관련 심사청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특혜원산지’와 관련한 심사청구는 총 7건으로 그중 3건은 일반특혜와 관련된 심사청구이고 4건은 FTA특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FTA특혜와 관련된 4건의 심사청구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관심 제2009관001**

한-EFTA 협정 발효일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 **관심 제2011-37호**

한-EFTA협정 부속서 Ⅰ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된 경우

3. **관심 제2012-33호**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4. **관심 제2014-12호**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물품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이하에서는 4건의 심사청구의 쟁점과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심2009관001

한-EFTA 협정 발효일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사실관계

청구인은 수입물품 Frozen Capelin Roe (냉동 빙어알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2006.6.17. 수출자 Icelan ㅇㅇ가 한 · EFTA FTA 당사국인 '아이슬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Certificate of origin을 발급받았고 2006.7.27. 및 같은 해 7.28.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 중에 2006.9.1. 한 · EFTA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상기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한 · EFTA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2007.4.2. 수입신고번호 2****-07-****08U호 및 2007.4.23. 2****-07-****28U호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ㅇㅇ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08.2.19.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은 한 · EFTA FTA협정상 신고규정 및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008.8.18. 청구인에게 협정세율을 배제한다는 요지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08.11.24.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20%)을 적용하여 부족세액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심사청구를 하였다.

□ 결정사항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6.9.1. 한 · EFTA FTA협정 발효일 이전 2006.7.27 및 같은 해 7.28.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고 2007.4.2. 및 같은 해 4.23. 수입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 Icelanㅇㅇ service LTD로부터 2006.6.17.자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동 협정세율 적용 신청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음을 인정된다.

한편,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34조(통과 또는 임시보관상품)에 의하면, 협정 발효일에 세관 감시하의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까지도 동 협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 2006.12.31.까지 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적용례)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례조항인 제3항을 통해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에 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상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 보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관련서류를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에서 동 협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후 4월 이내에 신고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적합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고 있으므로,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이 경과되어 관세당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 · EFTA FTA협정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취지를 감안해 볼 때, 협정발효일 이전에 입항되어 국내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이 한 · 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수입신고는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이 경과한 2007. 4월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은 한 · EFTA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더 이상 심리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2) 관심 제2011-37호

한-EFTA협정 부속서 Ⅰ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된 경우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6. 10. 18.부터 2008. 4. 26.까지 노르웨이 소재 ○○社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6-******U(‘06. 10. 18.)호 외 31건으로 선박용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8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적법성이 의심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2008. 10. 6. 관세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장은 2010. 4. 29. 원산지 조사대상 수입신고 32건의 진정성 여부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 등에 대한 검증을 노르웨이 관세당국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관세당국은 2011. 8. 23. 검증요청한 쟁점물품 중 일부 비원산지 물품(2건)이 있고, 그 외 물품은 한-EFTA FTA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물품이나 그 중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된 원산지신고서(21건) 및 원산지문구가 미표기된 원산지신고서(3건)는 형식적 오류로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상대국 세관(노르웨이)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내용]

*실질적 오류 : 원산지 불충족 물품 2건

*형식적 오류 : 원산지문구 미표기 3건, **원산지 오기표기 21건**

관세청장은 2011. 9. 9. 노르웨이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비원산지 물품, 원산지 문구를 미표기한 원산지신고서 및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건에 대하여 한-EFTA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도록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2011. 9. 20. 청구법인에게 비원산지 물품 수입신고건인 수입신고번호 *호 외 1건, 원산지문구를 미표기한 원산지신고서 관련 수입신고번호 *호 외 2건,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 관련 수입신고번호 *호 외 20건, 총 26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내역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건과 관련한 수입신고번호 *호 외 19건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0.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사실관계는 상기 청구경위와 같으며, 처분청이 노르웨이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결과에 따라 노르웨이 원산지가 아닌 물품 및 원산지 문구가 미표기된 원산지신고서와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호 외 5건에 대해 한-EFTA FTA협정 제28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수입신고번호 *호 외 19건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과 관련하여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살펴보면,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22조에서는 원산지신고의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부속서 부록3 제15조 원산지신고

서의 문안 주2 후단에서는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문안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되어 있으나 각 품목별 원산지란에는 별도로 원산지가 “NO"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문안 상의 원산지 표기(EEA)와 송장 특정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기(NO)가 상이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22조 제2항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보정요구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보정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의 보정절차가 마련된 취지가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자의 업무착오 또는 원산지 오류신고에 따른 과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노르웨이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것은 동 수출자의 실수이며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으며, 비원산지 물품 일부 품목을 제외한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나머지 품목은 한-EFTA FTA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품목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된 오류와 같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의 오류를 보

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인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EEA" 표기에 대해 논란이 되자 심사청구시 원산지 국가명이 ”EEA"에서 “NORWAY"로 수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한-EFTA FTA협정 상 원산지신고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자율증명 방식이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협정 상 인증수출자로서 수출자의 서명, 원산지신고서 수정 작성일자 등은 원산지신고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자의 서명 불일치, 원산지신고서 수정 작성일자 누락 등을 이유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는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되어 있으나 품목별 원산지 란에 “NO”로 적정하게 표기되어 있어 한-EFTA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표기방식을 충족하고 있고,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 관심 제2012-33호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7. 7. 31.부터 2008. 9. 27.까지(입항일 기준) 스페인 등에서 선적된 B/L ESBKR804058H01외 7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번호 *호(2008.8.22)등으로 수입통관하였다.

2008. 10. 17.부터 2010. 8. 4.까지 반송신고번호 *호외 7건으로 최초 반입한 물량에서 수입통관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홍콩의 ○○○ LTD.사로 반송하였다.

2009. 7. 13.부터 2010. 8. 28.까지(입항일 기준) 홍콩에서 선적된 B/L 809207호외 7건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고, 2011. 7. 6.부터 2012. 4. 16.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13건(이하 '청구대상건'이라 함)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2. 6. 30. 청구법인은 청구대상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처분청에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감액경정을 함께 청구하였다.

2012. 8. 28. 처분청은 협정적용신청을 심사한 결과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조 직접운송에 위배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쟁점물품의 운송경로를 보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BODEGAS CHIVITE, S.A. 등)로부터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일부를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을 다시 홍콩(○○○ LTD)으로 반송하였고 일정기간 이후 국내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지역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거래에 대해 운송서류 및 상업송장이 발급되었고, 홍콩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재반입 거래와 관련하여 별개의 운송서류 및 상업송장이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EU FTA협정 제13조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일 탁송화물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되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는 탁송화물에 대해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관심 제2014-12호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물품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2.7.24.부터 2012.10.15.까지 미국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시험 장비(Avionics Hot Bench,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율(0%)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2013.7.8.부터 2013.8.21.까지 청구법인에게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013.8.22. 수출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13.10.1. 수출자가 회신기한인 2013.9.30.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예비)결과를 통지하였다.

수출자는 2013.10.10.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원산

지검증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원재료별 HS 4단위가 기재된 원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10.28.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제8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3.12.20.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면서 함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4.2.5. 청구법인에게 관세 경정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이후 2013.10.1. 원산지 조사 (예비)결과통지서에는 위반 내용을 ‘수출자 자료 미제출’이라고 기재하고, 2013.12.20.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기재하고, 2013.12.20. 과세전통지서의 원산지 조사 경위 및 조사 내용에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검증’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4.2.5. 경정통지서의 경정사유에 ‘FTA 원산지검증 결과’라고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3.8.22. 처분청의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에 대해 수출자는 자료제출 회신 기한인 2013.9.30.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3.10.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 (예비)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부품별 품목번호가 기재된 원재료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본건 심사청구 후 전체 부품에 대해 7개의 중간 구성품으로 분류하고 구성품별 기능·용도 등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검증결과 통지에서 경정통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검증결과나 판단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한-미 FTA 협정 및 FTA특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관계판명에 관한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원재료명세서에는 부품별 품목번호 4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명세서의 부품 1,007개 전부의 품목번호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인 제9031호와 다르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 (예비)결과통지서의 사실관계 판명 부분에 '수출자 자료 미제출'과 법적근거에 해당하는 근거 조항 '한-미 FTA 협정 제6.18조' 및 'FTA 특례법 제16조'를 분명히 명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메일 및 구두로 부족한 부분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정자료 제출을 위해 요청한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원산지 입증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명세서에 모든 재료명이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지 등 원산지명세서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제조공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재료명세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명세서와 제조공정과의 연계성 파악 등 원산지 확인에 필수적인 요소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한-미 FTA 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6.18.조(검증)에서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물품 원재료명세서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제조공정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재료명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수출자가 도면, 부품목록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패키지(TDP, Technical Data Package)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동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처분

청은 동 자료를 제출받는 등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례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의 “FTA 원산지”와 관련한 심판청구 사례는 총 67건에 달한다. 총67건의 심판청구 사건 중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한 “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총4건에 해당한다.[112)]

FTA원산지와 관련된 4건의 심판청구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조심2011관0138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조심2012관0185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 · 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 ·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조심2013관0015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4. 조심2014관0073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하에서는 “취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4건의 FTA 원산지 분쟁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112) 조세심판사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http://www.tt.go.kr/search_page.jsp 홈페이지 상에서 심판번호별로 취소결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건이 확인 된다. 그러나 쟁점이 중복되는 사건들이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쟁점사항이 중복된 사안은 제외하고 총 4건을 선별하였다.

(1) 조심2011관 0138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OOO주식회사(청구법인은 2010.5.3. 동 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흡수합병하였다)는 1984년부터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구두, 핸드백, 의류 등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여 왔으며, 2006.9.19.부터 2009.9.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8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OOO산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FTA FTA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아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OOO 관세당국에 요청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 확인요청일(2010.9.14.)로부터 10개월(2011.7.13.)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2006.9.19.) 외 3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11.9.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2007.1.3.) 외 74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확인요청일(2010.9.14.)로부터 10개월(2011.7.13.)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1.1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1차 처분 및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1.10.13. 및 2011.1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 상대국 세관당국이 기한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에는 발리 상표 및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도 OOO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인 수출자는 협정 부속서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 종료일 이전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과 회신 종료일을 약 2개월여 넘겼지만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단순히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협정상 원산지검증 주체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OOO에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로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이 2011.9.21. 우리나라 관세청에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송부되었다면 검증내용대로 처분청에서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진행사실을 중간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회신기한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 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 수입물품에 대하여 OOO산임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OOO산이 맞다고 회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OOO 관세당국에서 OOO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원산지 검증결과 OOO산이 아니라고 회신된 부분은 당연히 협정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과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2년이지 여부**

특례법 제3조에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례법은「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특례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OOO산이 맞다고 회신된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수입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제외한다.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원산지를 불인정한 수입신고번호 /*10644-07-070200U호*/ 외 2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원산지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협정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OOO 관세당국에서 서류보관기간경과로 원산지 신고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10644-06-090494U호*/ 외 16건에 대하여는 협정 부속서 I 제21조 제1호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관련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수입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조심2012관0185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9.2.26. OOO로부터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OOO세관장(이하 "통관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0.2.18. OOO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2009.2.3. 선적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OOO,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0.2.2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여 관세 OOO원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이후,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2012.7.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쟁점물품은 2009.2.3. OOO에서 선적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2.26. 쟁점물품을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O 국제통상산업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일은 2010.1.18.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

상산업부에서 발급승인을 한 일자는 2010.2.18.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0.2.23.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2011.7.2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이고, 이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2009.2.26.부터 1년 내인 2010.2.23. 한-아세안 FTA에 따른 적법한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상산업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1 원산지규정 제7조 제4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는 1년 이내이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후적용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점, 쟁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신청이 협정에서 규정한 기간내(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상산업부에 신청하여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점,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 제10조 및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4항 1호에서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선적 전부터 수출자 측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후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측과 수출국 정부에 의해 발급이 지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한-아세안 FTA의 체결 목적이 체약국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이에 따른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신청을 한 이 건의 경우 한-아세안FTA 부속서 3의 부록1 원산지규정 제7조 제4항만을 들어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조심2013관0015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2012.10.05. 청구인은 OOO시 소재 OOO 매장에서 구매한 OOO핸드백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 이라 한다)에 의한 한·EU자유무역협정세율(이하 “FTA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해 OOO세관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자진신고하였다.

OOO세관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을 확인하고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고지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쟁점물품 유치 후 구매영수증의 보완과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납부고지서 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OOO세관장은「관세법」제39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 OOO핸드백 1점(구매영수증 가격은 OOO유로)에 대해 여행자휴대품 면세금액 미화 400달러 및 TAX REFUND된 278유로를 제외한 OOO유로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2.10.5. 납부고지번호 OOO호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청구인은 유럽에서 구입하는 가방에 대하여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 등으로 접하고, OOO시 소재의 OOO매장에서 쟁점물품 OOO가방 1개를 OOO유로에 구입하면서 매장의 판매원에게 한국에 입국시 협정세율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판매원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한·EU FTA의 특혜원산지제품임을 신고한다"라는 영문으로 된 원산지증명문구를 스탬프로 날인하고, 청구인이 OOO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쟁점물품 가액과 판매일, 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된 TAX-FREE 서류에 판매자가 서명을 한 후, 원본은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복사본 1부(구매영수증과 TAX-FREE)를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2012.10.5. 새벽 OOO공항에서 OOO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던 중 OOO에서 구입한 쟁점물품 가방에 대하여 협정세율적용을 위해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으나, 담당 세관직원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증명문구 스탬프 날인만 있고 판매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쟁점물품 구매영수증가격 OOO유로에 대해 여행자휴대품면세금액 미화400달러 및 Tax Refund 278유로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통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관세법」제232조 제1항 및「관세법시행령」제236조 제2항에 의거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EU회원국산 여행자휴대품의 경우,「한·EU FTA협정」의「우리나라와 EU간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21조 제3호에 따라 미화 1,000달러 미만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FTA관세특례법시행령」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2항 제2호를 보면 "쟁점물품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건 여행자 휴대품인 쟁점물품 구매가격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한도인 미화1,000달러 미만을 초과한 OOO유로이므로 원산지증명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원산지증명방법은 OOO가방 판매점에서 쟁점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협정대상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스탬프 날인과 판매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관련규정에는 구매가격에 관계없이 여행자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대상이라는 점, 쟁점물품 판매자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가 EU회원국산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한 점,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판매자의 서명이 없으나 TAX FREE 서류에 판매자의 서명이 있고 이를 편철하여 구매영수증과 함께 청구인에게 발급한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협정관세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조심2014관0073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8.7.부터 2009.8.6.까지 OOO로부터OOO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외 4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시,품목번호를 HSK 0404.90-0000호로, 관세율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로 적용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1901.90호로 기재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1월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대상으

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HS 1901.90호)와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HS 0404.90호)가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2013.5.14. FTA 특례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동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7.8. 및 2013.9.9.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36%)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사항

청구법인은 칠레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0404.90-0000호(유장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이하 "제0404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한-칠레 FTA협정에 따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13.5.14. 수출국의 제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 쟁점물품이 제1901.90호(곡분·밀크의 조제품, 이하 "제1901호"라 한다)로 분류되어 있어 특혜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이 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HS를 제0404.90호로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국 제조자에게 쟁점물품을 대한민국 세관에서 요구하는데로 제0404호로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은 전 세계에 제1901호로 수출하고 있어 대한민국만 제0404호로 바꾸어 줄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였다.

쟁점물품은 상표명이 OOO인 우유조제품(Milk Preparation)로서 밀크에 설탕, 포도당, 안정제 및 토코페롤 등을 혼합 가열하여 갈변화(캐러멜화)된 갈색계 고점도 페이스트상(지방함량 약 9% 이하)이며,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OOO세관장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품목번호를 HSK 0404.90-1000호로 회신한 바 있다.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에서 동 물품은 밀크에 설탕, 포도당 등을 첨가 후 가열공정으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1901.90-201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관련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정정 요청에 대하여 수출자는 쟁점물품은 제0404.90호에 분류되는 유장단백질과는 다른 물품이고 관세율표상 제1901.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칠레 세관 당국에서 확인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다.

동 협정 원산지규정 부속서4에는 물품별 협정세율 적용 대상 세번을 규정하고 있고, 협정 부속서2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상 HS 6단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산지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1901.90호 중 협정세율 적용 대상 품목번호는 HSK 1901.90-1000호(맥아추출물), HSK 1901.90-9010호(오트밀), HSK 1901.90-9092호(보릿가루의 것)의 물품을 협정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OOO 및 OOO세관 분석실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OOO부터 최근 OOO 6차례에 걸쳐 HSK0404.90-1000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바 있고, 원산지 증명서 검증 시점(2013.3.29. ~ 2013.5.1.)이후인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1901.90-2010호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한바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및 OOO세관 분석실은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 OOO부터 최근 2008.11.19.(부산세관 분석실)까지 HSK 0404.90-1000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바 있고, 원산지 증명서 검증 시점(2013.3.29. ~ 2013.5.1.)이후인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 1901.90-2010호로 품목분류 결정 회신한 바 있는 점, 쟁점물품을 최초 결정한 1993년 이후 15년 이상을 일관되게 제0404호로 처리하여 왔고, 최근에 와서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1901호로 변경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쟁점

물품은 2008.8.7.부터 2009.8.6.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당시에는 제0404호가 적용되는 시점인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제0404.90호)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제1901.90호)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199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처분청의 품목분류사전회시 및 분석을 통해 쟁점물품이 품목번호 제0404호에 분류된다고 통보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대상에 일응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 비대상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보정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부인하고 칠레산 우유조제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행정소송 사례

2014년 9월 말 현재까지 하급심에서 부터 대법원까지의 심급에서 판결요지상 “원산지”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25건이 조사되었다.

법원의 종류별로는 대법원 18건, 고등법원 2건, 하급심 5건으로 분류되고 사건종류별로는 민사 3건, 형사 20건, 특허 1건, 세부 1건이 분포되어 있다.

원산지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사례 25건을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서면 현재까지는 “FTA 원산지”가 쟁점이 된 사안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행정소송 현황]

심급별	건수	사건별	건수
대법원	18	민사	3
고등법원	2	형사	20
하급심	5	특허	1
		세무	1

자료: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수집 분석은 주요 수출국과 원산지검증 요청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총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상대국 법원 및 판례검색 DB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는 상대국 분쟁사례 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FTA 원산지 분쟁사례로 협소하게 설정하지 않고 원산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수집한 후 되도록 특혜원산지 판단 및 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심급유형도 하급심 판례보다는 상급심 판례 위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되도록 최신 사례를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는 13개 국가 총20개 판례로 대륙권별로 크게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기본취지는 FTA 수출상대국에서 발생한 원산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선험적으로 수집하여 상대국 분쟁사례를 이해하고 향후 원산지 분쟁시 기업 및 정부의 대응논리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에 있다. 수집된 사례는 모두 상대국 법원의 판결문으로 일반논문 또는 행정가이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집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학전문 번역가의 번역을 함께 진행하고 되도록 판결문의 문체나 단어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대륙별 또는 국가별로 판결문의 문체나 표현이 상이할 수 있다.

수집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국가명
영미권	미국(2), 캐나다(5), 호주(1)
유럽권	영국(3), 독일(1), 네덜란드(1), 슬로바키아(1), 폴란드(1), 스위스(1)
아시아권	중국(1), 인도(1), 인도네시아(1), 필리핀(1)
언어	영어, 독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 ) 안은 사례의 수

가. 영미권

(1) 미국

(가) 사례 1

□ 사례 개요

【원고】 FORD MOTOR COMPANY

【피고】 미국정부

【쟁점】 NAFTA 상 특혜관세 환급 청구의 유효성 여부

【결정사항】 각하

【판결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판결일자】 2010년 1월 12일

□ 사실관계

1997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Ford社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하였다. 수입 선적 중 일부가 미국에 통관번호 231-2787386-9호로 1997년 6월 27일에 통관되었다. [113]

통관 당시 Ford社는 해당상품에 대해 NAFTA 상 특혜관세 대우를 주장하지 않고 일반 세율에 따라 수입신고 하였으며, 관세청은 기본세율에 따라 통관 처리 하였다.

Ford社는 1998년 5월 13일에 제1520(d)에 따른 NAFTA 특혜관세 대우의 사후신청을 하였다(전자접수 신청번호 제3801-98-351253호). 사후신청 시 Ford사社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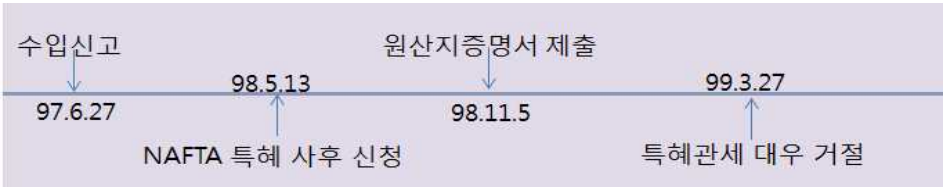
113) 당사자들은 통관번호 231-2787386-9와 관련 청구번호 3801-98-351235를 본 법원에 제기된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대표적인 청구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Ford社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일자로부터 1년을 도과 하여, 1998년 11월 5일에 관세청에 제출하였다.

1999년 3월 27일, 디트로이트 세관은 “NAFTA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Ford의 특혜관세대우 청구를 거절하였다.

Ford社는 이후 디트로이트 세관의 특혜관세 대우 거절에 대하여 이의제기서 제3801-99-100369호를 접수하였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거절하였다.

[사실관계 순차적 현황]



□ 쟁점사항

○ 물적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의 판단

본 사건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본 법원이 이의가 제기된 청구에 대한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을 가지는 지이다. “관할권 없이 법원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관할권은 법률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이 중단되는 경우, 법원의 유일한 나머지 역할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다.” 한편 본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본 법원은 모든 확정적 사실관계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드시 관할권 부재를 근거로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고측에 유리하게 모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원고 Ford Motor Company (“Ford”)는 자동차부품 수입자로 미국연방법전

(U.S.C.) 제19편 제1520(d)조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급을 위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 수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NAFTA의 원산지 증명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114]

오히려, Ford는 수입업자가 증명서를 해당 통관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ord는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일자로부터 1년 뒤에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관세청이 미국연방법규 제19편 제181.31-32조 또는 NAFTA 조정 프로그램(Reconciliation Program)에 따라 Ford의 제1520(d)조 상의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ord는 또한 미국연방법규 제19편 제10.112 조에 따라 관세청이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증명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청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본 법원에 관할권 부재를 근거로 각하를 신청하였다.

본 법원은 미국 순회법원의 선례를 근거로 피고 측이 제기한 중요한 쟁점인 관할권 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대해 아래에 설명될 사유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 측의 각하 신청을 승인한다.

미국연방법전 제28편은 법원의 관할권을 규율하고 있다. 제1581(a)조에 따르면 법원에게 "이의제기 거절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사안을 다투기 위해 제기된 민사 소송 일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부여한다. 관세청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15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검토하였으며, 관세청이 관련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접수이다.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15(a)조.[115] 관세청은 제1581(a)조에 따라 제기한 이의제기를 "심사"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의제기에 기재된 본안(merits)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법률에 따라 관세청의 행정심판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114) Ford는 본 법원이 본 사안에 대해 미국연방법전 제1581(a)조 또는 제1581(i)조 상의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115) 제1514(a)조는 관세청의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분류한다. 관세청은 관세 유형, 세율 및 과세가능 금액 등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검토할 수 있다. 제1514(a)조. 상기의 분류는 배타적인 것으로 "관세청의 관련 심판결정이 7가지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본 법원은 관세청의 이의제기 거절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제1581(a)조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Playhouse Imp. & Exp., Inc. 대(對) United States case]

제1520(d)조는 수입업자가 “수입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관련된 NAFTA 원산지 증명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특혜관세 청구를 제기”한 경우 NAFTA 상의 수입 후 사후청구에 의한 관세 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조항과 일치되는 관점에 따라 제181.31조는 “수입업자는 제181.3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181.32(b)조는 “해당 상품 각각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 환급을 위한 수입 사후 청구(post-importation claim)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ord는 수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전자접수를 통해 적합한 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본 법원은 Corrpro Cos., Inc.사건 (433 F.3d 1360)과 Xerox Corp.사건 (423 F.3d 1356)이 본 사건 쟁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116] 그러나 원고가 상기의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별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Xerox Corp. 사건에서, 정전기 복사기와 전선장비를 멕시코로부터 다수 수입한 수입업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 당시 NAFTA 상의 혜택을 청구하지 않았다.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한 후, 상기의 수입업자는 제1514(a)조 상의 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통관에 대한 관세 면제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통관된 한 건만이 1년의 기한을 충족하였으며, 나머지 통관은 관세 면제청구가 거절되었다. 상기의 수입업자는 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항소법원은 1년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NAFTA 상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관세청에 제기된 적이 없으며, 항소법원은 거절된 이의제기에 대한 사안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NAFTA 조항에 대해 조약, 시행법령, 입법연혁 및 관계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히 논의함으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제1520(d)조와 제181.31조가 NAFTA상의 사후 특혜신청을 위한 1년의 기한을 강화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판결하였다.

116) 원고는 법원이 참조하고자 한 위 사안들과 원고의 사실관계가 서로 구별됨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제1520(d)조의 의미가 해당 법령 상의 NAFTA 혜택 청구 제기가 반드시 기한 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지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였다. [Xerox Corp.사건 (423 F.3d) 1361-63 페이지.]

Corrpro Cos., Inc.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Xerox Corp.사건의 판시 근거를 인용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NAFTA 상의 청구 권리와 관련한 관세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결정에 대해 국제통상법원은 서면 진술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기한 내에 수입자가 통관 당시 또는 통관 후 1년 이내에 제출함으로써 NAFTA 상의 혜택 청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만 [제1581(a)] 조 상의 관할권을 가지며, 관세청은 명시적으로 해당 청구의 본안(merits)을 검토함으로써 "특정 의사결정 절차"에 연관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Ford가 NAFTA 상의 혜택을 통관 당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Ford는 미국에 상품이 통관된 후 1년을 경과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Ford의 NAFTA 상의 환급 청구는 유효하지 않으며, Ford의 NAFTA 상의 특혜관세 대우 요청에 대한 관세청의 거절은 이의제기가 가능한 결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Ford의 제1581(a)조에 대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Ford는 또한 본 법원이 제1581(i)조 상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법원은 제1581조의 다른 조항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제1581(i)조 상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Ford가 제1581(a)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Ford가 유효한 청구를 제기하고 관세청이 요청된 구제수단을 본 안을 심사하여(on the Merits) 거절한 경우라면, Ford는 해당 조항에서 제공하는 구제수단이 명시적으로 부적합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법원은 따라서 제1581(i)조 상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본 법원이 물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지 않으므로 Ford의 상기의 통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은 검토할 이유가 없다.

동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법원이 행정심판을 위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관할권 보유여부, 즉 물적 관할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물적관할이 없으므로 본안판단의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국제통상법원이 물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본 사안의 쟁점에 해당하는 NAFTA 특혜의 사후 신청과 관련하여 제1520(d)조와 제181.31조에 따라 특혜 사후 신청기한은 1년 이내로 제한되고 더불어 해당신청이 유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수입자는 제1581(a)조에 근거하여 관세청의 이의제기 거절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동 규정에 따라 국제통상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 물적관할을 가지려면 제1514(a)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관세청의 결정유형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1514(a)에 분류된 7가지 관세관련 결정에 대해서만 제1581(a)에 따른 항소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수입자는 유효하지 않은 특혜관세 사후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관세청의 거절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관세청의 거절결정은 제1514(a)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수입자는 제1581(a)에 근거하여 국제통상법원에 항소 하는 것은 물적 관할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나) 사례 2

□ 사례 개요

【원고】FORD MOTOR COMPANY,
【피고】미국정부
【쟁점】관세법 제181.22조와 NAFTA 제1520조의 충돌
【결정사항】관세청으로 파기 환송
【판결법원】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일자】2014년 5월 9일

□ 사실관계

Ford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였으며 NAFTA 상의 관세 면제를 주장하였다. Ford는 통관 당시 관세특혜(preferential treatment)를 주장하지 않고 대신 미국연방규정집(C.F.R.)제19편 제181.32조에 따라 (전통적인) NAFTA 수입사후 환급청구(postimportation refund claim)를 신청함으로써 상품 통관 후 이를 주장하였다.

수입사후 환급청구 요건 중 하나는 수입업자가 상품이 NAFTA 상의 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ord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세청은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22(d)(1)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요건을 면제하지 않았고 불충분성을 근거로 Ford의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Ford는 청구 거절에 대해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은 Ford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사자주장

○ 연반순회법원의 판결요지

Ford 사건에서 연방순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NAFTA와 제1520(d)조[117]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일로부터 1년내에 제시될 것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상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관세청은 사후조정 프로그램[118]의 모든 참가자에 대한 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하였었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관세청은 사후통관환급청구(post-entry refund claims)의 다른 유형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효율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면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기록이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제1520(d)조 청구를 사후조정프로그램 상의 제1520(d)조 청구와 다르게 취급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에 부적합하다. 사후조정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입업자를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자와 비교하여 제1520(d)조 상의 면세 목적상 다르게 취급되었다는

---

117) 미국 관세법 제1520(d). 타당한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 편의 제333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행법 제202조 또는 이 편의 제4033조에 적합하지만 수입 당시에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 관세(물품 가공비용 포함)를 환급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재처리 할 수 있다.

118) 미국 관세법 제1401조에 따르면 "사후조정"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 편의 제1484조제(a)항제(1)호제(B)소호에 따라 요구된 문서 또는 정보, 또는 수입실적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전송한 시점에서 제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신고 부분(물품의 반입허용과 관련된 것 이외의 부분)을 사후에 관세청에 제출하는 전자식 처리절차를 의미한다. 사후조정은 수입신고, 재신고, 기록보전, 그리고 이의제기의 목적상 신고로 본다.

* 제1484조에서도 "사후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b) 사후조정: 일반 (1)당사자는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당사자가 확인한 신고부분에 대해 사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사후조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 조의 제(a)항제(1)호제(B)소호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또는 정보가 관세청에 제출되거나 전송될 때 또는 관세청에서 자체 판단으로 허용하는 좀 더 늦은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조정은 수입자가 사후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날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장관이 정하는 때에 수입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수입자에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검토 완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후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입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관세청은 Ford의 전통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된 청구를 Ford가 사후조정 프로그램상 청구를 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였다.

국제통상법원은 상기의 다른 해석이 단순히 제181.22(d)(1)(i)-(iii)조와 유사하게 관세청의 면제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청이 환급 청구가 제기된 방식에 따라 해당 법령을 다르게 해석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세청이 다른 유형의 청구인들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는지를 본 법원은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법원은 국제통상법원에 상기의 쟁점을 먼저 검토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환송할 것을 명한다. Dongbu사건에서와 같이 관세청이 다른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조문에 대한 하나의 통일적인 해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 관세청의 주장

환송판결에서,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19]

CAFC의 환송 조회(remand inquiry)는 NAFTA 조정프로그램에 대해 관세청의 증명서 제시를 면제할 권한이 NAFTA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20(d)조로부터만 발생되었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면제는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01(s)조, 제1484조, 제1508조 및 제1509조와 같이 전혀 다른 종류의 법령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사후조정(reconciliation)과 관련된 맥락에서 모든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나, Ford가 쟁점이 된 제1520(d)조 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 증명서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1520(d)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사후조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통관후 NAFTA 청구만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두 가지 다른 법령 체계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사후조정과 관련된 맥락에서 관세청의 면제 권한 행사는 관세청 행정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두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정당화 된다. 최종적으로 상기의 NAFTA 청구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어, 수입업자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NAFTA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기회를 극대화되는 합리적인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관련된 모든 자가

119) 상기의 설명에서 사후조정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통적인 수입사후청구 접수절차(post-importation claim filing process)와 구별되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원은 요약정리가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환송판결의 중요한 부분을 판시사항에 인용하고자 한다.

관세청에게 일반적인 관세 혜택을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상기의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두 가지 절차적 방법 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후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 실행 법령 제VI편, 제B절 (Pub. L. 103-182 (1993년 12월 3일))과 관련하여, 상업적인 수입 처리 자동화 전자 시스템인 국가관세자동화 프로그램 (National Customs Automation Program -"NCA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CAP의 요소 중의 하나인 "사후조정(reconciliation)"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84(b)조는 관세법 1930의 새로운 조항 제484조 제(b)항에 입법화되었으며,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01(s)조에서 이를 "…수입업자가 신청하거나 본 법령의 본 편 제1484(a)(1)(B)조에서 요구되는 자료나 정보를 제출한 때 확인되지 않았던…통관 요건 중의 하나로 수입업자의 요청 시 개시되어 이후 …관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절차"로 정의한다.

사후조정은 전자절차를 설립함으로써 통관 시 사후조정해야 하는 행정상의 부담을 감소하고 이후에 통관 접수 당시 결정할 수 없는 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후에 제출될 수 있는 정보가 결정되고 나면 이는 관세평가, 품목분류, HTSUS 제9802호 적용가능성(heading 9802 eligibility) 그리고 NAFTA를 포함하게 된다.

NAFTA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통관 시 결정되지 않은 통관 정보는 상품이 NAFTA 상의 우대관세율을 적용 받을 자격을 가지는 지 여부이다. 수입업자가 상품이 NAFTA 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통관 요약 내역서 제출시 사후조정을 통해 NAFTA 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초기 통관 시 상품이 NAFTA 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된 이후에는 수입업자는 해당 통관에 대해 NAFTA 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를 기재하여 변경신고(reconciliation entry)를 신청해야 한다.

NAFTA상의 권리를 청구할 자격이 주장되고 CBP가 동의하는 경우, CBP는 NAFTA 상의 관세 혜택과 함께 변경신고를 정산(liquidation)하고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CBP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CBP는 NAFTA 상의 관세 혜택없이 변경신고를 정산(liquidation)한다. 관세청의 변경신고의 정산(liquidation)에 대해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14(a)(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필요한 경우 CBP가 이를 정산(liquidation)할 수 있다.

또한 NAFTA 증명서와 같은 사후조정과 관련된 양식과 자료는 기록보관에 관한 법률 상 “통관 기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제출은 조정 통관 접수 당시 면제될 수 있다. 특히 수입업자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검사 및 조사 기록을 작성, 유지 및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84조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09(a)(1)(A)조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 접수 시 요구되는 통관 기록 제출을 면제할 권한을 가진다. 상기의 면제 권한은 일반 통관 및 변경신고(reconciliation entries) 모두에 적용된다.

CBP는 관세청 규정 제163편에 대한 첨부문서인 표제 “잠정목록 (a)(1)(A)”에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필요한 “통관기록” 목록을 열거하였다. NAFTA 원산지 증명서는 상기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NAFTA 원산지 증명서는 통관 서류로 간주되며, 변경신고 접수 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CBP는 통관 기록으로서, 차후에 NAFTA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CBP가 해당 증명서를 검토하길 원하고 수입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는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조정 통관은 재정산(reliquidation)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후조정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CBP의 연방등록고시(Federal Register Notice)는 명시적으로 NAFTA 증명서는 통관기록으로 CBP가 변경신고 접수 당시 이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3 FR 6257, 6259 참조 (“원산지 증명서는 (a)(1)(A) 목록의 일부이며…관세법의 기록보관에 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CBP는 서면 NAFTA 증명서 제출을 조정 통관 당시 면제하였다. 이는 조정절차가 수입업자의 수많은 서면으로 된 증명서 제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CBP 가 모두 자동화된 환경에서 변경신고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01(s)조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두 전자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본 법원은 사후조정에 대해 그 자체로 “통관”으로 간주되는 증명서 제출 면제가 세관자동화 프로그램과 상기의 통관 접수 및 기록보관에 관한 법령에서 CBP에 부여하는 권한을 근거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상기의 법령은 관세청이 차후에 수입업자가 보유할 것이 요구되는 증명서(및 기타 통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통지 통고권한(caveat)과 함께, 해당 기관이 통관(또는 사후조정)시 상기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의 서류 제출 면제는 차후에 관세청이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이를 제출하는 데 실패한 경우,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일

반적인 기한과 관계 없이, 기록 보관에 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관련 통관이 NAFTA 상의 혜택 없이 정산(liquidation) 또는 재정산 (reliquidation)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NAFTA 조정과 관련한 증명서 제출 면제는 관세청이 특정 상품이 NAFTA 상의 권리에 대한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나, 상기의 법령에 반영된 통관절차가 자동화되고 능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정책결정을 근거로 한다.

이와 반대로 CAFC가 Ford Motor Co. 사건 (715 F.3d) (상기 판례 참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 규정집 제19편 제181.22(d)조에서 행사되는 바와 같이 제1520(d)조 청구와 관련하여, 증명서 소지 (및 제출)를 면제할 관세청의 권한은 협정에서 규정한 면제 권한만을 근거로 한다. 통관 또는 통관 기록 보관 요건에 관한 상기의 법령은 제1520(d)조의 청구와 관련한 결정에 따른 면제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청구와 유사한 제1520(d)조의 청구와 관련한 관세청의 결정은 해당 법령에 대한 관세청만의 해석을 대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상기의 결정은 사후조정프로그램을 근거로 하는 통관과 기록보관에 대한 법령을 근거로 하는, 변경신고 접수 당시 NAFTA 청구와 관련한 증명서 제시에만 적용되는 면제와 독립적이고 구별된다.

추가적으로, 관세청의 사후조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면제 권한은 해당 기관이 이후에 수입업자를 감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령 상의 조항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며, 보장을 받는 경우, NAFTA 상의 권리에 대한 자격을 승인하지 않고 면세 혜택 없이 통관을 재정산(reliquidation)하며, 그리고 관세청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수입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 1509조에 대한 논의 참조.]

관세청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09조에 따라 수입업자의 NAFTA 상의 조정 청구를 초기에 승낙하고 이를 번복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기꺼이 NAFTA 조정 청구 접수 당시 증명서 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즉, 관세청이 통관을 재정산(reliquidation)하고, 조정과 관련하여 상품이 NAFTA 상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수입업자에게 벌칙을 가할 능력은 관세청이 기꺼이 NAFTA 조정 청구에 대한 증명서 제시를 전반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청 규정 제181.22(d)조에 따라 증명서 면제를 한 후, 상기의 동일한 모든 안전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지는 않다(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수입업자의 증명서 소지 요건을 이전에 면제한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의 면제가 제1520(d)조 청구와 관련하여 쉽게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이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본 법원은 상기의 법령들이 관세청이 도입한대로 현재 수입업자에게 다음의 3가지 NAFTA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1) 기존의 통관 신청 당시, 2) 사후조정 당시; 단, 기존의 통관 시 조정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했어야 한다, 3) 제1520(d)조 청구를 통한 청구. 상기의 모든 3가지 방법이 수입업자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없는 혜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의 방법 각각은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후속적인 평가를 위해 수입업자가 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항만 세관 감독관(the port director)이 상품이 NAFTA 상의 권리를 청구할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관세청에게 NAFTA가 적합하게 청구된 상품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기의 모든 청구 방법은 공정하고 적합하게 협약을 실행하며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제1520(d)조의 해석이 해당 법령의 가능한 해석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관세청은 제1520(d)조상의 면제를 사후조정 프로그램의 면제와 별도로 구별한다. 관세청은 제1520(d)조의 면제가 기존의 수입사후 청구(post-importation claims)에 적용된다고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기의 청구 유형들은 통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NAFTA 상의 관세 면제 대우 부여를 받는 데 있어서 발생한 오류와 위법행위를 시정할 법령 상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사후조정 프로그램 상의 면제 청구가 다른 법령 체계와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후조정프로그램에 따라 제기되는 청구는 통관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관세청이 법령 상의 NAFTA 상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위법행위들을 시정할 것이 허용하도록 보장받는다. 따라서 관세청은 제1520(d)조의 면제 권한이 반드시 NAFTA 상의 수입사후 청구(post-importation claims)를 위한 두 가지 독립된 체계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ord는 관세청이 “사후조정프로그램 상 증명서 제출 면제 권한이 전혀 다른 법령이 아닌 NAFTA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20(d)조로부터 발생

한다"고 명백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Ford는 관세청이 조정과 관련하여서만 보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ord는 관세청이 이용가능한 보장 내용은 청구가 조정프로그램에 따라 제기되던 기존의 절차를 통해서 제기되던 동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Ford는 환송 판결이 제1520(d)조 상의 NAFTA 수입사후 청구(post-importation claims)를 다르게 처리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면제"의 목적 상 제1520(d)조에 따른 청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 NAFTA 제503(c)조는 관세청의 면제 권한을 규정하며 "개별 체약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 영토로 상품을 수입하는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의회는 제1520(d)조의 "면제"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제1520(d)조가 부분적으로 관세청 규정을 통해 NAFTA 조약 제503(c)조의 면제 권한 시행을 허용하기 위해 입법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앞선 판례에서 설명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순차적으로 면제 권한을 실행하는 규정을 공포하였다.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22(d)(1)조 참조.] 해당 규정은 수입업자가 기존의 수입사후청구(post-importation claim)를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이 증명서 "소지"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항만 세관감독관(port director)이 상품이 NAFTA 상의 관세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점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 세관감독관이 서면으로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상기의 판결 참조.]

법령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소지(보유)"라는 문언은 수입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향후 검사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 면제는 제시 면제와 다르다. 관세청은 환송판결에서 증명서 소지 면제가 번복될 수 없다고(irreversible) 설명하였으며 본 법원은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관세청은 이미 수입업자가 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면제한 경우, 향후에 수입업자에게 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 세관 감독관는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요구조건) 면제 요청을 허용하거나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사후조정 프로그램(Reconciliation Program)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수입사후청구(post-importation claim) 신청 당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면제하였다. 이는 수입업자가 항만 세관 감독관에게 출력본을 제시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며 상기의 프로그램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사후청구(post-importation claim)를 신청하는 수입업자는 관세청이 통관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08(a)조 참조.]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09조는 관세청이 상기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법령들은 사후조정 프로그램 상의 청구 자체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04(s)조 상 "통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청이 조정을 근거로 한 수입사후청구(post-importation claim)의 관리를 규율한다. 관세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통관의 정확성과 수입업자의 잠재적인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련의 법령 조항들을 포함한다. 기록 보유 요건과 감사 절차는 관세청이 자동화된 사후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Ford는 일부 쟁점에 대해 관세청이 이용할 수 있는 법령 상의 보장이 기존의 방식을 통한 청구와 조정을 근거로 한 청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Ford는 상기의 주장에 대해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81조를 근거로 한다.[120)]

□ 쟁점사항

의회가 "정부기관이 공백을 채우도록 명시적으로 남겨둔 경우, 해당 기관에게 해당 법령의 특정 조항을 행정법규를 통해 해석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임의 또는 자의적이거나, 또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일련의 행정법규는 법원에서 구속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Chevron사건의 두 단계 절차를 관세청의 행정기관에 위임된 법령 체계 해석을 심사하는 데 적용하고자 한다.

□ 판결 및 시사점

본 법원은 Ford의 법령 상의 보장이 기존의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이 관세청에게 NAFTA와 관련한 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기의 잠재적인 구제수단들은 벌금부과와 관련되어 있으

120)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81조에 이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NAFTA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해 모든 형사, 민사 또는 행정 벌칙이 미국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제조업체에게 부과될 수 있다.

며, 기존에 면제된 서류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Ford는 해당 규정이 관세청에 "기타 모든 관세청 규정 위반에 대한 완전한 청구 유효화, 감사, 조사 및 인가 권한 수단"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81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08(a)조와 제1509조에 규정된 기록보유 및 감사절차에 대한 모든 일련의 규정들을 참조하고 있지 않다. 본 법원은 해당 규정이 상기의 절차들 또한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하지 않는다. 항만 세관 감독관이 증명서의 단순한 제시가 아닌 "소지"를 면제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더욱 복잡해진다. 수입업자가 항만 세관 감독관이 이미 해당 서류의 소지를 면제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해 유효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관세청의 제1520(d)조 상의 면제 권한은 반드시 NAFTA 상의 사후수입 환급청구 처리에 대한 두 가지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본 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항상 수입업자에게 가장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면제"가 조정을 통해 청구가 제기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고 규정하는 사후조정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제1520(d)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환송 시 관세청은 NAFTA 상의 수입사후청구에 대한 두 가지 구별되는 법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전통적인 수입사후청구 신청 방법에 대한 면제권한이 제1520(d)조에 의해 규율된다고 설명하였다. 관세청은 또한 사후조정 프로그램 상의 면제권한이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484(d)(1)조와 제1509(a)(1)(A)조에 의해 규율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은 환송의 모든 근거에 대한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제1520(d)조의 면제가 기존의 방식의 청구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제1520(d)조가 일반적인 관세청의 면제 권한을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조항은 조정을 근거로 한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면제 절차를 규율하지 않는다. 조정을 근거로 한 청구는 수입사후청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른 체계 상 운영된다는 점이 분명하다.[121] 전통적인 청구 방식에도 동일하게

121) 사후조정 프로그램 자체는 세계 무역이 변화하는 방식에 부합하기 위한 오래된 절차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통상거래에 종사하는 자들 간의 수년 간의 논의의 결과였다. 다수의 공급업체들과 국가들의 원산지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과 규정 상의 기한 내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수입업자들과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경우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유연성이 통관 절차에 필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하여 자동화된 절차가 요구되었다. 사후조정 프로그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전통적인 청구는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22조에 따라 운영된다. 청구 유형에 따라 면제를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이 증명서 제시 요건 면제와 관련하여, 사후수입 청구 접수의 2가지 유형을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이며, 본 법원은 이러한 구별되는 취급을 주저 없이 확인하는 바이다.

게다가 Ford가 제시한 해석방법은 항만세관감독관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NAFTA상의 수입사후청구 접수에 대한 전통적인 절차 상의 면제를 승인 또는 거절할 권한을 완전히 부인한다. 본 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 해당 법령은 관세청에게 면제 권한 범위를 한정할 재량을 부여한다. 관세청은 항만 세관 감독관이 증명서 소지를 면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상기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81.22(d)(1)조 참조.) 부분적으로 관세청은 항만세관 감독관이 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한 불일치성을 제거하는 완전 중앙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자신을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 체계 상 면제를 위하여 청구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면제와 관련하여 제1520(d)조 상의 청구를 다르게 처리한 것에 대한 관세청의 사유는 본 법령을 승인 가능하게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선임판사 BARZILAY: 본 사안은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Ford Motor Co. v. United States, 715 F.3d 906 (Fed. Cir. 2013) (“Ford사건”) 판결에 따라, 추가 절차를 위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청”)에 다음과 같이 환송된다.[122]

연방순회법원은 관세청이 미국연방법전(U.S.C.) 제19편 제1520(d)조 상의 북미자유무역협약(“NAFATA”)의 수입 사후 환급 청구(post-importation refund)가 전통적인 절차 또는 사후조정 프로그램(Reconciliation Program)을 통해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관세 면제 목적 상 해당 청구를 다르게 취급하였는지를 적합하

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수입관세금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 기존의 수많은 “특별 약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한다. 지침 4페이지. ”이러한 지역의 비공식적인 ‘조정’은 지역별로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르게 적용되고 합리적으로 재정적인 통제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다.” 지침 참조. (원문의 인용문구 기재). 사후조정 프로그램은 NAFTA 수입사후 환급 청구 신청 방법이 “제1520(d)조 상의 환급을 받기 위한 상기의 절차와 구별되나 동시에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Ford 사건 (715 F.3d) 910쪽 (강조표시 추가).

122)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내역와 유사하다는 점이 추정된다. Ford Motor Co. 대(對) United States, 35 CIT __, 800 F. Supp. 2d 1349 (2011); Ford, 715 F.3d 906.

게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순회법원은 관세청이 “환급 청구가 제출된 방식에 따라 해당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였는지”를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건 환송 시(On remand) 관세청은 청구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 서로 다른 법률 체계인, “사후조정절차(reconciliation process)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와 NAFTA 상의 수입 사후 청구(post-importation claim) 만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원고 Ford Motor Company (“Ford”)는 관세청이 제1520(d)조 상의 면세 목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청구를 다르게 취급한 사유가 해당 법령의 불합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Ford는 관세청이 반드시 Ford가 이의를 제기한 NAFTA 사후 수입 청구 모두를 승인하고 Ford가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법원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제1581(a)조 상의 관할권을 가지고 이상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관세청의 환송판결은 유지된다.

동 사건은 수입자가 NAFTA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수입후에 신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의 근거조항이 되는 관련법령의 충돌 및 해석여부에 관세청과 다툼이 있는 사건이다.

미국은 세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관세법령도 정비하였는데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제1401조에 근거하여 세관자동화시스템을 통한 통관당시 일부 서류제출 면제권한을 부여하고 통관후 사후조정프로그램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런데 NAFTA의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규정에서는 제1520조가 수입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해 수입사후에서 특혜관세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인 사후조정프로그램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나, NAFTA의 경우 수입후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동 사례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다수의 수입자들은 일반적 사후조정프로그램을 통해 통관과 변경신고를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으나 원고 Ford사의 경우 제1520조에 근거한 수입을 진행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권한을 가지는 근거가 되는 두 개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후조정프로그램상의 면제권한과 NAFTA상의 면제권한은 각 법률의 취지에 따라 다른해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이분적 해석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해석방법에 의하면 관세청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NAFTA 사후청구에 대한 전통적 절차상의 면제의 승인 또는 거절권한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수입자가 일반적 수입통관을 접수 하던 FTA특혜신청을 하기위한 수입통관을 접수하던 관세법상 수입자에게 일반적인 서류제출면제에 대한권한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해석방법처럼 할 경우 FTA특혜신청을 하는 수입건에 대해서는 전통적 면제권한을 전혀 실행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관세법과 FTA 특례법 달리 운영하고 있다. FTA는 기존의 일반적 수입절차와 달리 FTA를 통한 수출입절차와 원산지증명 및 검증 등의 다른 유형의 제도를 수반한다. 따라서 동 사례와 같이 관세법상의 규정과 FTA특례법상의 규정의 해석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2) 캐나다

(가) 사례 1

□ 사례 개요

【원고】 Massive Prints, Inc

【피고】 캐나다 국경관세 관리청(CBSA)

【쟁점】 100% 면 셔츠에 대한 NA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결정사항】 항소 기각

【판결법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aian International Trade Tribynal)

【판결일자】 2011년 4월 27일

□ 사실관계

본 건은 관세법 제60조 4항에 따른 재결정요청에 관한 캐나다국경관세 관리청장의 2010년 5월 3일자 결정에 대해 수출자 massive Prints, Inc. (이하 Massive Prints)가 관세법 제67조 1항에 의거하여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한 사건이다.

본 건 사안의 핵심은 Massive Prints(수출자)가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 수출한 스타일 2007, 2307, 6307, 2101, 2102 및 2001의 100퍼센트 면 티셔츠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미국관세율상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007년 Massive Prints(수출자)는 해당상품의 캐나다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였고, 이에는 해당상품의 제조자인 American Apparel의 서면진술을 근거로 해당상품이 NAFTA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이 표시되었다.

이후 Massive Prints(수출자)는 CBSA의 원산지확인요청을 받았다. 2008년 4월 17일, Massive Prints(수출자)는 CBSA에 원산지증명서와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작성한 제조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원산지증명서는 하나 이상의 NAFTA 지역 국가들에서 특정의 면 티셔츠 전체가 생산되었다는 것과 그것들이 관세율 분류에 적용되는 부록 401에 규정된 해당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자 진술서는Massive Prints(수출자)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원단이 전부 미국 원산의 직물 및/또는 원재료를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08년 8월 19일, CBSA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관세법 제42조 1항에 따라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 청구가 들어온 해당상품의 원산지확인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보낸 공문은 요청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assive Prints(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될 수 있고 NAFTA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들에게 부여된 특혜관세율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8년 9월 2일, CBSA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의 Quebec주 Montreal 사무소로부터 팩스로 어느 수출자의 비원산지확인증명서 사본을 받았다. 그 증명서에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스타일 2007, 2307 및 6307에 사용한 실이 파키스탄 원산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다.

2008년 9월 3일, CBSA는 재차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공문을 보내 스타일 2007, 2307 및 6307에 관한 자료의 확인 및/또는Massive Prints(수출자)에 판매한 모든 스타일에 대한 원산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공문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assive Prints(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될 수 있고 NAFTA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들에게 부여된 특혜관세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지적하였다.

2008년 8월 19일자 공문 및 2008년 9월 3일자 후속공문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CBSA는 2008년 11월 7일, 해당 상품이 원산지확인절차의 목적상 비원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결정을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통지하였다.

2009년 2월 10일 ,Massive Prints(수출자)는 법 제60조(1)항에 의거한 재결정 신청을 하면서 해당상품이 NAFTA상 특혜관세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CBSA가 직접 American Apparel(생산자)을 만나 원산지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0년 3월 9일, CBSA는 Massive Prints(수출자)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는 것과 만약 Massive Prints(수출자)가 그 잠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2010년 5월 3일, 관세법 제60조 4항에 의거하여 CBSA는 재결정요청을 기각하면서 NAFTA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이전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월 7일,Massive Prints(수출자)는 관세법 제67조 1항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10년 7월 27일, Massive Prints(수출자)는 본 항소공판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2010년 8월 5일, CBSA는 공판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증인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본 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요청을 고려하여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판을 연기함을 통지하였다.[123)]

이후 법원은 2011년 2월 1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CBSA는 유일한 증인으로 CBSA의 이행점검실 부실장인 Mr. Eric Trudel을 소환하였다. Massive Prints(수출자)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청회 기록은 2011년 2월 4일 Massive Prints(수출자)에 송부되었고, Massive Prints(수출자)에게는 최종 제출물을 2011년 2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Massive Prints(수출자)는 기한일까지 아무런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1년 3월 18일, Massive Prints(수출자)는 법원에 보내는 사본과 함께 CBSA에 팩스를 보내서 Massive Prints(수출자)는 동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123) S.O.R./91-499

□ 당사자주장

Massive Prints는 준비서면에서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이미 Massive Prints(수출자)에게 해당상품이 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적용대상이라는 보증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입증공문에서 Massive Prints(수출자)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CBSA로 부터 현장방문에 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Massive Prints(수출자)는 American Apparel(생산자)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문서에 대해 아무런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CBSA가 해당상품이 NAFTA상의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CBSA가 그 결정을 재고하고 직접 American Apparel(생산자)을 접촉하여 American Apparel(생산자)의 설비에 대한 실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BSA는 CBSA가 법 제42조 1항 1목 (a)에 의거하여 NAFTA 및 CCFTA 원산지증명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적절한 시각에 정해진 구내에 들어가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에는 상품의 수출업체나 제조업체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제의 생산업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검증 설문서나 서면답변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CBSA는 CBSA가 첫 번째 검증문서와 후속 검증문서를 해당상품의 제조업체인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보내, 해당상품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 면사 공급자와 원단의 직조, 재단 및 봉제업체 모두로부터 선서진술서 형식의 자료를 받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BSA는 Massive Prints(수출자)와 American Apparel(생산자) 모두 CBSA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CBSA는 관세법 제42.1조 2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취소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CBSA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제출한 비원산지 직물제품 증명서를 근거로 해당상품의 일부 특정 스타일상품은 그 증명서상 티셔츠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면사가 파키스탄이 원산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NAFTA 국가가 원산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CBSA는 해당상품의 특정 스타일들은 해당상품에 적용되는 세번6109.10.00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124]

---

124) NAFTA 원산지증명규정 4(2)(a), S.O.R/94-14는 하나 이상의 NAFTA 관련국 지역에서 생산 전체가 이

□ 판결 및 시사점

관세법 제67조 1항은 “제60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떤] 사람은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이때 제60조에 따른 결정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결정도 포함된다.

캐나다 관세법에 혼입된 NAFTA의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원산지규정은 그 상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제조하기 위해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NAFTA 제4장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들)”의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제5장은 원산지증명의 요건과 관리 및 강제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의 규정들은 관세법, 관세율-표, NAFTA 원산지규정(NAFTA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수입상품의 원산지증명규정(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NAFTA 특혜관세규정(NAFTA Tariff Preference Regulation)및 NAFTA와 CCFTA 원산지검증규정(NAFTA and CCFTA Verification of Origin Regulations) 등의 다양한 규정들에 의해 캐나다 법에 혼입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24조 1항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4. (1) 제(2)항에 따른 명령이 달리 정하거나 관세항목에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아래의 경우 상품은 본 법에 따라 일반관세율이 아닌 다른 관세율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a)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이 발급되고
> (b) 상품이 제16조 또는 제31(1)(a), 34(1)(a), 38(1)(a) 42(1)(a)의 각 목 또는 45(13)항, 48조 또는 49(2) 및 49.5(8)의 각 항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루어진다면, 단 NAFTA 원산지규정의 다른 모든 관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표 I상의 해당 규칙에 따라, 비-원산지 대상인 각 원재료에 대해 관세분류에 있어 해당 변경이 가해지는 NAFTA 관련국이 상품의 원산지가 된다고 규정한다. 세 번 제6109.10.00호 관련 원산지규정은 면사에 관한 다양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장, 특히 세번 제52.04부터 52.12까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번호로부터 세 번 제61.09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바, 단 상품이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재단 또는 원단으로의 직조 및 봉재 기타의 조립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당상품이 NA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기 위해 관세율표 제24조 (1)항은 아래 두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상품의 원산지증명이 동 법에 따라 발급된 것일 것 (2) 상품이 관련 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그 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동법 제35조 (1)항은 수입된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 지정된 자료가 포함되고 제(4)항 상의 규정이 요구하는 자료, 진술 또는 증명을 갖거나 첨부된 지정된 양식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1(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5) 특혜관세대우가 청구된 상품과 관련하여, 본 조항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수입업자, 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본 법, 또는 관세율-표 상의 규정 또는 그 법률들에 의거하여 특혜관세대우에 관해 제정된 다른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상의 특혜관세대우는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수입상품 원산지증명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혜택이 청구된 경우 상품의 수입업체나 소유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규정에 아무런 원산지증명양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125]

본 사안에 있어서, Massive Prints(수출자)가 해당상품의 원산지증명을 CBSA에 제출하였다는 데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기록상의 증거에 따르면 Massive Prints(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은 해당상품이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제조한 100퍼센트 면 티셔츠라고 하고 있고 기간을 구체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 원산지증명은 해당상품이 NAFTA가 상품에 대해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Massive Prints(수출자)는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

125) NAFTA 제511조 (1)항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정부에 의해 채택된(캐나다에서는 그 규정이 CBSA가 발간한 각서 D11-4-18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의 국가별 대우 및 시장진입) 및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관리에 관한 통일규칙 제I. 1조는 NAFTA 제501조 (1)항이 말하는 원산지증명이 실질적으로 부록 I.1a가 정하는 원산지증명과 동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I.1a에는 양식 B232가 제시되고 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이 정해져 있다

에 해당한다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의 서면주장에 근거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안에 관한 논쟁은 CBSA가 2008년 원산지증명에 포함된 자료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원산지확인절차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특히, Massive Prints(수출자)는 해당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에 동의하지 않고, 또한 CBSA가 원산지확인을 한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항소의 대상인 결정이 원산지증명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르면 CBSA는 American Apparel(생산자) 및 Massive Prints(수출자) 양자가 NA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원은 CBSA가 그러한 이유로 Massive Prints(수출자)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American Apparel(생산자)과 Massive Prints(수출자) 양자가 해당상품이 NAFTA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를 정말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CBSA가 원산지 확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원 가능한 방법으로, 동 법 제42.1(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42.1(1)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대장이 지명하는 어느 공무원 또는 어느 부류의 공무원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을 대신하도록 대장이 지명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a) CEFTA 이외의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대우가 청구된 상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 (i) 정당한 시간 중 정해진 구내나 장소에 들어가거나
> (ii) 정해진 방식으로....

나아가, NAFTA 제2조 및 CCFTA의 원산지증명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2. 확인을 위한 방문 이외에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도 상품의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다.
> (a) (i) 상품의 수출자나 제조자 또는
> (ii) 동 상품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된 원재료의 제조자나 공급자가 작성한 확인용 질문서의 검토.

(b) 확인용 공문에 대해 위 (a)가 정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면답변의 검토
(c) 위 (a)가 정하는 사람이 제출한 기타 자료의 검토.

법원은 CBSA가 American Apparel(생산자)에게 동 법 제42.1조에 따라 2008년 8월 19일에 해당상품의 원산지확인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통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26]그 통지는 해당상품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 면사의 공급자와 해당상품의 원단 제직업체 및 재단업체에 관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것과,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를 진술할 것을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명확히 요청하였다. 나아가 그 공문은 American Apparel(생산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CBSA가 Massive Prints(수출자) 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을 무효화하고 해당상품에 대한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철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증거는 또한 2008년 9월 3일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대해 해당상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혜관세대우를 철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2차 공문이 발송되었음을 보여준다.

Massive Prints는 동 법 제42.1조에 따라 CBSA가 원산지확인을 하겠다는 것을 American Apparel(생산자)에 통지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Massive Prints(수출자)는 다만 American Apparel(생산자)로부터 American Apparel(생산자)을 방문하겠다는 CBSA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동 법이나 관련 규정들 중 어느 것도 CBSA로 하여금 상품이 원산지적용대상 상품인지 여부 및 그것이 특혜관세대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NAFTA와 CCFTA 원산지증명 규정은 현장방문 외에도 상품의 원산지확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우선 특혜관세대우의 철회와 관련하여 동 법 제42.1(2)항은 아래와 같이 정

126) 2011년 2월 1일자 6-12에서의 공판기록. Mr. Trudel은 수입 당시 수입품의 원산지, 가액 및 관세분류에 관한 수입업체의 보고가 수입업체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CBSA가 원산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CBSA는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상품이 국내로 들어온 후 보고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Mr. Trudel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CBSA가 상품의 수출업체나 제조업체에 공문과 질문서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상품이 NAFTA에 해당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현장방문의 실시여부는 특정의 사안에 대해 CBSA가 가진 자료 외에 CBSA의 위험부담 정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설명하였다.

하고 있다.

> 42.1(2) 제(1)(a)항에 따라 원산지증명 대상인 상품의 수출업체나 제조업체가 정해진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1)(a)(i)목에 따른 원산지증명의 경우 정해진 방식과 정해진 기간 내의 원산지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품에 대한 CEFTA 이외의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 대우는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또한 NAFTA 제13조(c)와 CCFTA 원산지증명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13. 동 법 제42.1 제(2)항의 목적상,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와 CCFTA 상의 특혜 관세대우는 원산지증명 대상인 상품에 대해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상품의 수출업체나 제조업체는. . .
> (c) 제 12조에 따라 2차 확인공문이나 2차 확인 질문서를 받은 사람이 2차 확인공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2차 확인질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2차 확인공문이나 2차 질문서에 관한 아래의 날짜 후 30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으면
> (i) 제18(a)목에 따라 발송된 곳에서 2차 확인서나 2차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 (ii) 제18(b)목에 따라 발송된 곳으로 2차 확인서나 2차 질문서가 발송된 날

법원은 본 항소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CBSA가 발송한 확인공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였다. 실제로 CBSA는 CBSA가 해당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127] 따라서 법원은 해당상품이 Massive Prints(수출자)가 요구하는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CBSA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American Apparel(생산자)이 제출한 유일한 자료가 비-원산지 섬유제품 확인서인 것을 지적하는 바이며, 그 확인서는 해당상품의 어떤 스타일들의 티셔츠를 만드는 데에 사용한 면사의 원산지가 파키스탄임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그 자료가 그 스타일의 상품들이 티셔츠관련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CBSA로 하여금 해당상품의 특정 스타일들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도록 하는 추가 근거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한다.

---

127) 2008년 9월 4일, CBSA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의 누구라도 2008년 9월 15일까지 CBSA의 요구에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는 American Apparel(생산자)의 이-메일 사본을 수신하였다.

법원은 CBSA가 동 법 제42.1(2)항에 따라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철회할 수 있는 동법 상의 권한을 행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CBSA는 동 법과 해당 규정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할 때, 법원은 해당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정당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동 사안은 수출자가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이다.

특히 본 사안은 캐나다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의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원산지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수출자는 관세청의 원산지확인 방식에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산자 검증실시에 대한 미공지와 생산자 검증의 적법여부를 문제 삼았다.

주요 쟁점은 제시된 원산지증명 자체의 유효성이 아니라 특혜관세 대우를 위하여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있다. 따라서 법원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N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자료를 정말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수출자와 생산자는 지속적으로 생산자를 현장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법의 근거가 없는 것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이 생산자에게 보낸 일련의 이메일 공문 확인결과 공지한 사실이 밝혀졌고 비록 검증시 생산자의 현장을 직접방문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확인 하였다.

다만 생산자가 제출한 유일한 근거자료가 특정 스타일 제품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확인서로서 이에 의하며 당해 스타일 제품은 특혜관세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법원은 최종 판단하였다.

(나) 사례 2

□ 사례 개요

【원고】 Duhamel & Dewar, Inc.

【피고】 캐나다 관세국경관리 청장

【쟁점】 NAFTA 상 특혜관세 대우 유효성 여부

【결정사항】 항소 기각

【판결법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판결일자】 2011년 2월 8일

□ 사실관계

Duhamel & Dewar의 소유주인 Mr. Victor Duhamel(수입자)는 2002년에 Tennessee의 Knoxville 소재 Buddy Gregg Motor Homes Inc. (Buggy Gregg:수출자)라는 회사로부터 중고 모터-홈(used motor home)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이때 CBSA에 전화 문의하여 중고 모터-홈에는 아무런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과, 원고의 관세사와 CBSA 중 누구도 NAFTA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입이 이루어진 지 수개월 후에 CBSA는 원고에게 모터-홈이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제조업체인 Monaco Coach Corporation (Monaco: 생산자)에게 연락하여 Monaco가 4개의 2002 모델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그 전부에 대해 특혜관세대우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그의 모터-홈도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Monaco(생산자)에 재료목록을 요청하였으나 그러한 기록은 구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는 Monaco(생산자)로 부터 받은 문서를 인용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고 동일한 공급업자로부터 구매되었으니 Duhamel & Dewar(수입자)가 수입한 모터-홈과 CBSA가 실사한 것들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CBSA의 원산지 및 평가감사실장(Manager of the Origin and Valuation Audit Unit)인 Mr. Raymond Thibeault가 CBSA를 대신해서 출석하였다. 본 사건의 사실요건들과 무관한 증언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Mr. Thibeault는 감사(aduting), 특히 NAFTA 환경관련 감사에 있어서 전문가적 자격을 갖추었다. 그는 NAFTA 환경 하에서의 감사인의 책임과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Lay witness로서, 중고 RV들을 포함하여, 해당사건이 수입업자가 제기한 불만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였다. CBSA가 일단 추가감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결정하면 CBSA는 수업업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감사인의 역할은 원산지증명에 기록된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Mr Thimeault는 NAFTA 규정상 수입업체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책임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o 관세청 원산지검증 전문가의 FTA 당사자의 역할론 설명

전문가로서의 그의 증언에서 Mr. Thibeault는 NAFTA 구조 내에서의 수출업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NAFTA 하에서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을 확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제공되는 자료가 NAFTA 하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상품에 관한 것임을 밝히게 되어 있고, 수출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을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Mr Thibeault는 제조업체가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이를 수출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CBSA가 수출업자에 대해 제조업체와 직접 교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출업체는 제조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공급자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자료를 직접 CBSA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통상 재료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명세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된 모든 부품과 재료의 목록으로서, 보통 그 부품과 재료의 공급업체가 나와 있고 그 부품이나 재료가 원산지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CBSA는 그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CBSA가 역내 부가가치와 상품의 순원가를 정하고 비-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

Mr Thibeault는 레저용 차량을 감사하는 중 Duhamel & Dewar(수입자)를 포함한 20~25개 업체가 고위험 업체로 판명되어서 CBSA가 그들의 파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상품들은 역내 부가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원산지규정 적용대상으로 역내부가가치 판단 요건에 따른 통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CBSA는 수출업체인 Buddy Gregg로부터 유효한 자료도 얻고 동시에 이를 수입업자에게 통지도 하였다. CBSA의 조사후 수출업체 Buddy Gregg은 해당 원산지증명을 철회하였다. Mr Thibeault는 CBSA가 이 자료를 근거로 2004년 4월 16일 수입자에게 해당 모터-홈이 NAFTA 하에서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통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정에 대한 심사요청은 관세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제출되었다.

감사 담당공무원은 재결정절차 진행 중 다양한 문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증명, 표준장비 리스트가 들어있는 딜러의 소매점 스티커 및 2005년 9월 9일자로 Monaco(생산자)가 Duhamel & Dewar(수입자)에 보낸 서신으로서 해당 모터-홈이 특혜관세대우에 관한 NAFTA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이 적힌 것도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수입업체 Duhamel & Dewar(수입자)가 CBSA에 해당 모터-홈과 다른 차량을 비교해 보도록 요청하였지만 자신이(감사 담당 공무원)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CBSA가 다른 파일에 있는 자료를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위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확보한 자료 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거래가격이었는데, NAFTA 원산지규정[128]에는 그러나 순원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입자 Duhamel & Dewar(수입자)는 또한 Monaco(생산자)의 서신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감사 담당자는 Duhamel & Dewar(수입자)가 해당 모터-홈을 2002년에 감사를 받은 4대의 모터-홈과 비교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CBSA가 그 모델들은 해당 모터-홈과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였다.

128) S.O.R./94-14.

□ 당사자주장

o Duhamel & Dewar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수입한 모터-홈에 대한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법원이 유지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준비서면에서 Duhamel & Dewar(수입자)는 기록상의 증거에 따르면 그들이 CBSA로부터 해당 모터-홈에는 NAFTA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모터-홈이 일단 그 요건을 충족하기도 하므로, 그 모터-홈에 대해 관세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Duhamel & Dewar(수입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원산지증명서와 제조된 후 그 모터-홈에 아무런 변경도 가해진 것이 없다고 적힌 수출업자의 서신을 제시하였다. Duhamel & Dewar(수입자)는 또한 그 모터-홈이 NAFTA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2003년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o CBSA의 주장: 관세법과 NAFTA 원산지규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와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수출자는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였으므로 원산지판단의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수입자가 유사한 동일모델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해당상품을 원산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어디에도 유사제품의 원산지 판단을 비교하여 해당상품의 원산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CBSA는 본 사건에 있어서 Duhamel & Dewar(수입자)가 겪은 불운한 결과를 이해하나 감사관은 법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CBSA는 그들의 임무 중 하나는 수입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BSA는 관세법, 특히 제97.1조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업자에 의해 발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CBSA는 그 문구를 "제조업자"로 변경할 권한이 없고 캐나다 국경 밖의 제조업체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CBSA는 NAFTA가 특혜관세대우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러한 상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NAFTA 원산지규정은 해당 모터-홈과 같은 상품은 역내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때문에 그러한 가치와 비-원산지 부품의 이전의 관세분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BSA는 감사관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형태의 원산지 증거자료 등의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CBSA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회수하였으며 제조업체는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CBSA는 또한 필요한 자료 없이 하나의 모델을 다른 모델의 모터-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결국, CBSA는 동 법 제42.1조(2)항 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NAFTA 하에서의 특혜관세대우를 취소한 것이 정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 쟁점사항

본 항소사건의 사안은 Duhamel & Dewar Inc. (Duhamel & Dewar)가 2002년 7월 12일에 수입한 중고 2000 Monaco(생산자) Signature 모터-홈이 북미자유무역협정[129] 상의 특혜관세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이다.

□ 판결 및 시사점

본 항소사건의 논점은 Duhamel & Dewar(수입자)가 수입한 모터-홈이 NAFTA하에서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캐나다 법에 반영된 NAFTA 원산지규정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NAFTA 제4장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제5장은 원산지증명의 요건과 관리 및 강제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의 규정들은 동법의 규정, 관세율-표 기타 원산지규정에 관한 NAFTA규칙, 수입상품의 원산지증명규정, NAFTA 특혜관세규정 및 NAFTA와 CCFTA 원산지확인규정 등의 다양한 규정들에 의해 캐나다 법에 혼입되어 있다. 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조항들만 검토할 것이다.

해당 모터-홈이 일반관세율이 아닌 다른 관세율 대우를 받기 위해, 본 사건

129)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정부 간의 1992년 12월 17일자 북미자유무역협정, 1994 Can. T.S. No. 2(1994년 1월 1일 발효) [NAFTA].

의 경우 미국 관세율-표 제24조(1)항은 아래 두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상품의 원산지증명이 동 법에 따라 발급된 것일 것 (2) 상품이 관련 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그 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

법원은 본 사건에 있어서 우선 아래와 같은 동 법 제35.1조(1)항과 (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 35.1 (1) 본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모든 규정에 따라, 수입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한, 정해진 자료가 포함되고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모든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 진술 또는 증거가 포함되거나 첨부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 (5) 특혜관세대우가 청구된 상품과 관련하여, 본 조항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수입업자, 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본법 또는 관세율-표 상의 규정이나 그 법률들에 의거하여 특혜관세대우에 관해 제정된 다른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는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수입상품규정상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제6조(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해 미국 관세율표상의 특혜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CBSA는 Duhamel & Dewar(수입자)가 해당 모터-홈에 대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동 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BSA는 원산지증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출업자에게 역내부가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순원가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출업자는 그 질문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이후 그 원산지증명을 철회하였다. 모터-홈의 제조업체인 Monaco(생산자)는 그러나 2005년 9월 9일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였다.

본 항소사건에서, CBSA는 Duhamel & Dewar(수입자)가 해당 모터-홈에 대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동 법 및 그 시행령상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BSA는 동 법, 특히 제 97.1조는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을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거를 포함한 충분한 자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원은 또한 Mr. Thibeault의 증언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바, 그가 본 사건의 상황에 대해 설

명할 때 중고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데 이는 제조업체가 생산 후 수출 전에 그 상품에 어떤 변경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항고대상인 결정에는 원산지증명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조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을 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나, 항소대상인 CBSA의 결정이 NAFTA 하에서의 특혜관세대우청구를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Duhamel & Dewar(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CBSA가 그러한 이유로 Duhamel & Dewar(수입자)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Duhamel & Dewar(수입자)가 해당상품이 NAFTA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주안점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모터-홈의 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NAFTA 원산지규정상의 모든 구체적인 기술적 요건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모터-홈과 같은 특정의 관세율 분류항목으로 분류된 상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고 그 가치에 관한 자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이전 관세분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 배경으로 2005년 10월 12일 CBSA는 Monaco(생산자)에게 그의 원산지증명을 입증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1. 위에 적은 모터-홈의 제조사, 모델 및 연도에 관한 재료명세서

2. 차량의 순-제조비용

3. 엔진, 트랜스미션 및 새시의 관세분류, 원산지(공급업체의 상호와 주소) 및 가치.

이 세 품목에 대한 NAFTA 적용용 공급업체 확인서 사본도 필요하다.

4. 엔진, 트랜스미션 및 새시용 부품에 포함된 추적자료의 관세분류와 가치를 보여주는 목록

법원은 동법 제 42.1조(1)(a)에 따라 CBSA가 Monaco(생산자)가 제조하고 Duhamel & Dewar(수입자)가 수입한 모터-홈의 원산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지하고 있다. Monaco(생산자)가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동 법 제42.1(2)항과 NAFTA 제13조 및 CCFTA 원산지증명규정에 의거하여 특혜관세대우가 취소되게 되었다. 제42.1조 (2)항은 아래와 같다.

42.1(2) 제(1)(a)항에 따라 원산지증명 대상인 상품의 수출업체나 제조업체가 정해진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1)(a)(i)목에 따른 원산지증명의 경우 정해진 방식과 정해진 기간 내의 원산지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품에 대한 CEFTA 이외의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대우는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Monaco(생산자)에 보낸 후 CBSA는 Monaco(생산자)로 부터 그 원산지증명을 뒷받침할 아무런 추가자료도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설사 해당상품이 중고품인 때에는 제조업체의 증명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사안의 경우 CBSA는 해당 모터-홈이 Duhamel & Dewar(수입자)가 요청하는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CBSA의 Ms. Valerie J. Fudge는 아래와 같은 2005년 11월 29일자 예비판정을 발송하게 되었다.

…본직의 2005년 10월 12일자 공문으로 Monaco Coach Corporation(생산자)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Monaco(생산자) Coach의 Mr. Kimball은 그들의 원산지증명을 뒷받침할 아무런 추가자료도 제출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해 왔습니다. 요청자료나 공급자 확인서가 없으면 그 모터-홈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모터-홈은 MFN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06년 1월 31일, 예비판정을 확인하는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동법 제42.1(2)항에 따른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철회하기 위해 CBSA가 동법 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본다.

판결에 이르는 데에 있어서 법원은 Monaco(생산자)가 CBSA에 보낸 2006년 9월 11일자 서신을 고려하였다. 그 서신에서 Monaco(생산자)는 다른 무엇보다

Duhamel & Dewar(수입자)가 수입한 모터-홈이 2002년 CBSA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Monaco(생산자)의 Oregon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과 Monaco(생산자)가 "문제 [없이] …통과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일한 서신에서 Monaco(생산자)는 또한 그 차량용으로 미국의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새시, 엔진, 차축, 타이어 및 트랜스미션의 원산지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코치의 나머지 부분("박스")을 대부분 미국의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다고 진술하였다. Monaco(생산자)는 또한 CBSA에게 해당 모터-홈에 관한 기록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법원은 CBSA가 이 서신을 그대로 신뢰하고 1999년에 제조된 어느 모터-홈을 2002년에 감사한 것으로서 Duhamel & Dewar(수입자)가 수입한 것과 동일한 모델이 아닌 모터-홈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130]. Monaco(생산자)가 제출한 보충자료는 2005년 10월 12일자 CBSA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CBSA는 모터-홈의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NAFTA 원산지규정 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원이 검토한 것을 근거로 할 때, 법원은 해당 모터-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발견할만한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은 캐나다 관세청의 25개 고위험 품목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중고 모터홈의 특혜관세 배제에 관한 사안이다. 관세청이 순원가에 따른 부가가치 검토를 위해 재료명세 및 가격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철회하였다.

이에 수입자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철회가 수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체의 자료를 요청해 줄 것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수입된 제품과 거의 동일한 유사물품의 제조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비록 수입자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정상 원산지증

130) Duhamel & Dewar(수입자)의 모터-홈은 1999년에 제조된 Signature 모델인 반면 CBSA가 감사한 네 개 모델은 Navigator, Cheetah, Patriot 및 Dynasty로써 그들 모두가 2002에 제조된 모델들이다. 115에서의 2006년 9월 13일자 공판기록.

명 주체는 '수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세청이 임의적으로 '제조업체'로 변경할 수 없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철회하였으므로 해당물품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협정상 명시적으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의 주체라고 하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 제조사의 증빙자료를 받아 원산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아 제조사도 원산지증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의 문리해석에 치우쳐 실질적 원산지판단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조자가 특혜관세가 배제된 동 물품의 증명자료를 시간이 오래지나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와 거의 유사한 물품의 자료를 대체하여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동 물품이 중고제품이라는 특성에 따라 엄격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검증담당자가 중고제품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중고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생산후 수출전에 그 상품에 어떤 변경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제조업체가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법원은 수입자가 유사품목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특혜관세대우 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규정 없이 확대할 수 없고, 더불어 제출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원산지 상품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사례 3

□ 사례 개요

【원고】BUFFALO INC.
【피고】캐나다 관세국경 관리청
【쟁점】미국산 레이스의 NAFTA 특혜관세적용 유효성 여부
【결정사항】인용
【판결법원】오타와 지방법원
【판결일자】2004년 3월 11일

□ 사실관계

본 사건은 관세법 제60조(4)항에 따른 캐나다 관세세무청장의 2002년 4월 16일자 17개 결정에 대한 관세법 제67조에 의거한 항소사건이다. 해당상품은 다양한 색깔과 패턴의 레이스들이다. 해당상품은 Buffalo Inc. (Buffalo:수입자), Looks Sportswear Ltd., Request Jeans Limited 및 Slide Sportswear Inc.(총칭하여 Buffalo Group이라 함)가 New York 소재의 Imperial Laces, Inc.(Imperial:수출자)로부터 1998년 3월부터 1999년 11월 사이에 수입한 것이다. 1999년 1월 1일, Buffalo는 다른 세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그들의 법인은 결국 해체되었다. 본 사건의 사안은 Buffalo Group이 수입한 레이스가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캐나다 관세세무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의 이의담당관인 Ms. Gisele Thibault가 청장을 대신해서 출석하였다. Ms Thibault는 자신이 본 사건의 이의담당관으로서 그 결정에 간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해당상품의 원산지 확인이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그 첫 단계는 수입자가 제출한 NAFTA상의 원산지증명과 실제로 수입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원산지증명에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수입업체와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사건의 경우, 그녀는 수출업체인 Imperial이 레이스를 캐나다에

수출하고 수입업체가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을 발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Ms Thibault는 공문을 수입업체, 즉 Buffalo Group에 보내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신이 아는 한 Buffalo는 NAFTA에 적합하게 작성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장의 준비서면[131]에 들어 있는 원산지증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 Ms Thibault는 그것은 Imperial(수출자)의 대표자가 작성하고 수입업체가 제출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명 5번 란에 적힌 레이스 스타일에 대해 NAFTA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게 해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녀는 원산지증명 7번 란에 적힌 자료와 관련해서 수출업체가 원산지를 정할 때 사용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7번 란에 쓰인 특혜기준 B와 관련하여, Ms Thibault는 상품의 비-원산지 원재료가 완제품에 혼입되면서 세번변경을 거쳤기 때문에 NAFTA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해당상품이 원산지 제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였다. 8번 란에는 수출자가 제조업체로 되어 있고 10번 란에는 원산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다.

Ms Thibault는 본 사건의 감사담당관이 해당상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용 질문서(도표)를 Imperial(수출자)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도표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CCRA는 비용명세서[132]와 공급업체 명단, 특히 세번변경을 거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 법 제59조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Imperial(수출자)가 해당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Imperial(수출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필요한 30일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NAFTA 특혜대우가 거부될 것이라는 예비판정이 Imperial(수출자)에 통보되었고, 이는 수입업자들에게도 통지되었다. 결국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그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NAFTA 특혜대우가 철회되면서 최혜국관세로 변경되었다. Buffalo가 항소한 후 Imperial(수출자)가 해당자료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Imperial(수출자)가 제출한 자료가 납득할 만큼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의 담당관이 추가자료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차 자료가 작성되게 되었다.

131) 청장의 준비서면, 부전 C.
132) “fiches de fabrication” 라는 프랑스 용어의 번역문

Ms Thibault는 그 시점에 본 사건을 인수 받았고 Imperial(수출자)가 작성한 두 개의 도표 사이에 많은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이 사실로 알고 있는 바,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출된 상품이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원재료의 공급자, 그 원재료의 원산지, 그리고 캐나다에 수출된 제품이 원산지규정이 정하는 세번변경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기준 B가 원산지인 상품의 경우 비-원산지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자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도표가 그 모든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비용명세서를 얻으려 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문서가 캐나다에 수출된 레이스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mperial(수출자)가 작성하여 2001년 2월 28일에 그 관리인인 Ms. Bette Slutsky이 발송한 1차 도표는 Ms. Thibault가 이를 신뢰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 도표가 "[그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고, 여러 곳이 비어 있었으며, 또한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NAFTA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는 결정을 재확인하는 예비판정이 Buffalo에 발송되었는데, 이는 2000년 말 부로 사업을 중단한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Buffalo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30일이 주어졌다. Ms Thibault는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원사에 관한 내역과 비용명세서였다고 하였으며,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판정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였다. Ms Thibault는 부족한 자료를 얻기 위해 Imperial(수출자)에 접근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녀는 자료의 제60류에 분류된 레이스가 관세율-표와 연계되는 것을 포함해서 원산지 세부규정이 가끔은 복잡해서, 특혜기준 B라고 되어 있다면 그 레이스는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원산지 원재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원산지규정은 제60류의 경우 관세율변경이 다른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원재료가 제60류 이외의 류에서 분류가 되고 그 류에서 레이스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른 규칙도 적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비-원산

지 재료가 제54 및 55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미국에서 제조된 어떤 레이스는 그 원사의 공급원이 다를 경우 원산지 상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의 질문에 대해 Ms Thibault는 자신이 비용명세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원산지증명에 특혜기준 B가 쓰여있어서 그것은 비-원산지 재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도표에 있는 자료에는 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라고 되어 있어서 원산지증명에 있는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Ms Thibault는 또한 Unifi, Inc. (Unifi)가 원사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공급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원산지 증명이 Unifi와 United Yarn Products Co. Inc. (United)에 의해 제출된 것이었지만 공급업체를 확인하기 전에 그녀는 캐나다에 수출된 레이스에 사용된 재료의 목록을 작성해야만 했다고 진술했다[133]. 그러나 그녀는 Imperial(수출자)에서의 현장실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법원판사 한 명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Ms Thibault는 어느 문서로 자신이 Imperial(수출자)에 비용명세서를 요청하였는지 지적하지 못했고 그런 자료는 기록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 당사자주장

Buffalo는 자신이 “catch 22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하였다. Buffalo에 의하면, CCRA가 자신에게 원산지증명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Buffalo가 문서제출요청을 받기는 했지만, 제출된 자료가 만족스러웠는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Buffalo는 수출업자에게 보내진 자료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uffalo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RA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Imperial(수출자)가 작성한 도표에 관해서 Buffalo는 그들이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Buffalo는 자신이 일으키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고, 자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자료도 없이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33) Unifi와 United는 Imperial(수출자)가 레이스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한 원사의 공급업체들이다.

NAFTA의 용어에 대해 청장은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으려면 상품이 단지 NAFTA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NAFTA에 규정되고 캐나다 법에 혼입된 것처럼 그것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품의 원산지확인을 수월하게 하도록 원산지증명이 채택되었으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권한 또한 CCRA에 유보시켰다는 것이다. 청장은 NAFTA 제401조가 특혜기준 B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원산지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그 규칙에 해당하게 되어 최종 수출제품이 원산지제품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장은 또 NAFTA 제 502조(1)항 및 시행령 조항들과 달리 Buffalo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장에 따르면, 상품의 NAFTA상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보장받으려면 Buffalo가 자신이 수입한 상품의 원산지 판단에 대한 사전결정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율-표 제24조에 관해서 청장은 동 법에 의해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수입상품원산지증명규정 제6조가 원산지의 입증자료로 수입업체로 하여금 상품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장은 Buffalo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24조(1)(a)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관세율-표 제24조는 관세율-표 제16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NAFTA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NAFTA 규정 제4조(2)(a)목은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들의 세번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바, 이 경우 상품의 분류 지침이 되는 관세율조항 양허표 I의 해당규칙은 세번의 변경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어서, 상품은 NAFTA 규정상의 다른 모든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청장은 레이스를 포함하여 직물, 직물제품 및 편직물에 적용되는 해당규칙에 관한 Ms Thibault의 증언을 인용하였다.

청장은 해당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Buffalo에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청장은 상품의 원산지증명을 제공해줄 수 있는 회사들과 협조할 책임이 Buffalo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및 시사점

캐나다 법에 혼입된 NAFTA 원산지규정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NAFTA 제4장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제5장은 원산지증명의 요건 및 그 관리와 강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의 여러 조항들이 동 법, 관세율-표 및 NAFTA 규정, 수입상품원산지증명규정, NAFTA 특혜관세규정 및 NAFTA와 CCFTA 원산지확인규정들과 같은 다양한 규정들에 의해 캐나다 법에 혼입되어 있다. 법원은 본 사건과 관계된 조항들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상품이 일반관세가 아닌 다른 관세대우, 이 사건의 경우 미국 관세율-표 상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관세율-표 제24조(1)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1) 동 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것과 (2) 상품이 해당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그러한 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을 것이 그것이다.

o 생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

수입상품규정상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제6조 (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해 미국 관세율표상의 특혜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Buffalo가 해당 레이스에 대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동 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Imperial(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관계가 있는 몇 개의 증명이 제출되었으며, 증거에 의하면 유효한 NAFTA 원산지증명이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기록에는 NAFTA 원산지증명 1999 양식의 사본이 들어 있다. Ms Thibault는 이 원산지증명이 해당상품의 것과 동일한 스타일번호에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134]. 또한, 기록상으로는 CCRA의 이행확인담당관인 Ms. Susan Easton이 해당상품의 수입이 진행되었던 전 기간에 걸쳐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었음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135]. 따라서 법원은 레이스에 대해 동법상의 요건에 따

134) 67에서의 공판기록, 2003년 9월 12일

135) Ms. Susan Easton은 자신의 2000년 3월 23일자 서신에서 "수출업체가 공란인 NAFTA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서신은 해당기간(1998년 3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전체에 걸친 수입 건 들에 해당한다.

른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법원은 본 사건의 제2사안, 즉 해당상품이 미국 관세율-표 상의 특혜 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NAFTA 규정들은 관세율-표 제16조(2)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NAFTA 규정 제4조는 상품의 원산지가 NAFTA 지역국가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NAFTA 규정 제2조(1)항은 "원산지상품"은 "본 규정상 원산지자격을 갖춘 상품"이라고 정의한다. NAFTA규정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복잡한 일련의 규칙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CRA는 해당 레이스의 생산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원산지 원사(즉 NAFTA 국가가 원산지가 아닌 원사)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Imperial(수출자)은 원사공급자인 Unifi 및 United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였고, 또한 CCRA의 요청에 따라 레이스의 각 스타일에 대해 CCRA가 제공한 상세한 도표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도표에는 원사함량 및 스타일 번호, 원사공급자 (레이스 스타일에 따라 Unifi 및/또는 United), 원사의 원산지(즉 미국) 및 생산공정과 장소(즉 미국)가 기입되어 있다. 작성된 도표는 제조업체가 원사공급자의 NAFTA 증명을 갖고 있었던 것도 확인하고 있다.

Imperial(수출자)은 도표를 두 번 작성하였다. 한 번은 2001년 2월이었고, 다른 한번은 2001년 9월이었다. CCRA의 Mr. Gerard Belisle의 서신을 보면 CCRA가 스타일 번호 1904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만족해했는데, 이는 그것이 Unifi가 제출한 NAFTA 증명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CCRA는 Imperial(수출자)에게 두 번째 도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해당 원사가 원산지증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스타일의 레이스에 대한 원사 함량과 제품번호, 미국의 어느 곳으로부터 원사를 구매하였는지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1년 9월에 제출된 수정도표는 CCRA로 하여금 다른 스타일들과 원산지증명의 일치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게는 해주었지만, 이 점에서 그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았다.

Ms Thibault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원사타입이 어떤 스타일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원사가 스타일번호 1904와 일치하였다는 Mr. Belisle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기억이 의심스럽다

고 되어 있다. 법원은 Mr. Belisle의 판단이 보다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자필로 소외의 자에게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는 두 개의 레이스 패턴 샘플을 CCRA에 제공하였다. 이 샘플들에 대한 요청은 CCRA가 Imperial(수출자)에게 첫 번째 도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CCRA가 2차 도표의 작성을 요청할 때 샘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샘플들이 CCRA에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Ms Thibault는 샘플이 특혜관세대우를 거절하기로 한 청장의 결정에 어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레이스의 미국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자료가 CCRA에 제출되었지만 청장은 그 레이스가 미국이 원산지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국 관세율-표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였다.

Ms Thibault는 미국 관세율-표 상의 특혜관세대우가 거절된 것은 CCRA에 제출된 Imperial(수출자)의 자료가 상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불일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요청한 비용명세서 양식의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레이스의 원산지증명에 특혜기준 B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Ms Thibault가 생각한 주요 불일치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혜기준 B의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 상품은 그 전체가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들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관세분류에 해당하는 부록 401이 정하는 특정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칙에는 세번의 변경, 역내부가가치 조건 또는 그들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상품은 또한 제4장의 다른 모든 해당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참조: 제401조(b) 항).[136]

Ms Thibault는 해당 레이스의 경우, 특혜기준 B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비-NAFTA-원산지 원사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그 자료가 모든 원사가 미국산이라고 한 도표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두 개의 자료가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Imperial(수출자)은 원산지규정

136) 원산지증명, 특혜기준 B.

이 적용된 후의 원산지를 적으려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원단의 원재료인 원사의 일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산지규정 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것은 미국산 재료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Ms Thibault가 이 두 가지 자료 간에 불일치가 있다고 본 것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에서 논한 것처럼 이점에 관한 다른 증거의 비중을 고려할 때 그것이 원사가 미국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증언은 Imperial(수출자)가 작성한 두 개 버전의 도표에 원사가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Ms Thibault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원의 견지에서는 Imperial(수출자)가 CCRA로 부터 원사에 대해 보다 잘 묘사한 두 번째 도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았음을 감안할 때, 원사에 대해 두 번째 도표가 첫 번째 도표와는 달리 기술되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기록상의 증거들은 두 번째 도표에 적힌 원사에 대한 기술이 오히려 더 자세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첫 번째 도표의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것이 없다. 증거는 없지만 두 번째 도표를 작성할 때 Imperial(수출자)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Ms Thibault는 또한 원사공급업체의 명칭 간에도 불일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두 개의 도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은 본 건과 상관이 없는 다른 스타일에 관한 도표 이외에는 Buffalo Group이 수입한 스타일을 위한 원사공급업체들에 관해 아무런 불일치도 발견할 수 없었다.

Ms Thibault는 Imperial(수출자)의 Mr. Kenneth Berger가 2001년 1월 9일자 서신에서 Imperial(수출자)가 사용한 원사를 Unifi가 공급한 것이라고 하였고 다른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도표에 제2공급업체로 United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도표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Ms Thibault는 이러한 불일치가 실제로는 두 곳 이상의 공급업체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법원은 두 버전의 도표 모두가 동일한 원사 공급업체 두 곳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 Ms Thibault가 의심하는 것과 같은 두 곳 이상의 공급업체가 있었

다는 증거는 없다고 본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은 Unifi와 United 두 곳의 공급업체가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한다. 법원은 Mr. Berger가 그의 2001년 1월 9일자 서신에서 Imperial(수출자)가 2000년 12월 이래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일부분 왜 그가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의 전 근로자가 예전의 문서를 찾아내서 말끔하게 다듬으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Ms Thibault는 자료에 불일치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레이스의 원산지 증명에 들어 있는 어느 스타일의 레이스는 도표에 의하면 Imperial(수출자)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스타일은 본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원은 이러한 불일치 가능성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Ms Thibault는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불일치를 감안하여 비용명세서 형태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가 Buffalo에 보낸 2002년 2월 11일자 서신에서 그녀는 청장의 예비결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자료는 전문용어나 비용명세서와 같은 문서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판에서 그녀는 비용명세서 제출요구에 관한 특이사항을 기억하지 못했고, CCRA의 수 많은 교신이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문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그녀의 생각 속에 그 요구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법원은 CCRA가 공장을 방문하여 추가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자료요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위 내용에 따라 법원은 해당상품이 NAFTA규정 제4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NAFTA원산 재료로 미국에서 Imperial(수출자)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인정하며, 따라서 미국 관세율-표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레이스가 미국원산이라는 결론은 레이스와 레이스생산에 사용된 원사 모두를 위한 원산지증명과 CCRA가 요구한 두 개 도표상 원사에 관한 상세자료로 뒷받침되어 있다. 법원은 CCRA가 파악하였다는 자료상의 불일치가 그 증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레이스가 미국원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할 거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동 사건에서 NAFTA 원산지 규정상 해당제품이 “원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데, 검증을 담당하는 캐나다 관세청은 2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였다. 첫째로 수출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둘째로 관세청이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관련 자료를 두 차례 요구하였는데 각각 제출한 자료의 원사 공급처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수출자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료미비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은 원산지검증절차에 따라 생산자에게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생산자 Imperial(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판단되므로 관세청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생산자가 미국산 레이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한 원사가 미국산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두 번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관세청은 이 시차가 있는 자료상에 원사의 공급처가 서로 다르므로 비원산지 원사의 혼입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서도 관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세청은 처음 제출한 재료명세 내역에는 원사공급자가 Unifi로 작성되어 있고, 2차로 제출한 서류에는 United로 작성되어 있어, 검증담당자는 원사의 공급자 명칭이 서로 다른 점을 바탕으로 원사공급업체가 2개 이상 존재할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재료명세 내역을 바탕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공급업체 2곳이 있는 것이지 2곳 이상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 따라 공급업체는 Unifi와 United 2곳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검증담당자들이 피검증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대조에 의한 검증기법을 주로 활용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증담당자는 자료의 대조를 통해 불일치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려면 그 역시 증거로서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 사례 4

□ 사례 개요

【원고】 Western RV Coach Inc.
【피고】 캐나다 관세국경 관리청
【쟁점】 중고 모터홈의 NAFTA 특혜관세 허용여부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판결일자】 2007년 4월 23일

□ 사실관계

○ 수출자는 생산자의 C/O신뢰하고 이를 제출

2002년 9월 24일, Marathon Coach Inc. (Marathon:수출자)는 Florida에 있는 자신의 종합판매서비스본부에서 해당상품을 Western(수입자)에게 중고차량으로 판매하였다. 판매 당시 Marathon은 해당상품이 NAFTA이행법률상의 정의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을 Western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수출자는 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상품의 품목분류번호가 8703.33[137]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관세분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Royale Coach by Monaco Inc. (Monaco:생산자)는 Monaco Coach Corporation에 속한 회사로 차량생산자로 알려져 있고, Marathon은 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Marathon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때 해당상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한다는 제조업체의 서면진술을 신뢰하였음을 주장하였다.

Marathon(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서 "상품이 원산지-재료만으로 순전히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만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Marathon(수출자)는

137) 품목분류번호 8703.33.00: "주로 사람의 운송을 위해 설계된 모터자동차 기타 모터 차량으로서 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실린더 용량 2,500cc초과의 것"

또한 순원가 방식을 이용해서 상품의 역내부가가치를 판단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상의 보장을 근거로 Western(수입자)는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아 해당상품을 캐나다로 수입하였다.

○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후 NAFTA 특혜관세배제 처분

CBSA가 다른 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된 모터-홈에 대해 (차량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세금과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받는 동안, 같은 시기에 다른 업체들은 단지 의심스러운 가격의 원산지증명서만을 제출함으로써 관세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CBSA는 2003년 1년간 Western(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배후의 기록과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3월 19일, CBSA는 Marathon(수출자)에게 Monaco로 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고 한 서면진술서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arathon(수출자)는 Monaco(생산자)가 해당상품의 원-구매자에게 발행한 “차량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같은 날 CBSA에 회신하였다.

2003년 7월 25일, CBSA는 Marathon(수출자)에게 공문을 보내 위에 언급한 증명서가 부적절하다는 것과 CBSA가 해당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겠음을 통지하였다. 공문에는 “NAFTA 원산지 확인용 설문서”가 첨부되었고, CBSA는 Marathon(수출자)에게 동 설문서를 작성하여 2003년 8월 29일까지 반송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Marathon(수출자)는 두 번의 연장을 받았고, 최종 만료일은 2003년 10월 31일이었다.

2003년 10월 16일, Monaco(생산자)는 Marathon(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보냈고, 2004년 4월 30일에는 CBSA에게 서신을 보내 Monaco(생산자)가 설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CBSA가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중고” (Monaco(생산자) 자신의 품목) 차량의 구성부분이나 가격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003년 10월 16일자 Monaco(생산자)의 서신을 근거로 CBSA는 해당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수입자의 심사청구 제기

이후의 재결정 절차에서 Western(수입자)는 CBSA에게 해당상품을 특혜관세대우를 받은 유사상품과 비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Western(수입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2003 Monaco(생산자) 모델들을 제의하였다. 즉 Navigator, Cheetah, Patriot 및 Dynasty가 그것들이다. CBSA는 제23조상의 NAFTA 이행법률의 정의 내에서 그 모델들이 "유사상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적절한 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Western(수입자)는 CBSA에게 해당상품을 1997년 제조된 Prevost Car Incorporated (Prevost)의 bus shell 통관증명과 비교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상품과 같은 경량차량[138]이 아니고, 부가가치 산정[139]에 있어서 다른 방식이 요구되는 중량차량들이었다. 또한, 비용관련 자료는 엔진, 트랜스미션 및 프레임 등과 같은 주요 부품에 대한 것들만 제공되었고, 그 구성부품의 추가분류나 추적재료목록도 없었다. 따라서 CBSA는 해당상품의 부품들을 Prevost bus shell과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CBSA는 2006년 1월 11일 해당상품이 NAFTA 하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6년 4월 6일, Western(수입자)는 CBSA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였다.

○ 원고의 헌법소원 청구

Western(수입자)는 2006년 6월 12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NAFTA 이행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특혜관세율에 적용되는 법률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2006년 7월 7일, 법원은 Western(수입자)에게 헌법소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연방법원법 제57조의 요건에 따른 Western(수입자)는 2006년 7월 28일 이를 이행하였다.

Western(수입자)는 그 소원에서 해당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CBSA의 절차적 헌법 불합치성에 관한 본질적인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Western(수입자)의 질문은 그 절차가 헌장 제 7, 11 또는 12조 또는 제15조(1)항이 보장하

138) 거래방식
139) 순원가 방식

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 각 경우에 그 침해가 제1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 관련법령의 검토

제1 쟁점, 즉 해당상품이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것이 캐나다 법에 반영된 NAFTA 원산지규칙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NAFTA 이행법률은 동법, 관세율-표 및 수입상품원산지증명규정, NAFTA 원산지증명규정 및 NAFTA와 CCFTA[140]원산지확인규정 등을 포함하는 여러 조항들로 구성되며, NAFTA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NAFTA의 요구사항들을 입법화한다.

이를 보다 상세히 하자면, 관세율-표 제24조 (1)항은 수입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a) 관세법상의 요건에 맞는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어야 하고

(b) 상품이 해당 규정들의 요건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해당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고 캐나다에 수입되려면 수입업체는 아래와 같은 네 개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수입상품이 그 부속품과 추적자재를 포함하여 규정상의 원산지확인요건, 즉 그 규정들이 요구하는 진술서에 첨부되는 원산지증명이 그 차량에 대한 것일 것.[141]
(2) 해당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재-조립되는 모든 비-원산지 내용물들이 하나의 분류에서 다른 분류로 적절히 재-분류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변형이 이루어질 것.[142]
(3) 수입상품의 역내부가가치(RVC)가 적어도 그 규정들이 정하는 최소 백분율에 달할 것.[143]
(4) RCV는 순원가 방식으로 산정할 것.[144]

140)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
141) 관세법 제35.1조 (1)항; 수입상품 원산지확인규정, 제6조 (1)항
142) NAFTA 원산지규칙규정, 별표 I, 세목 8703
143) NAFTA 원산지규칙규정, 제13조 (1)항 (a)목

□ 쟁점사항

본 항소에는 두 개의 쟁점이 내포되어있다. 하나는 Western(수입자) RV Coach Inc.가 2002년 9월 27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고 1995 Royale Coach 모터-홈 (해당 상품)이 NAFTA상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다. 두 번째의 것은 NAFTA의 특혜관세조항이행법률(NAFTA 이행법률)이 캐나다 권리와 자유장전의 제7조, 11조 또는 제15조 (1)항이 부여하는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것과, 만약 그렇다면 그 침해가 장전 제1조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하는 것이다.[145]

□ 당사자주장

관세법 제42.1조상, CBSA는 수출자의 장부나 기록을 감사하거나 수출자가 상품의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자의 장부나 기록을 감사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의 대상인 상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1)항은 일단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를 재-결정하는 데에 원래의 결정일로부터 4년을 CBSA에 허용하고 있다.

NAFTA 제13조 및 CCFTA 원산지확인규정은

*". . .특혜관세대우는…원산지확인절차가 진행된 국가의 관련법률에 따라 상품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품의 수출업자나 제조자가 . . .그 법률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 .그 상품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상품이 수입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년 3월 19일, CBSA는 원산지확인절차의 일부로 Marathon(수출자)에게 Marathon(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당시 신뢰하였던 Monaco(생산자)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CBSA와 Marathon(수출자) 간의 교신회수와 상관없이, Marathon(수출자)는 그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44) NAFTA 원산지규칙규정, 제6조 (6)(d)(i)

145) 이에 대하여는 본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헌법소원부분은 배제하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분만 수록 분석하도록 한다.

2003년 10월 16일자 서신에서 Monaco(생산자)는 자신이 ". . .1995 Royale Coach에 관한. .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Monaco(생산자)는 그 제품의 생산이 8-9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NAFTA 내용물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Marathon(수출자)가 자신이 믿었다고 주장하는 필요문서를 Monaco(생산자)로 부터 받은 적이 없이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Western(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뒷받침할 서류가 없다는 것과 Monaco(생산자)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Western(수입자)는 자신이 Marathon(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다는 점과 그 확인절차가 너무 늦게 시행되어 Monaco(생산자)로부터 기록들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Western(수입자)는 또한 자신이 원산지증명서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할 자료들을 Monaco(생산자)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NAFTA 원산지규칙규정 제VI부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수입업체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제15조 (1)항은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해당재료라는 것 또는 그 재료의 가액이 정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제15조 (3)항은 수입상품 자체가 원산지 해당상품이라는 것을 수입자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한다.

위의 두 상황에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CBSA는 자신이 (해당상품의 제조자가 생산한) 다른 유사한 상품에 대해 이미 확인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유사상품이 원산지 해당상품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46]

CBSA는 Western(수입자)이 동 규정 제15조(2)항의 정의에 따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암시하였다. 그것에는 파산, 재정적 압박, 사업 개편, 화재, 홍수 기타 기록의 상실을 초래하는 자연현상이 포함된다.

146) NAFTA 원산지규정규정, 제 15조 (1)(c) 및 (3)(c)

CBSA는 또한 Western(수입자)이 재-결정과정에서 제시한 대리상품들 중 어느 것도 동 규정 제2조 (2)항의 정의 하에서의 "유사상품"이라는 것, 즉 유사한 성격과 부속품 및 재료를 가진 것이어서 그 상품이 해당 수입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상업상 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CBSA는 대리상품이 상업상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합리적인 경쟁자라면 중고 1995 Royale 모터-홈이 신차 2002 Executive Rambler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 판결 및 시사점

최근의 Duhamel & Dewar 사건[147]에서 법원은 "…CBSA가 이 서신을 액면 가대로 믿고 1999년에 제조된 모터-홈을 CBSA가 2002년에 감사한 것이지만 Duhamel & Dewar가 수입한 것과 동일한 모델이 아닌 차량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Monaco(생산자)가 제출한 보충자료는 2005년 10월 12일자 CBSA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CBSA는 모터-홈의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NAFTA 원산지규칙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원이 검토한 것을 근거로 할 때 법원은 해당 모터-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발견할만한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위 사건이 이 점에 있어서 본 항소 건과 일치한다고 본다. 본 항소 사건에서 제조사는 해당상품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고 특혜관세대우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누락된 자료가 없이는 원산지 증명서상의 원산지국가를 확증할 수 없다.

Western(수입자)는 CBSA가 대리상품과의 비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당상품이 원산지 해당상품임을 확인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CBSA가 다른 해에 생산된 다른 Royale Coach 모델을 NAFTA 원산지규칙규정상의 "유사상품"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CBSA가

147) Duhamel & Dewar Inc. 대 캐나다국경수비대장 (2007년 2월 8일) 사건, AP-2005-046 (CITT) [Duhamel & Dewar]

법원이 다른 타입과 유형의 차량이라고 인정한 Prevost bus shell에 관한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자료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제15조는 유사상품으로 인정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Western(수입자)이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게 하는 적당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해당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상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법원은 해당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당상품이 네 가지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상품이 품목분류를 위한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는 제 규정들의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동 사례는 Duhamel & Dewar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 수출자로부터 받은 중고 모터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이다.

주요 쟁점은 수출자는 단순히 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을 신뢰하였으나 적절한 증명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관세청은 후속조치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생산자 역시 해당제품의 생산기간이 이미 오래 지나 관련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수입자의 과실없는 불가항력적 이유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상품과 유사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동 사건의 쟁점 물품이 NAFTA 이행법률의 정의 내에서 “유사상품”이라고 할 만한 적절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고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동사안이 Duhamel & Dewar 사례와 유사한 결과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는데 제조사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확인을 거부하였고 또한 특혜관세대우를 뒷받침 할만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근거자료 없이 원

산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수입자가 주장한 “유사상품”의 정의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면서 NAFTA 원산지규정 제6부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수입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산, 재정적 압박, 사업 개편, 화재, 홍수 기타 기록의 상실을 초래하는 자연현상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 사안에서 생산자는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유사상품에 대하여서도 유산한 성격과 부속품 및 자재를 가진 것이어서 그 상품이 해당 수입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상법상 교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례는 **수입자가 자신의 과오 없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판단과 대체 기준으로서 유사상품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사례 5

□ 사례 개요

【원고】 9133-7048 Quebec Inc.
【피고】 캐나다 관세국경 관리청
【쟁점】 방글라데시산 브래지어의 일반특혜관세 및 개도국 특혜관세 적용유효성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판결일자】 2011년 10월 6일

□ 사실관계

2008년 3월 11일부터 2009년 5월 8일 사이에 9133-7048 Quebec Inc.는 해당 상품을 방글라데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하였고 수입 당시 LDCT 상의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하였다.

2009년 7월 21일자 공문에서 CBSA는 동 법 제42조(2)항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LDCT상 특혜관세대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류의 검사를 시행하겠음을 9133-7048 Quebec Inc.에게 통지하였다.

2009년 10월 8일, CBSA는 동 법 제42.1조에 따라 이-메일로 Mam Trading에게 해당상품에 관한 원산지확인절차가 진행중임을 통지하였다. CBSA는 Mam Trading에게 확인용 질문서를 보내면서 2009년 10월 15일까지 이를 반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10월 14일, CBSA는 2009년 10월 8일자 CBSA 이-메일의 수령을 확인하고 질문서 반송 마감일인 2009년 10월 15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Mam Trading에 사후관리용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11월 9일자 공문으로 CBSA는 당시 진행중인 확인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이 LDCT상의 자격이 없음이 밝혀지면 동 법 제59조(1)(a)항에 따른 재-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을 통지하였다.

CBSA는 2009년 11월 9일 확인용 질문서를 첨부하여 Mam Trading에 재차 공문을 발송하면서 답신을 보낼 수 있도록 추가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그 공문은 질문서를 작성하여 요청한 날까지 반송하지 않으면 9133-7048 Quebec Inc.에게 제공된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고 해당상품에 대해 신청한 LDCT가 거부될 수 있다.을 통지하는 것이었다.

2009년 11월 10일, CBSA는 Mam Trading에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확인용 질문서를 보냈다는 것과 그것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같은 날 CBSA는 9133-7048 Quebec Inc.에게 확인용 질문서를 Mam Trading에 보냈음을 이-메일로 알렸다.

2009년 11월 23일, CBSA는 질문서 작성에 관해 묻는 이-메일을 Mam Trading에 보냈다. CBSA는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을 되풀이해서 알렸고 회신 마지막 날로 정해진 날이 2009년 12월 10일임을 상기시켰다.

2009년 12월 22일, CBSA는 Mam trading에 이-메일을 보내 확인용 질문서를 반송할 마감일이 지났다는 것과, 요청한 자료를 2010년 1월 22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해당상품에 대한 LDCT상의 특혜관세대우청구가 거절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CBSA는 2009년 12월 23일자 서한으로 이 내용을 반복하였다.

Mam Trading은 2010년 1월 22일의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0년 1월 28일에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보낸 공문으로 CBSA는 해당상품에 대한 LDCT상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함을 9133-7048 Quebec Inc.에 통지하였다(Mam Trading에 사본 전달). 그 공문으로 그 결정에 따라 9133-7048 Quebec Inc.가 취할 다음 절차가 통지되었다.

2010년 1월 28일, Mam Trading은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CBSA에 적어 보냈다. “귀관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그 서신을 더 일찍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귀관이 말하는 상품을 저희는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서 캐나다로 선적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고 이전에 질문서로 요청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010년 2월 1일, CBSA는 이-메일로 Mam Trading의 이-메일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이 이-메일은 Mam Trading이 동 법 제59조에 따라 9133-7048 Quebec Inc.가 CBSA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하였다. 2010년 2월 2일자 추가교신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후 9133-7048 Quebec Inc.는 2009년 12월 23일자 CBSA의 결정에 대한 재-결정을 요청하였다. 2010년 11월 19일자 공문으로 CBSA는 9133-7048 Quebec Inc.에게 재-결정 요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는 예비판정을 내렸음을 통지하였다. CBSA는 동 법 제60(4)조에 따라 2010년 12월 23일 및 2011년 1월 4일 동일한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2011년 1월 11일, 9133-7048 Quebec Inc.는 동법 제 67조(1)항에 따라 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2011년 7월 5일, 법원은 9133-7048 Quebec Inc.에게 Mam Trading이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은 2011년 7월 6일에 제출되었다. 이 때 CBSA는 2002년 12월 31일자 방글라데시와 캐나다 간의 양해각서와 원산지 확인(비-자유무역 당사자간) 및 관세분류와 수입상품 관세용 가액 규정의 각 사본도 제출하였다.

2011년 7월 7일, 법원은 Ontario 주 Ottawa에서 공판을 가졌다. CBSA는 CBSA 법무실장 Mr. Byron Fitzgerald와 CBSA 원산지평가실의 원산지 감사관 Mr. Frederick Aboagye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9133-7048 Quebec Inc.는 아무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았다.

□ 관련규정

동법 제67조(1)항은 “제60조에 따라 이루어진 [CBSA] 대장의 결정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한다. 제60조상의 결정은 본 사건 사안과 같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캐나다 법은 상품이 LDCT 하에서의 것과 같은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관세율-표 제24조(1)항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24(1) 아래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 달리 정하거나 관세항목에 달리 정해진 것이 없으면 상품은 일반관세율이 아닌 본법상의 관세에 대한 자격이 있다.
> (a) 상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고
> (b) 상품이 제16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행령 또는 제31(1)(a), 34(1)(a), 38(1)(a) 또는 42(1)(a), 45(13), 48 또는 49(2), 49.01(8) 또는 49.5(8)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명령에 따른 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을 때.

따라서, 해당상품이 LDCT 하에서의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4(1)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고 (2)해당 시행령 또는 명령에 따라 상품이 그 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동법 제35조 (1)항은 수입된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 지정된 자료가 포함되고 제(4)항 상의 규정이 요구하는 자료, 진술 또는 증명을 갖거나 첨부된 지정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1(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5) 특혜관세대우가 청구된 상품과 관련하여, 본 조항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업자, 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본 법 또는 관세율-표 상의 규정, 또는 그 법률들에 의거하여 특혜관세대우에 관해 제정된 다른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상의 특혜관세대우는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수입상품 원산지증명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NAFTA 상의 특혜관세대우혜택이 청구된 경우 상품의 수입업체나 소유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규정에 아무런 원산지증명서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반특혜관세 및 저개발국관세 원산지규정규정 제2조(2.4)항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4) 별표 C1 및 C2 부분에 적힌 관세항목번호의 상품으로서 저개발국가가 원산지 고 저개발국가에서 조립되었으며 그 국가나 캐나다에서 재단된 원단으로, 또는 그 형태로 직조된 부분품으로 만들되 그 원단이나 그 형태의 부분품이 아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a) 모든 저개발국가, 수익국가 또는 캐나다이며, 저개발국가가 원산지인 원사의 경우 그 수혜국가 또는 캐나다, 단 그 원사나 원단이 저개발국가나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b) 저개발국가가 원산지인 원사의 수혜국가, 수혜국가 또는 캐나다로서

(i) 원단이나 원사가 저개발국가, 수혜국가 또는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ii)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서 상품의 조립이 이루어진 저개발국가 외의 지역이 원산지인 포장 등 재료의 가액이 캐나다에 수출되기 위해 포장된 상태의 상품 공장도 가격의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동법 제42조(1)항은 원산지확인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42.1(1)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대장이 지명하는 어느 공무원 또는 어느 부류의 공무원들 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을 대신하도록 대장이 지명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CEFTA 이외의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대우가 청구된 상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i) 정당한 시간 중 정해진 구내나 장소에 들어가거나

(ii) 정해진 방식으로....

수입상품관세를 위한 관세분류 및 가액규정 제2조(2)항, 원산지확인(비-자유무역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일반특혜관세 및 저개발국가관세원산지증명규칙 규정의 별표가 정하는 관세번호의 상품으로서 저개발국가관세가 청구된 것에 대한 확인은 아래 항목의 하나 이상에 정해진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a) 아래에 의해 작성된 확인용 질문서의 검토

(i) 상품의 수입업체 또는 소유자

(ii) 동법 제32(1), (3) 또는 (5)항 상의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iii) 상품의 수출업체 또는 제조자

(iv)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b) 확인용 공문에 대해 (a)항에 적힌 사람이 보내온 서면답변의 검토

(c) 상품이나 상품의 구성부품에 대한 기록 또는 자료 또는 검사내용으로서 (a)항에 적힌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 .

□ 쟁점사항

본 사건의 사안은 Nam Trading에서 제조하였다고 하고 9133-7048 Quebec Inc.가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한 95퍼센트 면과 5퍼센트 스판덱스로 만들어진 스타일 번호 Mannan 01/07의 여성용 스포츠 브래지어(해당상품)가 저개발국가 시장진입촉진조치상, 따라서 관세율-표 및 일반특혜관세와 저개발국원산지규정 관세규칙에 따른 저개발국관세협정(LDCT)상의 우대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 판결 및 시사점

당사자들은 본 사안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오히려 유일한 문제는 온전한 확인절차 없이 CBSA가 9133-7048 Quebec Inc.의 LDCT상 특혜관세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9133-7048 Quebec Inc.가 신청한 해당상품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CBSA가 얻을 수 없었고 법원 또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CBSA가 한 것과 같이 해당상품은 LDCT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위에서 기술한 확인절차의 진행 중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다. CBSA는 9133-7048 Quebec Inc.나 Mam Trading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 전 과정에서 CBSA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9133-7048

Quebec Inc.는 항상 할 수 있는 데까지 CBSA에 협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133-7048 Quebec Inc.는 자신의 이전 공급업체로부터 더 이상 협조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Mr Rothstein은 그가 Mam Trading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Mr. Rothstein의 증언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기록상 Mam Trading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자가 이-메일 교신의 수령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해당상품에 대해 이미 CBSA가 LDCT상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한 이후이었다.

동법 제42.1(2)항은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갖지 못했을 때 청구된 특혜관세대우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CBSA에 부여하고 있다. 결국, 9133-7048 Quebec Inc.가 신청한 해당상품의 원산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문서도 CBSA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자료의 결여는 제42.1(2)항에 따른 LDCT상 특혜관세대우의 철회로 이어졌다.

기록상의 증거로 볼 때, 수입 당시 9133-7048 Quebec Inc.는 자신이 Mam Trading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아마도 Mam Trading이 확언한 내용을 믿고 Mam Trading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것이 통상의 사업과정에서의 관행일 수도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급업자를 믿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잘못이 없는 9133-7048 Quebec Inc.가 이제는 협조의 의사가 별로 없는 공급자의 원산지증명서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이 제기한 원래의 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세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Mam Trading이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9133-7048 Quebec Inc.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 Mam Trading이 단순히 9133-7048을 도울 의사가 없었다. 또는 (3) Mam Trading이 9133-7048 Quebec Inc.를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원산지를 뒷받침할 방법을 Mam Trading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9133-7048 Quebec Inc.는 자신이 특혜관세 및 LDC원산지규정 규정제2(2.4)항

이 요구하는 해당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사와 원단의 원산지증명서를 얻을 수 없었고, 따라서 Mam Trading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관세율-표 제24조 (1)(b)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9133-7048 Quebec Inc.는 법원에 이를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의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서면증거 대신, Mr. Rothstein은 법원이 그 산업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여서 특혜 및 LDC원산지규정 규정 제2조 (2.4)(b)(ii)목이 정하는 것과 같이 해당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가액의 적어도 25퍼센트의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r. Fitzgerald는 그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본 항소에 결정적인 것은 해당상품을 만든 원단의 원산지이지 그것에 사용된 재료의 가액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법원은 해당상품이 방글라데시에서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가액의 적어도 25퍼센트가 방글라데시 원산이라는 Mr. Rothstein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자료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9133-7048 Quebec Inc.는 특혜 및 LDC원산지규정 규정 제2조 (2.4)(a)항과 제2조 (2.4)(b)(i)목이 정하는 바 해당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사나 원단의 원산지에 관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원산지는 알지 못하며 그것은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9133-7048 Quebec Inc.는 법원에 자신이 처한 이른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원이 형평법 상의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결국 관세율-표 및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입법부가 채택한 여러 법률들의 요건을 묵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재량권은 법원이 갖고 있지 않으며, 9133-7048 Quebec Inc.가 처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형평법 상의 구제수단을 인정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입법부는 법원으로 하여금 동법, 관세율-표 및 입법부가 채택한 여러 관세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3) 호주

□ 사례 개요

【원고】Gaylor Jewellery Sales Pty Limited

【피고】호주관세청

【쟁점】ANZCERTA상 특혜관세 대우 허용여부

【결정사항】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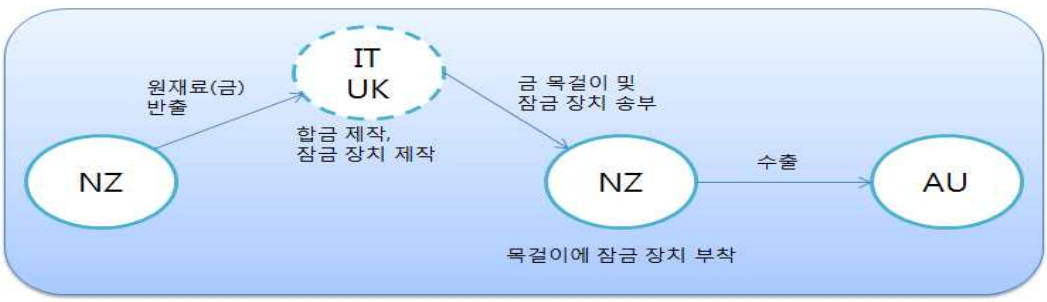
【판결법원】행정항소재판소

【판결일자】1990년 6월 5일

□ 사실관계

본 일련의 신청은 Koalic Enterprises Limited (Kolaic:수출자)이 뉴질랜드에서 수출한 금 장신구를 Gaylor Jewellery Sales Pty Limited(Gaylor:수입자)가 호주로 수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Kolaic은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산 금을 구매하고 그 금을 금 목걸이 제작을 위해 이탈리아 및 영국의 제작자에게 전달하였다. 제작자는 순금에 다른 금속을 추가해 금목걸이 제작에 적절한 금 합금으로 변형하였다. 이후 금 합금은 체인의 끝에 O-ring 납땜하여 체인 및 목걸이로 제작되었다. 체인 및 목걸이는 필요한 잠금 장치와 함께 이탈리아 및 영국에서 다시 뉴질랜드로 보내고, 뉴질랜드에서는 함께 받은 잠금 장치를 각 체인 또는 목걸이의 O-ring에 부착하였다. 그 후 이 상품들은 호주로 수출되었다.



Kolaic이 제공한 뉴질랜드 금은 제작공정의 전 과정에서 그 회사의 재산으로 유지되며, 제작자는 Kolaic 에게 사용된 금의 실제 수량에 대해 책임진다. 주문의 완료 후 남은 금은 Kolaic의 다음 주문에 대해 사용하기 위해 제작자가 보관한다.

체인 및 목걸이에 포함된 금의 가치는 상품의 총 가치의 최소 70%이며 제조과정에 소요된 비용은 총 가치의 30% 미만이다.

본 사항의 사실은 Rubis Investment Pty Limited 및 세관장 (1984) 판례의 사실관계와 유사한데 Rubis 사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뉴질랜드에서 걸쇠를 부착하는 것이 물품 제작의 완성 상태로 이행되는 최종 공정이다. (b) 종전에 제작된 부품을 완성된 물품으로 조립하는 것이 제작 공정이다. 그리고 (c) 물품은 그것들이 뉴질랜드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었고 그 제작의 최종 공정이 뉴질랜드에서 이행되었으며, 제조비용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재료의 가격으로 나타났으므로 1901 관세법 제151조에 따른 특혜관세율에 대한 자격이 있다.

Rubis 판례에서, “금 체인의 공장 또는 제작비용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재료의 가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즉, 순금 가격 NZ $ 81,000) 1901 관세법의 제151조 (3)항 (c)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제151조의 현재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따라서 Gaylor가 수입한 물품은 특혜 대우에 대한 자격이 없다.

따라서 금 체인으로 제작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금이 선적된 시점에 원재료는 관세법(1901)의 제151조 (7)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분명한 뉴질랜드의 재료였다. 이탈리아에서 금은 다양한 형태의 금 체인으로 제작되었고 원재료인 뉴질랜드산 금은 항상 수출자 Koalic의 재산에 포함 되었다. 체인의 금 비중은 상품가치의 최소 70%를 나타내고, Koalic은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금을 체인으로 제작한 비용 및 취급 수수료의 금액을 청구 받았다. 이탈리아 제조자는 걸쇠를 부착하여 뉴질랜드로 체인을 보냈고 완성품 체인은 상자에 포장되어 호주로 수출되었다.

체인으로 제작되기 이전에 금 자체가 호주로 수출되었을 경우, 재료는 “뉴질랜드산”의 재료였을 것이다. 그러나 역외국인 이탈리아에서의 제작으로 인해 금에 변경이 초래되었다면 “뉴질랜드산 재료”로 볼수 없고 호주로 수출하기

위한 최종품에 포함된 혼재되어 있는 여러 원산지 재료들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151조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 당사자주장

○ 피항소인 관세청 주장

피항소인 세관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진술에 근거해 답변하였다

(a) 호주 및 뉴질랜드간의 관세방침 및 절차의 조화에 대한 공동양해를 1988년 8월 16일 서명함에 따라 “호주로 수출하는 최종 제품에 포함된 혼재된 원산지 재료의 특혜관세 대우에 관하여 ANZCERTA에 따른 원산지 규칙에 변경이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b) 세관장은 관세법 제151조 (13)항에 따라 원산지 규칙에 대한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 1988년 8월(No. 88/8) 및 1988년 11월(No. 88/11)의 관보에 이를 발표하였고, 관보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

(c) ANZCERTA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재료는 최종 수출제품의 역내부가가치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1988년 8월 16일자 정부의 변경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d) Koalic이 사용한 “재료”는 이탈리아로부터 뉴질랜드로 수입되었다. 따라서 재료의 원산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다.

(e) 따라서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한 재료는 최종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완전한 역외산 재료이다.

(f) 관보공고에서 반영된 행정변경은 “관세법 제151조 (7)항 (b)의 요건에 해당하는 역내부가가치로 어떤 재료가 인정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이는 Rubis 판례의 결정 내용을 따른다.

또한 세관장은 추가적 주장의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1. 상당한 변형의 결과로서 관세법 제151조에서 언급된 “재료”는 뉴질랜드

에서 수출되어 호주로 수입되는 시점에 이탈리아 원산지 재료이다.

2. 순금은 뉴질랜드에서 반출되어 이탈리아에서 금 체인으로 특성 또는 본질이 변경되어 관세목적상 뉴질랜드 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변경 된 것이다.

3. 제작 공정에서 금은 관세법 제151조의 목적상 뉴질랜드산 재료로서의 특성을 잃었다.

4. Rubis 판결은 더 이상 관보에 대한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5. 뉴질랜드에서 행해진 유일한 제작 관련행위는 걸쇠 또는 체인의 부착 행위에 불과하다.

6. 교토 협정은 호주의 국내법의 일부로서 원산지 규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해는 협약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

7. 특혜의 규정은 물품의 역내생산을 장려하려는 것이었다.

8. 비관세 지위의 인정은 적용될 수 없다.

9. 1988년 11월의 관보에 포함된 “재료”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없고 이점에서 금은 제71류의 II 제7108호에 속하고 장신구는 제71류의 III 제7113.19.00호에 속한다.

○ 원고 수입자 Gaylor 주장

원고는 피항소인인 관세청의 주장에 반박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a) 실제 상황에 상반되는 관련 법률은 관세법 제151조에 포함된 그것이다. 교토 협정의 존재와 그것에 포함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언급은 규정을 읽을 필요가 없거나 그럴 가치가 없다. 교토협약은 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설명적인 메모랜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협약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되지 않았다.

(b) 협약의 제3조 (1)(c)(ii)A는 “재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며, 그것이 호주 법령의 문맥상 관련성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것으

로 생각될 수 있다.

(c) 판례에 따르면 양해각서 그 자체는 국내법 및 “재료”란 단어에 부여된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다(Simsek v MacOhee (1982) 148 CLR 636, 639, 641 참조) 양해각서의 첨부는 “재료”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 국내법령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1988년 8월 관보는 그 효력이 없었다.

(d) 관세법 제151조 (13)항은 세관장이 법령을 변경하도록 권한을 주지 않는다. 세관장은 관보를 이유로 법령을 양해각서의 의미에 맞추고자 하였다. 그는 물품의 비용 및 인건비 그리고/또는 재료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결국 세관장은 “재료”라는 단어에 부여된 의미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

(e) 1988년 11월 관보 공고는 대체로 효력이 없다. “본 공고의 목적상”문구는 공고에서 사용된 “재료”라는 단어가 공고에서 그것에 부여된 의미를, 법률이 아닌 공고의 목적상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f) 1988년 11월 공고는 1988년 8월 공고보다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8월 공고는 처음 3인의 신청인들에 한해 적용된다. 1988년 8월 관보의 취소 이후 “재료”에 부여된 의미는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151조 (7)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재료”는 1988년 11월 관보에서 부여된 것과 같은 “재료”일 필요는 없다.

(g) 각료의 조치로 국내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장관의 문구는 법령에 부여된 의미와 관련이 없다

□ 판결 및 시사점

피항소인 세관장의 주장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인 순금에 제작자가 추가적인 물질을 첨부였으므로, 합금이 뉴질랜드산 금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없었으며 둘째, 뉴질랜드산 금일지라도 Rubis Investment Pty Limited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원재료인 금에 단지 물질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더 내구성이 있다고) 뉴질랜드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즉, 금시계가 그 케이스가 22금 또는 28금으로 만들어 지고 순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시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Young v Cook (1877) 3 EX D 101 판결을 참고하자면, Cleasby B는 1867 재정법(Revenue Act 1867)의 목적상 "2온스 무게의 금"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본인은 이것(상기 표현)은 상업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순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22금, 18금, 15금 또는 9금 또는 어떤 것이든 합금인 금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체인 또는 목걸이의 구매자는 그것이 순금으로 만들어 지지 않았더라도 금 체인 또는 금 목걸이로 볼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다. 따라서 체인 또는 목걸이를 구성하는 금이 뉴질랜드산 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법령의 의미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의 재료"라고 본다. 이 견해에 대한 증거가 Macquarie Dictionary 재료의 정의에서도 발견된다:

" 1. 물건을 만들거나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물질들.

2. 물건의 구성분자."

따라서, 피항소인의 처음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피항소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1987년 관세법의 제5조 (1)항에서 "특혜국가(Preference Country)" 표현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의미상 특히 뉴질랜드를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제22조는 물품에 관한 관세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 (a)……(b) 물품이 캐나다 이외의 특혜 국가의 생산인 경우, (i) 특혜국가와 관련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물품을 분류하는 관세분류의 3열에 정해진 경우- 그 관세율; 또는 (ii) 다른 모든 경우- 면세; 또는 (c)……."

해당 물품이 1987 관세법 제71류 III 제7113.19.00호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다. 당해 세번에 대하여 뉴질랜드와 관련해 적용되는 관세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은 제22조 (a)(ii)에 따라 면세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이 면세를 적용하기 위해, 물품은 뉴질랜드에서 생산이 되어야 한다, 1901관세법 제151의 (6), (7) 및 (1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본 법률의 목적상, 물품은 다음의 경우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캐나다 또는 특혜국가가 아닌 국가의 생산이다.

(a) 그것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b) 그것들이 호주 및 국가의 한 나라 또는 두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재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c) 그것들이 국가에 수입된 재료로서 검사관이 관보에 발표한 서면공고를 통해 국가의 원재료로 결정된 재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7) 본 법률의 목적상, 물품은 다음의 경우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이다:

(a) 생산의 최종 공정이 뉴질랜드에서 이행된 경우; 그리고

(b) 50% 이상 또는 물품이 검사관이 관보에 발표한 서면공고를 통해 다른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한 종류인 경우. 그것들의 공장 또는 제작비용의 다른 비율은 뉴질랜드 또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인건비 또는 재료비 또는 노무 및 재료비로 나타낸다.

(13) 본 조항의 목적상, 검사관은 관보에 발표한 서면공고를 통해

(a) 물품의 공장 또는 제작비용이 결정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인건비, 재료비 또는 노무 및 재료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51조 (7)항 (a)의 목적상, Rubis Investment Pty Limited(supra)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Gaylor가 수입한 체인 및 목걸이 제작의 최종 공정은 뉴질랜드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제(7)항 (b)에 따른 관련 결정은 없었다.

원산지 규칙을 다루는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ANZCERTA (1983년 1월 1일 발효) 제3조는 특히 다음을 규정한다:

" 1.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직접적으로 수출된 물품 또는 직접적으로 수출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원국을 향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의 수출시점에 그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후속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다음의 경우 (앞의)처음 회원국의 영토가 원산지인 물품으로 취급된다:

(a) ……

(b) ……..

(c) 다음 조건에 따라 그 회원국의 영토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된 경우

(i) 물품의 생산 공정에서 최종 이행된 공정이 그 회원국의 영토에서 이행되고;

(ii) 다음에 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출이 그 물품이 완성된 상태의 공장 또는 제작비용의 절반 이상임:

A. 하나 또는 두 회원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재료;

B. 하나 또는 두 회원국의 영역에서 발생된 인건비 및 공장 간접비

C. 하나 또는 두 회원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내부 컨테이너

2. 본 조의 제1항 (c)(ii)항에 언급된 공장 또는 제작비용은 재료비(관세, 소비세 또는 기타 관세 제외), 인건비, 공장 간접비 및 내부 컨테이너 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한편 1988년 ANZCERTA의 일부규정에 관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 관세청장 간의 양해가 있었다. 협정 제3조의 주해 첨부와 관련한 공동이해에 대한 것으로 제3조는 혼재된 원산지재료의 대우에 대한 양국 세관의 관행변경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혼재된 원산지 재료와 관련하여 제3.1조 (c)(ii)는 다른 회원국에 수출하기 위한 최종제품에 포함된 수입 재료의 가격을 산청함에 있어 그 수입가격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규정한다.

-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국으로 수입할 때 그 수입형태에 있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었을 경우 완전한 역내가치로

-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국으로 수입할 때 그 수입형태에 있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을 경우 완전한 역외가치로

그리고 Rubis 판례에 따르면 ANZCERTA는 1977년 4월 교토협약에서 채택된 "실질적 변형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협정 당사국이 원하면 이를 채택할 수 있었다. 또한 Chow Hing Ching v The King [1948] 판례에서도 "모든 경우에 전쟁상태를 종료시키지 않는 조약은 왕권의 대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법적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왕권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없

다” 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법원 결정의 목적상 교토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1988년 9월 7일자 호주정부 관보에 발표된 1988년 8월 18일자 공고 No.88/11에 의해, 세관 검사관의 대표자가 1901 관세법 제151조 (13)(b)에 따라서 뉴질랜드에 관해 그 조항의 목적상 인건비 및 재료비를 결정하는 방법은 공고의 별첨에 정한 방법이라고 지정하였다.[148]1988년 11월 30일자 호주정부 관보에 발표된 1988년 11월 18일자 공고 No. 88/14(그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에 따라 공고 No. 88/11은 취소되었고 인건비 및 재료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설명서가 만들어 졌다. 88/14 공고의 별첨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및 재료비는 다음의 합계로써 결정된다:
> (a) (i) 뉴질랜드 또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 완전히 제조 또는 생산된 재료로서 그 재료와 관련해 물품의 생산 국가에서 지불하거나 지불할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그 재료의 비용; 또는
> (ii)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최종 제품에 포함시키기 위해 호주에서 부분적으로 생산하여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재료의 경우—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그 재료의 비용은 다음의 비용으로 될 것이다:
> A. 최종 제품에 포함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수입할 때 그 수입형태에 있어서 원산지 규칙에 따라 자격이 있었을 경우 완전히 자격지역 내용물
> B. 뉴질랜드로 수입하여 최종 제품에 포함시킬 때 그 수입형태에 있어서 원산지 규칙에 따라 자격이 없었을 경우 완전히 자격지역 외 내용물
> (iii) 뉴질랜드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된 재료의 경우, 가격은 뉴질랜드 또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발생된 그 재료의 생산비의 부분이다. 단 그 재료와 관련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지불하거나 지불할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148) 인건비 및 재료비는 다음의 합계로써 결정된다:
(a) (i) 뉴질랜드 또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 완전히 제조 또는 생산된 재료로서 그 재료와 관련해 물품의 생산 국가에서 지불하거나 지불할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그 재료의 비용; 또는
(ii)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최종 제품에 포함시키기 위해 호주에서 부분적으로 생산하여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재료의 경우—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그 재료의 비용은 다음의 비용으로 될 것이다:
A. 최종 제품에 포함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수입할 때 그 수입형태에 있어서 원산지 규칙에 따라 자격이 있었을 경우 완전히 자격지역 내용물
B. 뉴질랜드로 수입하여 최종 제품에 포함시킬 때 그 수입형태에 있어서 원산지 규칙에 따라 자격이 없었을 경우 완전히 자격지역 외 내용물
(iii) 뉴질랜드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된 재료의 경우, 가격은 뉴질랜드 또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발생된 그 재료의 생산비의 부분이다. 단, 그 재료와 관련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지불하거나 지불할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b) 제조임금;
(c) 공장 간접비; 및
(d) 뉴질랜드 또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및 호주의 생산의 내부 컨테이너 비용

(b) 제조임금;
(c) 공장 간접비; 및
(d) 뉴질랜드 또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및 호주의 생산의 내부 컨테이너 비용

본 공고의 목적상, "재료"는 호주로부터 수출되어 이후 호주에 수입되었을 경우 그 수입시점에 1987 관세법의 목적상 종전 수출 시 그것이 가진 것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물품을 의미한다.

신청인은 두 공고 Nos. 88/11 및 88/14의 효력에 대해 두 공고가 관세법 제151조 (13)(b)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벗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위 조항은 검사관이 그 조항의 목적상 "인건비, 재료비 또는 노무 및 재료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한다.

공고 No.88/11이 관련되는 한, 뉴질랜드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는 재료의 경우 노무 및 재료의 비용은 위 별첨의 (a)(iii), (b), (c) 및 (d)의 네 항목의 합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본 법원 견해로는 이 점에서 노무 및 재료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의 구체적 설명이 관세법 제151조 (3)(b)이내로 정확하게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공고 No.88/11는 그에 따라 부여된,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유효한 행사였다고 본다.

그러나 공고 No. 88/14의 경우 상이한 고려를 하였다. 공고 No.88/14의 공식이 공고 No88/14에서 반복되는 한, 우리 견해로는 관세법 제151조(13)(b)에 의해 검사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단, 공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된 항으로 끝을 맺는다.

" 본 공고의 목적상, "재료"는 호주로부터 수출되어 이후 호주에 수입되었을 경우 그 수입시점에 1987 관세법의 목적상 종전 수출 시 그것이 가진 것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물품을 의미한다"

관세법 제151(13)(b)항과 관련하여 검사관이 특히 노무 및 재료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검사관이 그 산정으로부터 특정 범주의 재료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만약 제151조 (13)(b)가 그 제외를 허용하도록 충분히 폭넓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비록 제151(7)에 그것들을 감안한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호주 또는 뉴질랜드 재료의 예외가 허용되었을 것이다.

우리 견해로는,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을 s151(13)(b)에 해당시켜야 한다는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본다. 공고 No. 88/14의 마지막 항은 특정 재료의 가격을 제외시킨 점에서 노무 및 재료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의 특정을 벗어났으며 따라서 무효이다. 검사관은 관세법 제151조(7)(b)에 따라 뉴질랜드 이외에서 발생된 생산비를 감안한 공장 또는 제작비에 대한 특정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01 법률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01)의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률이 모든 기관에 문서(규칙, 규정 또는 내규를 포함)를 작성, 부여 또는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a) 상반된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작성, 부여 또는 발행된 문서에서 사용된 표현은 권한을 부여한 법률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본 법률은 그 작성, 부여 또는 발행된 증서가 법률인 것과 같이 그리고 그 각 규칙, 규정 또는 내규가 법률의 조항인 것과 같이 그 증서에 적용된다; 그리고

(b) 그 문서가 본 조항을 제외하고 그 기관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 경우 그럼에도 그 증서가 그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증서라는 취지에서 그 작성, 부여 또는 발행된 증서는 작성, 부여 또는 발행의 근거인 법률에 따라 그리고 그 기관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석한다.

위의 (b)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고 No. 88/14의 마지막 조항의 무효는 그 공고에 정한 결정의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그 결정의 나머지는 공고 No.88/11에 정한 결정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신청에 해당하는 금 장신구의 화물 중에서 본 신청에 해당하는 것이 1988년 10월 12일(공고No. 88/11이 효력이 있는 동안)에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었고 나머지는 1988년 11월 18일 (공고 No. 88/14의 효력일 발생된 때)후에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되었다. 공고 No. 88/14와 관련해 우리가 취한 관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모든 신청이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물품의 공장 또는 제작비의 50% 이상이 뉴질랜드의 노무 및 재료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품은 관세법 제151조에 따른 특혜 관세율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토에 따른 결정은 유보하고 그 대신 수입

된 장신구가 뉴질랜드 특혜관세율에 따라 즉, 면세로 들어올 자격이 있었다고 결정한다. 신청인은 따라서 반대하여 지불한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동 사건은 뉴질랜드산 금을 역외국으로 보내 추가적 공정을 하고 이를 다시 뉴질랜드로 수입하여 최종품을 만들어 호주로 수출한 물품을 여러차례 수입하여 특혜관세 신청하는 동안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특혜관세 대우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이다.

특히 역내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내산 재료를 역외로 반출하였다가 역내에서 최종품을 완성한 후 수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핵심내용인 재료비산정 내역과 관련한 관보가 변경되면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여러 수입건 중에서 관보의 변경으로 재료비 산정내역이 관보변경 이전 수입건과 이후 수입건이 달라졌는데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료비 산정을 인용해 주었다. 기본적으로 역내산재료인 뉴질랜드산 금이 역외에서 일부공정을 했다고 해서 뉴질샌드산 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교토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협정 당시에 협정문에 교토협정을 고려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교토협약은 조약으로서 자유무역협정에 그 채택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석의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호주국내법상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해당조약에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고 그러한 내용이 조약에 없는 경우 조약의 해석에 관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관세청도 조약의 해석, 즉 자유무역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협정상에 채택되어 있는 해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기타의 협약들을 인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유럽권

(1) 독일

□ 사례 개요

【원고】 Gaylor Jewellery Sales Pty Limited

【피고】 독일 관세청

【쟁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생산품의 EC-Israel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 허용 여부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독일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판결일자】 2013년 3월 19일

□ 사실관계

○ EC-이스라엘 협정 / EC-팔레스타인 협정 가이드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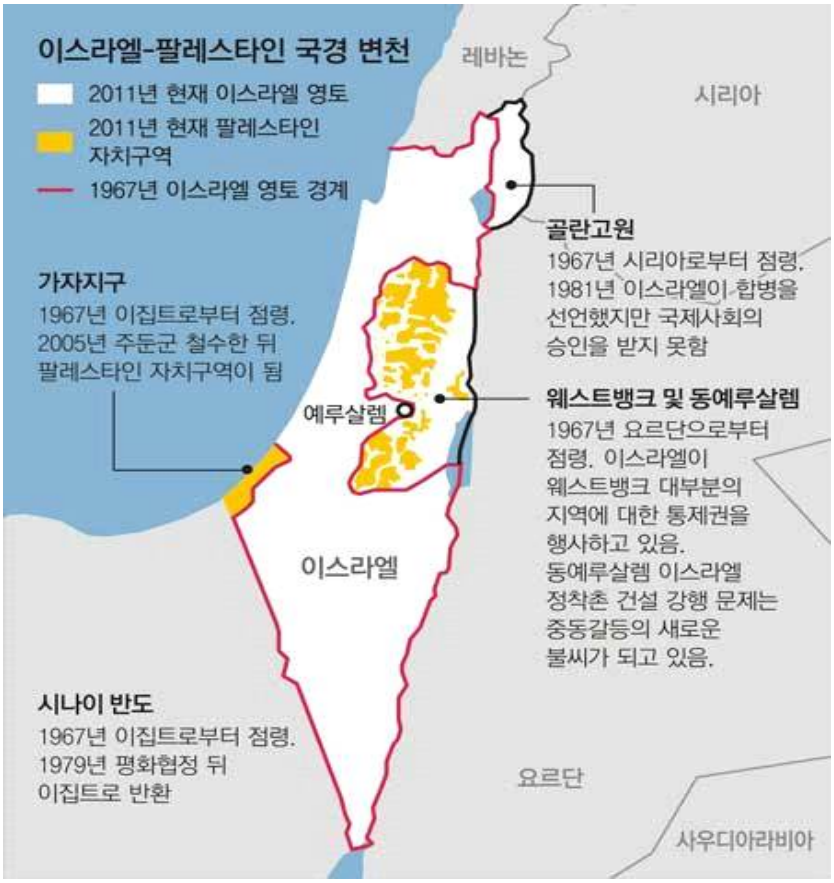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수입시 증명서에 원산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되어 있다할지라도 EC-이스라엘 제휴 협정 혹은 EC-팔레스타인간 제휴 협정에 따른 우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의 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하나로는 이스라엘 원산지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서안지구의 제품이 팔레스타인을 원산지로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우대 조치나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유럽 공동체가 이미 공보를 통해 서안지구가 원산지인 이스라엘의 수입품의 경우 관세 우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안지구의 제품이 법적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원산지 제품인가 하는 문제는 제휴 협정의 법적 해석에 달려 있다.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수입국 당국의 사후검증 요청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현황]



자료: 동아일보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2년 '이스라엘'원산지 상표가 붙은 제품을 자유 유통 품목에 등록하고 지중해 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UfM)- EC와 EC회원국과의 협정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EC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기도 함-에 따른 관세 우대를 신청하였다.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우대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자는 제품의 원산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이스라엘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수출업자와 배달업자의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자 중앙관세국측은 일시적으로 관세우대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관세 당국에 사후 검증을 요청했는데 그 대답은 해당 제품이 이스라엘 세관의 통제를 받는 지역에서 온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그러므로 이 제품들은 EC-이스라엘간의 제휴 협정에 따른 관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에 속한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이 제품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Gaza)지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동 예루살렘에서 온 것인지를 묻는 독일 세관당국의 질의 사항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관세국에서는 우대 조치를 거부하고 2003-09-25의 공식 통보를 통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 쟁점사항

본 사안은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EU-이스라엘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이 거부하자 항소한 것이다.

□ 당사자주장

이후에 이어진 소송에서 재정법원은 유럽 사법 재판소에 EC-이스라엘간의 제휴 협정의 해석에 관련한 질문이외에도 EC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간의 무역과 상호협력에 대한 조약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유럽 지중해간 잠정 제휴 협정(Europa-Mittelmeer-Interimsassoziationsabkommens) 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졌다. EC-팔레스타인 제휴 협정…(ABlEG 1997, Nr. L 187/3) 의 선결적 판결[149]은 다음과 같다.

“1. 수입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서안지구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우대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브뤼셀에서 1995-11-20에 체결된 EC와 지중해 회원국간의 협정인 동시에 EC 회원국과 이스라엘과의 협정이기도 한 유럽-지중해 조약(Europa-Mittelmeer-Abkommen)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수입회원국의 세관당국은 어떤 협정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149) (2008-07-30일자의 재정 법원 판결 4 K 133/06, 비공표), 2010-02-25일자의 판결로 유럽 사법재판소가 답변함 2010 C-386/08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EC와 지중해 회원국과의 협정을 위해 만들어짐과 동시에 EC 회원국과 이스라엘과의 협정이기도 한 유럽-지중해 조약을 우선시해야 할지 아니면 1997-02-24자에 브뤼셀에서 체결된, EC와 팔레스타인간 해방기구(PLO)의 무역 협정인 동시에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권한을 우선시하는 유럽지중해간 잠정제휴 협정 을 우선시할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유럽-지중해 조약의 부록 협정서 No4의 제 32에 따른 절차에서-수출국의 세관 당국에서 제출한 제품의 원산지 증명 자료가 협정서의 제 32조 6항에 따른 원산지를 밝히기에 충분한 자료를 담고 있지 않을 경우 수출국 세관 당국의 답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협정서 제 39조에 따른 관세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해 협정 적용 지역에 대한 논쟁 사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재정 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 2010, I-1289, ZfZ 2010, 104의 유럽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제품의 원산지가 서안지구일 경우 EC-이스라엘 간의 제휴 협정에 따른 우대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청구자가 자신의 법적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인용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지구(PLO) 간의 쌍방 협정은 이러한 결론을 바꾸지 못하였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지닙과 동시에 명확하다. 게다가 이스라엘 세관 당국이 제품의 생산 원산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것 만으로도 우대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다. 또한 예외적 상황에 의한 우대적 조치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공보에서 지적한대로 이스라엘 원산지에 대한 증명서의 정확성도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EC-팔레스타인 제휴 협정에 따른 서안지구에서 온 제품의 우대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원산지 증명도 없었다.

항소에서 항소인은 재정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1994년과 1995년에 체결된 이스라엘과 PLO사이의 가자 제리코 협정(Gaza-Jericho-agreement)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잠정협정(Israel-Palestineinterims treaty)을 무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재판소가 또한 쌍방간의 조약을 판결에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PLO는 이 조약에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내에 있는 서안지구의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스라엘 세관 당국이 통관업무를 맡는 것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조약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해당지역에는 이스

라엘세관 당국만이 유일한 세관당국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기업과 수출업자들만이 해당 제품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C-이스라엘간의 제휴 협정에 따르면 유럽재판소에 의한 국제법의 원칙을 고려하여 조약의 상대적 효력를 허용하는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통치권을 가진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효력있는 증명서를 발부한다. 쌍방의 조약에 따른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바탕으로 서안지구의 소위 C구역에서 이스라엘이 이지역을 원산지로 한 제품에 '이스라엘'원산지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로서 우대 조치를 위한 선제조건이 충족되며 독일 세관 당국이 이스라엘 세관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하나로 우대조치가 거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년간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서도 이스라엘 원산지라고 인정해왔던 관례를 보면 국제 관습법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이러한 원산지 증명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국제 관습법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재판에 대한 요청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아왔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이 팔레스타인지역을 원산지로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가능성이 어디에도 없다. 또한 원산지에 대해서는 청구자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중앙 세관국은 선결적 판결이 정당하므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및 시사점

○ 서안지구 생산품의 이스라엘산 인정여부

EC-이스라엘간의 제휴 협정의 부록 협정서 No4의 '제품의 원산지' 혹은 '원산지 제품'의 용어와 행정 협조의 방식에 대해 규정한 제 17장 1항에 따라, 협정서에서는 이동 증명서 EUR.1 를 제출하거나 수출업자가 계산서에 협정서 NO4 의 제 22장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시에 원산지 제품에 대해 수입시 계약 당사자에게 협약에 따른 우대 조치를 베풀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분쟁 사건의 경우 청구자는 수입제품에 대해 배달업자와 수출업자의 계산서에 우대 조치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적용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중앙관세국의 특혜관세대부

배제는 적법하다.

제품이 계약 당사자의 나라에서 온 원산지로 보이고 협정서의 다른 조건도 충족되었을 경우 협정서 No4의 제 22조 2항에 따라 수출업자는 계산서에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분쟁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설명이 곁들여진 수출제품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한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계산서에 덧붙여진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협정서 No4의 제 4조의 관점에 따른 협정서 No4의 제 2조 2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제품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생산되거나 수확되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협정서 NO4의 제 5조의 관점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가공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 제품에 대한 조건은 협정서 NO4의 제 11조 1항의 관점에 따라 장애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분쟁 제품은 재정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서안지구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가 2010, I-1289, ZfZ 2010, 104,의 판결을 통해 결정한 대로 EC-이스라엘간 제휴 협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데 즉 협정의 제83조에 따른 이스라엘 영토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Rz 53 판결) 서안지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협정서 NO4에 따라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제품의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

항소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PLO사이의 쌍방 협정에도 다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의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이스라엘의 세관당국이 유일하다는 항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PLO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건의 우대 조치의 효력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은 오직 EC-이스라엘간의 제휴 협정과 EC-PLO의 제휴 협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에 근거하여 위에 언급된 협정이 아닌 다른 종류의 조약이나 협정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판결 Rz 57)

만약 이스라엘과 PLO 사이의 쌍방측 협정을 고려하여 수입제품에 대해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EC-이스라엘 사이의 체휴 협정을 해석한다면 유럽사

법재판부가 2010, I-1289, ZfZ 2010, 104의 판결을 통해 천명한 협정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EU는 다른 당사자국간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부된 증명서를 EC-이스라엘 제휴협정과 EC-PLO 제휴협정이 허용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세관 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소자의 반대 의견을 따르자면 PLO가 가진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발부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이스라엘 세관 당국에 넘겨주는 것을 허용하는 EC-PLO 간 제휴 협정내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C-PLO 제휴 협정의 부록 협정서 NO3 의 제 16장 4항에 따른 '원산지 제품'이나 '오리지널 제품'이란 용어의 판정이나 행정협력 방식등의 결정권 (협정서 Nr.3)에 대해서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세관당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는 2010, I-1289, ZfZ 2010, 104 (Rz 51),의 판결을 통해 수출국의 세관 당국은 원산지 협정의 관점에서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업자의 권한 그리고 제휴 협정에 포함된 영역 내에 속한 지역 제품에 한해 원산지에 대한 설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청구자의 우대 조치신청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PLO가 EC-PLO 제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 세관 당국이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를 원산지로 한 제품을 '이스라엘'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양도하고 동시에 이 지역을 이스라엘로 넘겨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만약 변호인단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이스라엘과 PLO간의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당국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세관을 세우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자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항소자는 서안지구의 소위 C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컬렉션 2010, I-1289, Rz 126 ff.). 항소자가 주장한대로 이스라엘-PLO 협정에 따라서 오직 이스라엘 세관 당국만이 합법적인 세관 업무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치자. 그러나 EC-이스라엘 제휴협정에도 EC-PLO 제휴협정에도 서안 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스라엘'원

산지 제품으로 판정 되어 그에 따른 설명서를 계산서에 발부할 수 있다는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분쟁 사건의 수출업체가 이스라엘 기업이라는 항소자의 주장에도 변함이 없다. 제품의 원산지는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제품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이유와 2009-10-29 (컬렉션 2010, I-1289, Rz 38 ff.) 자의 최종 요청을 통한 일반 변호단의 설명으로 인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PLO 간 쌍방 협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항소자의 추측은 성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의 쌍방협정은 가자지구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발부에 있어서 이스라엘 당국의 합법적 권한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재정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원들은 선결적 판결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가 EC-이스라엘 제휴 협정과 EC-PLO 제휴협정을 다시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 서안지구 생산품에 대한 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의 국제관습법상 지위

항소자의 의견과는 달리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스라엘 원산지라는 증명서가 국제 관습법에 따라서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Wiener Übereinkommen über das Recht der Verträge)에 명시된 국제 관습법은 유럽연합의 구성 국가에 구속력을 지니며 유럽연합 법규정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국제협정에 대한 해석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EC-이스라엘제휴 협정의 제 83조에 따른 영역의 법적 권한에 대한 분쟁의 경우 항소자의 견해에 동의하려면 이스라엘에 점령된 지역이란 곧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라는 일반적 관습과 서로 합의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법상 원칙에는 그러한 부분이 어디에도 없으며 항소자도 그러한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항소자는 이스라엘에서 온 제품은 오래전부터 비록 점령지구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유럽연합의 세관영역에서 '이스라엘'원산지의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점령지구가 이스라엘 영토의 부분이라는 해석을 국제 관습법으로부터 이끌어낼 수는 없다. 또한 점령지구를 원산지로 둔 제품에 대해 관세 우대를 언급한 1997년의 EC-PLO 제휴 협정이 발

효한 후로 EU에서 그와 같은 법해석에 기반을 두고 실행을 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서안지구를 원산지로 한 제품에 대한 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항소자의 견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국제 관습법 규정을 내세운 컬렉션 2010, I-1289, ZfZ 2010, 104, Rz 40 ff.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판결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만큼 유럽사법재판소가 선결적 판결을 통해 국제 관습법을 무시했다는 항소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과거에는 서안지구에서 온 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가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항소자의 주장으로부터 분쟁 지역에서 온 제품에 대해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된 수입품에 대해서도 공보(ABlEG 2001, Nr. C 328/6) 에는 이미 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가 붙은 제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 220 조 2장 b 5 ZK).

○ 상대국 세관 사후검증결과의 구속력

비록 이스라엘세관당국이 사후검증신청에 대해 위의 제품이 EC-이스라엘 제휴 협정에 의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중앙관세국은 계산서에 적힌 수출업자의 이러한 설명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우대 조치를 거부하였다. 유럽사법재판부가 거듭해서 판결한 것처럼 우대조치에는 관계국끼리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정적 협조는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작업 분담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수출국의 임무인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출국의 제품이 수출국을 원산지로 삼는다는 협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서안지구의 특정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EC-이스라엘 협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원산지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질문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원산지 신청 지역에 관한 제휴 협정의 해석 문제이다. 이러한 법적 질문은 협정서 NO 4의 32조에 따른 수출당국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답변될 수 없으며 협정서 NO 4의 33조에 1항에 따른 통관문제에 대한 협조의 문제도 아니다. EC-이스라엘 제휴 협정 제 75조 1항에 의하면 법적 질문을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이러한 법적 질

문에 스스로 대답해서 우대조치를 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 제품이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음) 협정서 No 4 의 32조 6항에 따라 이스라엘 세관 당국이 생산 지역의 이름을 누락시킨 것은 중앙관세국이 우대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품이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것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규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EC-PLO협정과 EC-이스라엘협정의 관계**

EC-PLO의 쌍방 협정서 NO3에 따르면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경우 이를 유럽 연합국가에 수입할 시에 EC-이스라엘과 같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컬렉션 2010, I-1289, ZfZ 2010, 104 에서 우대조치에 대해 판결한 것처럼 어떤 협정을 우선시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 EC-PLO간의 제휴 협정에 따른 논쟁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해서는 -재정 법원이 올바르게 결정한것 처럼- 원산지 증명에 대한 협정서 No3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예외적 상황'에 의해 청구자의 수입품에 대한 우대 조치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EC-이스라엘 제휴 협정서 NO 4 제 32조 6항에 따른 청구자의 청구는 청구자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규정의 마지막 조항인 '…불가항력이나 예외적 상황에 의한 것일때만' 이라는 표현은 수입국 세관당국의 법적 결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수출국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사후 검증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수입국 세관 당국은 우대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우대 조치에 대한 유럽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수출국의 세관 당국이 원산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지 못할 경우 우대 조치를 신청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이 아닌 다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원산지가 이러한 방법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될 수 있다면 수입업자는 공식적인 원산지 증명의 부재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임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의 불가항력을 이유로 (우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자는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수입업자가 처음부터 자신있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이후에 효력이 없음이 판명되어 객관적으로 나중에 다른 올바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쟁 사건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청구자가 원산지 증명을 확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2001년에 이미 공보를 통해 청구자를 비롯한 수입업자들에게 서안지구가 원산지인 제품의 경우 이스라엘 제품 우대조치 규정(1967년부터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지역의 제품에 한함)에 어긋나는 지역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경고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안지역의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모든 무역업자들은 따라서 합법적 면세 무역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주의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품 운송 과정에서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제품을 유럽연합지역으로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들에 대한 공시, 2001/C 328/04, ABlEG 2001, Nr. C 328/6).

그러므로 청구자가 우대 조치를 받기 위해 효력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임무인 우대 조치에 따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공보에 설명한대로 수출업자가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팔레스타인 당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을 받지 못했다는 청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대 조치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제220조 2항 b.5 ZK의 규정에 모순되는 것이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02년 서안지구 생산품에 대하여 ‘이스라엘’원산지 상표를 부착하여 EU-이스라엘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하였으나 관세청은 이를 거절하였다.

독일관세청은 이스라엘 관세당국에 사후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상대국 세관의 답변은 해당제품이 이스라엘 세관의 통제를 받는 지역에서 수출된 것으로 원산지상품이라도 답변하였다. 그러나 서안지구에서 수출된 것인지 동 예루살렘에서 수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 독일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특혜대우 거절 결정을 하였다.

동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수출국의 제품이 수출국을 원산지로 삼는다는 협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안지구의 특정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EC-이스라엘 협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원산지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 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산지 신청지역에 관한 제휴협정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쟁점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답변될 수 없는 사항이며, 통관문제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결국 이러한 쟁점은 사법적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수입국세관당국이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고 법원은 보았다. 나아가 원산지 신청지역의 제휴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전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확인해 보면 EC-이스라엘 협정상 이스라엘 영토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서안지구는 이스라엘 역내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항소자는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세관당국이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세관당국만 존재하여 이스라엘 원산지증명서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항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의 주된 근거는 2001년부터 관세청 공보를 통하여 수입업자들에게 서안지구가 원산지인 제품의 경우 이스라엘 제품 우대조치 규정에 어긋나는 지역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경고를 내린적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스라엘 제품을 유럽연합지역으로 수입하려는 수입자들에대한 공시를 통해 서안지역 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무역업자들에게 운송상 통관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적 관세특혜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오히려 수입자인 항소인이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항소인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적 예외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동사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맺은 FTA에서 특수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대우와 관련한 분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안지구와 비록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성공단 역시 국내외 법상 법적 지위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자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서안지구 분쟁은 충분한 참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네덜란드

□ 사례 개요

【원고】 유한책임회사 X B.V.,
【피고】 네덜란드 관세청장
【쟁점】 불가리아 당국의 EUR-1인증서 유효성 및 특혜관세 적용여부
【결정사항】 인용
【판결법원】 Haarlem 지방법원
【판결일자】 2007년 10월 17일

□ 사실관계

2004년 12월 20일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관세 €19.101,91의 지급통지(UTB)를 발행하였다. 항소인은 서면으로 2005년 2월4일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항소인은 이를 2005년 2월 8일에 수령하였다.

피항소인은 2005년 2월 10일 이의제기서를 확인하고 인정 가능하다고(admissible) 선언하였다. 피항소인은 2005년 12월 15일자 이의판결을 통해 항소인의 이의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항소인은 2006년 1월 23일 서면으로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2006년 1월 25일에 항소장을 수령하였다. 피항소인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항변서(statement of defence)를 접수하였다.

Haarlem에서 2007년 9월 14일에 심리가 열렸다. 항소인을 대리하여 권한을 승인받은 A씨가 출석하였다. 피항소인은 B씨와 C씨가 대리하였다. 심리에서, 피항소인은 법원과 항소인에게 진술서(notes of submission)와 첨부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사건절차서류목록에 상기의 진술서를 추가하였다. 심리에서 다뤄진 사안들은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으며, 본 사건 판결에 첨부문서로 첨부되었다.

항소인은 수입신청서를 2003년 9월 3일에 접수하였으며, 수입신청서에서 0%의 관세 혜택으로 불가리아로부터 다양한 의류를 신고하였다.

피항소인은 수입 후 검증을 실행하였다. 검증은 상기의 관세 신고에서 제출된 원산지 인증서 (EUR-1)의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검증으로 인하여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항소인이 신고한 상기의 품목에 대한 관세 금액의 12.2 퍼센트인 €19.101,91의 지급통지(UTB)를 2004년 12월 20일에 발행하였으며, 항소인은 상기의 지급통지에 대해 항소하였다.

사건절차서류목록에 포함된 불가리아 공화국, 재무부, 중앙관세청장, 국가관세청의 2004년 9월 14일자 서신 사본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 관세당국은 EUR.1 인증서 [제1번]를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품은 관세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불가리아 관세당국은 EUR.1 인증서 [제2번]를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품은 관세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당사자주장

○ 이의제기의 인정여부

이의제기서에서, 항소인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기재하였다. 수령확인서에서,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제공한 지연사유가 인정된다고(admissible) 확인하였다. 이의 제기 판결에서, 피항소인은 착오를 근거로 이의제기가 재판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이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변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 CCC 제b편 제2절 제220조

항소인은 CCC 제b편 제2절 제220조를 근거로 들었으며, 인증서가 인증된 것으로 보이나 허위인 경우, 인증서에 직인을 찍은 불가리아 관세당국 또는 네덜란드 관세청이 CCC 제220조에 관한 오류를 범했을 것이라고 항소인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항소인은 관세당국이 유효한 관세 행위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CCC 제220조에 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CCC 제b편 제2절 제220조의 3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항소인은 이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품의 원산지**

항소인은 항소인으로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리아 당국이 상품 원산지 신고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인은 또한 원산지 증명서가 완벽하게 정규적인 형식에 따르고 있어 중대한 허위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항소인은 불가리아 당국이 EUR-1 인증서를 발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2004년 9월 14일 에 진술했음을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EUR-1 인증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일견 상, 양식, 직인 또는 서명을 근거로 EUR-1 인증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증서 발행 후 발행당국은 인증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인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항상 신고 수령 후 3년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 피항소인은 국제거래에 관계된 모든 자가 원산지 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적인 결과를 인식해야 하며, 항소인은 관세 신고인으로서 상기의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심리에서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음을 지적하였다.

○ **접근권**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불가리아 당국에 모든 서신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였다.

○ **관세 채무 통지**

심리 기간 동안,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사전에 관세 채무 통지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유럽재판소 Molenbergnatie NV[2006년도 2월 23일자

사건 (사건번호: C-201/04)]에 대한 판결(the arrest)을 인용하였다.

□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발행된 UTB(관세지급통지)에 대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이다. 기한 내 이의제기가 된 경우, 쟁점은 UTB(관세지급통지)를 적합하게 부과했는지 여부이다.

또한 본 사건의 쟁점은 구체적으로 수입한 상품의 원산지가 불가리아 인지이다. 항소인이 제품의 원산지가 불가리아 원산지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피항소인이 이후에 유럽공동체 공동체 관세 법률 (CCC) 제b편 제2절 제220조를 준수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는지 여부이다.

□ 판결 및 시사점

○ 이의 제기의 재판 대상

본 법원은 먼저 2004년 12월 20일 이후 항소인에게 지급통지가 발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또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일반세법 제22j조와 전문 그리고 제a편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기한은 2004년 12월 21일 이후 개시된다. 이의제기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는 6주의 기한을 고려했을 때, 일반행정법 제67조를 근거로 이의제기서가 기한 이후에 접수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항소인이 부주의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실관계 또는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서(the statement of admission)는 인정받을 수 없다(inadmissible).

CCC 제235조 제1단락과 제2단락에 따라, 수입세는 합법적으로 지불의무가 있지 않거나 CCC 제220조 제2단락에 반하여 부과된 경우 상환되어야 한다. CCC 제1편 제236조 제1단락에 따라, 채무자가 상기의 관세에 대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한 이내에 해당 요청이 접수된 경우 상기의 상환은 관세청에 이뤄져야 한다.

UTB(관세지급통지)이후 부과된 관세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서에서 -항소인의 의견에 따라- 관세 부과 이후 합법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된 관세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었거나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제기서가 CCC제236조에 규정된 상환청구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법원의 의견이다. 이의제기서가 명시적으로 이의제기가 논쟁의 대상인 UTB(관세지급통지)에 기재된 관세 금액에 대한 상환 또는 면제를 포함하는 지는 차이가 없다.

항소인에게 관세 지불의무를 통지한 UTB(관세지급통지) 일자가 2004년 12월 20일이고, 상환요청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소인의 서신을 피항소인이 상기의 통지 이후 3년의 기한 이내에 2005년 2월 8일 수령하였기 때문에, 상환청구가 기한 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항소인은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피항소인이 실질적으로 항소인이 제기한 이의제기의 근거를 다루었으므로, 본 법원은 CCC의 제236조 상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처리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항소인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법원은 어느 정도 절차 상의 경제적 고려로 인하여 피항소인을 다시 참조하는 것보다는 청구 그 자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심리에서, 양 당사자들은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수입관세 상환**

항소인은 Molenbergnatie NV 판결(arrest)을 인용했으며, 그리고 피항소인이 세금 징수 전에 관세를 부과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과세 절차에 대한 피항소인의 심리진술서를 인용한 법원은 UTB(관세지급통지)가 과세 이후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본 사건과 관련한 상기에서 인용한 판결(arrest)을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법원은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상품의 원산지**

수입신고 시, 항소인은 관세 혜택을 신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항소인은 2.1번 항목에서 언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인은 인증서가 CCC 제b편 제220조 제 2단락에 따라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불가리아 당국이 서류를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불가리아 당국은 상기의 서류를 제2.4번과 제2.6번

항목에 언급된 서신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상기의 서신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법원은 상기의 자료가 해당 기관에서 발행되지 않았다고 추정토록한다. 이에 대하여 본 법원은 1996년 5월 14일 판결(arrest)(관련사건C-153/94 및C-204/94 (Faroe Seafood Co. Ltd 등 16번 항목)을 포함한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일부 근거로 한다.

피항소인은 불가리아 당국이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상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자료이며, 이는 불가리아 당국의 오류라는 항소인의 주장은 수출관리소에 상품과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항소인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항소인은 수출관리소가 현장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항소인이 언급한 수출관리소의 의무가 -관련된 범위에서-입증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이러한 조치가 검토되지 않았다.

상기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본 법원은 상품의 원산지가 불가리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항소인은 관세혜택을 잘못 이용하였으며, 피항소인(관세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발행된 UTB(관세지급통지)에 대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수입한 상품의 원산지가 불가리아 인지여부 이다.

우선 이의제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피항소인인 관세청의 과세지금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항소인의 상환요청이 있었으므로 이는 기한내의 유효한 이의제기라고 법원은 보았다.

불가리아 세관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수출관리소가 현장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의무는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을 보건대 수출상대국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와 관련하여 수입

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수입자의 불가항력적 상유, 객관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의하여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본 사건 뿐만 아니라 앞선 일부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인정에 법원은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영국

(가) 사례 1

□ 사례 개요

【원고】ALFRED LAMB INTERNATIONAL LIMITED
【피고】HMRC
【쟁점】캐나다에서의 가공이 직접운송원칙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사항】각하
【판결법원】조세재판소 First Tier Tribunal (Tax Chamber)
【판결일자】2010년 1월 12일

□ 사실관계

항소인은 런던에 소재한 Alfred Lamb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수입자 Alfred Lamb社) 이다. Corby Distillers Ltd(이하 Corby社)는 캐나다 토론토 소재 유한회사이고 항소인은 Corby의 자회사이다. Corby社는 Pernod Richard Corporate그룹의 일부로 역시 Hiram Walker and Sons Limited의 자회사다. Corby社는 증류주의 생산자 및 공급자이며 Lamb's Rum을 판매 할 수 있는 판매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9월에 Corby社는 캐나다 이외에서 Lamb's Rum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2차 라이선스를 항소인에게 부여하였다. 2008년 9월 까지, 항소인은 다양한 카리브해 지역의 생산자들로부터 사전 혼합된 럼주를 영국으로 수입하였다. 사전 혼합된 럼주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증류되어 영국 및 세계시장에 판매되기 위하여 영국에서 숙성, 혼합 및 병입을 하기위해 영국으로 직접 선적되었다. 숙성, 혼합 및 병입은 스코틀랜드 Dumbarton의 시바스 브라더스 시설에서 수행되었다.

2008년 4월 3일에 항소인은 공급체인의 변경에 관해 피항소인에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원산지 정보("BOI")결정을 신청하였다.

항소인은 증류된 럼주는 그것의 원산지 국가들에서 숙성되어 EU시장에 대해 항소인을 대신해 Corby가 혼합 및 병입을 위해 캐나다로 선적한다고 제시하였다. 완성된 럼주는 캐나다로부터 영국으로 수입된다. 항소인은 숙성에 필요한 보관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하는 것에 근거해 수출국가의 세관당국에 EUR1인증서의 소급적용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2008년 4월 17일에 세관은 럼주가 직접운송 규칙을 충족하지 않음을 근거로 BOI결정에 대한 신청을 거절하였다. 세관은 직접운송 위반의 근거로 혼합 및 병입이 럼주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려고 하는 하역, 재선적 또는 작업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외적으로만 발행 될 수 있는, EUR1인증서의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008년 5월 28일에 항소인은 2008년 4월 17일자 세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8년 7월 17일에 세관은 BOI결정 거부결정을 재확인 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17일에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BOI결정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으며 다른 회사가 캐나다산 럼주의 영국 공급에 책임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항소인의 모회사인 캐나다 소재 Corby社가 카리브해 지역의 생산자들로부터 사전혼합된 럼주를 취득하였고 영국으로 완성품을 선적하기 이전에 캐나다에서 숙성, 혼합 및 병입후 영국으로 운송된다는 공급변경사항을 설명하였다.

이후 피항소인이 여전이 이전결정을 유지하자 2008년 9월 17일에 항소인은 재판소에 공식적인 항소를 제기하였다.

참고로 쟁점대상 물품 Lamb's Rum은 기아나, 바베이도스 및 트리니다드에서 증류된 혼합럼주이다. Lamb's Rum은 바베이도스 또는 트리니다드에서 생산된 기본 럼주와 세가지 기아나 럼주들과의 혼합한다. 기아나, 바베이도스 및 트리니다드는 의회규정 1528/2007에 정의된 ACP그룹 국가들의 일부이다. 카리브해 지역 럼주에 추가하여 소량의 (1%) 캐나다 증류 럼주와 함께 캐러멜 착색제와 탈염수가 추가된다.

□ 당사자주장

○ 원산지판단 사전심사(BOI) 신청 및 결정관련

공급체인 보고서를 2008년 4월 3일자 신청에 동봉하였다. 항소인 또는 Corby의 자문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보고서는 Alfred Lamb이 럼주가 EU로의 수입에 대한 특혜 원산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공급체인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목표는 예정 공급체인에 의해 럼주의 자격을 확인하는 BOI결정을 받는 것이었다고 언급되었다. 네 가지 관련 럼주들의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자메이카 및 기아나) 혼합은 숙련된 또는 복합적인 절차가 아닌,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캐러멜의 추가는 4.2항의 15%규정 내에 해당되며; 혼합 전, 후의 완성된 럼주의 상품코드는 2208이었다고 언급되었다. 보고서에서 직접운송규칙을 적용하였고 이동인증서 EUR1 또는 동등한 것이 필요한 것이 인정되었다. 보고서는 MAR규칙의 부록II의 21조에 포함된 10개월 규정은 럼주 생산에 관한 카리브해 지역의 시장조건이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생략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또한 문서로써 물품을 증류주의 원래 수입까지 추적할 있고 캐나다 기관이 절차에 만족하였고 비 조작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문서10/179는 2008년 12월 5일자에 몬트리올 지역의 캐나다 국세청의 소비세 공무원이 서명한, Age 그리고/또는 원산지의 증명서다. 이것은 Lamb의 해군 럼주 2,200상자와 관련이 있고 그것들이 캐나다 소비세 관리에 따라 병입 되었으며 캐나다로부터 선적되었다고 서술한다. 증명서는 또한 “제품이 카리브해 지역이 원산지이며 캐나다 식약법 및 규정의 요건에 따라 생산되었다. 그에 포함된 정보는 캐나다 정부 공무원의 감시에 따른다”고 서술한다.

문서 10/139는 시장접근 규정의 부록II의 14.1(b)호에 정한 신고서의 예시다. 이것은 이동인증서EUR.1와 동일한 목적에 쓰일 수 있다.

합의된 사실의 진술서(2008년 6월 18일 서신)의 9항에 언급된 결정의 근거는 (i) 물품이 혼합 및 병입의 작업을 위해 캐나다 창고로 선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직접운송 규칙을 준수한 것으

로서 인정될 수 없다 (ii)신청인이 ACP국가의 개별적인 제3자 생산의 최종 과정 수행능력에 대한 우려를 하였고, 이는 Alfred Lamb社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위험이 생기며, 이는 EUR1의 소급 발행에 대한 특별한 상황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08년 10월 9일자 HMRC서신(합의된 사실의 진술서, 15항)에 포함된 결정의 근거는, 신청을 거절한 2008년 6월 18일자 결정(상기 합의된 진술서의 9항 참조)은 가공을 위해 물품이 캐나다로 발송되었을 때 Alfred Lamb International Limited가 물품의 소유자라는 결과로서가 아니며, 2008년 7월 24일자 서신에 기술된 공급체인의 변경(합의된 사실의 진술서의 12항 참조)이 신청을 거절한 이유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원래 결정은 HMRC서신에 따라 뒤집혀 질 수 없다.

항소인 주장의 요점은, (i) 유럽 법령(Srl CILFIT and Lanifico Di Garado v Ministry of Health 1982 ECR 3415 18-20항; Agrover Srl v Agenzia Dogane Circoscrizione di Genova 18/10/07, Case 173/06 17항)에 대해 목적이 분명한 해석을 하고 (ii) 특혜원산지 규정의 목적이 매우 광범위하며, ACP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iii)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럼주에 대해 캐나다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은 하역 및 재 적재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제품의 원산지는 ACP국가들로 유지되며; MAR의 4.1항의 규정은 충족되지 않았고, 따라서 럼주의 혼합 병입 및 라벨부착으로 인해 럼주에 비특혜 캐나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으며 (v) 캐나다 럼주의 추가, 캐나다 법률의 요건은 럼주에 대해 비특혜 원산지를 부과하지 않는다 (vi) MAR의 12조는 규정의 목적,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ACP국가들과 EU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MAR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한다 (vii) HMRC의 분석은 비례의 원칙(Militzer and Munch GmbH C-230/06; 47항, Swedish Match 2004 ECR 1-11839 47항, Laserdisken 2006 ECR I-8089 53항)을 침해한다; (viii) 대체적으로, 작업은 특혜신청 자격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58(1)항의 규정, 세관창고 절차에 관한 공동체 관세규정의 98-113 및 실행규정 2454/93의 표제III, 524-535 조들 그리고 특히 531조 및 취급의 통상 서식을 열거한 부록72에 때문에 발생한다;

이 건에서는 물품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았다.

EUR1 이동인증서와 관련해, 주장은 12개월 숙성기간으로 인해 제품이 달성할 목적(무역 및 경제 개발의 촉진을 통한 ACP국가들의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촉진) 그리고 비례의 원칙 및 효과성을 참조하여 해석한 부록의 16조 및 21조의 의미에 드는 예외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 및 숙성은 이동 인증서 EUR.1의 소급발행이 요구되는 16조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HMRC를 대신한, Andrew Scott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i) 쟁점은 수입된 제품이 시장접근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혜관세의 이득을 보는지 이며; 따라서 12조의 해석이 핵심 사안이다 (ii) 쟁점은 캐나다에서 수행한 것이 CCC의 24조의 작용에 의해 비특혜 자격을 부여하는데 충분했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iii) 특혜 원산지 규정은 공동체가 ACP국가들과 체결한 협약- 여기서는 시장접근 규정(CCC 27(a)및 20.3(d))에 포함된 특혜관세 조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행규정의 531조 및 부록 72는 관련이 없다 (iv) 12조 는 규칙 및 예외를 포함한다; 예외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 (v) 하나의 단일 화물 문구는 효력을 가져야 한다; 경우가 발생해야 하는데…는 경우가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 것을 시사한다. (vi) 12조는 공동체 규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회피방지 규정의 성질인 것 이다 (vii) 항소인이 숙성 혼합, 병입 및 라벨부착의 과정을 수행하는 한 12조의 요건은 절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과정이 수행되고 난 후 다른 제품으로 된다; 물품의 성질이 다르 게 된다. 부록II의 4조 및 5조는 ACP국가에서 물품에 대해 행해진 것과 관련이 있고 캐나다 에서 행해진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동 인증서 EUR.1에 관해서 Mr. Scott은 HMRC가 지연된 이동 인증서를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하였으나,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진술했다; 소급적인 인증서의 발행은 수출국가에 대한 것이었다(시장접근 규정 부록II 15.7항) 16조는 일회성 사건을 다루었다.

□ 판결 및 시사점

○ 럼주의 생산과정 검토

럼주는 증류용 발효 설탕 및 물로 만든다. 과정은 당의 생산을 위해 기른 사탕수수에서 시작한다. 사탕수수는 수확되어 즙을 추출하기 위해 자르고, 분

쇄되는 공장으로 운송된다. 사탕수수 주스는 끓여서 시럽으로 된다. 당 결정이 자라고 원심분리기로 제거된다. 모든 설탕이 결정화되고 추출될 때까지 과정이 반복된다. 잔류물은 당밀로 알려진 걸쭉하고 끈끈한 점성액이다. 이것이 럼 증류액의 기반을 형성한다. 럼 증류주 공장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당밀을 구매한다. 그것은 약46% 발효성 당을 포함한다. 이스트가 추가된다. 이스트는 당을 소모하여 알코올, 이산화탄소 및 열로 만든다. 사용된 이스트의 종류가 짧게는 22-26시간 또는 길게는 12일의 발효과정의 길이 및 성질에 영향을 미치듯이 풍미에 영향을 미친다. 발효과정이 끝나면 알코올을 추출하기 위해 wash가 증류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솥이 럼주의 풍미에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럼주 생산의 첫 기록은 Kill Devil로 알려진 발효액이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었을 때인, 서인도제도에서 1647년부터 시작된다. 1650년에 Rumbullion으로 알려진 증류제품이 바베이도스에서 생산되었다. 이것은 럼주로 알려지게 되었다. 1660년대부터 유럽과 서인도제도 간에 무역루트가 열리고 난 후 럼주는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665년에 영국해군은 해외의 모든 선박들에 라임으로 달게 만든 럼주의 지급을 개시하였다. 해군에 대한 럼주 배급은 1970년까지 중단되지 않았다.

Alfred Lamb은 22살에 와인 및 증류주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런던에서 1849년 Lamb's Rum을 설립하였고, 템즈 강변의 서늘한 지하저장고에서 카리브해 지역 럼주를 숙성, 혼합시켜서 독특한 혼합을 병에 넣었다. Lamb의 해군럼주는 그 이후 대영제국 전반적으로 럼주 배급에 대한 영국해군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Lamb's Rum에 대한 최대 시장은 연간 500,000상자가 팔리는 캐나다이다. 영국은 매년 약 110,000상자가 팔리는 두 번째 최대시장이다. 일부 더 작은 해외의 수출시장들이 있다.

Lamb의 해군럼주를 구성하는 럼주에 사용되는 당밀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서인도제도 증류주 회사는 브라질의. 당밀을 사용하고 한편 Demerara는 기아나 설탕회사(정부기관)의 당밀을 사용한다. Lamb의 럼주는 다수의 다른 증류기 또는 솥에서 증류된 럼주의 혼합이다. 이것은 바베이도스 또는 트리니다드에서 생산된 기본럼주와 D, M 및 ICBU로 알려진 세가지 기아나 럼주들과의 혼합이다.

기본럼주는 column 증류방법으로 알려진 것을 이용해 생산된다. 이 컬럼들은 구리로 만들어 진다. Demerara Rum회사는 매우 다양한 럼주를 생산한다. 이것은 다수의 상이하고 독특한 유형의 증류를 이용해 얻는다. Column증류기는 목재로 만들어지는 반면, 솥 증류기는 목재와 구리로 만들어 진다. Lamb의 럼주를 위해 구매한 Demerara럼주는 column 및 솥 증류 양자의 혼합이다. 이것이 Lamb's Rum의 독특한 맛을 내는 럼주다.

이 다양한 예비 숙성된 럼주들이 대형선박을 통해 분리되어 운송된다. 그것들은 처음에 플로리다로 선적되어 철도로 온타리오 워커빌로 운송된다. 캐나다에서 Demerara D, M 및 ICBU가 컨테이너에서 하역되어 종전에 버번 위스키 산업에서 사용된 오크 통에 적재된다. 이것이 럼주의 색상 및 풍미에 더해진다. 그것들은 약 1년 동안 숙성된다. 바베이도스 및 트리니다드의 기본 럼주들이 탱크로 옮겨진다. 그것들은 숙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혼합이 수행된다. 네 가지 구성 럼주들이 최종 제품의 품질 및 풍미에 대한 일관성을 얻기 위해 혼합된다. 캐러멜 착색제 및 탈염수가 적절한 외관과 도수(37.5%)를 얻기 위해 추가된다. 혼합 공정은 혼합 명장이 맡거나 감독한다. 제품은 병에 넣는 장소인, 몬트리올의 Corby구내로 운송된다. 몬트리올은 워커빌로부터 차로 약 하루 걸린다. 병에 라벨을 붙이고 영국 또는 해당하는 다른 지역으로 선적하기 위해 상자에 담는다. 다양한 과정들이 최신의 정교하고 컴퓨터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 작업 및 과정들은 단순하지 않다. 과정 도중에 제품을 통에 넣고; 수시로 물이 추가되며; 통에서 빼내고; 독특한 혼합인, Lamb's Rum으로서 인정받는 일관된 풍미를 얻기 위한 미묘한 균형으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혼합된 것을 테스트하고 조정한다.

요약하면, 캐나다에 도착한 럼주는 본질적으로 숙성되지 않는 주정이다. 이것은 화학물질 냄새로 묘사되는 것을 풍기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미에 안 맞고 본질적으로 마실 수 없다. 캐나다로부터 궁극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캐러멜 착색을 하고 아주 적은 량의 캐나다 럼주를 추가하고, 주의 깊게 혼합하여 숙성된 럼주다; 그러면 그것은 도매 및 소매시장을 위해 병에 넣어 포장된다.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캐나다 세관당국의 요건 및 캐나다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 **관할권의 검토**

당사자들은 재판소가 모든 항소의 관할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였다. BOI를 거절하는 결정은 세관 검토 및 항소(관세 및 원산지) 규정 1997 SI No 534/1997의 규정3을 적용하여 1994 금융법의 14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우리는 규정 3(1)(b)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세 정보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관심이 있다. 규정4는 1994 금융법의 16(4)항(검토 관할)이, 특히 규정3(1)(b)가 별첨5의 1항에 정한 서술내용 즉, 1994법률의 16(8)항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인 것과 같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결정은 1994법률의 별첨5에 정한 서술내용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는 그 법률의 13(2A)(a)항에 해당하는 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1994법률의 13A(2)(a)~(h)항 이내인 것으로 간주되는 1997규정의 3(1)(a)항에 따른 결정이다. 그것이 당사자들의 명백한 합의와 상반된 경우 우리 권한은 1994법률의 16(4)항에 정한 것으로 제한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결정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결과에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이전 관련 사례들에서 드러난 것은 (i) 법적 개념은 공동체 법률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ii) 공동체 법률 규정은 규정의 목표 및 목적에 유념하고 공동체 법률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아 문장의 문구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iii) 2차적인 공동체 법령은 가능한 한 공동체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그리고 그 규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주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소한 계약법률에서 광범위한 상대를 가진다. 상업적인 계약의 규정은 계약을 체결하는 객관적인 특정 목적에 유념하여 계약의 체결시점에 양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관련 주변상황에 비추어 해석한다.

본 지침에 따라서, 시작점은 관련 공동체 법률의 문구이어야 한다. 이는 위에 인용된 시장접근 규정의 서문의 일부 그리고 역시 위에 언급된 CCC의 27조에 따른다. 여기서 우리는 Mr. Scott가 진술한 바와 같이 핵심 규정은 시장접근 규정의 부록II의 12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법률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진 법적 개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항소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암시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12조의 문구로 돌아간다.

○ 직접운송원칙의 검토

12조는 특혜대우는 부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접 운송된 제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는 유럽공동체로 직접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반 원칙 또는 규칙이지만 예외에 해당한다. 그것은 둘째 문장의 첫 단어(단,) 및 동일한 문장에 나타나는 문구 (경우가 발생되어야)로부터 명확하게 보인다. 통상적으로 원칙의 예외 또는 수정은 좁게 해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 또는 일반 규칙은 부당하게 약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예외에 대한 여러 측면이 있다.

첫째는 해당제품이 하나의 단일 화물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주장을 거의 듣지 않았다. 증거의 면에서 우리는 다른 출처의 혼합되지 않은 럼주의 선적 분들이 동시가 아니라 다른 시점들에 캐나다에 도착한 경우, 변경된 공급체인에 따라 한 방식을 하나의 단일화물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품은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록II의 1(1)항의 화물의 정의 참조)

둘째는 항소에서 주요한 사안으로서 예외에 해당하려면 제품은 양호한 상태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i) 하역, (ii) 재 적재 또는 (iii) 작업 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 캐나다에서 하역된 것은 이의가 없다; 또는 동일한 제품인지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EU까지의 선적을 재 선적으로 시작해 기술하는 것이 맞는지의 핵심적 의문에 불구하고 제품이 적재되었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 마지막으로 보존에 관한 쟁점은 없다. 쟁점은 캐나다에 도착함에 따라 제품이 예외 없이 작업을 거쳤는지 여부이다.

○ 부록II의 4조 및 5조관련

4.1항의 시작문장은 이 조항들이 ACP 국가들 또는 공동체에서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과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한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작업에 관심이 있다. 이 조항들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쟁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틀린 경우 비원산지 재료들의 총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정제품의 생산에 그 재료의 사용을 허

용하는 4.12(a)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원산지 재료는 캐러멜 및 1% 캐나다 럼주이다. 캐나다 럼주는 캐나다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된다. 우리는 캐나다 법령규정을 조회하였으나 그 효력에 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논의한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품목들이 부록II의 1조의 그 단어의 정의 이내의 재료들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기 보다는 그것들은 제품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틀린 경우, 다음 관문은 Lamb의 캐나다 럼주의 공장도 가격의 증거와 캐러멜 및 캐나다 럼주의 총 가격의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 관련된 캐러멜 및 캐나다 럼주의 적은 양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두 품목의 가격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합쳐서 Lamb의 해군럼주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할 것 같지 않다는 추론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진상조사에 기술된 과정이 하역, 재선적 및 보존의 예외가 없는 작업의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없을 경우 12조에서 하역, 보존 및 재 적재를 제외하고 작업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소의 끝이다.

○ 더 넓은 문맥의 의미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장은 12조의 운영을 더 넓은 공동체 법률 문맥으로 봄으로써 작업이 물품의 성질 변경 그리고/또는 그 원산지의 변경에 관해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캐나다에서 수행된 작업은 럼주가 캐나다 원산지로 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시장 규정

작업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단, 부록II의 목적상,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이 생산을 구성한다 (1(a)항) 제품은 다른 생산공정에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술한 바 숙성, 혼합, 희석, 캐러멜 및 캐나다 럼주의 추가는 작업 또는 가공에 이르고 따라서 생산의 작업으로 된다. 이것 만에 근거할 때, 제품은 12조의 예외를 충족하지 않는다. 부록 II의 5조는, 관련이 있는 한 혼합을 포함한 작업이 단순하게 기술될 수 없으므로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b) 공동체 관세규정 및 관련 법령 규정

20.3(d)항 및 27조를 함께 판독하면 ACP 국가들 및 기타 시장접근 규정에 포함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들과 관련해 특혜관세 조치 및 특혜원산지에 대한 의문을 요구한다. CCC의 특정 규정이 어떻게 항소인을 돕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럼주가 새로운 제품 즉, Lmab의 해군 럼주로 되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정당한 가공 또는 작업을 거쳤다는 견해에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24조 참조)

(c) 세관창고

1992 세관 공동체 규정에 따른 세관창고의 주요 기능은 물품의 보관이다 (98.1, 98.2, 101(b)항 참조) 그럼에도 수입된 물품은 그것을 보존하고, 그 외관을 개선하고 시장성이 있는 품질을 개선하거나 공급 또는 재판매를 위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통상 형태의 처리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109.1항 참조) 이것들은 위원회 규정 2454/93/EEC의 부록 72(실행규정- 531조 참조)에서 확인된다. 그 처리에는 물품의 추가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또는 원래 물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 그 물품의 추가(12항), 희석(13항), 물품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혼합(14항), 포장 및 단순한 컨테이너로 옮김(16항), 그리고 수입된 물품의 외관 또는 시장성 있는 품질을 개선하거나 공급 또는 재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취급(19항)이 포함된다.

혼합을 포함하여, 항소인 또는 Corby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과정은 주정에서 맛 좋은 알코올 음료로 원래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킨다. 숙성 및 혼합된 럼주를 병에 넣고, 라벨표시를 하고 포장하여 상자에 넣고 단순 컨테이너에 옮기는 보틀링 시설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부록 72에 근거해 특혜원산지 및 특혜관세 대우를 잃지 않고 제품 또는 물품에 대해 어떤 작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인해 항소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d) 정책적 목표

유럽 공동체는 2002년부터 ACP국가들과 경제적 동반자 협정을 협상하였다. 본 항소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경제적 동반자 협약이 CARIFORUM국가들과

체결되었다. 시장접근 규정 및 2008 경제적 동반자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협정의 기저를 이루는 광범위한 정책 목표는 이 경제권 내에서 발전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생활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ACP경제권을 세계무역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통합 촉진하는 것이다. 협정의 기반은 이들 국가들과 유럽공동체간의 직접적인 무역관계이다. 이것은 2008 경제적 동반자 협정의 부록II의 14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시장접근 규정의 부록2의 12조의 직접운송규칙을 설명한다. 그 규칙은 회피금지 규정의 성질이다. 이것은 ACP국가들로부터 EU로의 제품의 간접적인 운송을 막고 제한적인 예외에 따라 직접 운송을 요구한다.

변경된 공급체인이 12조를 침해한다는 결정은 시장접근 규정 또는 경제적 동반자 협정의 기저를 이루는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례의 원칙 또는 효과성에 근거한 이들 규정의 변경요청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규정은 이유가 있는 것이며, 제한적인 예외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 그것들은 캐나다 회사의 수정된 상업적 정책에 단지 맞도록 그 규정에서 모든 내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빈곤의 퇴치에 기여하는, ACP경제권으로의 자금유입 목표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ACP국가들과의 무역과 유럽공동체로의 직접 제품운송에 대한 원래 정책은 분명코 12조에 따른다. 거래가 존재하고 증류된 럼주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한, 제품이 EU로 직접 수출되든지 캐나다를 경유해 간접적으로 수출되든지 ACP국가들과 빈곤의 퇴치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사안의 경제성에 대한 증거 또는 논의가 없었다. 항소인은 그의 제품이 카리브해 지역의 럼주임을 근거로 제품을 판촉 하였다. 그들이 카리브해 지역 럼주를 계속 생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관련 ACP국가들과 계속 거래해야 한다. EU로 직접 운송하지 않고 캐나다를 경유해 선적하는 그들의 정책결정의 결과는 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규정은 항소인의 주장이 맞을 경우 숙성, 혼합, 병입 및 포장 그리고 다른 제품과 관련해 전체 범주의 활동이 수행되는 스코틀랜드 또는 일부 다른 EU회원국에서 가능한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EU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물론 이전 사례에서 확인된 비례의 원칙을 인정한다. 단, 우리는 그 적용이 12조의 해석에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지 알기 어렵다. HRMC가 너무 제한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시사하였다. 수행된 작업이 물품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장이 유효한 경우 12조의 조건은 충족된 것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노력한 이유로써, 12조는 하역 및 재 적재 또는 보존 이외의 어떤 작업도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제품에 이행된 것(숙성, 혼합, 캐러멜 및 캐나다 럼주의 추가, 병입,라벨표시 및 포장)을 작업 또는 중대한 작업이 아닌 증거로서 해석할 수 없고, 단지 우리는 폭 넓게 조항을 해석한다. 그 활동은 하역 및 재 적재로서 분류될 수 없다.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캐나다에서의 작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남용이 될 수 있고 이는 직접운송 규칙의 해석에 심각한 빈틈이 생길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EUR. 1**

본 사안을 엄격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견해는 항소인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16조는 해당제품의 수출 이후 이동인증서 EUR.1이 발행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본 규정상 '예외적으로'라는 문언은 상황이 보통 또는 일반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제품의 성질과 관련이 없다. 제품을 예외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따라서 쟁점이 아니다. 16.1(a)항 이내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추가적인 주장은 또한 우리 견해로는 부적절하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일반적인 것이다. 모든 경우에 인증서는 수출시점에 발행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21.1항에 정한 10개월 기한을 이유로 인증서는 제품이 EU에 도달하는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고 무효가 된다. 항소인은 그들이 숙성기간을 9개월 반으로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이동 인증서 EUR.1을 인정하기 위해 21.2항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단, 그 주장에는 매우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된다. 고려한 상황은 예외적이 아닐 수 있다; 그것들은 일반적이다. 게다가 조항은 의도한 또는 계획된 거래전략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최종일자까지 비의도적으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예상한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보인다. 따라서 본 법원은 HMRC가 BOI 거절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사례 2

□ 사례 개요

【원고】SKILLBOND DIRECT LIMITED
【피고】HRMC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결정사항】기각
【판결법원】조세재판소
【판결일자】2010년 1월 12일

□ 배경지식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

EU회원국들의 특정제품 수입에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특혜관세율 신청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공급인의 세관(즉, 실제로는 스위스 세관이다, 이와 관련해 그 기관이 리히텐슈타인을 대신해 행위를 하기 때문임) 또는 공급인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요약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이다.

우리는 그 "원산지 증명"은 해당 세관(즉, 이 경우 스위스)이 발행한, EUR 1 서식으로 알려진 서식으로 제공될 수 있거나, 수출자들이 6,000유로까지 가격의 제품 수출에 대한 그들의 송장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마지막으로 "인증수출자들"이 그들의 수출 가격에 상관 없이 송장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

우리는Ivoclar가 공급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자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 또한 항소인에게 공급되는 제품에 리히텐슈타인을 나타낸 "원산지 증명서"가 붙어있다.을 모든 Ivoclar의 송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주었고 따라

서 물품은 원산지 증명을 적절히 제출함에 따라 관세의 지급 없이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었다고 들었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 및 "증명"의 효력에 대한 규칙일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원산지 증명을 발행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발행되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약간 특이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은 물품의 공급 시점에 발행되어 종종 공급인의 송장에서 확인되며, 허용된 방법들 중 하나로써 송장은 물품의 통관시점에 수입자의 세관에 제출 또는 제시된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우리가 현재 참고할 특정 기간들은 특별히 관련이 없다.

공동위원회 결정의 20.6항은 송장신고서와 관련해 "6. 송장신고서는 그것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된 때, 또는 그것이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내에 수입국가에서 제출되는 조건으로 수출 이후에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또한 공동위원회 결정의 22조는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 유효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50]

이 단계에서 22.3항의 매우 불분명한 의미를 무시하고 8항 및 9항에 요약된 규칙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20.6항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제품이 수출될 때 원산지 증명이 발행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것의 수출 후 발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그 국가로 수입된 후 24개월 이내에 수입국가의 세관에 제출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제출시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의 제출 이전 4개월 내에 그것이 발행된 것을 증명해야 하며 또는 (이점에서 또다시 22.3항을 무시하고) 22.2항을 적용할 수 있고 지연된 제출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이후의 다른 시점에 발행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15개월 후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공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을 경우 그 증명이 유효

150) 1. 원산지 증명은 수출국가에서 발행된 일자로부터 4개월 동안 유효하며, 수입국가들의 세관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1항에 정한 제출기한 이후에 수입국가의 세관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지정된 최종일자까지 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우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 목적상 인정될 수 있다
3. 지연된 제출의 다른 경우, 수입국가의 세관은 제품이 그 최종일자 이전에 제출된 경우 원산지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원산지 증명은 19개월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3개월 에만 원산지 증명이 발행되는 경우 그것은 지연발행이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남은 한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관 화물 간이절차("CSFP")

마지막으로 소개할 언급은 CFSP가 비문서의 전자적 제출이 포함된 단순화된 방법으로 수입된 제품이 세관목적상 통관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모든 형태로 발행된 원산지 증명을 포함한 관련문서는 HMRC가 문서원본을 보자고 요청할 경우 모두 유지해야 하지만 통상의 경우 CFSP는 전자적으로 실행된다.

본 항소의 목적상 중요한 범위에서, CFSP에 따른 전자적 제출을 실행할 때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력은 원산지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혜관세율이 신청될 수 있도록 코드 300을 입력하는 것이다. 원산지 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진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300이 아닌 코드100을 제출한다. 코드 300을 제출한 경우 원산지 증명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추가로 상세한 입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원산지 증명이 인가된 수출자에 의해 송장에서 자체 확인된 경우에는 전자적 제출에 입력할 적절한 코드는 코드9001인 것으로 들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제출과 상관없이 전자적 제출이 물품의 출신 지역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니셜 LI 또는 CH가 물품이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왔거나 스위스 세관이 수출을 다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사실관계

2007년3월과 2008년 3월 사이에 리히텐슈타인의 치과제품이 수입되었다. Icoclar는 모든 송장에서 리히텐슈타인의 원산지증명이 주장된 것으로 나타냈다. 코드 300 입력대신 운송인은 물품과 코드100을 입력하였고, 저절로 원산지 증명이 주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적절한 번호인 9001이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내역란에 입력이 없었다. 단 모든 제출에서 물품이 스위스 또는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표시되었고 이 점에서 국가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차이가 없었다.

2008년 5월 , HMRC는 항소인에게 원산지 증명이 주장된 것인지 문의했어야 했고 그래서 항소인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직후에 서류형태로 원산지 증명의 모든 원본이 제출되었고 2007년 3월 이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관세의 상환에 대해 청구하였다. 사실 청구 2건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2008년도의 수입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7년 3월과 12월 사이의 수입에 관한 것이다, 단 두 청구 간의 차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

HMRC는 2008년 5월에 서류형태로 제출된 원산지 증명이 그 발행일자로부터 4개월의 기간 이내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있었을, 그 수입에 대한 제출오류의 정정을 즉시 하였다. 그 원산지 증명은 공동위원회 결정의 22.1항에 정한 4개월의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단, 유효한 원산지 증명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을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하지 않았을 지라도 제출이 없었고 따라서 지불한 관세가 정당하게 지불되었으며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하게 지불되었을 지라도) 그래서 HMRC가 관련 관세를 환급할 여지가 없다는 것에 근거해 환급에 대한 청구는 거절되었다.

항소인은 관련 거절(실제는 첫 번째 청구와 관련한 부분적인 거절, 그리고 그 앞의 잘못된 제출에 관한 두 번째 청구에 대한 전체적인 거절) 그리고 거절을 확인한 검토결정에 대해 항소하였다.

□ 당사자주장

○ **관련 법률**

상기 8항 및 9항에서, 우리는 본 항소에 대해 중요한 두 규정을 인용하였는데 상기 9항에서 인용된 공동위원회 결정의 22조가 가장 중요한 한 규정이다.

다른 두 규정들이 중요하며, 첫째 관세법의 2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는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 또는 금액이 220(2)항에 상반되게 계좌로 들어간 경우 상환된다. 상환으로 이어진 사실 그리고 법적 지불대상이 아닌 금액이 계좌로 들어간 것이 관련 당사자의 계획적인 행위의 결과인 경우 상환이 되지 않는다."

다른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 관세법의 78조이다:

" 1. 세관은 그 자신이 먼저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의 출고 이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세관은 물품의 출고 이후 신고서에 포함된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물품과 관련해 수입 또는 수출 운영과 관련한 또는 그 물품과 연관된 후속적인 상업적 운영과 관련한 상업적인 문서 및 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3. 신고서의 수정 또는 통관 후 검사에 따라 관련 세관절차의 규정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세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상황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수입의 모든 시점에(다양한 화물에 대해) 유효한 원산지 증명이 존재했으며, HMRC가 하고자 하였다면 공동위원회 결정의 22.1항의 의미 내에서 수입 시 모든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세법의 236조는 과오 납부된 관세는 환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78조는 잘못 작성된 원래 신고서를 정정함에 있어 세관은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상황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따라서 과오납된 관세는 환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22.2항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증명의 지연된 제출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언급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비록 항소인이 22.3항에 포함된 불분명한 그 규정이 본 사례에 적용되었다는 주장에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공정하지만 그 규정을 가능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 판결 및 시사점

결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은, 원산지 증명은 통상의 경우 정확히 4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가의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위원회 결정의 22.1항에 포함된 규칙이다.

상기 21항의 첫 문장에서 언급된 항소인의 주장은 DSG Retail v. HMRC [2010] UKFTT 413 (TC)사례에 대한 최근 재판소 결정(John Walters QC 및 Sheila Cheesman) 의 대상이었다. 그 경우 그 사실에 따라 증명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동의한다.

전자적 제출의 내용상 공급품의 "원산지"를 근거로 한 특혜대우의 신청이

없었고, 제출에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원산지 증명이 제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인정하건대 원산지 증명은 존재했고 그것들은 요청될 수 있었으나, 제출에서 결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암시된 문서를 HMRC가 요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우리는 DSG Retail사례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며, 증명이 제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원산지증명을 제출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는 본 사례에 대한 피항소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물품이 스위스 또는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온 것으로 신고제출에서 나타난 사실로써 원산지증명의 제출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원산지인 물품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수 없었던(또는 착수단계에서 첨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품의 수출 이후 원산지 증명의 발행에 24개월의 기간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증명은 (그 기회의 기간 동안 발행된) 일반적으로 단지 4개월의 기간에 한해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약간 특이한 것을 인정한다. 두 기간 간에 분명히 올바른 조화가 있다. 상기10항에서 우리는 두 기간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법을 요약하였으며 이제 그 요약이 올바른 조화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22.2항에 따라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22.3항에 따라 제기된 다음의 매우 제한적인 주장을 다룰 것이며, 우리는 이제 관세법의 236조 및 78조에 근거한 주장으로 돌아간다

236조의 조건을 별개로 다룰 때, 항소인의 청구에서 치명적인 결함은 관세가 지불된 경우 그것이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산지 증명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실제 관세가 지불되었을 때 관세는 실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산지 증명이 제출될 때까지 관세는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지불된 관세 금액은 220(2)항에 따라 계좌로 들어갔다. 따라서 236조를 별개로 다룰 때 항소인의 상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78조에 따른 주장으로 돌아가면, 이 조항은 잘못된 신고서를 정정하기 위해 물품의 출고 후 세관이 관세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세관은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해 상황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 본 규정의 효력에 관한 피항소인의 주장은 물품이 리히텐슈타인이 출처인 것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특혜에 대한 자격이 있는 물품으로서 통관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78조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제출된 것으로서 간주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품의 원래 잘못된 통관 이후 수개월 동안 증명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008년 1월 이전의 모든 수입에 적용되는 증명이 4개월 기간의 만료로 인해 22.1항에 따라 효력이 중단된 경우, 78조에 따른 "정상화"는 해당할 경우 물품의 지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연장될 수 있으나 무효인 원산지증명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22.1항에 정한 효력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피항소인의 주장의 효과는 2008년 5월 또는 6월에 모든 송장과 그것들의 원산지증명이 실제로 HMRC에 제공되기 직전 4개월 동안 수입한 것과 관련해 그들이 해준 임시처리에서 잘 설명되었다. 그 마지막 4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한 것에 관해, 수입 및 통관의 시점에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된 관세는 적절하게 지불된 것이고 236조를 별개로 고려할 때 관세는 그 시점에 거의 확실하게 법적으로 지불했어야 했고 그 관세의 금액에 대한 상환마저 배제한다. 일단 잘못된 입력이 수정되면,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이후 물품이 잠정적으로 특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8년 5월 이전의 마지막 4개월의 기간에 수입된 물품과 관련해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혜는 정당하게 된다. 이는 물품이 현재 특혜자격이 있는 것으로서 분류되고 그것과 관련해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세가 지불되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의미한다(원래 사실상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관세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2008년 1월 이전에 한 모든 수입에 대한 청구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차이다, 그 이유는 물품이 잠정적으로 특혜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혜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는 핵심요건의 하나, 유효한 증거의 제출이 현재 제공될 수 없으며 또는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재 어떤 것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78조 및 236조를 보완하는 실행규정 890조가 상환요청을 하고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 상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890조는 매우 특별하게 "그 문서의 인정에 관한 모든 요건이 충족 [되어야 만 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추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환 요청은 4개월의 기간 내에 제

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무효가 된 인증서가 아닌 유효한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상기 9항에서 이미 인용된, 불분명한 문구의 22.3항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본 조항의 의도는 분간하기 어렵다. 그 조항에서 “지연된 제시”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최종일자 이후 즉, 증명의 발행으로부터 4개월 기간의 만료 후의 증거 제출을 언급한 것이다. 동일하게 단어 “제시”는 단어 “제출”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세관이 “지연된 제시”의 한 사례에서 (즉, 외견상 4개월 기간의 만료 후 원산지증명의 제시 또는 제출) “그 최종 일자 이전에 제품이 제출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규정은 원산지증명이 4개월의 기간 내에 제출 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 최종 일자 이전에 제품이 제출되었다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개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DSG Retail 사례에서 재판소가 고심하여 22.3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을 언급한다. 우리의 심리 도중, 피항소인은 22.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에 관해 논리 정연한 제안을 하였으나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주제사항과 관련이 없으며, 22.3항의 실제 문구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관련문구의 해석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첫째 이유는 항소인은 22.3항에 근거해 주장을 간신히 제기하였고, 둘째 이유는 본 사례에서 어느 것도 쉽게 방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장은 “원산지증명의 발행으로부터 4개월 기간의 만료 이전에 제품이 제출되었다”고 주장했어야 했고,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표시된 방법으로 물품이 통관되었고 원산지증명의 제출에 대한 암시가 없었을 경우, 우리는 “최종일자 이전의 제출”에 관한 문구가 충족될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본 사례에서 피항소인이 강조하고 또한 DSG Retail사례의 재판소에 대해 강력하게 영향을 마친 마지막 사항을 언급한다. 이는 세관 법령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규칙은 특혜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어야 하고, 효과가 있으려면 그 증명이 유효해야만 한다. 이는 원산지증명이 발행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22.3항 별도) 상환청구를 그 기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주장 또는 증명의 발행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78조에 따른 재분류의 효과로 인해 과오 납부된 세금이 상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

적인 규칙으로 보이는 것, 즉 증명의 효력에 대한 4개월 기간을 완전히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피항소인 및 과거 재판소에 동의하며, 그 주장은 근본적인 규칙으로 보이는 것에 거스르며 맞을 것 같지 않다. 문구의 문제로서, 그러므로 법령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항소인의 항소는 기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다) 사례 3

□ 사례 개요

【원고】 LAMA LTD
【피고】 관세청장
【쟁점】 레바논 세관 미서명 EUR.1 인증서의 유효성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London Tribunal Center
【판결일자】 2004년 6월 8일

당해 사건은 24,659.79파운드 금액의 2001년 7월 12일자 C18통관 후 지불요구서의 발행 결정을 유지하는 검토에 대한 2002년 4월 3일 및 2003년 3월 4일자 서신에 포함된 피항소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이다.

본 사안은 1998년 11월 10일과 2000년 7월 13일 사이에 레바논에서 의류를 6회 수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물품들은 레바논과 유럽 공동체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율을 청구할 수 있는 EUR.1 이동 인증서가 첨부되었다. 본 사건은 인증서에 레바논 세관이 날인하지 않았다. 피항소인은 2001년 1월 31일자 서신을 통해 인증서의 효력과 특혜관세의 청구에 대해 레바논 세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다. 레바논 세관은 그들이 인증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수출자는 더 이상 레바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따라서 인증서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2001년 6월 11일자 서신) 그 서류를 수령한 후 피항소인은 2001년7월 12일자 통관 후 지불요구서를 발행하였다.

첫 심리 일자에 법원이 고려해야 할 여러 인권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항소인을 법적으로 대리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는 Mr. Timson-Hunt에게 인권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재판소를 위해 정리하도록 요청하였다.

□ 사실관계

재판소는 Mr Haytayan 및 관세 검토공무원 Mr M J Brewis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양 당사자들은 문서 일체를 제공하였다.

Lama Ltd(“항소인”)은 의류 수입자다. 해당 수입품은 레바논으로부터 “La Marquise”라고 하는 회사가 수출하는 잠옷이었다.

1978년 9월 26일에 레바논 및 유럽 공동체간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의회규정(EEC) 2214/78에서 발표되었다. 그 협약은 수입물품에 대한 (자격 있는)감소된 관세율을 규정한다.

품목분류상 세번 6108 및 6208에 해당되고, EUR. 1 이동인증서가 첨부된, 니트 및 비니트 의류로 구성된 수입물품은 세관에서 특혜관세율에 의한 수입으로 모두 인정되었다. 레바논에서 의류의 생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 또는 의류의 정확한 성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증서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레바논 세관당국의 날인이 없었다.

협약에 따라 피항소인이 레바논 관세당국에 발송한 2001년 1월 31일자 피항소인의 서신에서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수입품과 관련한 인증서들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2001년 6월 11일에 수령된 레바논 세관의 답신은 아랍어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EUR. 1 이동인증서 번호, A 34063, A34065, A34066, A34067, A34068, A30081, A41784 및 A43464의 소급 확인을 요청한 상기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우리는 상기 인증서에 레바논 세관이 서명하지 않았고, …..또한 공장… 그 이름이 box1에 나타나고…..폐업을 하고 떠났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그 인증서들을 무효로 간주하기 바란다 …”

처음의 두 인증서는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피항소인이 밝혔고 본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지불요구서가 무효인 다른 인증서들과 관련해 발행되었으며, 줄어든 관세율에 대해 전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2001년 7월 9일자 서신에서 피항소인은 특히:

“공동체 관세규정 (의회규정 2913/92)의 220.2(b)항은 수입시점에 청구한 특혜관세율에 대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 지불할 관세의 감면(비 회수)를 규정한다. 면제는 특혜청구를 성실하게 한 것을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음에 달려있다. 수입자는 La Marquise로부터 수입을 한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원산지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공급인으로부터 규정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의, 일자를 기재한 확인을 수령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자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서식 C285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본 사무소로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2001년 7월 18일에 본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부서검토가 항소인을 대신해 요청되었다. 2001년 9월 28일에 아랍어의 팩스를 피항소인이 수신하였고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통관 대리인 Mr Joseph Abu Khalil은 IMF 임시 수입신고에 따라서 La Marquise 의류회사를 대신해 많은 직물을 임시로 수입하였다 …직물은 La Marquise 의류공장에서 가공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었다 …물품은 EX3 신고에 따라 재 수출되었다 …본 진술서는 기록의 남용에 대해 세관 부서 측에서 책임을 인정함이 없이 우리가 보유한 기록에 근거해 교부한다.”

항소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된 팩스는 레바논 세관이 날인하였다. 이 문서는 첫 제조보고서(first production statement)로 참조되었다.

2001년 7월 18일자 서신을 통해 항소인의 대리인들은 피항소인에게 레바논 세관을 접촉하였고 그들이 항소인의 청구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대리인들은 EUR. 1 이동인증서를 베이루트 상공회의소가 발행하였으며 외무부 장관이 서명하였다는 것과, 공장 또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에 당시 문제가 있었더라면 인증서가 서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공장이 2000년 7월 이후 폐쇄되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세관사무소는 공장이 인증서에 표시된 주소에 소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부서 검토가 수행되었고 항소인은 2002년 4월 3일자 서신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았다. 2002년 4월 3일 서신에서 피항소인은 특히 레바논의 적절한 기관은 레바논 세관국장이었으며 그 국장이 영국세관에게 그들이 EUR. 1

이동인증서를 서명하지 않았으며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통지한 것을 언급하여, 항소인의 주장을 거절하였다. 그 서신에서 또한 “본 건과 같은 경우에 해외 기관의 진술 및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청장의 방침이다” 라고 하였다.”

2002년 4월 3일자 서신 이후 관련 공무원은 관세 특혜부서에 문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부서는 문서에 레바논의 적절한 세관당국의 진정한 날인이 없다는 검토를 유지하였다

당사자들간에 추가적인 유선문의 및 서신이 뒤따랐다. 이 연락을 하는 도중 항소인은 특정한 금액이 수치화되지 않았으나 그가 많은 시간과 금전을 소비하였음을 반복하였다. 피항소인의 결정은 2003년 3월 4일자 서신으로 궁극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본 항소의 대상이다. 물품이 특혜대우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레바논 세관이 수긍하였다는 것을 제공문서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항소인의 견해이며, 이것이 생산을 위해 레바논으로 수입된 직물로부터 의류인 물품이 생산되었다고 피항소인이 거론한 이유라는 것이다. “61류 및 62류의 물품에 대한 자격이 있는 과정은 생산의 방법에 따라 방적사 또는 직물로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된 직물을 가공하는 것은 특혜대우에 대한 자격이 있는 물품으로 불충분하다.”

2003년 3월 10일 피항소인과의 전화 대화에서 첫 제조 보고서에 언급된 직물성질의 의문점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직물이 EU가 원산지이며, 그래서 의류가 특혜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자수물품에 대한 대체 원산지 규정에 따라 레바논이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한 자수의류라는 것이 항소인의 생각이었다. 피항소인의 입장은 두 경우에 의류의 원산지 자격에 관해 스스로 수긍할 수 없었던 레바논 세관과 얘기 했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류가 자수인지 아닌지의 관련성은 세번 6108 및 6208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유선으로 확인한 2003년 3월 10일자 피항소인의 서신의 결과로서, 의류의 원산지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 대해 레바논 세관을 수긍시키기 위해 레바논에서 대리인을 고용하였으며, 그 회의에서 2차 제조보고서로 이어졌다.

항소인은 2003년 4월 24일에 그의 항소를 제기하였다. 2003년 11월 21일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EUR. 1 이동인증서 사본에 대해 레바논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피항소인의 변호사 사무실의 시니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본인은 귀하가 레바논 세관과 접촉하여 해당 화물에 대한 새로운 EUR. 1 이동인증서의 승인을 레바논 세관에 요청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UR. 1은 예외적인 상황에 물품의 수출 이후 발행될 수 있다. 단, 귀하는 La Marquise의 인가된 대리인에게 세관당국과 연락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귀하는 레바논 원산지 자격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즉, 그 의류가 원산지 규정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그리고 내역 또는 원래 수출, 예를 들어 수출송장의 사본을 제공해야 할지 모르며…..본인은 귀하가 가진 그 직물 또는 완성된 의류의 특혜 원산지에 대한 증거서류를 열람하고자 한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을 본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물품이 EC원산지 자격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물의 EC 공급인 또는 생산자의 공급인 신고서. 신고서는 특히 중요하며 지정된 서식이어야 한다 …

▶ EC에서 발행한 그리고 수출 직물에 해당하는 EUR. 1 또는 송장 신고서의 사본.

▶ 해당 원산지 규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레바논의 생산자와의 서신. 예를 들어, 그 확인은 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재료의 원산지 및 수행된 생산과정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명한 언급에 대한 위험에 따라, 귀하는 본 서신의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 6 EUR. 1 이동인증서들에 해당하는 의류의 수입에 대해 귀하가 특혜관세율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EC 또는 레바논 원산지 자격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귀하가 수입한 다른 의류들에 대해서와 같이 그 의류에 대해 EC 또는 레바논 원산지 자격을 규명하지 않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 의견으로는 현재까지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본 항소의 대상인 물품에 대한 레바논 원산지 자격을 증명하지 않는다."

본 서신을 수령하고 레바논의 추가 조사를 한, 항소인은 특히 다음을 언급

한 2차 제조보고서를 제출했다:

“2003년 12월 9일자 레바논 세관의 승인 번호 21666

확인 부록

관계자 제위

“2001년 9월 12일에 “의류회사 La Marquise에 발행된 증명서의 확인에 있어” 우리는 제품이 “의류회사 La Marquise”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Lama Ltd (이후 항소인의 주소에 따름) 의 이익을 위해 재 수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음의 재 수출 EX3 진술서와 관련된 EURO1(sic)인증서(관련 인증서 번호)는 유효한 규정에 따라 산업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이 발행하고 승인하였으며, 수출된 제품이 각 인증서에 언급된 표현 “EMB” 대로 자수의류임의 확인하며, EUR. 1 인증서는 그 인증서와 관련된 생산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후 발행되었음을 언급한다

“그 증거로써 2001년 9월 12일자 증명서의 본 확인부록은 남용에 대해 세관당국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행하였다.”

진술서는 2003년 12월 19일자로 세관국장 Assaad Ghanem이 서명날인 하였다.

재판소는 La Marquise가 수입한 영국원산지 직물과 관련한 다양한 송장, 선하증권 및 포장목록을 보았으며; 일부 문서는 Ipswich and Suffolk 상공회의소가 진정성을 증명하였고, 하나는 Arab- British 상공회의소가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단, 이들 문서는 해당 6수입품들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없다.

Mr Haytayan의 증언은, 항소인이 영국에서 La Marquise에게 직물을 수출하고, La Marquise는 레바논의 공장에서 직물을 가공하여 영국의 항소인에게 그것을 재수출하는 것을 주선하였다는 것이다.

항소인이 취득한 문서에서, 여섯 인증서들의 다섯과 관련한 송장 둘이 있고 하나는 A로 표시하고 하나는 B로 표시한 것이 보인다. A로 표시된 송장들은 물품이 레바논으로 수입된 의류 또는 직물로 만들어 진 것을 나타내는, EX3진

술서가 대변한다. B로 표시된 송장이 있는 경우, 이는 물품이 레바논에서 가공된 직물로 만들어 진 것을 나타낸다. 본 사건에서 A34066번 및 A34067번 EUR. 1 인증서는 송장A만을 지칭하였고, B는 아니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요청한 문서들을 항소인이 찾고 있었던 동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레바논으로 가는 것이 어려웠다. 항소인은 관행상 레바논 당국이 비협조적이었음을 진술하였다. 결국 항소인은 2차 제조보고서를 받는데 1년에서 18개월이 걸렸다. 해당 인증서는 산업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날인이 있었다. Mr Haytayan의 증언은 또한, 레바논의 시스템은 레바논 세관이 날인하기 전에 문서의 진위를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다는 것이다. 해당 6인증서와 관련해 항소인의 대리인은 적절한 세관의 날인을 받지 않았다.

2003년 3월 4일자 Mr Brewis의 서신에서 그는 그 서신의 말미에서 항소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관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항소인이 항의하고자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관련 주소를 주었다. 그 이유는 사안을 처리하는데 세관 측에서 지나치게 지연한 것으로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첫 제조 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에 피항소인은 그 날인이 공식적인 레바논 세관의 직인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심리의 시점까지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그 직인이 EUR. 1문서에 있었더라면 관세청장은 그것을 인정하였을 것으로 인정하였다. 첫 제조 보고서는 두번째 제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레바논 세관국장, Assaad Ghrnem이 서명하였다.

심리의 시작부터, 진술서가 여러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이 피항소인을 대신해 인정되었다. 특히 항소인의 진술서는 피항소인의 “해외 기관들의 진술 및 결정을 인정하는 방침”, 그리고 피항소인의 지불요구서 발행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는 것을 거론하였다. 실제로는 전자는 방침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의 요건의 문제이며, 결정은 피항소인의 재량권의 행사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물품이 EU로부터 수입된 의류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항소인이 제시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였는데, 요구된 것은 적절히 날인된 EUR. 1인증서의 제시였다. 항소는 주제가 아닌, 1994 금융법의 s.16(4)항 및 별첨5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과 관련하였으며 결정은 모든 상황에 있어 공정하고 비례적이었다고 주장되었다. 항소인은 항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가졌다. 또

한, 피항소인과의 과거 연락 및 전화 대화의 결과 그가 레바논으로부터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문서를 취득하면 본 항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o 피항소인의 주장

Mr Timson-Hunt는 피항소인을 대신해 매우 적절하게 다음을 인정했다: 항소인의 진술서가 사건을 적절히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장의 결정을 지연시킴으로 인한 과도한 금액에 항소인이 해당되었고, 항소인은 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의 증거 및 사안에 대한 관세청 관할권의 성질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피항소인의 주장은, 그 수입품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협약 및 규정(EEC)2214/78에 따라 규정된 것이었다. 6개의 화물에 관해 해당규정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제61.08호로 반입된 물품이 방적사로 생산되지 않았고, 직물이었기 때문에 특혜원산지 자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인권에 관한 사안과 별도로 피항소인의 실체적 사건에 대한 원칙 제출은:

(a) 피항소인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의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또한 재판소도 그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이 견지에서 재판소는 Vtech Electronics (UK) Plc v 관세청장 [2003] EWHC 59사건을 참조하였다

(b) 그 특혜 협약의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은 협약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않는 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 재량권이 없다(Indus Food Ltd v 관세청장 (2003) CW 178참조)

(c)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 협약의 프로토콜2.

(d) 협약 프로토콜2의 6조의 요건은 원산지 자격의 증거는 EUR. 1이동인증서 또는 우편화물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협약에 다른 증거가 규정

되지 않았다..

(e) 프로토콜의 7조의 요건은 “EUR. 1이동인증서는 수출국가의 세관당국이 발행한다…..”. 단어 ‘Shall’의 사용은 세관당국이 인증서를 발행하는 요건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레바논 세관이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은 이의가 없다.

(f) 산업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이 발행하거나 확인하는 EUR. 1이동인증서에 대해 협약에 대체 규정이 없었다.

(g) 2001년 1월 31일 피항소인의 인증서 확인요청에 따라 레바논세관은 인증서에 레바논 세관이 서명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고 인증서를 무효인 것으로 간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h) 프토토콜2의 6조에서 특혜 원산지 자격의 증거로서 EUR. 1만을 규정하였고, 항소인의 화물에 동봉한 EUR. 1이 무효였던 것으로 볼 때,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발송한 후속 문서는 협약에 따라 특혜 원산지자격을 규명하는데 불충분하였다. 재판소는 Fiat Auto (UK) Ltd v 관세청장(2201) COO 141사건, 인용사건 C-334/93 Bonapharma Arzneimittel GmbH v Hauptzolamt Krefeld[1995]ECR 1-0319사건을 참조하였으며 그 사건에서 ECJ는 다음을 언급하였다:

“EEC-호주 협정의 조건에 따라 공동체 또는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한해 특혜협정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EUR. 1이동인증서는 그 원산지의 서면 증거를 구성한다……. 그 원산지 증명에 추가하여 다른 증명의 수단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적용의 통일성 및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 물품의 특혜원산지 자격을 확인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아닌 것으로 진술되었음) 문서가 협약에 따라 인정될 수 있었을 경우:

(i) 2001년 9월 12일자 첫 제조 보고서만이 물품을 La Marquise를 대신해 통관 대리인이 임시로 수입하였으며, 그 회사가 직물을 가공해 재수출하였음을 나타냈다. 서신에 레바논세관의 공식적인 직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인정된 반면, 직물이 본 항소의 대상인 실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직물이 어디에서 수입되었는지 또는 원산지 국가(들)

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레바논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생산의 수준 또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았다;

(ii) 둘째 제조 보고서는 단지 물품이 La Marquise에 의해 생산되어 관련 EUR. 1에 따라 항소인에게 재수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문서는 그것이 세관당국이 아닌, 산업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이 발행하고 승인하였음을 인정한다. 그것에 레바논 세관날인이 있는 반면, 과거 문서에는 추가된 것이 없다. 진정 EUR. 1는 세관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협약 7조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산업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인증의 유일한 근거는 물품에 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61.08호로 신고한 항소인의 물품과 관련해 관련이 없고, 이는 제62.08호로 신청하였음이 인정되었다.

(j) 물품이 특혜자격을 취득했는지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 협약, 프로토콜2의 1조 및 3조에 정해졌다. 제품은 반드시:

(i) 수입된 직물이 아닌, 전적으로 레바논에서 생산되거나;

(ii) 최종 제품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 레바논에서 취득되었으며, 생산 도중 사용된 다른 제품은 레바논의 것이 아닐 것.(1(b)항 참조) 3조에 따른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은 프로토콜의 목록A 또는 B에 열거된 물품을 제외하고, 작업 또는 가공된 각 제품에 해당하는 세번 이외의 세번 (4단위 기준)에 따른 분류를 받기에 충분하다. 본 사건에 있어 레바논에서 수행된 가공을 나타내는 것은 2003년 3월 10일자 항소인의 서신과 2차 제조 보고서에 있으며, 수행된 작업으로 양자가 나타낸 것은 자수였다. 제6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협약목록A의 관련기준에 따라 이것은 관련이 없었다. 제6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기준이 준수되었을 경우 충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유효한 EUR. 1이동인증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iii) 가공에 관한 1(b)항의 규정은 공동체가 원산지인 물품(즉, 가공을 위해 공동체로부터 레바논으로 선적되어 공동체로 다시 재 수출된(1(b)항 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인의 물품이 공동체가 원산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인의 물품이 원산지기준의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물

품이 협약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입증하는 기준을 충족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볼 때, 그 자격은 거절되어야 한다.

(k) 피항소인은 협약, 프로토콜2의 22조에 따라 레바논 세관에 인증서들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24조에 따라 제공된 후속적인 확인은 인증서들이 무효이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l) 수출자, 수입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문서의 확인을 위해 수출국가의 세관당국에 접근할 수 있는 협약의 규정이 없었고 협약은 제공된 문서의 인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진술서 1 및 2는 항소인과 재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m) 규정 78(3)항에 따라 피항소인은 상황을 합법화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지불할 관세를 회수하는 것이 포함되었다(완전한 세율에 따라). 단 채무는 발생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규정, 221(3)항) 본 항소에서 첫 화물에 대한 관세는 1998년 11월 10일에 발생되었고, 2001년 7월 2일에 통지되었다

물품이 모든 필요한 문서와 함께 수입되었고 피항소인이 여러 번 물품을 통관시켰으므로 이는 관세청이 인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항소인이 주장하였지만, 무역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당국의 최초 인정과 관세의 산정으로 인해 추가로 관세를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합법적인 기대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법률에 의해 확립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관세청장 v Invicta Poultry Ltd 및 Fareway Trading Co Ltd [1997] V&DR 56)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항소인이 제기한 점과 관련해, 항소가 유럽공동체 법률 및 그 실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권법에 관한 유일한 관련성은 특혜원산지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공동체 법률의 실행과정에서 관세의 지불을 요구함에 있어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권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유럽공동체에 대한 인권의 적용과 관련해, 공동체는 ECHR에 응하지 않았었고, 따라서 이는 공동체 법률의 실체적인 부분이 아니었다. 단 EC조약, 표제I, F조, 2항에 따라, 1950년 조약에 포함된 기본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인권에 대한 존중은 공동체 행위의 적법성의 조건이었다 (유럽법원의 1996년 3월 28일 의견 참조(2/94 ECR [1996]1-01759) 재판소는 ECJ가 인권문제를 고려

했던, Marguerite Johnson v Chief Constable of Royal Ulster Constabulary [1986] ECR 01651 Case 222/84 및 The Queen v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ex parte Denis Clifford Bostock [1994]ECR 1-009555사건을 참조하였다. Bostock at para사건에서 ECJ은 다음을 언급했다:

"…법원은 Wachauf(19항)에 대한 판결에서 일찍이 공동체 법규명령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의 필요조건도 회원국들이 공동체 규정을 실행할 때 그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그 필요조건에 따라서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피항소인은 공동체 법령을 준수하고 협정을 실행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문서만이 인정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무역협정을 실행하는 규정의 문구는 엄격하고 매우 명확하다; EUR. 1이동 인증서만이 특혜자격의 증거로서 회원국들이 인정할 수 있고 인증서는 수출국의 세관당국에서 발행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인권개념으로 규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 또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피항소인은 재량권이 없다.

인권법에 따른 항소와 관련된 특정한 권리와 관련해 다음 진술이 있었다:

(i) ECHR, 6조- 민사 사항,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항소인의 권리는 재판소 시스템 및 법원에 대한 접근으로 이행되었다.

(ii) ECHR의 프로토콜 1의 1조에 따라 항소인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에게 속한 재산을 그가 소유함을 나타내야 한다. 본 항소에서 관련 재산은 관세 금액으로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경우 항소인은 그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위반이 없었다. 또한, 국가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률에 규정된 세금 또는 기타 분담금 또는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Timson-Hunt는 다음을 인정했다, 항소인이 사건에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증거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해야 한다면 조항의 적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관세청장이 주장의 진술을 준비할 때 원래 결정에서 제시된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관세청장 v Alzitrans SL[2003]EWHC 75사건을 참조하였다.

(iii) ECHR 13조- 이것은 실체적인 협약권리의 위반이 형성되고 그 위반의 경우 의지할 것이 없는 경우만 적용된다, 이것이 진술되었으나 본 사안이 아니다.

49. 항소인은 심리 1개월 전에 적절히 필요한 증거 즉, EUR. 1 및 원산지 증거에 대해 통지를 받았으며,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50. 비례의 원칙 문제와 관련해, 재판소는 공동사건 C1153/94 및 C-204/94, The Queen v 관세청장 ex parte Faroe Seafood Co Ltd, Foroya Fiskola L/F [1996] ECR 1-2465f를 참조했다, 114페이지에서ECJ는 다음을 언급했다:

"규정 1687/79의 5(2)항 [현재 220(2)(b)항]의 신청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입물품의 매수인으로부터 청구한 관세를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을지라도 통관 후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비례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적 관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은 국제적 거래자들의 책임이다 …"

잘못된 지시의 문제와 관련해, 관세는 EC조약을 통해 공동체 수준에서 부과되며, 관세징수의 시스템은 1992년 10월 12일자 규정 2913/92에 정해졌고 공동체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조약 또는 관세규정은 관세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 또는 추가적인 법정 양허를 규정하지 않고 따라서 본 사건에서 개념(VAT항소와 관련 있는)에 근거할 수 없다. 관세와 관련한 양허는 국가지원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관세규정, 220(2)(b)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기대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a) 법적으로 정히 지불할 관세 금액으로서 세관당국 측의 오류로 인해 계좌에 들어가지 못한 금액;

(b)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자가 합리적으로 감지할 수 없었던 오류;

(c) 후자가 신고의 비용과 관련해 성실하게 행위를 하고 유효한 법령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본 사건에서 레바논 세관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만한 실제 근거

가 없었으며 EUR. 1이 날인을 위해 레바논 세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항소인의 주장이다. 피항소인이 수입 시점에 EUR. 1를 인정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진술은 근거가 없다(관세청 v Invicta Poultry and Fareway Trading Co Ltd [1997] V&DR 56참조)

o 항소인의 주장

항소인은 유일하게 인정되는 문서가 EUR. 1이었다는 것을 적절히 통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1년 7월 9일자 서신에서 관세청장은 항소인에게 구제는 특히 특혜에 대한 청구를 성실하게 한 것을 그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함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인은 청구를 성실하게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였다.

2002년 4월 3일자 검토 서신에서 관세청장은 해외 기관들의 진술서 및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청장의 "방침(poilcy)"인 것으로 언급하였고, 그들은 그 진술서 및 결정을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항소인이 처음에 EUR. 1에 관련한 엄격한 요건에 대해 통지를 받았더라면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항소인은 레바논으로 두 번 출장으로 갔고 레바논 세관에 두 번 접근 하였는데 지금은 레바논 기관들의 성질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레바논 당국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였다.

2003년 3월 4일자 추가 검토에서 모든 EUR. 1의 언급이 없었고, Mr Brewis가 수입된 직물을 가공하는 것이 물품의 특혜대우에 대한 자격에 불충분하다는 사실만을 언급하였다. 또한 2003년 3월 11일자 서신에서 Mr Brewis는 EUR. 1 인증서가 정확하게 날인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당시 레바논의 변동성에 대해 상기하였다.

항소인이 2차 제조 보고서를 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레바논 세관이 원래 말했던 것처럼 EUR. 1이동인증서가 무효로 간주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Mr Assaad Ghanem은 첫 제조 보고서에 서명하였고 그의 이름이 둘째 제조 보고서에도 표시되었다. 관세청장이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했던 시점까지 공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레바논 세관은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반면 항소인이 더 일찍 통지를 받았더라면 적절한 증거를 구할 수 있

었다.

항소인은 2차 제조 보고서와 같은 문서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항소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항소인은 그것과 다른 문서를 구하는데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였다. 또한, 항소인은 물품의 원산지의 증거를 재판소에 제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였다.

항소인이 제시한 문서는 항소인이 가공을 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직물을 보냈음을 나타낸다. 선하증권은 진본으로 날인되었고 그것은 선사 및 수하인을 표시하고 있다. Cloverbrook Fabrics 의 1995년 3월 14일자 서신은 항소인과 La Marquise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른 문서들은 직물의 Completion이 100% 폴리에스테르이며 일부는 100% 면인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해당 화물과 일치한다. 이는 직물을 영국에서 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피항소인의 변호사의 2003년 11월 21일자 서신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과정을 통지하였음을 Mr Haytayan이 인정하였다. 작성자는 “like to suggest” 문구를 사용하였고 그는 항소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구해야 한다거나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항소인은 또한 행정에 대한 권리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헌장의 41조에 근거하여 주장하였다. 본 사건에 있어 피항소인이 적절한 행정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인이 행정청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것을 법이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

2003년 3월4일자 서신에서 피항소인은 사안해결의 시간경과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민원상담 기관은 안내하였으나 첫 검토단계에서 관세청장이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였더라면,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 그리고 검토단계에서 행정실책에 대한 의문이 없었다. 항소인은 2003년 4월 항소했으며 규정상 진술서를 30일 내에 송달할 것이 요구되었다. 2003년 5월 29일 관세청장은 항소인이 항소를 철회할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2003년 7월 1일까지 연장을 신청하였다. 2003년 6월2일 피항소인은 자신들의 실수를 이유로 7월 1일까지 다시 연장을 신청하였다. 2003년 7월 24일에 재판소는 진술서를 송달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항소인은 또 다시 항소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재판소에서 2003년 8월 7일까지 추가의 시간 연장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 피항소인은 추이를 보면서 2003년 9월 7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을 하였다. 신청에 대

한 근거는 관세청장이 “그들의 검토를 수행하는” 추가 시간을 요청한 것이었다. 항소인의 진술서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었을 때 그것은 일관성이 없었고, 적절하게 사건을 진술하지 않았다.

항소인은 현 상황에 있어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위해 인권법의 13조를 근거로 한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자문에 근거해 문서를 찾는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피항소인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 항소인게게 손해가 생겼다.

항소인은 Invicta Poultry Ltd사건은 그 비용이 912파운드인데 본 사건의 26,000파운드와 비교할 수 없음을 근거로 종래 판례와 구별을 주장하였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은 아랍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류를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성실하게 대응하였으므로 관세를 청구함에 있어 특정한 상황에 따란 과도한 시간의 경과는 불공정하다.

□ 판결 및 시사점

항소인의 대리인 Mr Haytayan은 항소 근거의 관련부분을 취소하지 않았고, 피항소인이 관련 협약의 조건 및 소송법에 따른 의무가 있으며 관세가 적절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하였다. 그의 주요한 주장은 인권의 위반에 관련되었다. 단, 재판소가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다른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소인이 이 수입과 관련해 특혜관세율에 자격이 있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증거와 관련하여 43항에 정한 피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항소인은 적절한 법령체계를 정리하여 설명하였을 때 달리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주장은 위에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주요 사안은 항소인이 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규명하였는가 이며, 그러한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가능한 구제가 있는지 여부이다. 심리의 개시에서 재판소의 주 관심사는 피항소인이 처음 물품에 대해 적절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항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준 잘못된 정보, 그리고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제기한 높은 관세율의 부과의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이유들이었다. 법원은 그 당

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이 개정된 1992년에 협약이 개정되지 않았던 것을 몰랐고 또한 Mr Timson-Hunt도 몰랐던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재개된 심리에서야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지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물품의 원래 수입과 피항소인의 높은 관세 지불요구 사이의 시간 경과 문제이다. 이 문제는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관세를 회수하기 위해 3년 이내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규정 (EEC) No. 2913/92가 적용된다. 본 사건에 있어 추가 관세에 대한 요구는 3년의 기한 이내에 하였으므로 항소인은 그와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관세청장은 최초 요구 이후 절차상 지나치게 지연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인이 원산지증명에 시간과 비용이 든 것과 같은 문제들이 피항소인의 지연과 특별히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들은 레바논 세관이 조사를 한 시점에 레바논의 생산자가 폐업한 결과에 다른 것이고, 또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3년의 기간 이내에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항소인에게 발생된 비용 문제는 행정청의 행정지연의 문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항소인이 원산지 증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항소인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유럽연합이 원산지라는 사실과 모든 점에서 협약의 다른 조항을 준수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관련 문서를 절대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대리인은 EUR.1이동인증서가 적절히 날인되었음을 보장하지 못했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됨에 따라 항소인이 특혜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협약은 영국 세관당국이 레바논 세관당국에 문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항소인의 위치에 있는 어느 자가 그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며, Mr Timson-Hunt가 진술한 바와 같이 항소인이 제공할 수 있는 문서의 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2003년 11월의 서신에서 항소인에게 레바논 세관에 접근해 새로운 EUR.1 인증서의 승인을 요청할 것을 제안한 것은 항소인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Mr Timson-Hunt는 스스로 관련 법적 규정을 아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고 진술하였다. 충족시켜야 할 법적 요건에 관해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한 자문

에 대해 항소인이 의지한 것은 본 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이 적절한 기관이므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11월까지 완전히 잘못된 자문을 한 상황에서 항소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피항소인은 항변할 수 없다. 또한, 항소인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EUR.1 이동인증서 서명자의 서신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항소인은 협약의 개정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전 협약을 바탕으로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상화에서, 피항소인은 납세자가 그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Mr Timson-Hunt는 피항소인이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그것이 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항소인이 변경한 것은 결정에 대한 근거가 아니었으며,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한 자문은 피항소인의 결정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문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항소인이 잘못된 법적용을 통하여 자문한 것은 항소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피항소인이 발송한 11월 서신에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지도 않았다. 핵심적인 문제는 피항소인이 그들의 주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항소인이 협약의 개정상황에 무지했고 게다가 법률의 잘못된 원칙을 적용하고 항소인에게 잘못 자문을 한 것이다.

유럽연합 기본 인권헌장 41(3)항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럽의회 기반 문서로서 본 상황에서는 참작할 수 없다. 인권법 13조는 법 자체 내에서 실체적인 구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본 인권헌장은 의회를 위한 것으로 공포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적용할 수 없다.

본 법원은 따라서 피항소인의 행정적 오류가 항소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본 사건에서 결국 원산지증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본 재판소에서는 그러한 구제를 다룰 수 없다. 결국 본 항소는 항소인이 주장한 비용에 대한 명령 없이 기각한다.

본 사안은 영국 수입자가 레바논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였으나 영국 관세청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항소이다. 본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레바논 세관의 서명이 날인 되지 않는 EUR. 1인증서가 유효한 것인가 였는데 영국세관이 레바논 세관에 검증 요청한 결과, 레바논 세관은 해당 인증서가 위조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해당 인증서의 진실성을 신뢰하였고 위조여부에 대

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항변하면서 관세청이 요구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들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레바논 생산자가 이라크 전쟁 중 폐업을 하면서 해당 증빙를 완수 할 수 없었다.

결국 원산지증명을 충족하지 못함에 대하여 항소인과 피항소인, 법원 모두 이견이 없으나 다만 항소인이 피항송인의 잘못된 행정자문으로 인하여 장시간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원산지증빙자료 입수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럽인권헌장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항소인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음은 확인되고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인권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슬로바키아

□ 사례 개요[151]

【원고】 슬로바키아 국세청
【피고】 Profitube spol. s.r.o.,
【쟁점】 역내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유예제도 관련분쟁
【결정사항】
【판결법원】ECJ fist chamber
【판결일자】 2012년 11월 8일

□ 사실관계

법원에 제출된 조회 및 의견지시에 따라, Danovy urad pre vybrane danove subjekty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기관: “the Danovy urad”)이 2005년 7월, 8월, 9월 및 10월 그리고 2006년 1월, 2월, 4월, 5월 및 12월의 수개월 동안 Profitube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사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다.

그 세금감사 조사기간 동안 Kosice에서 설립된 회사 SSIM a.s.는 Profitube에게 판매된, 철강 반제품 즉 열연 코일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왔다. 그 Profitube가 이용하는 공공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슬로바키아의 영역에 소재한 그 코일은 관세규정의 98조의 의미 내에서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었다.

열연 코일은 관세규정의 114조의 의미 내에서 철강부품으로 가공되기 위해 관세유예제도를 이용한 역내가공원칙에 따라 보관되었다.

그 열연코일에 대해서는 다시 형강으로의 가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통관규칙 제114조의 의미에 따른 유예시스템 형태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였다.

151) 슬로바키아의 원산지관련 또는 FTA 무역관련 분쟁사례를 수집할 수 없어 슬로바키아 대법원을 거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진행된 관세관련 분쟁사례로 대체하였다.

Profitube는 그 철강 부품을('문제의 물품') Kosice에서 설립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등록된 회사 Mercurius s r.o.에게 판매하였다('문제의 판매') 문제의 물품이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다시 보관되었다. Profitube는 문제의 물품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었다.

회계연도 2005년 및 2006년 동안 수행된 모든 거래 도중 문제의 물품은 동일한 공공 세관창고에 남아 있었다.

2006년 6월 27일의 결정에 따라 세관(Danovy urad)은 다음을 결정했다: 문제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Profitube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의 2(1)(a), 2(2)(a), 8(1)(a), 13(1)(a) 및 19(1)항과 함께 판독하는 그 법률의 69(1)항을 침해하였다.

그 점에서 세관(Danovy urad)는 슬로바키아 영역에 소재한 공공 세관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공급을 통해 Profitube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의 2(1)(a)에 따른 세금에 해당하는 물품의 공급을 하였다는 견해를 가졌다.

2007년 10월 25일의 결정을 통해 관세청(Danove riaritel'stvo)은 세관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2008년 7월 23일 판결을 통해 Bratislava지역법원(Krajsky sud v Bratislave)은 관세청의 결정에 대해 Profitube가 제기한 소송을 유지하였고 사안을 관세청에 되돌려 보냈다. Bratislava지역법원은 특히 자유유통으로 보관해야 하는 비회원국의 물품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관세청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슬로바키아 대법원(Najvyssi sud Slovenskej)은 2009년 10월 20일 판결을 통해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세관창고는 법적으로 그 영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간주하여 Bratislava지역법원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관세청은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의 2(1)(a)호의 목적상 문제의 판매가 국내 영역에서 대가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이 옳았다. 게다가 문제의 판매는 그 법률의 12조의 의미 내에서 수입의 대상이 아니었다.

□ 당사자주장

Ptofitube는 슬로바키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Ustavny sud Slovenskej republiky)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2010년 10월 27일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결정을 위해 사안을 대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슬로바키아 헌법의 46(1)항의 목적상 법적 보호에 대한 Profitube의 기본권리 그리고 1950년 11월4일 로마에서 체결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의 6(1)의 의미 내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견해를 가졌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대법원이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에 따라 관세규정이 그 법률에 우선해야 하는, 그 부가가치세 법률의 12조의 적용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절차를 유보시키고 예비 결정을 위해 다음 질문들을 사법재판소에 보냈다:

‘(1) 2005년 및 2006년에, 유럽연합의 비회원국(우크라이나)의 물품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수입자에 의해 회원국의 공공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그 세관창고에서 수입통관 유예절차에 따라 후속적으로 가공되어 결과적인 제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세관창고에서 방출되지 않고 후속적으로 세관창고보관 절차로 복귀시키는 규정No 2913/92의 114조의 의미 내에서 즉시 수출되지 않고 대신 그 세관창고에서 물품의 가공자에 의해 그 회원국의 다른 회사에게 판매된 경우, 동일한 세관창고 내에서의 상품의 판매가 여전히 공동체 관세규정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거래가 [6차 지침]에 따른 시스템에 현재 해당되는 범위에서 그 판매에 의해 법적인 환경이 변경되었는지, 즉 6차 지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목적상,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공공세관창고를 6차 지침의 3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서 공동체의 영역 또는 회원국의 영역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가 수립한 권리남용의 원칙으로 볼 때, 그리고 6차 지침의 적용[사건 C-255/02 Halifax 및 기타 [2006] ECR I-1609]과 관련해, 위 사례를 신청인이 슬로바키아 영역 내에 소재한 공공세관창고에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대가에 따른 공급을 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3)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해당 거래가 현재 6차 지침에 따른 시스템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거래가 다음과 같은 과세되는 사건인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a)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영역 내에 소재한 세관창고에서 물품의 인도 결과 세금을 과세할 수 있게 되고, 6차 지침의 10(1)항 및(2)항에 따른; 또는

(b) 물품이 제3국가로부터 수입된 후 (6차 지침의 10(3)항), 물품이 그 세관창고에서 보관되는 동안 회원국의 다른 자에게 판매됨에 따라 세관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경우

(4) 제3국가로부터 세관창고로 수입되어 그 안에서 가공되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의 영역 내의 세관창고에서 회원국의 다른 자에게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 그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서문에서 표현된 6차 지침의 목적 또는 [1994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WTO 설립 협정의 부록1A에 표시된 합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의 검토도 필요하다.

□ 판결 및 시사점

편의상 함께 검토하는 첫째 및 셋째 질문에 따라, 국내 법원은 본질적으로 비회원국의 물품이 회원국의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유예시스템의 형태로 내부 가공약정에 따라 가공되어 후속적으로 판매되어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다시 보관됨으로써 그 모든 거래에 있어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동일한 세관창고에 남아 있는 경우 그 물품의 판매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묻는다.

예비적 의견으로서, 6차지침의 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영역에서 과세대상자가 실행한 물품의 수입 그리고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과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주요절차에서 문제가 된 그 물품이 6차 지침의 2(2)항의 의미내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차 지침의 7(1)(a)에 따라, '물품의 수입'은 23EC 및 24EC조항에 정한 조건

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공동체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6차 지침의 7(3)항은, 그 물품이 공동체로 반입될 때 그 지침의 16(1)(B)(a), (b), ©및 (d)에 언급된 약정들의 하나에 따라 보관된 경우 그 약정에 해당되는 것이 중단된 영역의 회원국에서 그 수입이 실행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비회원국에서 온 해당 물품이 회원국의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었으며 유예시스템의 형태의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그 회원국의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다시 보관되기 이전에 판매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물품은 6차 지침의 16(1)(B)(c)에 언급된 두 약정에 따라 공동체에 반입된 후 보관되었다.

문제의 물품은 문제의 판매일자에 약정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것이 비록 유럽연합의 영역으로 물리적으로 반입되었을 지라도 그것은 6차 지침의 2(2)항의 의미 내의 '수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 취지에서 사건 C-305/03 위원회 v 영국 [2006] ECR I-1213, 41항을 참조)

그 점에서, 그 물품들이 세관약정을 변경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것들에 수입된 물품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두 관련 세관약정들이 6차 지침의 7(3)항에 언급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요절차상의 분쟁 사실의 일자에 수입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의 물품은 6차 지침의 2(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둘째로, 주요 절차상 그와 같이 문제가 된 물품의 판매가 6차 지침의 2(1)항의 의미 내에서 그와 같이 행위를 한 과세대상자가 국가의 영역 내에서 대가에 따라 실행한 물품의 공급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첫째 6차 지침의 5(1)항에 따라 '물품의 공급'은 소유자로서 유형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법재판소의 판례법은 그 용어는 상대방이 재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유형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상대방에게 권한을 준 일방당사자에 의한 그 재산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한다. (특히 사건 C-320/88 Shipping and Forwarding Enterprise Safe [1990] ECR I-285, 7항; 공동사건 C-497/09,

C-499/09, C-501/09 및 C-502/09 Bog and others [2011] ECR I-1457, 59항 참조)

둘째, 6차 지침의 2(1)항의 의미 내의 '대가에 따른'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은 제공된 물품 또는 서비스와 수령한 대가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의 존재를 추정한다 (사건 102/86 Apple and Pear Development Council [1988] ECR 1443, 12항; 사건 C-53/09 및 C-55/09 Loyalty Management UK and Baxi Group [2010] ECR I-9187, 51항)

셋째, 물품의 공급은 '그와 같이 행위를 하는 과세대상자'가 실행을 해야 한다. 과세대상자는 그의 과세대상 활동의 과정에서 그가 거래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행위를 한다. (사건 C-587/10 VSTR [2012] ECR,49항) 이 경우, 조회 지시에 따라 Profitube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등록된 과세대상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의 판매가 그처럼 행위를 하는 과세대상자가 대가에 따라 실행한 물품의 공급을 구성한다. 주요절차에 있어 문제가 된 사례에서 공급의 장소는 물품이 판매일자에 소재한 장소, 즉 슬로바키아 영역에 소재한, Profitube가 이용한 공공세관창고이다.

넷째, 조회한 법원은 더욱 특히,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세관창고가 6차 지침의 2(1)항의 의미 내의 '국가의 영역 이내"에 소재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그 점에서, 6차 지침의 3(2)항에 따라 '국가의 영역 이내'는 299EC조항에서 각 회원국에 대해 정의된 EC조약의 영역범위에 상응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299EC조항은 1항에서 조약이 적용되는 회원국들을 열거하고, 한편 다음 조항에서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정한다.

6차 지침의 3(3)항은 특정한 국가 영역을 그 지침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이 경우, 본 판결의 56항 및 57항에서 언급된 규정 또는 기타 6차 지침의 규정은 공공 또는 개인의 세관창고가 6차 지침의 3(1)항에 정해진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경우 '국가의 영역 이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 범위와 관련해 세관규정은 세관창고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6차 지침의 2(1)항의 목적상 세관창고는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경우 '국가의 영역 이내' 인 것이다.

또한, 6차 지침의 2(1)항은 공급이 공동체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Profitube가 그의 서면답변에서 유지하는 것과 상반되게 해당물품이 수입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회원국의 영역에서 공급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았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의 판매는 6차 지침의 2(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대상이며, 그 지침의 10(2)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사건이 물품의 공급이 실행된 일자에 발생되었다는 것이 유지되어야 한다.

단, 6차 지침의 16(1)항은 그 항의 (B)및 (D)호에 언급된 약정들과 관련해, 세관창고보관 절차 또는 내부가공 약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의 공급 또는 (B), (a)~(d)호에 열거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급에 대해 그 상황의 하나가 유지되는 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단, 그 거래들은 최종 사용 그리고/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의 중단에 따라 지불할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그 각 거래에 대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 과세된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국들은 따라서 세관창고보관 절차, 내부가공 약정 및 세관창고에서 수행된 거래를 포함해, 16(1), (B) 및 (D)에 언급된 약정 또는 상황에 따라 보관된 물품과 관련해 국가 내에서 수행된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 취지에서 위원회 대 영국, 40항 참조)

법무담당관이 그의 의견 29항 및 30항에서 지적했듯이, 6차 지침의 16(1)항은 원칙적으로 유예 관세약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의 공급을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세관창고에서 과세대상자가 대가에 따라 실행한 것은 6차 지침의 2(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이 경우, 주요절차에서 신청인과 같이 서면의견을 제출한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이6차 지침의 16(1)항에 따라 문제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여지가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한 문제의 판매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지하였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그 시설을 이용하였는지는 국내법원이 확인한다.

따라서 첫째 및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회원국의 물품이 회원국의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유예시스템의 형태로 내부 가공절차에 따라 가공되어 후속적으로 판매되어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다시 보관됨으로써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동일한 세관창고에서 그 모든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 그 회원국이 6차 지침의 16(1)항에 따라 그 판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여지가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 물품의 판매는 6차 지침의 2(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국내법원이 그 시설의 사용을 확인한다.

위의 근거에 따라 법원(제1 재판관실)은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비회원국의 물품이 회원국의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유예시스템의 형태로 역내가공 약정에 따라 가공되었으며 후속적으로 판매되고 세관창고보관 절차에 따라 다시 보관됨으로써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한 동일한 세관창고에서 그 모든 거래가 유지된 경우 그 회원국이 6차 의회 지침의 16(1)항에 따라 그 판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여지가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은 국내법원이 확인), 그 물품의 판매는 매출세에 관한 회원국들의 조화에 대한 1977년 5월 17일자 6차 의회 지침 77/388/EEC; 부가가치세의 공동시스템; 산정의 통일 기준의 2(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대상에 해당한다.

동 사안은 유럽연합의 비회원국(우크라이나)의 물품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슬로바키아)의 수입자에 의해 회원국의 공공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그 세관창고에서 수입통관 유예절차에 따라 후속적으로 가공되어 제품으로 완성되었다. 그 후 동 상품이 세관창고에서 반출 없이 세관창고보관절차에 따라 회원국내의 다른 업자에게 판매된 경우로 이때 동일한 세관창고 내에서의 물품의 매매행위가 유럽공동체 관세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6차 지침]에 따른 회원국 영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슬로바키아 세관창고 내에서 역내가공이 추가로 이뤄진 후 상품으로 완성되어 다른 업자에게 판매된 행위를 '수입'행위로 보아 유럽공통체 관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역내에서의 판매'행위로 보아 유럽의회 제6차 지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 영역내의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5) 폴란드

□ 사례 개요

【원고】 S.G
【피고】 폴란드 관세청
【쟁점】 스위스산 차량의 EUR. 1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결정사항】 기각(원고패소)
【판결법원】 최고행정법원
【판결일자】 2012년 6월 22일

□ 사실관계

판결의 이의 제기 사유서에는 원고 S.G는 스위스 승용차 브랜드 O.V 수입과 관련하여 2002년 9월 […]일자에 SAD E13 문서를 포함한 세관 신고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 11월 […]일자에 R 지방 세관서는 신고 결정에 관련한 세금과 세관 의무 사항을 설명하였다. 스위스 세관 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 검증이 부적절하게 되었고, 이는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R 지방 세관서에서는 2005년 2월 […] 일자에 상기에 언급한 세관 신고와 2005년 4월 […]일자에 내린 결론에 관하여 신고 절차를 재개 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 […]의 결정을 취소 하였다. 그리고 세율 적용 또는 명시된 관세 액수 범위 내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 최소 2500 EURO, 관세 부채 (미납금) 규모 10.142,80 ZL 및 백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매매 계약서 및 모든 데이터와 서명의 인증이 들어간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수출 회사 E.A.E의 선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이다. (R지방 세관서 결정)

2005년 8월 […]일자에 원고는 W지방 세관 의장에게 2005년 4월 […]일자에 R 지방 세관서에서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R 지방 세관서가 내린 결정 사항이란 상품 원산지 설정, 관세 세율 명시 및 2005년 6월 […]일자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및 납세 의무 규정에 대한 액수를 의미한다. 원고는 2005년 8월 […]일 번호 […]에 E.A.E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EUR1에 첨부하였고, 이는 스위스 세관 당국이 확인하였다. 2006년 4월 […]일자 서면에서 원고는 2005년 8월 […]일자에 작성한 자신의 서면이 2005년 4월 […]일자에 R 지방 세관서에서 내린 최종 결정을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기관은 EUR 1, 번호 […] 문서 검증을 진행하였고, 스위스 세관 당국의 정보로부터 상기의 차량이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독일에서 스위스로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으며, 상기의 차량이 동일한 조건하에 다시 수출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질문지를 포함한 폴란드 세관 당국의 제안서를 미루어 볼 때, 스위스 당국은 CCM(소비자 만족 자율 관리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위스 당국은 폴란드의 세관 당국의 결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지를 지적하였다.

□ 당사자주장

2005년 9월 […]일자에 원고는 W 지방 세관 의장에게 2002년 10월 […]에 자동차 관세 가격에 관한 R지방 세관서가 내린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기관은(원고) 2005년 3월 […]일자에 이 결정이 관세법 265조 1항에 근거하여 2002년 10월 […]일자에 결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절차를 취소하였다.

2006년 6월 […]일자에 R 지방 세관서는 2005년 4월 […]일자의 결정(원고측 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절차 재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W 지방 세관 의장은 해당 결정을 기각 하였다. 이는 원고의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인정한 것이다.

2008년 2월 […]일자에 내린 다음 결정에 관하여, R 지방 세관서는 해당 절차 재개를 거부하였다. 내용인 즉, 2002년 9월 […]일자의 세관 신고가 "상품 원산지, 세율 적용 및 2005년 4월 […]일자에 책정한 관세 액수 범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R 지방 세관서가 판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원고

가 주장한 이의 신청을 인정하여 2008년 9월 W 지방 세관 의장이 R 지방 세관서의 결정을 무효화 하였다.

2009년 2월 [..]일자에 다음 1심 기관에서는 2005년 4월 [..]일자에 내린 전체 결정 사항에 대한 취소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일자에 항소 기관은 이 결정을 무효화 시켰다.

2009년 11월 […]일자에 R 지방 세관서는 세관 신고에 관한 2005년 4월 […]일자의 최종 결정과 2009년 12월 […]일자에 내린 결론 (상기에서 다룬 본 사건에 대한 총 결정 사항)에 대해 무효화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절차 재개를 위한 기본 사항으로 새로운 증거- 스위스 세관 당국이 2005년 8월 […]일자에 발급한 인증서 사본 EUR 1, 번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인증서는 계약서 EFTA에 의정서(PROTOKOL)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폴란드 국가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된 순간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스위스 세관 당국에 의해 이러한 문서를 발행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기관은 이 문서가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상황에서 무효화가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세금 조례 245조 1항 3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4월 […]일자의 결정은 폐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산지 증명서 EUR 1, 번호[…]에 근거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 부당한 내용이 합의의 기초로 채택된 사실이라고 잘못 가정하였음을 주장하며 2009년 12월 […]일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다.[152] 원고의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항소를 바탕으로, W 지방 세관의장은 1심 기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W 지방 세관 의장은 이 문서가 법적 근거가 없이 발행된 것을 감안하면, 스위스 세관 당국에 의해 진행된 검증 절차는 증명서 EUR 1, 번호 […]를 포함한 상품 수령이 세율을 결정짓는 특혜 관세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증 결과는 합법적인 증거이며, 수입 국가에 해당된다. 이 상황에서 의정서 B에 의

152)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 한 내용에 특혜 관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합의 하였다고 피고가 잘못 설정하였다는 내용임

거한 상품 원산지 특혜 서류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율 인하로서 특혜 관세를 적용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EUR 1 번호 […] 증명서와 2002년 9월 […]일자에 발행한 영수를 포함한 수출 선언에 해당되는 이전의 원산지 증명서는 적절하지 않다. 수출업자가 유럽 연합의 상품 원산지로 발행하지 않은 채, 스위스 세관 당국에 의해 초기 검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증명서 EUR 1 번호[…]은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는 2010년 7월 […]일자 W 지방 세관 의장의 결정에 대해 W 지방 행정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발행된 증명서 EUR 1이 세율을 낮추는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EFTA 계약서 의정서 B 18조를 위반한 것이며 무효화를 주장하였다. 세율 감소를 적용하는 것은 상품 원산지가 있을 때, 그리고 EFTA 국가 간의 계약이 종료 되었어도 서류 EUR 1이 상품 수입한 후에 발행될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는 증명서 EUR 1 번호[…]는 자동차의 원산지 증명서 이며, 스위스 세관 당국은 -기관에 반대하여- 이 문제가 폴란드 국가의 재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관세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판결 및 시사점

지역 행정 법원은 이러한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법원은 타당한 기관이 실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고, 2002년 9월 […]일자에 세관 신고가 확실하게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문제로 받아드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며, 그 날짜에 해당하는 관세 부채(미납) 발생과 법적 의무는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법원은 관세법 209조 2항 (제정 2001년 75번, 후 개정 802)에 따른 해당 날짜에 세관 신고한 점과 유럽 연합의 RP 가입 후 의무 조항에 의거 <1992년 10월 12일자 위원회 규정(EWG) 번호 2913/92 201조 2항> 유럽 통합 관세 법 (제정 UE L 1992년 10월 19일자)에 따라 세관 신고 접수 시에 관세 부채(미납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이 규정에 관한 조항은 2004년 3월 19일자 법안 26조항에 내용이 나와 있다.- 법 시행 규정- 관세 법. 법원은 상품에 관하여 상품 원산지의 특혜 설정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992년 12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폴란드 공화국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국가 (EFTA)간의 국제 협정

- 1991년 12월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폴란드 공화국과 유럽 공동체 및 회원국 사이에 체결한 관계 수립 유럽 협정

○ 폴란드-EFTA FTA협정(1992)상 원산지검증: 간접검증 원칙

제 1 심 법원은 상기에 언급한 규정 사항에 따라, 상품 원산지 검증은 수출국가의 세관 당국에서 진행하며, 수입 국가의 세관 당국은 해당 사항만 검토하고, 상품 원산지 검증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진행한 검증 결과는 수입 국가 세관 기관에만 구속력이 있고 추가 확인 및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1심 법원은 - 증명서 EUR1 번호[…] 또는 독일 자동차라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세관 신고서에 부착한 구매 문서에 관한 원본, 관세 0%를 적용할 수 있는 특혜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증서 중 적어도 하나는 해당 사건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세관서는 이 문서가 법적 근거가 없이 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서 EUR1 번호[…]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증명서는 계약서 EFTA에 의정서(PROTOKOL)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폴란드 국가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된 순간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스위스 세관 당국에 의해 이러한 문서를 발행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 1심 법원에서는 이 경우 법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금 조례 210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의정서 B는 2004년 1월 26일자로부터 정부 문서에 영향력을 미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 사항은 폴란드(2003년 1차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소속 공동위원회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의무 규정이다. 또한 의정서B 개정사항은 2003년 10월 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였다. (법안 2004년 117번 1222). 이는 유럽 연합에 가입 후 발표된 사항들이다.

상기에 언급한 규정 위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제 1심 법원은 기관이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2005년 결정 문제. 특혜 적용 없이 의무 관세를 부과한 점 (본 경우에, 절차 재개에 관하여 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임) 자동차 원산지 특혜에 관련된 문서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 하지 않았다.- 원고는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 "SAD"와 함께 이 문서

들을 제출하였다. 2002년 3월 […]일자 스위스 세관 당국이 이를 위조한 가능성이 의심되어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2007년 3월 […]일자에 스위스 세관 당국은 2004년 3월 [..]일자의 정보에 모순이 있었다고 전하였으며, 반대로 법원은 해당 기관이 이 모순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것과 관련하여 2007년 3월 […]일자에 스위스 세관 당국이 제시한 정보 내용에는 2002년 9월 […]일자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기초로 하여, 문서 EUR 1, 번호 […]는 독일산 자동차라는 원산지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스위스로부터 수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2004년 3월 […]일자 정보는 추후 2007년 3월 […]에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세관 신고에 부착된 차량 원산지 문서의 진위를 논의할 수 없으며, 제 1심 법원에 의견에 따라, 특혜 관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이 문서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법안 191조, 122조 및 세금 조례 187조 1항에 의거한 절차 규정 위반인지는 상기의 모순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W 지방 세관 의장은 "법 절차에 관한 관리 행정 법안(이하 P.P.S.A로 표기)"에 대해서 제정 법안 174조 2항에 근거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 절차에 관한 관리 행정 법안 (P.P.S.A) 141조 4항에 근거한 법원이 발견한 오류란, 폴란드 공화국과 1992년 12월 10일자 제네바에서 서명한 유럽 자유무역 연합 국가 (EFTA) 간의 계약 의정서 B의 의무 규정 범위 내에서 잘못 설정하였고, 차량 원산지 검증 결과가 모순을 초래한 사실이다.

P.P.S.A 133조 1조에 의거한 관련 이의 제기는 세무서가 진행한 절차가 법원이 확인한 오류를 고려하여, 1997년 8월 29일 제정 122조, 187조 210항 4번 세금 조례에 따른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정으로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가 해당 증거를 취합하여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평가는 세금 조례 191조에 명시된 증거 평가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W 지방 세관 의장의 상기의 주장은 항소 판결을 취소한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W 지역 행정 법원에 전달하였다. 원고의 이의 신청을 거부하는 데에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 폴란드-EFTA와 폴란드-EU 협정의 관계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의정서 B 의무 규정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2004년 4월 16일자 정부 증명서 및 2004년 6월 7일 번호 129, 1364 공식 저널에서 발표된 문서에서 나와 있듯이 폴란드 대통령이 EFTA 협정을 맺으면서 그 결정이 중단 되지 않았고, 폴란드 공화국이 유럽 연합(법안 2004년 129번, 1365) 가입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무역인지 아니면 일반 무역 관계 계약서의 의무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004년 5월 3일자 관련 소식이 1992년 12월 10일 제네바에서 진행한 EFTA 국가와 폴란드 사이에 협정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관의 이의 신청 거부 결정에 따라, 제 1심 법원은 2004년 3월 [...]일자에 스위스 세관 당국이 근거로 내세운 정보인 2002년 9월 [...]일자에 발행된 영수증(receipt)의 원산지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2007년 3월 [...]일자에 스위스 세관 당국이 확인한 인증서가 공식적으로 무효라며 원산지 정보의 모순에 대한 위조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최고행정법원의 판단

최고 행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의 제기 거부결정은 근거가 정당하지 않으며, 최고 행정법원이 무효 절차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의제기 거부결정은 받아드릴 수 없다.

제 1심 법원의 결정은 원고에게 절차 재개 후 세관 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다룬 최종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해당 절차가 철저하고 상세하게 만들어졌으나 결함이 있다고 발견되어 최종 결정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관이 진행한 절차의 재개가 최종 결정을 완료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가능성과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에 이용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조례 243조 3항에 적용하면, 절차 재개에 대한 결정이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는 재개 조건에 맞는 지는 적절한 기관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 근거를 확립하여야 한다.

절차 재개 후 최종 결정을 해결 하는데 심사 절차의 한계라는 문제가 드러

난다. 본 사건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목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기관은 최종 결정을 내린 절차에서 법적 및 사실적인 문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보통" 절차에서 진행한 모든 증거의 신뢰성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 조례 규정에서는 절차 재개 문제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절차 재개 후에 절차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규정해야 하는 데 이때 세금 조례 187조 1항, 191조 122조와 같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는 기관이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취합할 의무가 있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적인 증거 자료를 취합함으로써, 사실이 입증이 되는 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4년 3월 [...]일자에 스위스 세관 당국의 정보가 본 문제 사항에 놓여 있는데, 증거가 남아 있는 절차 재개 후 절차에서 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의 제기 거부 결정을 인지한 판결에서 제 1심 법원에서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미결의로 남은 판정에서와 비슷한 경우이다. 제 1심 법원에서 스위스 세관 당국이 2004년 3월 [...]일자의 정보가 모순이라는 판정으로 남은 채, 2007년 3월 [...]일자에 제시한 정보에 동의한 것이다. 그 날짜에 확인한 서면에서는 물품은 원산지 불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반면 2007년 3월 [...]일자에 서면에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폴란드 측의 제안에 동의하며 자동차가 독일에서 유입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증명서가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기에 이것은 상품 원산지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스위스 세관 당국의 서면에는 2004년 3월 [...] 일자에 제시한 정보의 이전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였다.

이의 신청 거부 결정의 두 번째 주장은 법원이 (...) 문제를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린 p.p.s.a 규정 133조 1항을 근거로 하였다. p.p.s.a 133조 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법원은 본 문제를 기관에 의해 완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행정 법원에 제기한 항소와 관련하여, 사법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의를 허용 범위 내에서 증거와 사실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스위스 세관 당국의 상기의 정보들이 문제에 대한 증거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의 내용을 분석 하자면, 2004년 3월 [...]일자의 스위스 세관 당국의 정보가 절차 재개 후에 취합한 증

거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본 문제에 대한 다른 증거를 취합한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는다. 제 1심 법원은 세관 기관이 세금 조례 187조 1항, 191조, 122조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법 절차에 관한 관리 행정 법안 (P.P.S.A) 141조 4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발견한 오류란 폴란드 공화국과 1992년 12월 10일자 제네바에서 서명한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 (EFTA) 간의 계약 의정서 B의 의무 규정 범위 내에서 잘못 설정하였고 차량 원산지 검증 결과라는 모순을 초래한 사실이다. 제 1심 법원은 단독적으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님에 주목해야 하며, 행정 문제로서 기관에 의해 진행한 증거자료 평가를 기초로 평가하였고 본 문제는 세금 조례 규정에 엄격한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상기의 이의 신청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EFTA 계약 의정서 B규정에 구속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W 지방 세관 의장의 입장에 동의해야 한다. 동시에 제 1심 법원이 본 문제에 어떠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6) 스위스

□ 사례 개요

【원고】 Medigros AG

【피고】 스위스 관세청

【쟁점】 원산지증명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관련 분쟁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스위스 연방재정법원

【판결일자】 1988년 11월 11일

□ 사실관계

1982년 2월 16일과 4월 27일 , 7월 12일과 14일 그리고 9월 30일에 Medigros AG는 여러 개의 실험실 장치(원심분리기 튜브나 피펫 등)을 스위스 세관을 통해 수입하였다. 1983-07-14의 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은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바탕으로 면세혜택을 받았다. 1983-07-14에 수입된 제품은 잠정적으로 세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에 따라 180,55 스위스 프랑이 예치되었다.

1983-07-14와 1983-07-27의 서한에 따라서 스위스 세관 행정은 독일 세관당국에 1982-07-14에 송부된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적합성을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인츠에 있는 중앙 세관에서 스위스 연방 관세국에 보낸 1984-02-10일자의 답변에 의하면검증 결과 해당 송부제품은 스위스와 유럽경제 연합(ECC)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합당하는 원산지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출업체인 독일의 주식회사 Imeda-Grosshandels-GmbH가 1982년 11월 11일자로 파산을 한 관계로 첫 번째 사후 검증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검증을 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관세국 제 3부서는 Medigros AG에게 1985-05-20의 독일 당국의 답변을 전달하고 469,55 스위스 프랑을 이후에 관세로 제불 해야 할 것을 통고하였다. 또한 부흐스(Buchs)에 있는 세관은 임시로 표준 계산에 의한 통관 절차를 밟은 1982-07-14의 송부 절차와 내용을 기록할 것을 요구받았다.

비록 Medigros AG가 이미 1985-05-30에 행정적 의도에 반발하였지만 지역 관세국 제 3부는 1985-06-03 에 이미 공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연방 관세국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스위스 관세청 이의신청위원회는 1987-10-30 자의 연방 관세국의 결정에 대한 Meidgros AG의 이의를 완전히 기각하였다.

Meidgros AG는 관세청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과 지역관세국 제 3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항소신청을 했으며 새로운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부차적 요청으로 연방 법원 측에서는 증거를 받은 다음에는 제품에 대해 면세지위를 부여하고 부흐스의 세관에 예치된 금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항소자는 법원이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는 마인츠의 세관으로부터 받은 사후 검증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된 제품이 EC 회원국에서 왔다는 것을 밝혀줄 자신들이 제공한 증거를 관세청 이의신청위원회가 완전하게 불확실한 논리로 거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 판결 및 시사점

연방법원은 행정법원의 항소를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기각한다.

○ 사후검증의 주체

a) 1972-07-22 (AS 1972, 3115; 1975, 1437) 자에 체결된 스위스 연합과 유럽

경제연합(EEC)사이의 자유 무역 협약에 따라 1977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 관세가 철폐되었다. 스위스에 의해 면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EEC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는 제품뿐이다. 원산지에 대한 규정과 원산지 증명의 형식 등이 위의 협정서 Nr. 3 에 언급되어 있다.

b) 수출국의 세관 당국에 의해 수출품에 대한 EUR. 1의 운송 증명서가 발행되었다. (협정서의 제 9장 1항) 1500 계산 단위의 송부제품(1978년에 수정된 협약서의 제 8장 1항 lit. b)이나 3400 ECU (1985에 수정됨)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양식 EUR. 2 가 사용되는데 수출업자 혹은 수출업자를 대신하는 공식 대표자(협정서의 제 14장)가 이 양식을 작성한 다음 서명한다. 공식 양식인 EUR. 2은 1987년 협정서에서 계산서에 수출업자의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c) EUR. 1, EUR. 2의 증거나 설명이 곁들어진 계산서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제품을 원산지가 확실한 제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협정서 제 8장 1항) 하지만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나 원산지재료에 대한 의혹이 있을 시에는 세관 당국은 수출국의 세관 당국에 사후 검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협정서 제 17장) 이러한 사후 검증의 구체적 절차과정은 협정서에 나와 있지 않다. 수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연방 고등법원 BGE 111 Ib 326 /7). 수출국의 세관 당국은 사후검증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연방 고등법원 BGE 110 Ib 309).

연방 법원의 판결은 유럽사법 재판소의 결정과 일치된다. 1984-07-12자의 Les Rapides Savoyards 사건9(EuGH, (유럽 사법 재판소) 컬렉션 1984, p. 3105)에서 법원은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당국이 판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다. 직접적으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화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의 기능은 자유무역 협정에서 세관행정당국사이의 상호 신뢰와 임무 분담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입국의 행정 당국은 수출국 행정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d) 협정서의 제 16장과 17장에서는 의혹 시 사후 검증서에 대한 질의와 추가확인절차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간의 협조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하는데 있어서의 협조가 포함된다.

검증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수입국의 당국은 다른 검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국제법을 위반하지는 않는 사항이다.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후 검증 결과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한다면 그 것의 성사여부는 수입국의 국내법상의 판결에 달려 있다. 스위스 법 연방 법원에서는 수출국 당국에서 또 다른 검증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한 관계로 수입업자의 이같은 요청에 답변하려 하였다. 하지만 스위스 세관 당국에서는 수출국의 또 다른 사후 검증을 막으려고 하였다. (연방 고등법원 BGE 111 Ib 323).

만일 위에 언급된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의 고려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스위스 세관 당국이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고 수출국당국에게 검증한 결과를 확인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한다면 이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협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오직 수출국의 당국뿐이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정뿐이다. 제품이 수입되는 국가의 국내법상 절차는 수입업자에게 수출국의 당국에 의한 사후 검증이 세관당국뿐 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뿐이다. 최종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업자는 이러한 결정에 승복하고 스위스 당국에 스스로를 옹호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a) 항소자는 수입제품의 가장 큰 부분은 이탈리아가 원산지이며 나머지는 EC국의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또 스위스 절차법에 따라 스위스 당국이 자신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위스 세관 당국이 독일 세관 당국에게 새로운 사후 검증을 요구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b) 부흐스(Buchs)의 관세청은 항소자에 의해 1982-07-14일자에 수입된 제품에 공식 양식인 EUR. 2 의 목록에 오른 제품 외에 일본이 원산지인 흡입관(cannula)가 든 다른 상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스위스 연방 관세국은 협정서 제 16/17장의 행정 협조조항에 따라 독일 관세당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마인츠의 연방 관세국의 사후 검증에 따르면 송부된 제품은 자유무역협정에 부합되는 원산지의 제품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 연

방 관세국은 1982년에 송부된 다른 제품의 사후 검증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마인츠의 관세국은 수출업자의 파산으로 인해 실질적인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인츠의 연방 관세국은 처음1982-07-14 일자에 송부된 제품의 사후 검증 결과를 통해 다른 제품도 원산지가 EC국이라rh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 사실을 스위스 연방 관세국에 알렸다.

항소자의 계속된 주장이 정당화될지는 마인츠 관세국이 같은 결론을 내리느냐에 여부에 달려있다. 여기서 우리는 원산지 증명이 올바르다는 증거는 수출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GE 110 Ib 308 /9).

c) 항소자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자신의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아직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써 항소자는 가격 목록과 판매 전망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파산한 수출업자와, 같은 제품을 거래하는 다른 독일 회사의 사장에게도 이 문제에 관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1982년에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회사에 대한 확인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인츠 연방 세관국이 말한 대로 이 회사는 파산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독일 세관당국이 제품 원산지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스위스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새로운 확인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다. 아시아권

(1) 중국

□ 사례 개요

【원고】 구이린지푸스바이오테크
【피고】 중화인민공화국 순강 세관
【쟁점】 품목분류 적정성 항소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광동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일자】 2011년 11월 20일

□ 사실관계

항소인 구이린지푸스바이오테크 (이하 지푸스 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순강 세관 (이하 순강 세관) 행정 처벌 분쟁 안건 소송에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2011)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하였다.

1심 법원은 심리를 통해 2009년 2월 13일 원고 지푸스 회사가 531720090176013959 호 세관신고서를 소지하고 세번 제13021990.99호로 선전 세관 부속 공항 세관 (이하 공항 세관) 에 모그로사이드 수출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공항 세관은 조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정확한 세번은 제29389090.90호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제29389090.90호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신고상의 실수를 인정하였으며 통관 대행회사도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수정/취소 확인서>에 사인을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2009년 6월 10일·7월 4일·7월 24일·2월 19일·6월 19일에 각각 일련번호 530620090067007643호(A)와 일련번호 53062009006713951 1호(B)는 순강 세관을 통해, 일련번호 531620090165747485호(C)는 다펑 세관을 통해, 일련번호

721320090139000043호(D)와 721320090139000188호(E)는 구이린 세관을 통해 모그로사이드 수출을 신고하였으며, 신고 세번는 모두 13021990.99로 총 5480Kg에 달한다.

2009년 7월 23일 원고는 C에 대하여 세관신고서를 구비하여 세번 13021990.99로 순강 세관에 모그로사이드 1320Kg을 신고하였다. 순강 세관은 이에 대해 2009년 11월 20일 원고 대리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심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2010년 4월 26일 순강 세관은 원고에게 <행정처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년 4월 27일 원고가 피고에게 증언 청취 신청을 하였다. 2010년 5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처벌증언 청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당월 26일 증언 청취를 실시하였다. 2010년 11월 3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2010년 11월 23일 법에 의거하여 송달하였다. 상기의 원고가 처벌을 받은 6개의 수출신고물품 가격은 총 231.8만 달러이며, 위안화 1576만 위안으로 환산된다.

원고가 수출 신청을 한 모그로사이드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어느 세 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대한 문제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간의 관점이 서로 대립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수출 신청을 한 모그로사이드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의 세번 '29389090.90'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는 세번 '13021990.99'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쟁점사항

본 안건의 중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가 수출 신청을 한 모그로사이드를 세번'29389090.90' 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있다고 1심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당사자주장

○ **세관의 품목분류 제29389090.90 주장**

본 안건에서 피고가 행정처벌을 받은 행위 중 원고가 수출 신청을 한 모그로사이드를 세번 '29389090.90'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세번 '29389090.90' 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에서 대분류에 속하는 세번가 '29.38' 이며, 이 대분류 세칙 번호에 상응하는 물품명은 '천연 또는 합성으로 만든 글리코시드 (배당체) 및 나트륨·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파생물질' 이다. 세번 '13021990.99' 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에서 대분류에 속하는 세번가 '13.02' 이며, 이 대분류 세칙 번호에 상응하는 물품명은'식물 추출물 및 잔류물, 펙틴·펙틴산염 및 펙틴산 에스테르, 식물 레벨링(铲平)을 통해 얻은 한천(Agar)·기타 접착액 및 침전제, 성질 변화 무관' 이다.

2. 이번 처벌 전에 원고는 세번 13021990.99로 공항 세관에 모그로사이드 수출을 신청하였으며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세번가 29389090.90이라는 것을 지시받고, 스스로 신고된 분류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대리 통관수속 회사도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수정/취소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확인 하였다.

3. 세관은 중국의 수출입 제품 분류를 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며, 수출입 제품에 대한 분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세관은 본 안건이 모그로사이드 중 '천연 또는 합성으로 만든 글리코시드' 범주에 속하며 '식물 추출물 및 잔류물, 펙틴·펙틴산염 및 펙틴산 에스테르에와 식물 레벨링(铲平)을 통해 얻은 한천(Agar)·기타 접착액 및 침전제'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수출을 신고한 모그로사이드를 세번 '13021990.99'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충분하다. 양측의 근거를 비교한 결과 본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수출을 신고한 모그로사이드를 세번 '29389090.90'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원고의 품목분류 13021990.99호 주장**

지푸스 회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본 안건에서 모그로사이드는 개여주 과실에서 추출한 액즙이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13.02' 에 상응하는 '식물 추출물 및 잔류물, 펙틴·펙틴산염 및 펙틴산 에스테르이고, 식물 레벨링(铲平)을 통해 얻은 한천(Agar)·기타 접착액 및 침전제' 로써 '식품류 제품' 으로 대분류된다. 그리고 <수출입세칙>'29.38' 에 상응하는 대분류는 '화학공업 및 관련 공업 제품' 에 속한다.

2. 공항 세관이 통관수속 회사에 분류 일련번호 수정 요구를 한 사실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모르고 있던 사안이며, 통관수속 회사의 행위가 항소인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3. 세관총서가 제품 '빌베리 추출물' ·'황련(三颗针, Barberry Root) 1차 추출물' 의 분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일련번호를 '13.02' 로 한다고 공고하였으며, 모그로사이드와 상기 두 종류 제품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공 방법도 같다. 항소인이 예전에 통과한 구이린 세관·다펑 세관에서도 항소인의 분류 일련번호를 인정받았다.

4·중국은 이미 <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HS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그로사이드는 계속 국제적으로 형성된 일련번호13021990.99에 속해 있으므로 중국은 반드시 협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5·본 안건의 순강 세관은 항소인에게 수정된 세관신고서를 통지해 주지 않았다. 7월에 항소인의 물품을 압수한 후 11월이 되어서야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듬해 3월이 되어서야 항소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에 속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송 처벌 결정 절차는 합법적이지 않았으며 적용 법률도 정확하지 않고 원심 판결 인증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2심 법원에 원심 취소 판결을 청구하여 소송이 제기된 [2009]068호 행정처벌 결정서를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 판결 및 시사점

2심 법정 심문에서 지푸스 회사가 본 법원에 제출한 세 가지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세관총서에서 작성한 HQH106785호 판결서로, 미국 세관총서가 개여주 추출물의 제작 공정을 거친 후의 모그로사이드 제품을 1302류 중의 1302.19.9140류, 즉 '식물 즙액과 추출물 : 기타 : 기타 : 기타 ' 로 분류한다는 점

2.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가 발표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첨가제사용기준에 따르면 위생부가 모그로사이드를 '개여주 추출물' 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며, 즉, '식물 즙액과 추출물'로 제1302류 명칭에 상응한다는 점

3. 미국국토안전부－ 세관국경보호국 7501호 입국신고서（523－08940965에 따르면 빌리톤社에 대한 모그로사이드에 관한 생산 공정·성분 상세 설명 분석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 세관이 모그로사이드의 생산 공정과 제품 성분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실시한 후 모그로사이드 제품을 제130219호에 포함시켜 세관 통과 청산에 적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세 가지 증거는 1심 판결 후 형성되었고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증거의 문제에 대한 규정>제52조의 관련 '새로운 증거' 의 규정에 부합하며 본 법원은 이 세 가지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대질을 하였다.

이밖에 본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항소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행정처벌 결정 전에 수집한 세 가지 증거를 제출 받았다.

1. 광저우 세관 화학검사센터에서 2009년 9월 14일 작성한 <중국 세관 수출입물품（제품）화학검사 검증서>에서는 물품（제품）신고명이 모그로사이드/개여주 추출물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며 화학검사 결과 검사 샘플은 모그로사이드로 판정되었다. 감정 결론 및 설명에 따르면 검사 샘플은 모그로사이드이며 분류는 29389090로 한다는 참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2. 2009년 7월 20일에 항소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선전 세관에 설명한 내용과

3. 2009년 8월 5일 항소인이 피항소인이 설명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모그로사이드의 성분·특징·제품 공정 프로세스·성분 및 제품 판매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증거 역시 법정 대질심문을 거쳤다.

본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제42조의 규정 '수출입물품의 제품 분류는 국가의 관련 제품 분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송수신자가 제품 분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은 화학검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 세관이 인정한 화학검사·검증 결과는 제품 분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에 따라 판단토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품목분류 제29.38호에 상응하는 물품명은 '천연 또는 합성하여 만들어진 글리코시드（배당체） 및 나트륨·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파생물질이며, '13.02'호에 상응하는 물품명은 '식물 추출물 및 잔류물,

펙틴·펙틴산염 및 펙틴산 에스테르이다. 식물 레벨링(铲平)을 통해 얻은 한천(Agar)·기타 접착액 및 침전제, 성질 변화 무관' 이며 본 안건 관련 물품명은 '모그로사이드' 이고 성상은 황색 분말이다. 피항소인은 이를 '29.38'호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의 규정에 부합한다.

더불어 광저우 세관 화학검사센터에서도 모그로사이드 세번를 29389090.90의 분류로 확인한 참고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피항소인의 분류 결론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수출입 제품 분류에 있어서 '29.38'호에 대응되는 유형분류가 유기화학공업 제품이기는 하지만 모그로사이드는 '29.38' 시리얼넘버로 분류되며 이것이 그 식품의 성질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항소인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29.38'호에 대응되는 대분류는 '화학공업 및 관련 공업의 제품' 이고 모그로사이드는 제품계 식품으로 개여주과실에서 추출한 즙액이므로 '13.02' 유형에 대응된다는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항소인은 모그로사이드가 계속 국제적으로 형성된 분류 일련번호 13021990.99에 따라 사용되어 왔다고 하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지 않았다. <HS협약>및 그 부록인 품목분류 리스트에는 모그로사이드의 물품을 '13.02'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항소인이 제출한 관련 미국 세관이 모그로사이드 제품을 '13.02'호로 분류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국가들이 모그로사이드라는 물품에 대해 어떻게 <HS협약> 및 그 부록의 제품 분류 등 리스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설명할 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항소인 또는 중국 세관이 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제86조 규정：'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 ：…… (3) 수출입물품·화물 또는 해외 운송·환적·직송 물품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공항 세관은 2009년 2월 13일에 항소인 지푸스 회사의 대리 세관신고 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항소인이 531720090176013959호 세관신고서를 소지하여 세번 13021990.99로 세관에 모그로사이드의 분류가 잘못되었으므로 29389090.90로 수정해야 한다. 항소인 역시 신고 분류 착오를 인정하였으며 그 대리 세관신고 회사가 대신 <수출입물품세

관신고서 수정/취소 확인서>에 서명하여 확인을 하였다. 이에 모그로사이드의 수출 세번는 29389090.90로 수정되었으며 그 후 항소인은 공항 세관에 모그로사이드 세번 수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인의 선전 대표처 판매 총 책임자 역시 회사가 공항 세관 수정 의견을 받은 후에도 세번 13021990.99에 따라 모그로사이드 수출을 신고한 것은 이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다. 상기 사실을 토대로 보면 항소인은 2009년 2월 13일부터 모그로사이드 수출 시에는 29389090.90의 세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2009년 2월 19일·6월 10일·6월 19일·7월 4일·7월 23일·7월 24일에도 여전히 세번13021990.99로 세관에 6개의 모그로사이드 수출을 신청한 것은 상기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실시조례>제15조 규정：'수출입물품의 품명·세번 ·수량·규격·가격·무역방식·원산지·선적지·하역지·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위법하여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4)국가 외환과 수출 환급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고한 가격의 10% 이상 5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소인의 모그로사이드에 대한 세번 신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6표(票)물품 가격은 위안화 총액 1576만 위안으로 환산할 수 있다. 피항소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위안화 63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1심법원이 원고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확한 결정이므로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

○ 수출자에게 직접 수정신고 고지 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제13조 규정：'세관은 수출입물품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하지만 수출입물품발송인/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수출입물품의 발송인/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수출입물품발송인/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수정/취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출입물품 세관신고서 수정 또는 취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한 후에는 세관이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를 완료해야 한다.' 공항 세관이 항소인에게 세관신고서 수정을 요구할 때 그 대리 세관신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그 대리 회사가 수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공항 세관이 세

관신고 회사에 분류일련번호 수정을 통지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리 세관신고 회사의 행위가 항소인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세관이 항소인에게 세관신고서 수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소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 징수관리방법>제8조 규정：'세관은 법률·행정법규 및 세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물품 제품명·규격 모델·세번 ·원산지·가격·거래조건·수량 등을 심사해야 한다. 세관은 항구 통관과 물품 수출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물품 통관 부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대해서만 프로세스적인 심사를 실시하며, 물품 통과가 허가된 후에 신고 가격·제품 분류·원산지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제9조 규정：'납세이무자가 세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허위 신고에 속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 조사 또는 밀수조사부서에 보내 처리하도록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선전 공항 세관이 항소인의 모그로사이드 분류'13.02' 일련번호 오류를 고지한 날로부터 본 안건이 밝혀지기까지 항소인이 계속 고의로 '13.02'호로 세관신고를 한 6건의 모그로사이드에 대해 피항소인이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항소인은 구이린 세관·다펑 세관에서 모그로사이드'13.02'호로 세관 수출 신고를 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피항소인의 분류를 부정할 이유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피항소인이 모그로사이드를 압수한 후 2009년 8월 3일에 즉각 압수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항소인의 대리 세관신고 회사의 서명을 받았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물품을 압수한 후 이듬해 3월이 되어서야 항소인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의 근거로 성립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피항소인 순강 세관이 제기한 행정처벌 결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정확하게 법률이 적용되었고, 절차도 합법적이므로 1심에서 항소인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합당하기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바이다. 지푸스 회사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며 법에 의거하여 기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제6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한다.

(2) 인도

□ 사례 개요

【원고】 BASUDEV GARG

【피고】 관세청장

【쟁점】 원산지변경 신고건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적정성

【결정사항】 파기환송

【판결법원】 델리 고등법원

【판결일자】 2013년 4월 12일

□ 사실관계

다수의 항소인이 뉴델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재판소(Customs, Excise &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의 2010년 3월 15일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상기의 모든 항소에서 항소인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쟁점은 항소인들이 과세예고통지(show-cause notice)에 참조하고, 과세청장이 2005년 11월 30일자 과세통지 원본(Order-in-Original)에서 신뢰하였으며, 항소재판소가 2010년 3월 15일 판결명령에서 신뢰한, 진술서를 작성한 자들에 대해 2004년 4월 30일에 요청한 반대심문이 승인되었는 지이다. 상기의 요청에 대해, 항소인들은 진술서 작성인을 반대심문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적인 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이 침해되었다. 또한, 항소인들은 관세법(1962) 제138(B)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상기의 진술서들이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서에 포함된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 제CUSAA No. 7/2010호를 제외한, 상기의 모든 항소들에서, 추가적으로 스리랑카 당국의 심리 결론 이후 작성된 조회보고서(enquiry report)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상기의 쟁점들을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소인에 대해 제기된 주요 주장은 항소인들이 중국산 볼 베어링을 수입하였음에도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스리랑카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이다. 과세예고통지는 2004년 4월 30일에 항소인들에게 발급되었다. 각각의 진술인들은 다수의 진술서에서 상기의 과세예고통지를 인용하였다. 항소인 Sh.Anil Goel의 과세예고통지를 인용한 진술서 목록이 있으며, 2004년 5월 6일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답변 5째 단락에 상기의 항소인은 이를 신뢰하였다는 점이 보여진다.

상기의 자료를 통해, 각각 다른 진술인들이 21개의 진술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인용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2004년 5월 6일자 답변 6번째 단락을 통해 상기의 진술인에 대한 소환 요청이 명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5년 11월 30일자 과세통지 원본에서 증인 소환 요청이 요구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과세통지 원본의 50번 째 단락을 보면, 반대심문을 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관세청 공무원을 포함한 상기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소환 요청이 이뤄졌다는 점이 분명하다. 더불어 과세통지 원본의 61번째 단락에서 증인과 인도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DRI) 공무원의 반대심문 요청이 거절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또한 판결과정에서 피통지인들(notices)에게 증인과 관세청 공무원을 반대심문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심문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지 않았다.

□ 당사자주장

항소인은 2005년 11월 30일자 과세통지 원본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하였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상기의 항소들에서 반대심문 기회가 거절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반박의 대상이 된 2010년 3월 15일자 명령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기의 쟁점을 각하하였다(brushed aside)

○ "해외조회결과(Overseas enquiry)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회결과, 현재 해당 상품에 대한 항소인의 동기와 악의적 고의(ill will)가 입증되고 밀수된 상품 일부에 대한 수입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반대심문 거절에

대한 명시적인 항변이 제출된 것을 제외하고 조회 결과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 의해 수집된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의심할 여지 없이, 관세 신고가 잘못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여러 중개인들이 연루된 밀수 조직이 본 사안에 연관되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자연적인 정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 지지 않았다. 항소인들의 변론 과정에서 사법기관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면서 사건전체를 검토하였다.

스리랑카 정보부가 진행한 조사가 인도에서의 사건 조사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준사법절차(quasi judicial proceeding)에 적용되지 않는 증거행위(Evidence act)가 국세청(Revenue)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세청은 사건에 대한 산술적인 정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수집한 증거들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에 항소인에 대해 제기된 주장들에 위반행위의 방법(modus operandi)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인들은 이에 대해 반대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국세청은 입증부담을 면제받으나 항소인들은 여전히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항소인들은 증거를 통해 상기의 범죄행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배제하고 결백(clean hands)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항소인들은 "KG: 브랜드의 볼 베어링이 중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상기의 사항의 어떠한 점도 반박하지 않았다. 항소인들은 자신들의 선의(bonafide)를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수입서류에서 수입된 상품을 스리랑카 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misdeclared). 항소인은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는 면세제도를 악용하였으며, 수입한 볼 베어링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였다.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신고 혜택(Notification benefit)을 악용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 전문 변호인(learned counsel) Sri. Pradeep Jain이 이의를 제기한 주요 쟁점은 자연적 정의 원칙이 위반되었다는 점이었다.

항소인에게 비밀로 한 채 증거들이 수집되지는 않았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보고가 조사 이후에 후속절차로 이뤄졌다. 조사결과를 통해 일련의 밀수활동가 과세예고통지에 드러나 있다. 항소인들은 각자의 밀수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의심을 배제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 밀수 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과 신뢰성뿐 아니라 합리성의 측면에서, 항소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반대심문과 증

거의 성격뿐 아니라 밀수행위의 기밀적인 성격(concealed nature)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근거로 하는 국세청(revenue)의 모든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항소인들의 불공정한 거래가 표면화된 상황에서, 사법절차 상 자연적 정의를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심리과정에서 항소인들이 참조한 사례들은(the citations) 조사의 악의(malafide)로써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인들은 이를 잘못 인용하였다."

상기의 항소들 중 몇몇 사례에서 제기된 다른 쟁점들은 피통지인들이 상기의 통지 발행일자에 열람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이에 답변을 했어야 함에도 과세예고통지가 2004년 4월 30일에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본 사안에 대한 심리는 2004년 10월 14일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관체청장은 상기의 2004년 10월 14일의 심리 종료 이후 시행된 조사/조회를 근거로 2005년 7월 20일자 후속 보고서를 신뢰하였다. 이에 대한 상기의 보고서/자료는 항소인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소인들에게 제공된 적이 없다.

상기의 보고서와 자료 없이 항소인들은 답변할 권리와 보고서/자료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족시킬 유효한 권리를 거절당하였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었다. 상기의 2004년 10월 14일 심리 이후에 상기의 보고서가 고려되었다는 사실은 과세통지 원본의 70번째 단락을 발췌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명백하다.

마찬가지로 M/s Maya Trading Co.와 Devsons의 베어링 수입에 대해 Shri Anil Goel은 자신이 상기의 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hri Anil Goel가 M/s Maya Trading Co.와 Devsons의 수입이 선의로 이뤄졌다고 증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 14일 개별 심리 당시 제출한 변론서(brief)에서 Shri Anil Goel은 해당 상품 관세 신고 시에 M/s Maya Trading Co.와 Devsons가 ICD Patpargani 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의 출처에 대한 질의를 그의 변호인이 스리랑카 조사위원회(Board of Investment)에 2004년 5월 10일자 서신을 통해 접수하였고, 스리랑카 상무부가 이를 2004년 7월 28일자 서신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Shri Anil Goel은 베어링의 생산활동은 스리랑카에서 이뤄졌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상무부를 통해 발급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제출된 기록에 따라, M/s V.M.Doiphode의 변호인은 2003년 5월 10일자 서신을 통해 스리랑카 상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저희 고객인 Shri Anil Goel를 변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상무부에서 다음의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하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상무부에서 다음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였거나 또는 다음의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가 승인받은 서명권자가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번호인 지 여부.

(i) 2003년 5월 9일자 CO/ISFTA/03/2748

(ii) 2003년 6월 16일자 CO/ISFTA/03/3618

(iii) 2003년 4월 3일자 CO/ISFTA/03/2 i 38

상기의 원산지 증명서가 M/s Aurea Industries Pvt. Ltd.에서 수출한 베어링에 대해 발급되었다. 따라서 귀하는 상기에 인용된 증명서를 이전에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받았다."

상기의 서신에 대한 답변에서 M/s Bogollagama & Co.와 법정변호사와 법률자문은 2004년 6월 11일자 서신을 통해, 스리랑카 상무부 부장관인 R.D. Kulatilleke씨로부터 Shri V.M. Doiphode 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4년 7월 28일자 서신을 전달하였다.

상기의 2004년 7월 28일자 서신 (제COM/ISFTA/C00/04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 5월 10일자의 귀하의 서신을 참조하여, 저희는 귀하의 서신에서 참조한 원산지 증명서가 상무부로부터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상기의 3건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DRI에 의해 조사과정에서 이미 입증되고, 과세예고통지에서 명시적으로 참조되었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합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통지인들이 상기에서 새로이 제출한 사항을 고려하여,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의 서신의 출처를 DRI가 입증하였다는 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확인 절차는 스리랑카 관세청에 의해 이뤄졌다. 스리랑카 관세청은 재무부에 확인을 받은 후, 2005년 7월 20일자 서신 제CIU/WROA/05/07 호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제CO/ISFTA/03/2748 호와 제CO/ISFTA/03/3618 호가 스리

랑카 재무부를 통해 생산된 컴퓨 부품에 대해 M/s Aurea Industries Pvt. Ltd. 가 아닌 스리랑카 Kandy의 M/s Celetron Ltd.에게 발급되었다고 고지하였다. 상무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사본 또한 상기의 스리랑카 관세청의 서신에 첨부되었다. 스리랑카 관세청은 또한 원산지 증명서 제CO/ISFTA103/2138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고지하였다. 상기의 서신은 본 법정에 제출되었다. 스리랑카 관세청을 통한 DRI의 독립적인 조사는 피통지인이 베어링이 스리랑카에서 생산되었으며 상기의 원산지 증명서들이 진짜라는 결론이 모두 뒤집어졌다. 따라서 상기의 피통지인은 사실관계를 허위로 제시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하려고 노력하였다. 상기의 위조되었다고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 3건이 위조된 증명서라고 판결한다."

□ 판결 및 시사점

상기의 문제에 대한 양 쪽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양 측의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 항소인의 전문 변호인(learned counsel)은 국세청이 신뢰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작성한 자를 반대 심문할 기회가 피통지인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2000 (122) E.L.T. 641 (S.C.)에 출판된 Swadeshi Polytex Ltd. 대(對) Collector와 2002 (143) E.L.T. 21 (SC)에 출판된 Laxman Exports Limited 대(對) Collector of Central Excise를 근거로 들었다.

항소인의 전문 변호인(Learned counsel)은 또한 본 법원의 부심(Division Bench)의 판결로 2011 (22) S.T.R. 225 (Del.)에 출판된 J & K Cigarettes Ltd. 대(對) Collector of Central Excise을 근거로 하였다.

상기의 일반적인 주장이 관련되는 한, 피평가인(assesse)에 대해 진술서가 이용될 경우, 해당 진술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 반대심문을 할 기회가 피평가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Swadeshi Polytex Ltd.사건(상기참조) 그리고 Laxman Exports Limited 사건 (상기참조)의 판결을 통해서도 명백하다. 이와 별개로 상기의 쟁점에 대해 J & K Cigarettes Ltd.(상기참조) 사건에서 법원은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있다. 상기의 사건에서, 중앙 세무국 법률(Central Excise Act) (1944) 제9D조[153]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153) "9D. 특정 경우에서의 진술서의 관련성- (1) 본 법령 상의 조회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보에 공시된 계급의(gazette rank) 중앙 세무국 공무원(Central Excise Officer)앞에서 진술하고 서명한 자가 진술한, 진술서는 본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기소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성을 가진다:-

된다. 상기의 중앙 세무국 법률(Central Excise Act) (1944) 제9D조는 다음과 같다:-

중앙 세무국 법률(1944) 제9D조의 규정이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법(1962) 제138B조[154]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 세무국 법률 (1944) 제9D조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해석하였다:-

"12. 상기의 조항을 문장 그대로 읽을 경우, 특정 상황에서 규정된 바대로 본 법령 상의 조회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보에 공시된 계급의 중앙 세무국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서명한 자가 진술한 진술서는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진술인이 반대심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려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기의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본 법령 상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절차에서 진술서에 포함된 사실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진술서가 관련이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의 하위 항목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이외의 모든 절차로 확대 적용한다. 이로 인해, 제9D조는 징수인(Collector)이 진행하는 사법절차에서 이용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징수인은 본 법령의 제9-D조의 규정을 불합리한 지연 또는 비용 없이 증인들을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하였다. 상기의 결론이

(a) 진술서를 작성한 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방해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안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시간 또는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진술서를 작성한 자를 해당 사안에서 증인으로 심문을 하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의 상황 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증거로써 해당 진술서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2) 상기의 제(1)항의 규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이외에 본 법령 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54) "138B. 특정 경우에서의 진술서의 관련성- (1) 본 법령 상의 조회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보에 공시된 계급의 중앙 세무국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서명한 자가 진술한 진술서는 본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기소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성을 가진다:-

(a) 진술서를 작성한 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방해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안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시간 또는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진술서를 작성한 자를 해당 사안에서 증인으로 심문을 하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의 상황 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증거로써 해당 진술서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2) 상기의 제(1)항의 규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이외에 본 법령 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의 두 조항이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정당한 지 여부는 항소에서 판단될 수 없다."

부심은 또한 준 사법절차에서 반대심문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피통지인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상기의 절차들은 동시에 특정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에 따라, 상기의 반대심문에 대한 권리는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법원은 또한 상기의 상황이 예외적일 수 있으며, 중앙 세무국 법률 (1944) 제9D조에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9D조와 제138B조에 규정된 상황들은 진술서를 작성한 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방해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안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시간 또는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의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통지인들이 준사법절차에서도 근거로 제시되는 진술서를 작성한 자를 반대심문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부심은 또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지침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지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준사법기관에 임의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진술서를 작성한 자가 특정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만 관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상기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끈 기록 상의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만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를 대신하여 준사법당국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평가인을 대면하여, 주장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의 자료를 근거로 사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를 기록해야 하는 요건은 권리 행사에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한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준사법기관이 내린 판결/결정은 항소기관에 의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권리를 침해 당한 당사자는 항상 해당 경우에 해당 조항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J & K Cigarettes Ltd. 사건 (상기 참조) 에서 부심이 내린 결론과 의견은 관

세법 (1962) 제138B조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법원은 본 사안의 이러한 측면을 하기의 관할기관 어디에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사실, 관세법 (1962) 제138B조는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들을 근거로, 항소법원이 상기의 사건들을 제138B조 규정과 J & K Cigarettes Ltd. (상기참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소법원은 또한 2004년 10월 14일에 종료된 심리 이후에 스리랑카로부터 해당 관청이 입수한 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된 명령을 배제하고, 상기의 관점과 지시사항에 따라 사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원심으로 환송한다.

(3) 인도네시아

□ 사례 개요

【원고】PT XXX
【피고】인도네시아 관세청
【쟁점】ACFTA상 제3국 송장의 허용여부
【결정사항】인용
【판결법원】대법원
【판결일자】2010년 1월 12일

□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04월 16일자로부터 2010년 03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제3국 송장을 활용하여 AC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ACFTA의 이행은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OCP)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OCP절차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의 당사자는 수출자, 제조자 및 수입자이고 제3국에 소재한 회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CFTA상에서는 제3국 송장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인다.

원고는 세관의 ACFTA상의 제3국송장 허용여부 해석에 대하여 법리적 오류가 있고 이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주장

○ **피고주장**

관세청이 2010년 01월 15일 공표한 문서 SE-01/BC/2010에 따르면 SKA Form D, Form AK 및 Form IJEPA에서는 제3국송장에 의한 특혜관세대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03월 23일 공개한 SE-05/BC/2010에 따르면 ACFTA에는 이에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2011년 01월 21일 공개한 S-60/BC/2011에 따르면 제3국송장 규정은 추가로 통보될 프로토콜의 비준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아직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피고(세관)에 의하면, 2010년 12월 16일 발표된“말레이시아 국제 통상 산업부 무역 및 산업 협력국에서 제공한 아세안-중국 FTA 운영 확인 절차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새로운 발행일 및 Form E 발행일 및 수령일”은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중국,말레이시아,싱가폴,태국, 베트남: 2011년 01월 01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PDR,미얀마,필리핀: 미정

2011년 02월 21일 말레이시아 국제 통상 산업부 무역 및 산업 협력국에서 공급한 Recognition Of New CO Form E 언급하기를, 새로운 OCP 개정 이행은 다음과 같다 :

-브루나이,중국,말레이시아,싱가폴,태국,베트남은 2011년 01월 01일

-캄보디아-2011년 06월/07월,

-인도네시아-To be confirmed,

-라오스 PDR- 늦어도 2011년 01월 15일,

-미얀마-2011년 07월 01일,

-필리핀-2011년 01월 1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ACFTA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프로토콜을 2010년 10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및 2010년 11월 0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을 하였으며, 상기 언급 된 협정은 2011년 07월 07일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으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의 Attachment A 중 OCP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ACFTA개정

에 대하여 추가 된 규정(Rule)이 있으며 그 중에서 Rule 23은 ACFTA 체계에서 제3국송장의 허용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국 관세 당국은 상업 송장이 제3국에 위치한 기업에 의해 발급되었거나, 해당 업체(제3자)의 구좌로 ACFTA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로서, 제품이 ACFTA의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양식 E)를 수취할 수 있다. 제3자 송장 번호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양식 E) 상의 10번 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출업자 및 화주는 당사자 란에 반드시 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할 시에는 제3자 발행 송장의 사본을 원산지 증명서 (양식 E)에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세관)에 의하면, 이 문제는 ACFTA상 OCP절차의 개정과 관련된 2011년 10월 03일 공표한 관세청 문서 SE-12/Bc/2011에 의해 확인되고 ACFTA상의 제3국송장을 이용한 특혜관세대우가 허용된다.

각 협정별로 제3국송장 허용여부를 비교해 보자면 010 01월 15일 공표한 관세청문서 SE-01/BC/2010에 따르면 “SKA Form D, Form AK 및 Form IJEPA는 제3국송장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2010 03월 23일 공표한 관세청 문서 SE-05/BC/2010에 따르면 ACFTA에서는 제3국송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피고(세관)에 따라, ACFTA에서 제3국송장을 이용한 수입에 대한 관세 재결정의 경우에, 제17조 1항에따라 “사무 국장은 세관의 통지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입 관세 계산을 위한 관세 가액과 세율을 재설정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ACFTA 규정의 체계

원고에 따르면 ACFTA의 국내적 이행은 재무부 장관령 PMK 235/PMK.011/2008에 따라 유효성을 가지면 때문에 ASEAN 국가들로 수입하는 중국산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양허는 위 법령에 따른다.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1. 발급권한 기관에서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Form E)가 갖추어진 수입 물품에만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2.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수입통관시에 원산지증명서(Form E)를 바탕으로 품목의 세 번을 작성하영야 하며,

3. 원산지 증명서(Form E) 원본 및 사본은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에 따르면 원고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ACFTA상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제3국 송장 허용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

원고는 또한 ACFTA 국내이행법인 재무부 장관령 PMK 235/PMK.011/2008에 제3국송장 허용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위 법령에 제3국송장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ACFTA상에서도 다른 FTA와 마찬가지고 제3국송장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원고는 제3국송장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세관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세관에서 위 법령에 대하여 제3국송장이 허용된다는 결론을 구두로 확인 받았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3국송장의 허용이 재무부 장관령 PMK 235/PMK.011/2008에 근거하여 이미 2008년부터 인정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2011년 제3국 송장허용 지침을 근거로 하여 본건에 대해 제3국송장에 근거한 특혜관세대우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법률의 우선순위 관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헌법 하위에 법률, 정부의 법령, 대통령령, 지방법령의 순서이다.

a.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

b. 법률 / 법을 대신하는 정부 법령,

c. 정부 법령,

d. 대통령령,

e. 지방 법령;

ACFTA의 국내적 이행의 근거는 2004년 대통령령에 바탕을 두고 재무부 장관령 PMK 235/PMK.011/2008에 따라 이행한다. 그런데 세관이 제3국송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SE-05/BC/2010는 관세청이 공표하는 지침 성격이므로 그 법적 효력이 대통령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SE-05/BC/2010이 구속력있는 법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재무부 장관령 PMK 235/가 관세청 지침SE-05에 우선한다.

-소급효 금지 원칙

원고는 본건 거래는 2009년 4월 16일-2010년 3월 19일에 이뤄진 것으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당시의 법령인 재무부 장관령 PMK-235/PMK.11/2008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2010년 3월 23일 공표된 SE-05/BC/2011 에 근거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관이 SE-05/BC/2011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되고, 본 지침 어디에도 소급적용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소급적용 금지 원칙)을 일반적이 법원칙으로 당해 건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역시 부당하다.

-원고 주장의 요약

원고가 2009년 4월 16일 시작일로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의 수입건에 대하여 제3국송장을 활용하여 ACFTA상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근거를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원고가 수입한 물품은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으로 ACFTA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다.

2. 다른 협정과 비교할 때 CEPT, AKFTA,IJEPA에서 제3국송장 사용을 금한하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ACFTA도 같은 방향을 이해되어야 한다. ACFTA의 국내적 이행절차에 대해 재무부 장관령 PMK235에 따라야 하는데 이 법령에는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후 2010년 제3국송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관세청 지침 SE 05공표 되었으나 이후 2011년 ACFTA의 원산지증명절차에 대해

개정하는 2차 프로토콜에 합의가 있었고 이 프로토콜에는 제3국송장의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판결 및 시사점

재판부는 의뢰인과 심사관이 제출한 항소와 정보의 기반으로 심사한다.

AC-FTA의 기본 규정은 2008년 12월 23일 관청 재무부 장관령 PMK 235/PMK.011/2008, 2004년 6월 15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2004년 제48조,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인민, 중국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2004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0번)합법화에 대한 것;

대통령령 2004년 제48조에 따르면,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인민, 중국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2004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0번)합법화에 대하여, ACFTA에서 말하는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Rule of Origin(ROO) Form E 또는 아세안-중국 자유 무역 지대 내 원산지 규정에 따른 운영 확인 절차 (OCP)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물품 원산지 증명서 사용을 동의한다.

AC-FTA를 위한 수입 관세 세율(비율) 결정에 대한 PMK 235번 /PMK.011/2008, 2008년 12월 23일,은 법령 1995년 제10조항 제13조 (1)항 의거

2006년 법령 제17조에 의해 개정 된 관세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세율 크기가 다른 기준으로 제12조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부과된다.

- 수입 관세 세율(비율)이 부과되는 수입 물품은 국제 계약 또는 합의 기준으로 한다, 또는

- 탑승자,승무원 수단, 우편이나 택배에 의한 국경간 수단으로 가져온 수입 물품

법령 1995년 제 10조항 제13조 (2항)에 의거 관세에 의해 개정 된 법령 2006년 제17조의 내용은 제1항에 언급 된 수입 관세의 세율(비율)의 부과 절차

또한 장관 규정에 의해 조절된다.

2008년 12월 23일, PMK 235번/PMK.011/2008 제2조 a)에서 권한 기관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원산지 증명서(Form E) 를 갖춘 수입 물품에게만 적용된다고 기재 되어있다.

ROO/OCP AC-FTA는 동남아시아 협회 구성원 국가와 중국 인민 공화국 협정에 대한 동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의 많은 가운데에 틀에서 국간 협정은 ASEAN 국가에서 수입 된 중국 수출품을 조절 또는 그 반대로 이 협력으로 특혜관세 대우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 문서가 권한 기관에서 발행한 SKA Form E 를 합의하였다.

위에 언급 된 설명의 근거로, ASEAN 국가 및 중국은 의무적으로 ROO/OCP AC-FTA에서 정한SKA (Form E)의 발행/게시에 모든 규정 및 요건에 따라야 하며, 비록 수출국의 권한 기관으로부터 서명받고 발행한 SKA(form E)이더라도, 발행 규정 및 요구 사항이 ROO/OCP AC-FTA에서 정한 규정과 적합하지 않아서 SKA (form E)는 특혜관세를 얻기 위해서 사용 할 수가 없다.

OCP의 Attachment C에서 규정한 Form E 유형 및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번 란, Goods consigned from.....	이 칸에 이름 및 수출하는 수출 업자 주소 그리고 수출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
2번 란 Goods consigned to.....	이 칸에 이름 및 수입하는 수입 업자 주소 그리고 수입 국가에서 구매하는 제품
5번,6번,7번 및 8번 란	제품 종목 정보 작성
9번 란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칸에 제품 수량 및 전문용어로 선적운임이 포함된 가격/값 작성
10번 란 Number and date of invoice.....	이 칸에 인보이스(견적서) 발행일 및 발행번호 작성.

위에 설명한 내용의 기준 OCP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Form E 규정을 기반으로 수출자는 판매자의 역할을 하고, 수입 국가에서 수입자는 구매자의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있어서 OCP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규정에 따른 Form E 발행 규정은 인도네시아 수출 제품에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발행에 대한 2007년 10월 8일 43번 /M-DAG/PER/10/2007과 2010년 12월 30일 59/M-DAG/PER/12/2010번 무역부 규정에 따라서 설정된다.

위에 언급 된 두 규정은 임시적 및 명시적으로 Form E를 오로지 그 측이 진행한 무역 거래를 위해 시행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두측은 바로 :

-수출업자는 판매측으로, 수출업자 명은 수출 제품 통지서(PEB)와 견적서에 적혀있다.

-수입업자는 구매측으로, 수입업자 명은 수출 제품 통지서(PEB)와 견적서에 적혀있다.

위에 언급 된 규정으로 Form E는 Third party Invoicing 혹은 third country invoicing으로 알려진 그 측 이상으로 시행되는 무역 거래에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Form E와 관련되어,third party invoicing 혹은 third country invoicing으로 알려진 그측 이상으로 시행되는 무역 거래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수출업자,제1자는(Form E에 명이 적혀있는 판매자),제2자 (Form E에 명이 적혀있는 구매자) 수입업자에게 Form E에 설명 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제1자는(판매자) 제3자에게 Form E에 설명 된 제품을 판매한다.

-제3자는 Form E에 설명 된 제품을 제2자(Form E에 명이 적혀있는 구매자) 수입업자에게 판매한다.

위에 언급 된 설명을 따라서 재판부는 심사관이 수입 제품 관세 세율(비율)을 2011년 4월 11일에 발행 된 LHA-84/KPU.01/BD.10/IU/2011번, 첨부파일 III KKA 02번 LHA에 있는 201 PIB 바탕으로 정했음을 증명 됐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ACFTA 계획은 사용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MFN)관세 세율(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위에 언급 된 판단을 따라서, 재판부는 2011년 4월 12일에 발행된 SPKTNP-102/KPU.01/2011번의 SPKTNP에 적용된 심사관의 결정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위에 언급 된 세금법원 결정에 대해서, 재판부 XVII 세금법원 판사 한 명이, 이름 : 재판부 법학사 수디르만, 다음과 같은 다른 세금 소송의 심사 소송 자료 검토에 대해서 설명한다.

심사 소송이 되는 것은 SPKTNP (SPKTNP.102/KPU.01/2011번 2011년 4월 12일)에 대한 심사관의 결정이며, 그 청구 금액은 Rp.11.139.977.000,00이며, 첨부 파일 III KKA 02 LHA번 , LHA-84KPU.01/bd.10/IU/2011 (2011년 4월 11일)번에 있는 201 PIB에 적혀있고, 그 첨부 파일에는 Form E 원산지 증명서형태의 AC-FTA 특혜 관세 조건과 중국에서 출판되고 중국 수입 제품을 실은 B/L와 같은 운송 서류로 채워졌다. 수정은 심사관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심사관에 따르면 third country invoicing(TCI)으로 판단된 (Sony Electronics Asia Pacific Pte. Ltd., Singapore에서 견적서가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제3조 2항을 바탕으로 (법률 14번 2002년, 세금 법원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다), “심사에서 세금 법원은 단지 심사와 이의 결정에 소송 중단 한에서 만 한다, 다만 유효한 규정에서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제외 된다.” “심사 목적이 되는 세금 소송은 이의 결정에서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이의 신청에 들어 있는 의뢰자의 소송이다. 그 외 세금 법원은 관련된 법률이 그렇게 설정 되어 있는 한, 공인 공식에서 출판한 결정에 따라서 심사 요청을 심사하고 중단할 수도 있다.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OCP-ROO AC-FTA는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협회 사이에 종합적인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프레임 워크)에 관한 2004년 제 48번 대통령령으로 합법화 하였다. (2004년 제 50번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장)

OCP-ROO AC-FTA조약에 Third Country Invoicing(TCI)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가 중국인 TCI는 일반 관세 세율(비율)을 적용한다, 혹은 AC_FTA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함을 심사관이 결정하였다.

합법성의 원칙을 따르면, 설정하는 법률 없이는 그 어떤 행위도 법의 강제력을 받을 수 없다. OCP AC-FTA는 Third Country Invoicing(TCI)에 관하여 조정하지 않고 있다, 제 의견으로는 그 절차 혹은 벌칙을 자세히 구성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OCP-ROO AC-FTA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유효 하는 규정은 AC-FTA 특혜 관세 시설이다, 그 시설은 중국에서 맞게 수입된 제품 한에서 유효 하다. 수입 제품이 중국에서 출판되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서명된 Form E 원산지 증명서(SKA)로 갖췄다면 또한 유효 하다. 그것은 수입 제품이 중국에서 출판되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서명된 Form E 원산지 증명서로 보호 되었고 그리고 심사관에게 PIB제출 시기에 제출한다면 적용된 관세 세율(비율)은 AC-FTA 관세 세율(비율)이 된다. 혹시라도 심사관이 원산지 증명서 혹은 현지 내용이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그 수입 제품을 의심 한다면 심사관은 그 원산지 증명서 조건을 수정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한 중국에게 설명 혹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수정된 OCP 혹은 수정 본은 추가 조목이 포함한 수정 본이다. 그 조목 중 하나는 AC-FTA에 Third Country Invoicing (TCI)도 허용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수정 본은 TCI가 AC_FTA에 허용되고 유효 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안의 형성 및 제7조 4항에 언급 된 많은 이들 가운데에,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외 법령의 유형을 인정하며, 더 높은 법률에 의해 명령을 통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 외에 많은 규정 가운데 유형은, 국민협의회 및 국회, 지방 지도 위원회, 대법원 ……등등……장관, 청장, 연구소, 또는 위원회와 동등하게 법률로 의해 만들어지고 또는 정부 명령법……..등등…..으로 인해 발행 된 규정들이다.”

심사관의 다른 규정의 기본은 2010년 3월 23일 회람공문서 SE-05/BC/2010번이다. 저의 의견에 따르면, 2010년 3월 23일 회람공문서 SE-05/BC/2010 심사관에 의해 기본 규정으로 사용되고 조항이 있다. “이 회람공문서의 효력이 시작될 시, SE-01/BC/2010 및 SE-03/BC/2010 는 박탈하고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2010년 3월 23일 SE-05/BC/2010은 적용 시작일 또는 기간이 없다.

2010년 3월 23일 회람공문서 SE-05/BC/2010은 구체적인 규정이며, 단지 세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조절, 관념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시작 적용한 기간도 없이 만들었다. 따라서, 만일 회람공문서 SE-05/BC/2010번을 법을 발생하는 기본 법적 규정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은 결점이 된다.

현재 법률 2004년 제7조 10번에 의거, 2010년 1월 15일 세금 및 관세 국장 회람공문서 SE-01/BC/2010번 및 2010년 3월 23일 SE-05/BC/2010은 구속력 법적 효력이 있는 관념적인 법률규제가 아닌 구체적인 규정이며, 그러므로 세금 및 관세 국장 회람공문서는 법을 발생하는 (SPKTNP)기본 법적 규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제 의견은 SKA (Form E)는 물품 정체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중국의 권한 기관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중국에서 게시한 것은 합법적이고 ACFTA 특혜 수입 관세 세율(비율)을 얻을 권리가 있다.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의 틀 내에서 수입 관세 세율(비율) 결정에 대한 재무 장관의 2008년 12월 23일 규정 PMK-235번/PMK.010/2008 기반으로, 수입 물품이 보호/갖추어진 경우, SKA(Form E) 권한 기관의 서명과 AC-FTA 수입 관세 세율(비율)에 따라 PIB 관세의 제출과 동시에 주어진 심사관에게 전달한다.

상기 고려 사항에 따라, 법원은 AC-FTA 수입 관세 세율 0%를 설정하여 의뢰인의 모든 호소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린다.

(4) 필리핀

□ 사례 개요

【원고】 Hon. Edurado Ermita etc.
【피고】 Hon. Jenny Lind R. Aldecoa- Delorino, etc. et al.
【쟁점】 AFTA/CEPT상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양허제외
【결정사항】 기각
【판결법원】 필리핀 대법원
【판결일자】 2011년 6월 7일

□ 사실관계

신청인 Eduardo Erimta는 신청인의 신청을 거절하고, 민간 피신청인 필리핀 석유화학 생산자 협회(APMP 또는 민간 피신청인)에 대한 2007년 2월 6일 옴니버스 결정에 따라 마카티 시의 지역법원이 부여한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다.

대통령 Gloria Macapagal-Arroyo가 2006년 1월 12일 공포한 시행령 No. 486 (E.O. 486)은 다음과 같다:

아세안 자유무역 지역(AFTA)에 대한 공동실효특혜관세(CEPT)제도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및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양허제외

임시예외 목록 및 요주의 수입품목에서 AFTA에 대한 가속화 CEPT제도의 목록의 포함목록으로 이전된 제품에 대한 2000-2003 필리핀 관세인하 계획을 실행한, 2000년 4월 27일자 행정명령 234는 석유화학제품 및 특정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CEPT 관세율이 2003년 1월 1일에 5%로 인하될 것으로 규정하였다;

2003년 1월 9일 공포된 행정명령 161은 2003년 및 2004년에 한해 석유화학제품 및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의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였다;

정부는 나프타 분해설비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NEDA위원회는 석유화학제품 및 특정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상기 양허제외를 철폐하고 나프타 분해설비의 상업적인 가동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CEPT 관세율을 EO 161(s.2003)수준으로의 복귀하는 것에 승인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대통령Gloria Macapagal-Arroyo은 1978 관세규정(대통령령 No.1464)의 402조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이에 명령한다:

제1조. 1978 관세규정의 104조에 따라 분류된, 본 명령의 부록 “A”에 특히 열거된 물품은 부록 “A”의 4열에 표시된 계획에 따라 아세안 CEPT관세율에 해당한다. 그 표시된 아세안 CEPT관세율은 CEPT협약의 4조 및 그 주해에 따라 CEPT양허를 적용하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입품에 해당된다.

제2조. 부록 “A”에 대한 필리핀의 기본관세율이 부록 “A”의 4열에 지정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변경되는 경우 그 물품은 자동적으로 인하된 관세에 해당된다.

제3조. 행정명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비를 위해 필리핀의 창고에 반입되거나 그로부터 반출된 부록 “A”에 열거된 모든 물품은 1992년 1월 28일 서명된 AFTA에 대한 CEPT제도의 협약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자격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된다.

제4조. 무역산업부는 국가경제개발 기관, 재무부, 관세위원회 및 세관당국과 협력하여 나프타 분해설비의 상업적인 가동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CEPT관세율을 EO 161(s.2003)수준으로의 복귀하는데 적용되는 실행규칙 및 규정을 공포한다.

제5조. 본 행정명령과 상반되는 모든 대통령발행, 행정규칙 및 규정 또는 그 일부는 이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된다.

제6 조. 행정명령은 필리핀에서 일반에 보급되는 두 신문에서 완전한 발표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06년 1월 12일 마닐라 시에서 공표하였고 효력이 있는 상기 공표는 아세

안 자유무역(AFTA)회원 국가들로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 특히 플라스틱 음식포장용기에 대해 10%에서 5%로 보호관세율을 인하한다.

□ 당사자주장

APMP는 석유화학제품 및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E.O.486의 실행에 반대하였다. 대통령령 E.O.486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PMP는 대통령이 의회의 회기도중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금지한 법률 No. 6647의 4조[155] 및 관세규정의 402(e)[156]을 위반한 것에 대해 헌법위반의 선언을 구하는, 신청을 민사사건 No. 06-2004로 마카티 RTC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APMP는 그 실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대통령의 준 입법기능의 행사가 금지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피고인이 금지 청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부여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중대하게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금지명령은 사법적, 준 사법적 또는 행정적 기능을 행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지명령 구제를 부여함에 따라, 신청인은 민간 피신청인이 구하는 것이 E.O.486의 실행을 중단하는 것임을 볼 때 공공 피신청인이 사건의 재판을 효과적으로 선점하였으며 예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E.O.486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PMP가 보호하고자 하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 보호적 관세율은 정부특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누구도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 권리가 없는 이익에 있어서 금지명령 구제의 부여가 사실 및 법률에 의해 옹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155) 4조. 본 조항에 표시된 수입관세의 종가세율은 지정 세율의 효력발생으로부터 1년 후 국가경제 개발기관의 검토 및 권고에 따른 의회의 변경에 따른다. 단, 본 조항에 따라 의회에 권고가 제출되기 전에 관세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출석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관세위원회는 정부사무소,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견해 및 권고를 듣는다.
[Chan robles 사실상 법률총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경제개발 기관은 그 효력발생으로부터 6개월 후에 수입관세의 특정 세율에 대한 필요한 조정을 의회에 권고한다. 단, 대통령은 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종가세율 또는 특정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없다.(

156) 402조.e. 본 조항의 어느 것도 필리핀에 대한 외국의 채무 또는 외국에 대한 필리핀의 청구권을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은 E.O.486이 헌법적으로 확고하며, 그것은 관세율을 조정하고 공동실효 특혜관세(CEPT)에 대한 AFTA양허의 정부대응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제한을 정하지 않은, 관세규정의 401조 및 402조의 권한에 따라 공포되었다는 것을 유지한다.

이의가 제기된 것은 기각신청을 거절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부여하는 옴니버스 결정일 뿐이므로 법원은 법정에 아직 계류중인 E.O. 486의 합헌성에 대해 판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 피신청인은 본 청원의 거절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무엇보다 신청인이 반대하는 공공 피신청인의 옴니버스 결정의 재검토에 대한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원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E.O.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금지구제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간청한다.

□ 쟁점사항

1. 공공 피신청인이 금지의 청원에 대한 관할권을 맡는데 있어 그리고 신청인의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2. 재검토에 대한 신청을 신청인이 제출했어야 하는지 여부

3. 공공 피신청인이 APMP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부여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 판결 및 시사점

○ 관할권의 쟁점에 대해

법원 규정의 규정65, 2조는 다음을 정한다:

2조. 금지에 대한 청원 - 사법적, 준 사법적 또는 내각의 기능을 행사하는 재판소, 법인, 위원회, 공무원 또는 인(人)의 절차가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권을 초과하거나, 관할권의 결여 또는 초과로 이어지는 재량권의 남용이 있으며, 법률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항소가 없거나 기타 분명하고 신속하며 충분한 구제가 없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확실성이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에게 소송 또는 특정사항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절차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기타 법률 및 정당성이 요구하는 부수적인 구제를 부여하는 판결을 하도록 간청하는 입증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Holy Spirit Homeowners' Association v. Defensor[157]는 시행령에 대항하는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금지에 대한 청원은 또한 준 입법기능의 행사에서 공표된 IRR에 대항하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금지는 사법적, 준 사법적인 또는 내각의 기능을 행사하는 재판소, 법인, 위원회, 공무원 또는 인의 추가적인 절차에 있어 그 실체 또는 인의 관할권이 없거나 또는 초과한 경우 또는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률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항소가 없거나 기타 분명하고 신속하며 충분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그 실체 또는 인에게 추가적인 절차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예외적인 명령이다. 금지는 사법적인 또는 내각의 기능에 대해 있으며, 입법적인 또는 준 사법적인 기능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의 목적은 법 집행을 질서 있는 체계로 유지하기 위해 하급 법원을 관할권의 한계 이내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금지는 관할권 또는 하급법원의 권한의 침해에 대해 또는 분명하게 인지한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에 의해 하급법원에게 지정된 한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법률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 구제를 부여하는 적절한 구제수단이다. 구하는 주요 구제수단이 IRR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제수단은 무효화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이며, 지역 재판소의 관할권에 적절히 해당하는 조치이다. 모든 경우에 "피신청인이 그의 관할권이 없이 또는 초과하여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금지명령 또는 임시 제한명령을 통해 재판소에서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과 어느 법원이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가는 소송에서의 주장과 구하는 구제수단의 특성인 것으로 정착되었다.[158] 법원에 대한 APMP의 청원을 정독하면, 이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신청을 한 금지에 대한 단순한 청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또한 특별히 E.O.486이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R.A. 6647의 4조 및 관세규정의

157) G.R. No. 163980, 2006년 8월 3일, 497 SCRA 581.
158) Vide Fernando v. Spouses Lim, G.R. No. 176282, 2008년 8월 22일, 563 SCRA 147.

402(e)항을 위반하여 공포된 것이며 따라서 그 시행은 금지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그 실행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송명령에 대한 청원이다.

이송 및 금지에 대한 청원은 헌법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입법 및 행정 공무원들의 행위를 검토 그리고/또는 금지하거나 무효화하는데 적절한 구제수단이다. 이처럼 그 청원에 금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 피고인은 이를 이송명령이나 다툼에 대한 심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잘못 취급하지는 않았다.

○ 재검토를 위한 신청제출의 적절성에 대해

통상적으로 피고인-측 심판위원회에 지정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검토 신청을 먼저 제출하지 않는 한, 특별 민사소송으로서의 이송은 존재하지 않는다.[159] 단, 이 규정은 예외가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예외에 의해 제한된다; (a) 결정이 특허 무효인 경우, 그로부터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b) 이송절차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정당하게 제기되었고 하급법원에서 그에 대해 판결하였거나 그 의문들이 하급법원에서 제기되어 판결된 것과 동일한 경우 (c) 문제의 해결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지연으로 정부 또는 신청인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소송의 대상 사안이 변질되기 쉬운 경우 (d) 상황에 따라 재검토에 대한 신청이 쓸모없을 경우 (e) 신청인이 정당한 절차를 박탈당하여 구제가 매우 긴급한 경우 (f) 형사사건에서 체포명령에 대한 구제가 긴급하고 법원이 그 구제를 부여할 개연성이 없을 경우 (g) 하급법원에서의 절차가 정당한 과정의 결여로 무효인 경우 (h) 절차가 일방적이거나 그 절차에 있어 신청인이 반대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i) 제기된 사안이 순수한 법률의 사안인 경우 또는 공공이익이 연관된 경우.[160]

본 사건은 관세율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AFTA에 따른 정부의 약속과 연관된 집행발행(executive issuance)의 합헌성 및 실행과 관련한다. 분명하게 재검토를 위한 신청의 제출은 Siok Ping Tang에 있어 상기 열거된 예외 (c) 및 (i)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159) People v. Duca, G.R. No. 171175, 2009년10월 30일
160) Siok Ping Tang v. Subic Bay Distribution, G.R. No. 162575, 2010년 12월 15일

○ 예비적 금지명령의 부여에 대해

APMP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정한 석유기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E.O.486의 실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들의 판매이익에 악영향을 주는 저가 수입상품으로 국내 시장이 넘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의를 제기한 명령을 부여함에 있어 공공 피신청인은 제시된 1차 증거에 근거해 E.O.486가 실행될 경우 APMP가 "상당한 수입"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그 구성원들의 일부는 "결국 그들의 나프타 분해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해야 할 지 모른다"; 그리고 신청인이 무효인 집행발행(executive issuance)의 효력에 대한 APMP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공공 피신청인은 법원은 세금의 징수를 제한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신청인이 인용한 Southern Cross사건은, E.O.486의 실행 금지가 정부로부터 수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예정된 세율인하가 금지됨으로써 더 많은 수입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공공 피신청인은 APMP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서 발행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계류된 사건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의 부여 또는 거절은 이를 인지한 법원의 타당한 재량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161]본 사건에서 발행의 실행이 금지된 정부가 타당성의 추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재량은 최대한 주의하여 행사해야 한다. 사무국장 v. 항소법원[162] 사례에서 설명함

사회보장 위원회 v. 판사 Bayona사건에서, 우리는 사법적인 해석에 의해 달리 선언될 때까지 법률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정하였다. 법률의 적용정지는 그것이 국민의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최고 치안판사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Younger v. Harris, Jr.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다음을 강조했다:

주의 형사법규에 대한 연방의 금지명령은 그 법규가 위헌적이더라도 전체

161) Bustamante v. 항소법원, 430 Phil. 797 (2002)
162) G.R. No. 131719, 473 Phil 27 (2004)

적으로 또는 별개의 뚜렷한 금지와 관련해 당연하게 부여될 수 없다. 시민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의 주장된 범죄행위에 대해 선의로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 승인되지 않고 따라서 불법이라고 주장되었을 지라도 기소의 긴급함은 도움을 찾는 원고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한해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근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163]

그리고 마찬가지로 Douglas, supra에서 우리는 이 규칙을 재확인한 후 분명해졌다:

" 신청인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선의로 제기된 모든 형사절차의 부수적인 피해 이외의 피해로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164]

문언상, 법규의 가능한 위헌성으로 인해 악의, 괴롭힘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가 요청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선의에 의한 법규의 시행시도에 대한 금지명령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언상" 법규의 무효화는 "간간히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쓰여지는 "명백히 효과적인 처방"으로 기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위헌적이라고 주장된 법률의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해 자격이 있으려면, 당사자는 금지명령 구제가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하며, 사건의 시비가 이어질 것 같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시비거리가 되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곤경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입증해야 한다. 더 높은 기준은 "추정적인 이유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발된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사법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또한, 금지명령은 현상을 유지하기 보다는 변경하며 또는 신청인에게 찾고 있는 실질적인 모든 구제를 제공할 것이고 그 구제는 피고가 사안에 대해 재판에서 이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금지명령이 형평법상 구제 및 권한의 행사임을 고려할 때,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포함해 상황의 모든 형평성을 민감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당사자들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적인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만 향한 것 이외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제를 부여하고 보류하는 두 방향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한다. 원고가

163) 752 Beal v. Missouri Railroad Corp., 312 U.S. 45, 49, 61 S. Ct. 418, 85 L. Ed. 577.
164) 319 U.S., at 164,63 S. Ct., at 881.

장래의 시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는 어떤 실질적인 곤경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강조)

진정으로, 예비적 금지명령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철저히 검토 또는 판결될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일부에 대해 임박한 또는 지속적인 회복불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사건의 본래 시비에 대해 완전히 심리할 수 있을 때까지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 정밀하게 발행한다. 금지명령이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구제인 경우에도 그 발행을 경시해서는 안되며, 신청인은 구제에 대한 자격을 설득력 있게 나타내야 한다. St. James College of Paranaque v. Equitable PCI Bank,[165] 사례가 설명하고 있다.

법원규정의 규정58의 3조에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은 다음에 대한 근거가 규명되는 경우 부여될 수 있다: 사실상의 법률총서

(a) 신청인이 요구한 구제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그 구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또는 영구히 행위 또는 불만 있는 행위를 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행위의 이행을 요구함에 있다

(b) 소송을 하는 동안 행위 또는 불만 있는 행위, 그 지속 또는 행위의 미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부당하게 될 수 있다;

(c) 당사자, 법원, 기관 또는 인(人)이 소송 또는 절차의 대상과 관련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리고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우려가 있거나 그 시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이루어 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필요조건은 법에 정해진 또는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증명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은 보호되어야 할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실재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그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실질적인 침해가 있다

(3) 신청인에 대한 회복불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장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165) G.R. No. 179441, 2010년 8월 9일, 627 SCRA 328

(4) 회복불능의 피해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신속한 충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따라서 APMP가 영장에 대한 자격이 있으려면 침해된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권리 있으며 영장의 발급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166] APMP는 소송사유와 금지에 대한 소송당사자 적격이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해 금지명령 구제에 대한 자격의 입증 없이 자신에 대한 금지명령 구제를 청구하지 않았다

Transfield Philippines, Inc. v. Luzon Hydro Corporation[167]은 금지명령 구제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기 전에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하며 영장의 대상인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고소에 의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의 침해가 중대하고 실질적이며, 고소인의 권리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에 대한 긴급하고 최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금지명령 구제는 일반적인 보상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피해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의지할 수 있다.

공공 피신청인의 결정과 상반되게, APMP는 E.O.486의 시행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수 있는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권리를 가진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E.O.486이 실행되어 인하된 관세율로 인해 수입된 플라스틱 및 유사한 제품이 국내시장에 넘침에 따라 APMP구성원들의 수입의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한 APMP 및 그 구성원들의 두려움에 달려 있었다. 신청인이 올바로 상정한 바와 같이 APMP는 기껏해야 미완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장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 보호는 권리가 아니며 정부가 부여하는 특혜이며, 따라서 APMP는 주장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사한 사례, 대통령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과 관련한 R.A.9337의 효력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매입세액은 정당한 절차 조항의 합헌적인 범위 이내의 재산 또는 재산권이 아니다.

166) ide First Global Realty and Dev’t. Corp. v. San Agustin, 427 Phil. 593 (2002)
167) G.R. No. 146717, 485 Phil. 699 (2004)

올바른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록인의 자격은 법정 특혜에 불과하다. 법정 특혜에 대한 확정된 권리가 없는 자들에 대해 법정 특혜와 확정된 권리간의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형성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뺏을 수 있지만 그 권리로 인해 귀속된 재산을 뺏을 수 없다.[168]

APMP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보장에 따른 것이었다는 논의상 가정에 불구하고, 그것은 APMP에게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요소에 관해 획기적인 사건, 사회보장 위원회 v. Bayona[169]는 다음을 시사한다:

피해는 합리적인 정확성으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경우 금지명령발부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 이내에서 회복 불능인 것이다 (Crous v. 중앙노동위원회, 83 ALR, 193) "형평법 법원이 명령하는 회복불능의 피해에는 측정의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추측에 의해서만 추산될 수 있는 상처, 불편 또는 피해를 낳는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종류의 잘못의 정도가 포함된다" (Phipps v. Rogue River Valley Canal Co., 7 ALR, 741).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회복불능의 피해는 "판결을 받은 재산에 물리적으로 또는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대한 심각한 또는 해로운 부담으로 또는 재산이 어떤 특이한 품질 또는 용도가 있는 경우 따라서 금전적인 가격으로는 제산의 손실에 대해 소유자에게 공정하게 보상되지 않을 경우 그 손실"로 구성된다. (Dunker v. Field and Tub Club, 92 P., 502)

필리핀 항공 대 국가 노동관련 위원회의 최근 사건에서와 같이[170]

피해는 지속적이고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법원에서 그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측정할 기준이 없을 경우 즉, 수학적인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회복불능으로 간주된다. 피해 자체의 성질 또는 권리 또는 피해재산의 성질로 인해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해의 측정에 대한 특정한 금전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로 간주된다.

본 사건에서 인하된 관세율이 APMP 구성원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폐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APMP의 주장과는 달리, E.O.486의 실행으로 인해 겪을 것을 주장한 "회복불능의 피해"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이 없다.

---

168) Abakada Guro Party List, Inc. v. Hon. Exec. Sec. Ermita, 506 Phil. 1 (2005)
169) G.R. No. L-13555, 1962년 5월 30일, 5 SCRA 126
170) G.R. No. 120567, 1998년 3월 20일, 287 SCRA 672.

결국 APMP측의 분명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피해가 본질적으로 장래의 것이므로 금지명령 구제는 부여될 수 없었다.

이에 청원을 부분적으로 부여한다. 공공 피신청인 판사 Jenny Lind R. Aldecoa-Delorino가 내린 2007년 2월 6일자 옴니버스 결정은 민간 피신청인 필리핀 석유화학 생산자 협회 (APMP)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서가 부여되는 한 수정된다. 따라서, 영장을 취소하고 추가적인 적절한 절차를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특혜관세를 활용한 교역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FTA 활용 증가는 수출입기업들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반면 이를 악용한 원산지 위반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 또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원산지 검증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FTA 특혜관세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다.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기업은 관세청의 원산지 판단의 해석과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판례에서도 왕왕 제기되었던 것처럼 FTA 특혜의 이행절차와 검증절차는 사실상 개별국가의 국내법에 구체화 되어 있어 협정상으로는 추상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규정은 법해석의 견해 차이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늘어나는 원산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분쟁사례와 원산지분쟁 해결제도인 행정구제제도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를 크게 대륙권별로 구별하여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3분하고 이들 권역에서 교역이 왕성한 13개 국가를 선별하였다.

체약상대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조사연구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또는 관세관련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관세관련 행정 구제제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사법심사 일반도 함께 수행하였다. 행정구제제도는 구체적으로 구제대상, 청구방법 및 절차, 기한, 담당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상대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영미권 국가 및 선진국의 경우 사전심사제도 발달하여 분쟁의 사전예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호주의 경우 관세법상의 심사청구 외에 정보자유법(FOI 법)이라는 별도법률에 근거하여 따른 관세법상 심사청구 외에 행정구제로서 심사청구가 양립가능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세를 포함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법심사가 가능한 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CIT), 캐

나다(CITT), 영국(Tax Tribunal)은 조세법원 또는 무역관련 특별법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조세법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조세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법원형(독일, 슬로바키아), 행정법원형(폴란드, 스위스)로 구분된다.

아시아권의 경우 중국은 (지역해관→해관총서→지역인민법원)의 세관→ 행정구제→ 사법구제의 일반적 구조로 분쟁해결을 진행한다. 그러나 베트남은(세관→관세청→재무부 or 국가감찰관)으로 최종심이 재무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제도화 한 것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의제기 불복에 대해 별도의 관세항소기구를 관세청 내에 두고 있고, 특별법원으로서 조세법원(Tax Court)이 존재하는 유형을 보이는데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체로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인도 역시 관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관세청 내 항소가 가능하고 별도로 관세 및 소비세 항소재판소(CESTAT)가 존재한다. 또한 관세율 및 관세평가 관련여부에 따라 항소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상급법원이 양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율 및 관세평가 관련성이 있으면 대법원에, 관련성이 없으면 고등법원에 불복청구 하도록 이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행정구제기관의 명칭상 'Tribu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단어지만 해당기관의 지위가 구분됨에 주의가 필요하다. 'Tribunal'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시적 사법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특별법원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보통 '법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재판소'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그러나 일부국가들의 경우 이를 사법심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의 경우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수집 분석은 주요 수출국과 원산지검증요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총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가 관련된 분쟁사례를 상대국 법원 및 판례검색 DB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는 상대국 분쟁사례 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FTA 원산지 분쟁사례로 협소하게 설정하지 않고 원산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수집한 후 되도록 특혜원산지 판단 및 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심급유형도 하급심 판례보다는 상급심 판례 위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되도록 최신 사례를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는 13개 국가 총20개 판례로 대륙권별로 크게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수집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국가명
영미권	미국(2), 캐나다(5), 호주(1)
유럽권	영국(3), 독일(1), 네덜란드(1), 슬로바키아(1), 폴란드(1), 스위스(1)
아시아권	중국(1), 인도(1), 인도네시아(1), 필리핀(1)

분쟁사례 수집분석 결과 특징적 사례의 개요와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사례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에서 원재료 공급자가 다른 점을 근거로 관세청이 원재료공급자가 이외에도 더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검증담당자가 피검증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자료와의 대조기법을 통해 자료 불일치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이 충족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관세당국이 사후 검증을 실시할 때 주요 근거로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이 확대 해석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사례에서 호주관세청이 사안의 해석근거로 교토협약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토협약은 조약으로서 FTA협정에서 해당협약의 채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일반적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호주 국내법상 조약의 해석에 관해 해당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약해석에 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검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관련법령

을 인용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사례에서 주요 쟁점은 수출자는 단순히 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을 신뢰하였으나 적절한 증명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관세청은 후속조치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생산자 역시 해당제품의 생산기간이 이미 오래 지나 관련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수입자의 과실없는 불가항력적 이유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상품과 유사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동 사건의 쟁점 물품이 NAFTA 이행법률의 정의 내에서 "유사상품"이라고 할 만한 적절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동사안이 Duhamel & Dewar 사례와 유사한 결과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는데 제조사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확인을 거부하였고 또한 특혜관세대우를 뒷받침 할만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근거자료 없이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수입자가 주장한 "유사상품"의 정의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면서 NAFTA 원산지규정 제6부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수입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산, 재정적 압박, 사업 개편, 화재, 홍수 기타 기록의 상실을 초래하는 자연현상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 사안에서 생산자는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유사상품에 대하여서도 유산한 성격과 부속품 및 자재를 가진 것이어서 그 상품이 해당 수입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상법상 교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례는 수입자가 자신의 과오 없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판단과 대체 기준으로서 유사상품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체약상대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와 원산지분쟁 소송사례를 분석한 결과 FTA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해당사자의 불복이 제기될 수 있도록 각국 관세법 및 행정법등에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TA로 인한 원산지 분쟁에 있어 기존의 협정에서는 협정문 내에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경우가 없었지만 최근 발효된 호주, 뉴질랜드등과 같은 FTA에는 협정문에 이를 도입하고 있다. 협정문상 불복절차를 명시 할 경우 비록 국내법상 불복절차를 각국이 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조약상으로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FTA특혜활용에 의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한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FTA 원산지검증에 따른 행정처분 소송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업이 제기하는 불복청구 쟁송에서 귀책사유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뿐 아니라 체약상대국 관세행정 당국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FTA 무역이 가지는 특징으로 분쟁당사자의 간접적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FTA 무역을 인한 분쟁의 결과는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판례법 국가에 속하는 영미법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쟁해결에 있어 선행판례의 해석과 결론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서 FTA가 국제법에 기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대국의 FTA 원산지 분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여 법률적 논거를 견고히 해 나가는 것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과 메가 FTA시대의 실질적 대비책이라 하겠다.

부록. 기업의 FTA 사후검증 대비 현황

1. 기업의 검증대비 서류보관 사례

□ 원산지 입증관련 보관서류 현황 조사 개요

(인증수출자 사례조사)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위하여 수출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현황을 조사하고 인증수출자 심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기업의 서류보관 실태 인터뷰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조사)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의해 컨설팅 받은 기업이 원산지증빙을 위해 준비한 서류 현황을 조사

□ 인증수출자 제출서류 사례조사 결과

기본 제출서류	원산지 입증용 추가 제출서류
○ 인증관련 제출자료 – 인증신청서 – 원산지 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원산지 관리 전담자 확인서 – 자격증,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 원산지 증빙 제출자료** – 원산지 증명서 서명카드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 소명서 – 제조공정도 – BOM – 제품 설명서, 카달로그 등 – FTA-PASS 캡쳐화면(해당하는 경우)	**○ 세번변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확인서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원재료 수불부 – 매출원장 – 재료구입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원재료 수입신고 필증 – 수출신고 필증(상품가격 산정 목적) – 송품장 – 선하증권 – 관세사 품목분류 의견서 **○ 완전생산기준** (농산물)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재배확인서 등 (수산물) 어업허가증, 수매확인서 등 **○가공공정기준** – 국내제조 확인서 – 공정단계별 원산지 확인서

ㅇ 완전생산기준 증빙자료 특징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제출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의 완전생산 증빙자료의 경우 농협 및 수협 등의 수매확인서 제출은 초기보다 원활한 수준. 그러나 수매이후 최종 수출자까지의 거래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미비로 보완요구 받는 경우가 대다수

따라서 농협 및 수협 등으로 부터의 수매확인 이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 최종 수출자가 FTA 원산지 입증을 하기위해 거래관계 증빙자료 보관에 주의가 필요

한편 수산물의 경우 협정별로 영해내 수산물, 영해 밖 수산물의 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영해내/영해밖을 구분하여 증빙자료 보관필요. 더불어 영해밖 수산물의 경우 선박의 등록 및 국기게양과 소유요건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등록증과 전자공시스템상의 주식지분 비율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입증하는 특징을 보임

ㅇ 가공공정기준 증빙자료 특징

가공공정기준 입증의 경우 대체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원산지를 입증하고 있다.

이때 각 공정이 중단 없이 진행됨을 입증하기 위해 원재료별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공정을 수행한 기업별로 원산지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함

따라서 모든 공정이 지속됨을 입증하기 위해 공정단계별로 개개의 원산지확인서 보관이 필수적이고, 하나의 원산지확인서만 미비되어도 입증자료 미비가 되므로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함

ㅇ 세번변경기준 및 최소허용기준 증빙자료 특징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증빙을 위해서는 제조공정도와 BOM을 증빙서류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모든재료가 비원산지 재료가 투입되어도 되는

경우(즉,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원산지재료가 포함되어도 BOM상에 모두 미상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처리함

왜냐하면 원산지재료로 처리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통한 추가의 증빙서류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 단일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과 마찬가지로 가격증빙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어야함

□ 중소기업 FTA 컨설팅 사례조사 결과

ㅇ (사례1) YY기업

기업개요	원산지 증빙서류 현황
- 적용협정 : 한-EU FTA - 품명: hot stamping - 품목번호 : 3212.10 - 결정기준 : CTH - 생산자 및 수출자 동일	-FTA-PASS 현황내역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신고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사업자등록증 -제조공정도 -제품 설명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ㅇ (사례2) @@기업

기업개요	원산지 증빙서류 현황
- 적용협정 : 한-EU FTA - 품명: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 - 품목번호 : 8202.39 - 결정기준 : CTH - 생산자와 수출자 상이	-FTA-PASS 상 개별항목 인쇄본 -구매요청내역(오더내용 메일) -송품장 -수출신고필증 -원산지확인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표준손익계산서(총 매출액 검토용)

ㅇ (사례3) AA기업

기업개요	원산지 증빙서류 현황
- 적용협정 : 한-EU FTA - 품명: 냉동바지락/냉동 붕장어 조제품 - 품목번호 : 0307.99/ 1604.19 - 결정기준 : WO - 생산자 및 수출자 동일	○ 냉동바지락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제품 1제조공정도 -제품 2제조공정도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사업자등록증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물품 현물사진 -교육이수증 ○ 냉동 붕장어 조제품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 확인서 -소요부품 명세서(BOM) -원재료별 거래명세표 -원산지확인서 -근해통발수산협동조합인 생산 확인서(예정) -회사개요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수협 수매확인서(예정)

□ 완전생산기준 품목 원산지증빙서류 실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 및 중소기업들이 FTA 컨설팅을 받으며 보관하고 있는 서류 조사에 따라 특히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을 받는 농림수사문의 원산증명서상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실례는 아래와 같음

(1) 농산물 관련

○ 농지원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농 지 원 부

고유번호	4136010200-1-1-0904

1/2

1. 일반현황

최초작성일자 : 2013년 04월 25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외겸업
	김상균		기타
준농업 법 인	명칭	조직형태	사업목적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46 아파트)	(평내동,	

농업경영 변동사항	
사유	일자

세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황		처
김		자
김		자

농지소유 비농가 가족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기록사항변경	
사유	일자
김 -신규	2013-04-25
황 -신규	2013-04-25
김 -신규	2013-04-25

0034 남양주시 1000 2013.04. 서류발급(열)(1) 2013년0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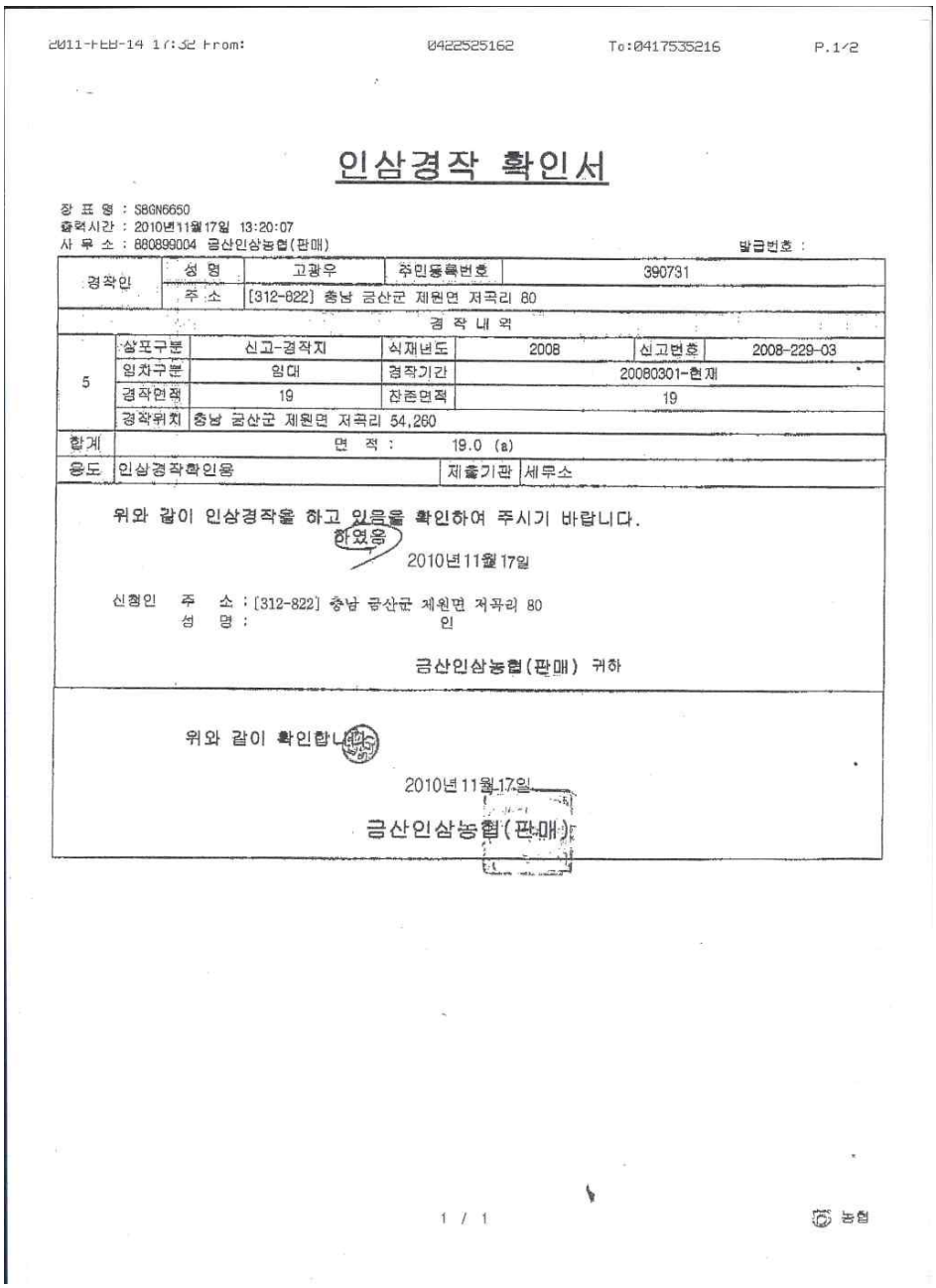
2. 농지현황작성현황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자경										
임대										
임차	2	6,260.00	3	12,545.00					5	18,805.00

남양주시 평내

http://refarmdiary.tistory.com

○ 인삼경작 확인서



2011-FEB-14 17:32 From: 0422525162 To:0417535216 P.1/2

인삼경작 확인서

장 표 명 : SBGN6650
출력시간 : 2010년11월17일 13:20:07
사 무 소 : 880899004 금산인삼농협(판매) 발급번호 :

경작인	성 명	고광우	주민등록번호	390731
	주 소	[312-82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80		

경 작 내 역

5	삼포구분	신고-경작지	식재년도	2008	신고번호	2008-229-03
	임차구분	임대	경작기간	20080301-현재		
	경작면적	19	잔존면적	19		
	경작위치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54,260				
합계	면 적 : 19.0 (a)					
용도	인삼경작확인용		제출기관	세무소		

위와 같이 인삼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11월17일

신청인 주 소 : [312-82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80
성 명 : 인

금산인삼농협(판매)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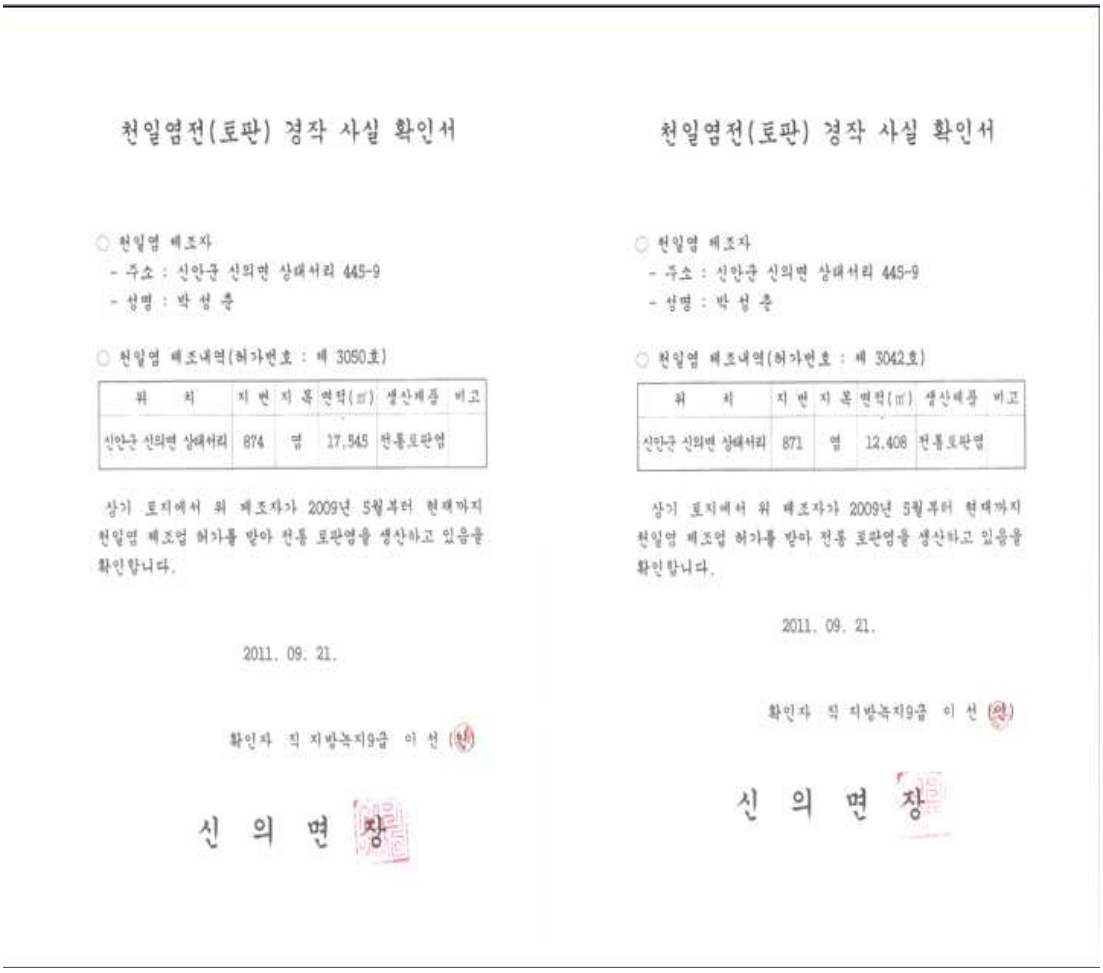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0년11월17일

금산인삼농협(판매)

1 / 1 농협

○ 천일염전 경작 사실 확인서



천일염전(토판) 경작 사실 확인서

○ 천일염 제조자
- 주소 :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445-9
- 성명 : 박 성 출

○ 천일염 제조내역(허가번호 : 제 3050호)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생산제품	비고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874	염	17,545	전통토판염	

상기 토지에서 위 제조자가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천일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전통 토판염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 09. 21.

확인자 직 지방녹지9급 이 선 (인)

신 의 면 장

천일염전(토판) 경작 사실 확인서

○ 천일염 제조자
- 주소 :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445-9
- 성명 : 박 성 출

○ 천일염 제조내역(허가번호 : 제 3042호)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생산제품	비고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871	염	12,408	전통토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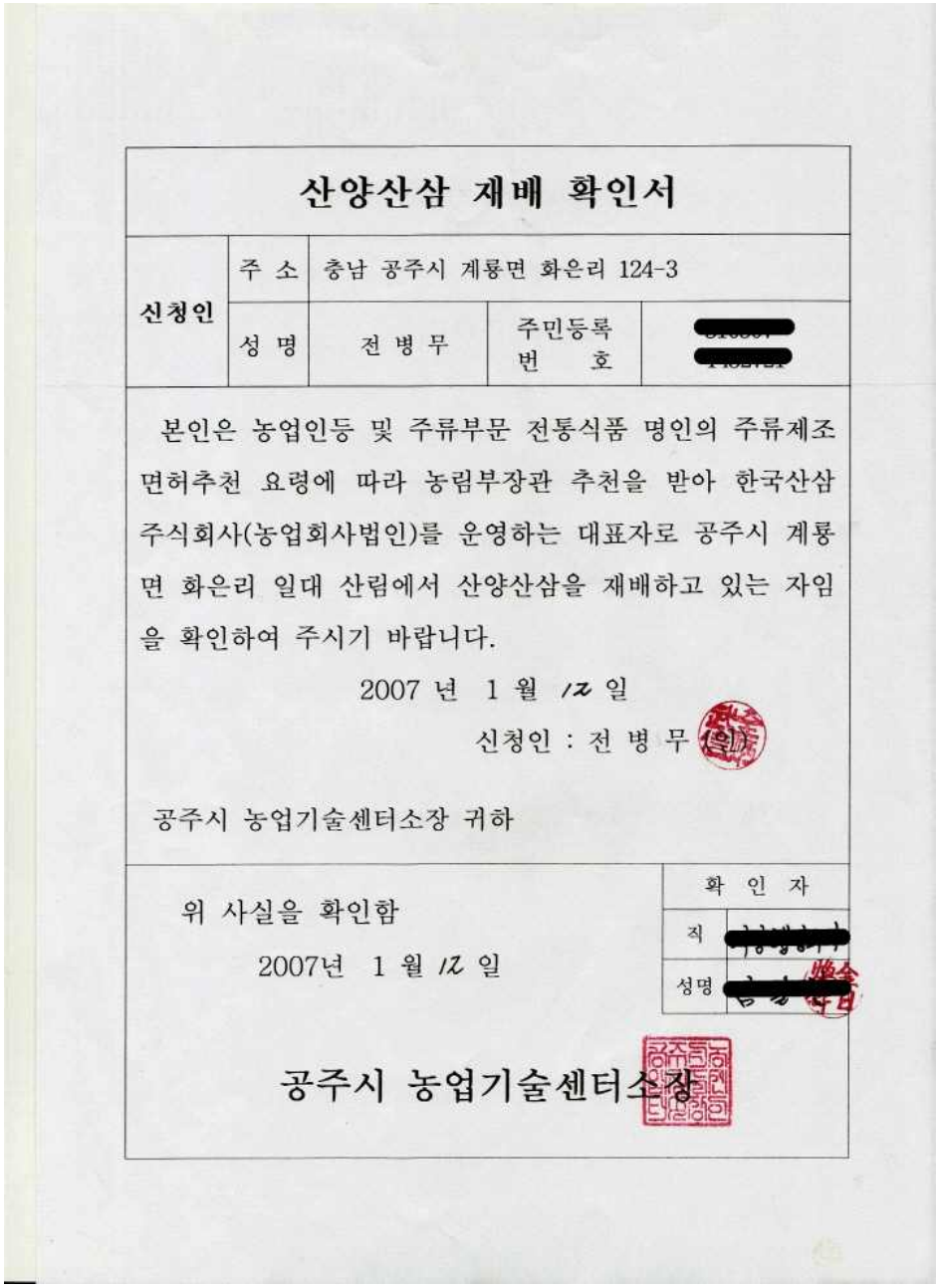
상기 토지에서 위 제조자가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천일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전통 토판염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 09. 21.

확인자 직 지방녹지9급 이 선 (인)

신 의 면 장

○ 재배 확인서



산양산삼 재배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124-3		
	성 명	전 병 무	주민등록 번 호	[redacted]

본인은 농업인등 및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의 주류제조 면허추천 요령에 따라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한국산삼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일대 산림에서 산양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년 1 월 12 일

신청인 : 전 병 무 (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07년 1 월 12 일

확 인 자	
직	[redacted]
성명	[redacted]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2) 영해 내 생산 수산물관련

○ 수산물 수매확인서

수 산 물 수 매 확 인 서

산정기간 : 2009/3/10

발급번호	2009-574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수 매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매내역					

일자	품목	수량	단위	금액	중도매인	비고
2009/3/10	국내산				(인)	
총 계						

용도	중개 확인용	농안사업명	
대출취급점		발급구분	
재발급 사유			

공급자 확인

상기 수매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직 인)

전 화 번 호 :

※ 작성시 이면 유의사항 참조

○ 출하확인서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취급장명 :

(발급번호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류	단량 (kg)	출하수량 (대)	출하자		
						조직명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로 구분기재
3.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서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확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 급 장 대 표 :

출 하 확 인 서

공급받는자 상호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 수산물 거래확인서

[별지 서식]

수산물 거래확인서

거래시설 (산지 위판장)	명 칭	
	소재지	
매 수 인	성 명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 품목 등	품 종	
	수 량	
	거래단위	
	거래단가	
경매사	성 명	
	경매사 자격증 취득 등록번호	
	경매일시	년 월 일 시
출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및 희망단가	출하예정 도매시장명	
	희망단가(원)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 거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O O O (인)

OO수협 조합장 (인)

○ 어업 허가증

내 수 면 어 업 허 가 증

① 성 명	박성용	② 주민등록번호	590123 - 1******
[redacted]			
④ 허 가 번 호	2013년 무안군 내수면 자망어업 허가 제46호		
⑤ 어 업 의 종 류	내수면 자망어업		
⑥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단자망		
⑦ 사 용 어 선	- 어선번호 : 0212001-6468406 - 선명 : 중앙호 - 선질 : FRP - 톤수 : 0.34톤 - 기관 : 가솔린 40마력		
[redacted]			
⑨ 어 구 의 규 모	단자망 150m(25m×6조)		
⑩ 포획채취물의 종류	붕어, 잉어, 가물치 등		
⑪ 허가의 유효기간	2013. 9. 16부터 ~ 2018. 8. 31일 까지		
⑫제한 또는 조건	1. 조업구역에서 시행중인「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전라남도),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한국철도시설공사호남본부) 「일로~몽탄간 도로확장공사」(전라남도), 교량설치 및 우기철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피허가자 : 영암군)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없음. 2. 내수면어업 행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휴식 및 물놀이 등 주민들의 하천 자유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하며, 하천 이·치수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익산국토관리청 협의조건에 의하여 제출된 각서내용과 같음		

내수면어업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업을 허가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무 안 군 수

(3) 영해 밖 생산 수산물관련

○ 선박국적증명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OWNERS	Name : Address :

Official Number _____

Name of Vessel _____

Signal Letters _____

Kind of Vessel _____

Material of Hall _____

Port of Registry _____

Riggings of a Sailing Vessel _____

Type and Number of Foabes _____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_____

Where Built _____

Name of Bulders _____

Date of Launch _____

Main Dimension		
	Length	metres
	Breadth	metres
	Depth	metres

Gross Toonage _____ tons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_____cubic metres

Under the Upper Deck

_____cubic metres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Deck

_____cubic metres

Forecastle _____cubic metres

Bridge _____cubic metres

Poop _____cubic metres

Deck Houses _____cubic metres

Other Spaces _____cubic metres

Total Capacity of Exerapted Spaces

_____cubic metres

Forecastle _____cubic metres

Bridge _____cubic metres

Poop _____cubic metres

Deck Houses _____cubic metres

Other Spaces _____cubic metres

It is hereby certifl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U respect, and that the above-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l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mentioned Vessel.

The 15 day of OCT. 2008

ADMINISTRATOR OF OFFICE, , REPUBLIC OF KOREA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확인번호)						처리기간
						서류심사시:즉시 물량확인시: 입항후 즉시
조업선	(1)선 명		(2)톤 수		(3)업 종	
	(4)조 업 구 역		(5)허 가 번 호		(6)허 가 기 간	
운송수단	(7)선 명 또 는 항 공 편 명		(8)국 적		(9)톤 수	
	(10)전 적 장 소		(11)전 적 일 시			
반입사항	(12)반 입 일		(13)반 입 장 소		(14)반 입 후 보 관 장 소	

(15)어 종	(16)반입형태	(17)어획기간	(18)반입량(M/T)	(19)포장형태	(20)어종수	(21)비고
총계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 국내 반입코자 신고합니다.

신고일

주소
상호
성명
전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장 귀하

검 사 원	직급 : 성명 :

위의 신고사항을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장 (인)

(첨부서류)
1. 선하증권사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 적하목록사본(세관제출용) 1부(내국적 외항선인 본선으로 반입하는 경우)
3. 하역협정서(지방해양수산청 제출용) 사본 1부.
4. 어획증명서 사본 1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고기류인 경우에 한하며, 농림수산부 장관의 기국확인번호를 부여 받은 것)
5.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

○ 원양어업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원양어업허가증
(LICENSE FOR DISTANT SEA FISHING)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사용어선 (VESSEL SPECIFICATION)	선명, 톤수 (NAME OF VESSEL, TONNAGE)			
	어선번호 (REGISTRATION NUMBER)			
	기관종류 및 마력 (TYPE OF ENGINE & HORSE POWER)			
	선질 및 주요치수 (MATERIAL & MAIN DIMENSIONS OF VESSEL)		길이(LENGTH) m 너비(WIDTH) m 깊이(DEPTH) m	
	주요기기 및 시설 (MAIN EQUIPMENT)			
허가번호(LICENSE NO.)				
어업종류(TYPE OF FISHERY)				
어업의 명칭 (APPELLATION OF FISHERY)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FISHING METHOD, GEAR TYPE)				
조업구역(FISHING AREA)				
포획·채취물의 종류(TARGET SPECIES)				
어업의 시기(FISHING PERIOD)				
허가기간(TERM OF VALIDITY)				
제한 또는 조건 (LIMITATION OR CONDITION)	뒤쪽 참조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원양어업을 허가합니다.
THIS LICENSE IS ISSUED IN CONFORMITY WITH CLAUSE 1, ARTICLE 6 OF THE DISTANT SEA FISHERIES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선적 증서

[별지 제36호서식] < 개정 2009.12.14 > (앞 면)

선 적 증 서

제2012-0186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박성용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돈도리길 63			
어선번호		0212001-6468406	주요치수	길이	4.27m
어선의명칭		중앙호		너비	1.45m
어선의종류		동력선 FRP		깊이	0.49m
선적항		일로읍	총톤수		0.34톤
추진기관		가솔린선외기 기관 40마력1대			
조선자		우성FRP조선소	진수연월일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12년 06월 13일

무 안 군 수

210mmX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2. 기업의 원산지 입증자료 보유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 입증 관련서류 보관실태 파악

표본 설계: 2013년 업종별 FTA 무역비용 설문조사 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진행. 조사 표본은 220개기업, 유효 응답은 65개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음

1) 기업체 일반현황
2) FTA 원산지 관리 관련 기본정보
3) FTA 원산지 관리 인프라
4) FTA 원산지 증빙서류 관련 업무부담
5) FTA 사후검증대비 보관자료

(2) 응답자 특성

- 산업

화학공업제품(20.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페품 (19%) > 기계류(12.3%) > 전자전기제품(12.3%) > 섬유류(12.3%) 순

산업에 대한 응답자는 중복응답기업을 포함하여 총 73개 기업. 산업별로 화학공업제품이 20.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이 19%, 기계류 12.3%, 전자전기제품 12.3%, 섬유류 12.3%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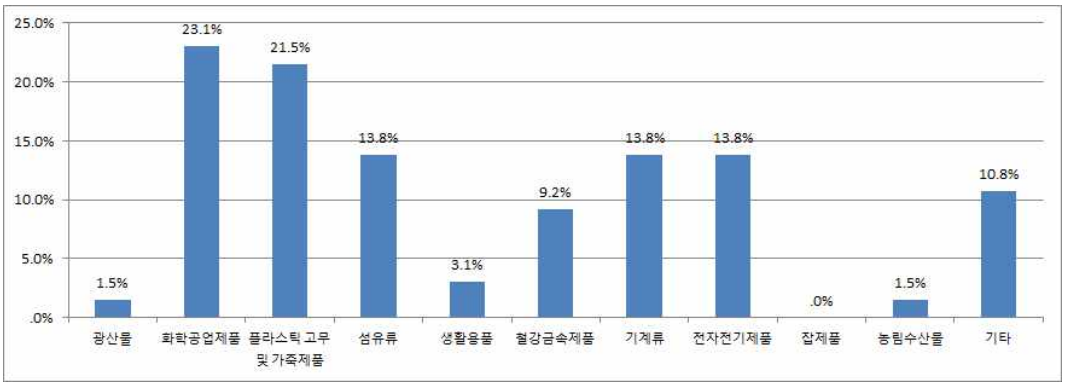
응답비중이 낮은 기업은 광산물 1.4%, 농림수산물 1.4%로 나타났으며 잡제품의 경우 응답자가 없음

2013년 MTI 1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금액기준 제1위 산업은 기계류로 다음으로 전자전기제품이, 화학공업제품 순.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산업별 비중 결과치가 대체적으로 응답 기업이 국내 산업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

표 69 응답자의 산업별 구분 빈도표

구분	응답	
	N	퍼센트
광산물	1	1.4%
화학공업제품	15	20.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4	19.2%
섬유류	9	12.3%
생활용품	2	2.7%
철강금속제품	6	8.2%
기계류	9	12.3%
전자전기제품	9	12.3%
잡제품	0	0%
농림수산물	1	1.4%
기타	7	9.6%
	73	100.0%

그림 41 응답기업의 산업별 구분



- 종업원수

종업원수 300명 미만이 전체의 79.4% 점유

응답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종업원수와 매출액. 기업규모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 300명은 중소기업, 50인 미만은 소기업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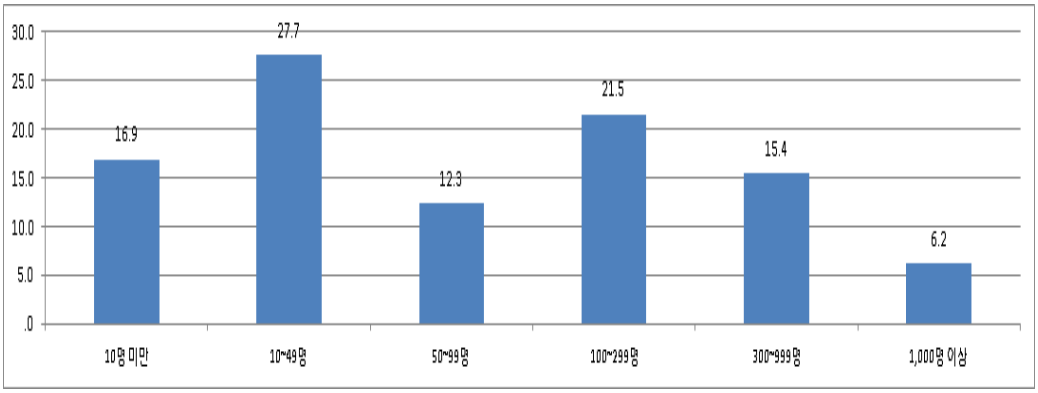
설문결과 18개기업이 27.7%로 10인 이상 49인 이하 종업원수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응답자는 14개 기업으로 21.5%에 해당하여 응답기업의 다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해당

300인 이상 999인 이하를 선택한 기업은 총 1개 기업으로 15.4%, 1000명 이상 기업은 4개 기업으로 6.2%에 해당

표 71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별 구분 빈도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명 미만	11	16.9	16.9
10~49명	18	27.7	27.7
50~99명	8	12.3	12.3
100~299명	14	21.5	21.5
300~999명	10	15.4	15.4
1,000명 이상	4	6.2	6.2
합계	65	100.0	100.0

그림 42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별 구분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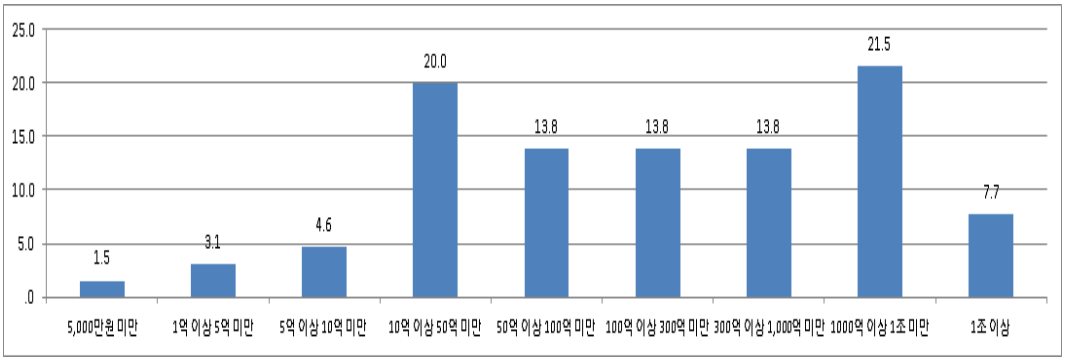
매출액 300억 이하 미만이 전체의 70.8% 점유

매출액 기준 1000억 이상 1조미만인 기업이 전체 응답의 14개 업체(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억 이상~50억 미만인 기업이 전체 응답의 13개 업체(20%)로 나타남.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매출액 300억 이상인 기업은 43%로 나타남.

표 73 응답기업의 매출액별 구분 빈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000만원 미만	1	1.5	1.5
1억 이상 5억 미만	2	3.1	3.1
5억이상10억미만	3	4.6	4.6
10억 이상 50억 미만	13	20.0	20.0
50억 이상 100억 미만	9	13.8	13.8
100억 이상 300억 미만	9	13.8	13.8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9	13.8	13.8
1000억 이상 1조 미만	14	21.5	21.5
1조 이상	5	7.7	7.7
합계	65	100.0	100.0

그림 43 응답기업의 매출액별 구분



- 생산 수출 수입기업 여부

수출기업(95.4%) > 생산기업 (87.7%) > 수입 기업(60%) : 복수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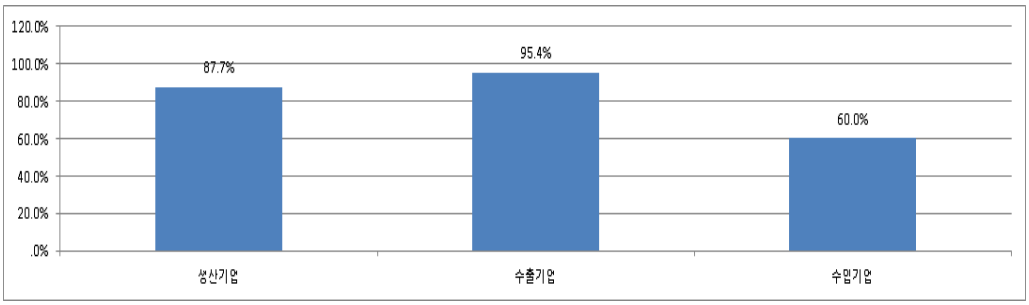
응답 기업의 95.4%는 수출기업, 87.7%는 생산기업, 48.5%는 수입기업으로 나타남. 수출과 생산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54개 업체, 83%이며, 생산·수출·수입을 모두 이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9개 업체 60%임..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9개 업체, 60%였음.

생산에만 응답한 기업은 3개 업체, 수출에만 응답한 기업은 8개 업체, 수입에만 응답한 기업은 없었음

표 75 응답기업의 생산 수출 수입기업 여부별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생산기업	57	36.1%	87.7%
수출기업	62	39.2%	95.4%
수입기업	39	24.7%	60.0%
합계	158	100.0%	243.1%

그림 44 응답기업의 생산 수출 수입기업 여부별 구분



- 현재 활용중인 FTA

한-EU(80%) > 한-ASEAN(66%) > 한-미(63%) : 복수응답가능

기업이 활용중인 FTA로 가장 다수의 기업이 응답한 협정은 한-EU FTA로 52개 업체(80%)가 활용한다고 응답. 다음으로 한-미 FTA가 41개 업체(63%), 한-ASEAN FTA가 43개 업체(66%), 한-인도 CEPA가 27개 업체(41.5%) 순. 한-콜롬비아 FTA를 제외한 그 외 FTA 활용비중은 2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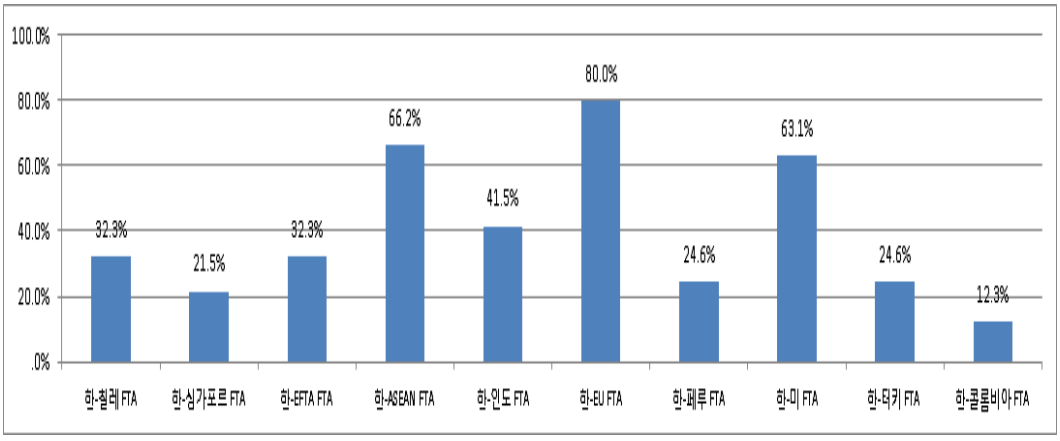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한 응답은 우리나라 기업이 인지하는 FTA의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로서 무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가장 최근 발효된 콜롬비아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들도 20%이상의 활용비중을 보여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FTA 협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77 응답자의 현재 활용중인 FTA별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한-칠레 FTA	21	8.1%	32.3%
한-싱가포르 FTA	14	5.4%	21.5%
한-EFTA FTA	21	8.1%	32.3%
한-ASEAN FTA	43	16.6%	66.2%
한-인도 FTA	27	10.4%	41.5%
한-EU FTA	52	20.1%	80.0%
한-페루 FTA	16	6.2%	24.6%
한-미 FTA	41	15.8%	63.1%
한-터키FTA	16	6.2%	24.6%
한-콜롬비아 FTA	8	3.1%	12.3%
합계	259	100.0%	398.5%

그림 45 응답기업의 현재 활용중인 FTA별 구분



(3) FTA 원산지 관리 인식도

- 회사가 활용하는 FTA 협정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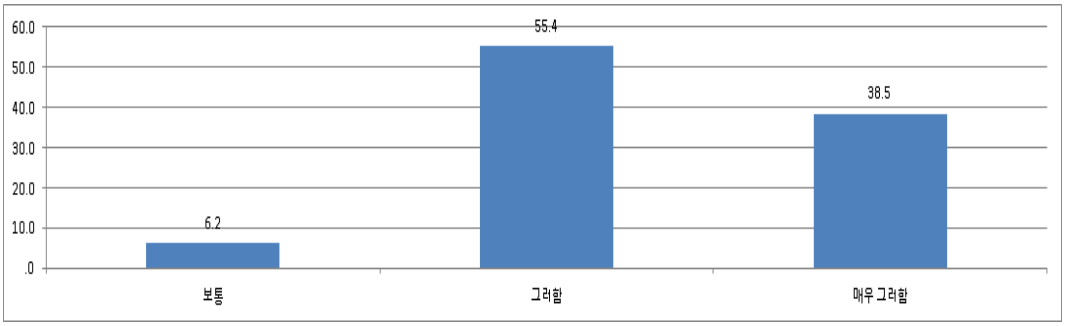
활용 협정 인지도는 높은 수준(그러함 이상 : 93.8%)

현재 회사가 활용하는 FTA 협상국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에 응답을 한 기업이 93.8%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은 당사가 활용하고 있는 FTA 협정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수준.

표 79 응답회사가 활용하는 FTA 협정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	4	6.2	6.2
그러함	36	55.4	55.4
매우 그러함	25	38.5	38.5
합계	65	100.0	100.0

그림 46 응답회사가 활용하는 FTA 협정 인지도



- 특혜수출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인지도

보통이상 : 83%, 그러함 이상 : 70.7%, 협정국 인지도보다는 다소 낮음

'회사에서 활용하는 FTA 특혜 수출품목, 원산지기준 등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다'에 '보통'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83%이며, '그러함'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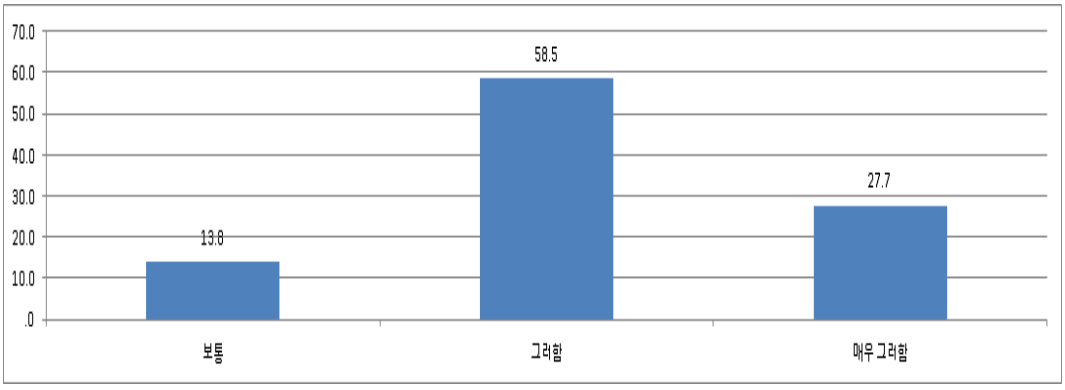
FTA 협정 활용 수출시 필요한 정보인 특혜수출 품목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협정국에 대한 인지도(그러함 이상이 93%)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

협정국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만 대상협정이 다양해지면서 해당물품의 구체적인 특혜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

표 81 응답자의 특혜수출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	9	13.8	13.8
그러함	38	58.5	58.5
매우 그러함	18	27.7	27.7
합계	65	100.0	100.0

그림 47 응답자의 특혜수출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인지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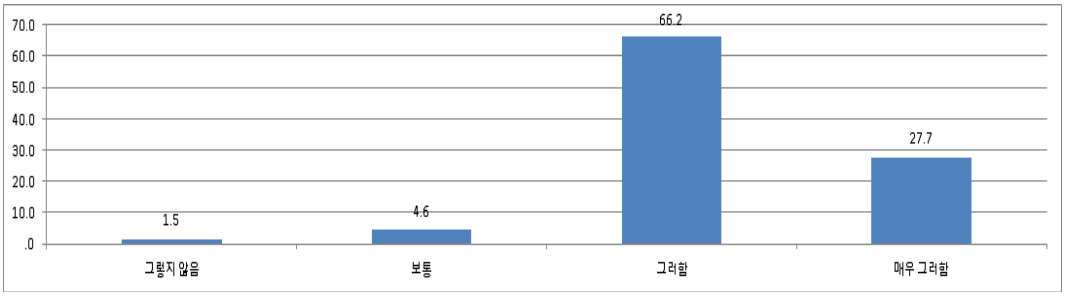
보통이상 : 99%, 협정국 인지도, 특혜 수출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보다도 높음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자율발급, 기관발급)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은 99%.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한 인지도는 협상국 인지도, 특혜수출 품목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보다도 높게 나타남

표 83 응답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음	1	1.5	1.5
보통	3	4.6	4.6
그러함	43	66.2	66.2
매우 그러함	18	27.7	27.7
합계	65	100.0	100.0

그림 48 응답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인지도



- 원산지 검증 인지도

그러함 이상 :87%, 원산지 검증 인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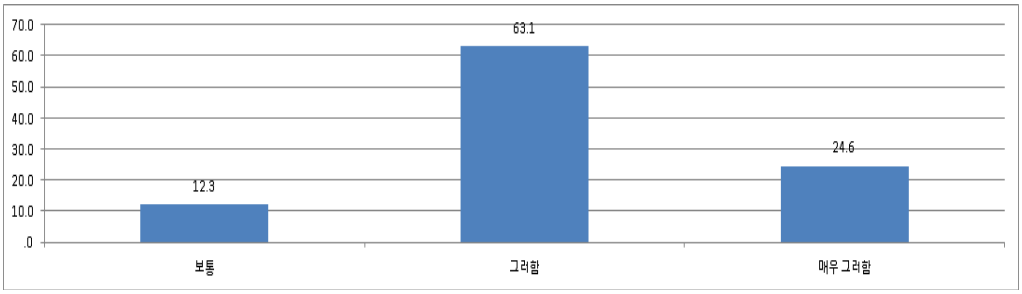
'FTA 원산지 관리에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 사항도 포함됨을 알고 있다'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은 100%이며, '그러함'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87%로 나타남.

응답기업 중 원산지 검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검증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표 85 응답자의 원산지 검증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	8	12.3	12.3
그러함	41	63.1	63.1
매우 그러함	16	24.6	24.6
합계	65	100.0	100.0

그림 49 응답자의 원산지 검증 인지도



- FTA 원산지 관리 컨설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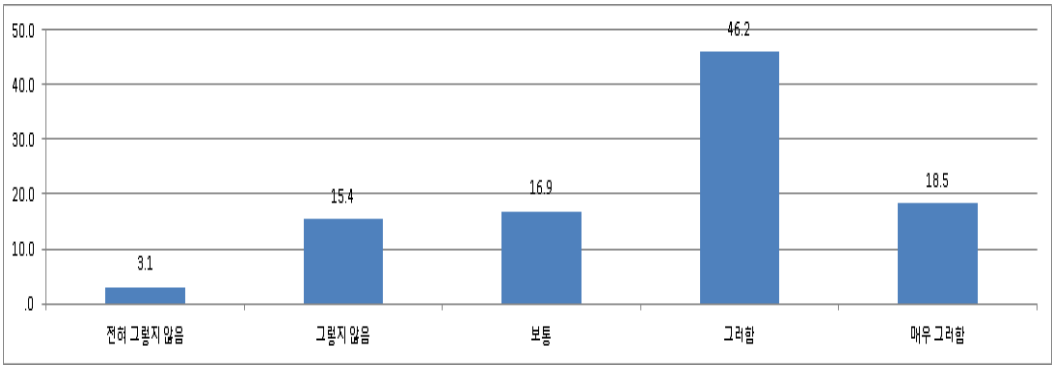
FTA 원산지 관리 컨설팅 경험 보통이상 81.5%., 경험없음 18.4%

기업들은 FTA 원산지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보통이상을 응답한 기업이 81.5%로 높게 나타났으나 컨설팅 경험이 없는 기업도 18.4%로 적지 않은 수준

표 87 응답자의 원산지 관리 컨설팅 경험 유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음	2	3.1	3.1
그렇지 않음	10	15.4	15.4
보통	11	16.9	16.9
그러함	30	46.2	46.2
매우 그러함	12	18.5	18.5
합계	65	100.0	100.0

그림 50 응답자의 원산지 관리 컨설팅 경험 유무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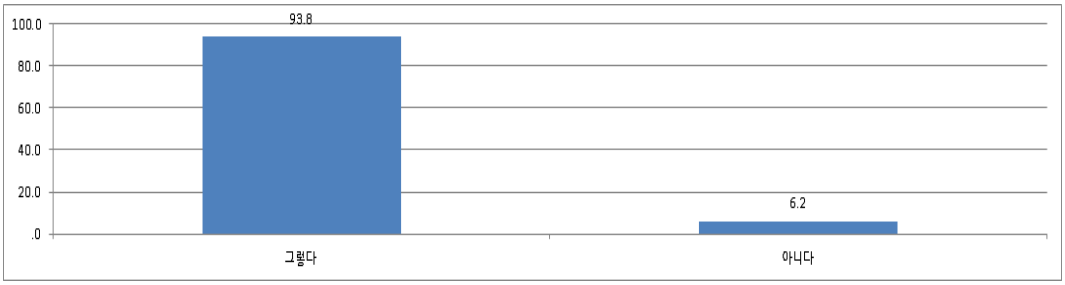
설문 대상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중 : 93.8%

기업의 원산지증명서(또는 확인서) 발급여부에 대한 문항에는 약 93.8%가 발급한다고 응답. 원산지검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결과 원산지검증의 전제가 될 수 잇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응답도 높은 비중인 것으로 판단됨

표 89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61	93.8	93.8
아니다	4	6.2	6.2
합계	65	100.0	100.0

그림 51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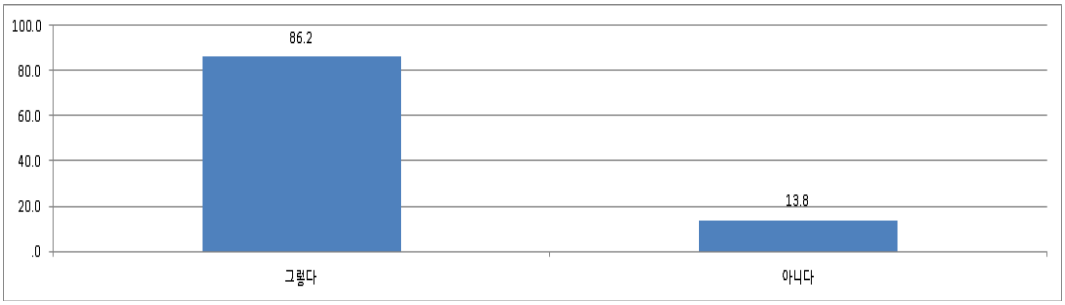
설문 대상의 인증수출자 취득 비중 : 86.2%

‘귀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습니까?’의 질문에 약 86.2%가 발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은 인증수출자임을 알 수 있음

표 91 응답자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56	86.2	86.2
아니다	9	13.8	13.8
합계	65	100.0	100.0

그림 52 응답자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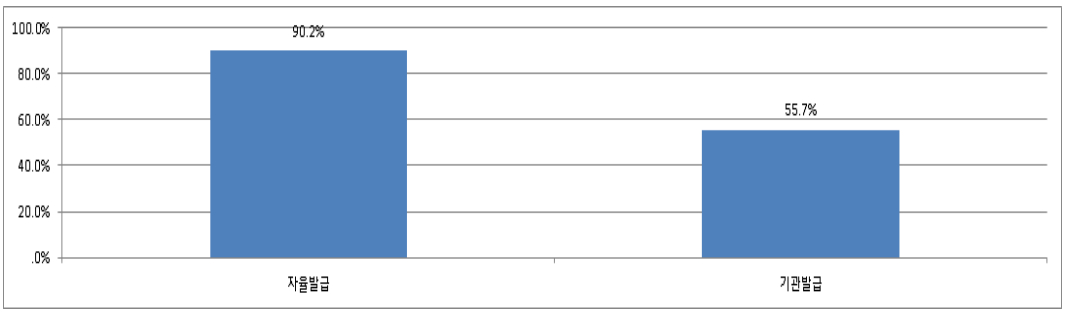
자율발급 : 90.2%, 기관발급 : 55.7%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복수응답)에 대한 응답은 자율발급이 90.2% 기관발급이 55.7%. 전체 응답자 가운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기업은 90% 이상으로 절대적 수출 비중이 높은 한-EU, 한-미 FTA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율발급 방식이 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

표 9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복수응답)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자율발급	55	61.8%	90.2%
기관발급	34	38.2%	55.7%
합계	89	100.0%	145.9%

그림 5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복수응답)



- 원산지 충족여부 관리방식

수기 : 45.9%, 원산지 관리 시스템 : 31.1%, 기타(FTA-PASS 등) :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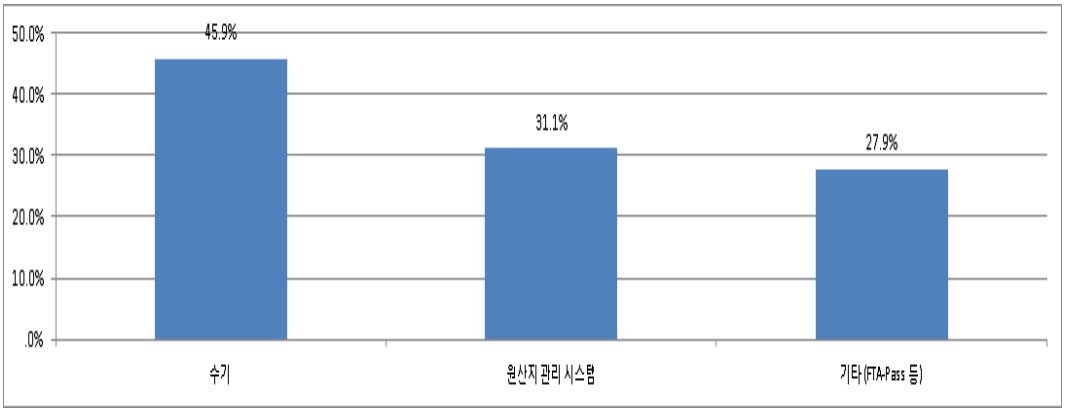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원산지 충족여부를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업들은 수기관리가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체 원산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31.1%로 나타남

수기방식에 의한 원산지관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응답기업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95 응답자의 원산지 충족여부 관리방식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수기	28	43.8%	45.9%
원산지 관리 시스템	19	29.7%	31.1%
기타 (FTA-Pass 등)	17	26.6%	27.9%
합계	64	100.0%	104.9%

그림 54 응답자의 원산지 충족여부 관리방식 구분



(4) FTA 원산지관리 인프라

- 담당자

겸직 업무자(68.9%) > FTA전담 직원(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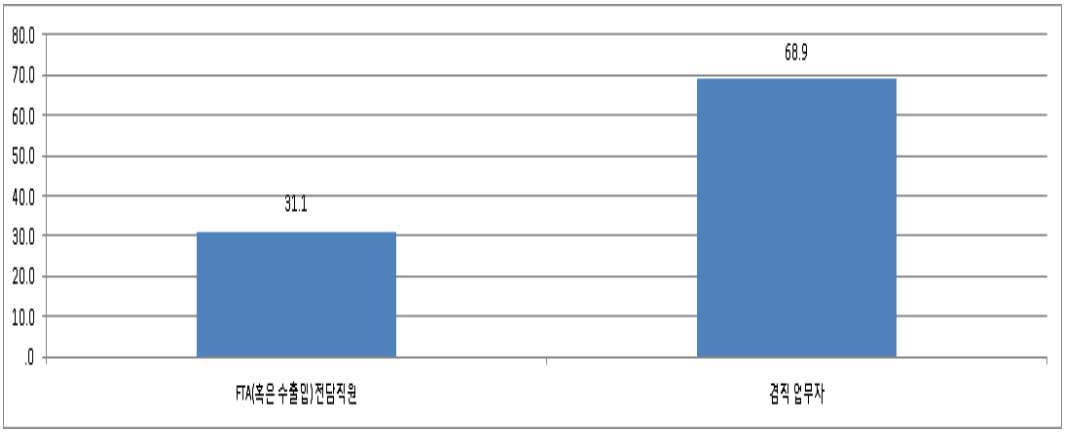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또는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업무 담당자의 선택’에 대한 설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율은 ‘겸직 업무자’로 42개 기업(68.9%)이 응답. 이는 절반 이상이 넘는 기업에서 FTA 원산지 증명 업무는 타 업무와 겸직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 FTA(혹은 수출입) 전담직원에 응답한 기업이 19개 업체로 응답자의 31.1%로 나타났고 관세사 대행을 응답한 기업은 없음

응답자의 대부분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의 원산지 관련 업무는 전담직원 체제보다는 겸직업무체제의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97 응답기업의 FTA 담당자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FTA(혹은 수출입) 전담직원	19	29.2	31.1
겸직 업무자	42	64.6	68.9
합계	61	93.8	100.0
시스템 결측값	4	6.2	
합계	65	100.0	

그림 55 응답기업의 FTA 담당자



-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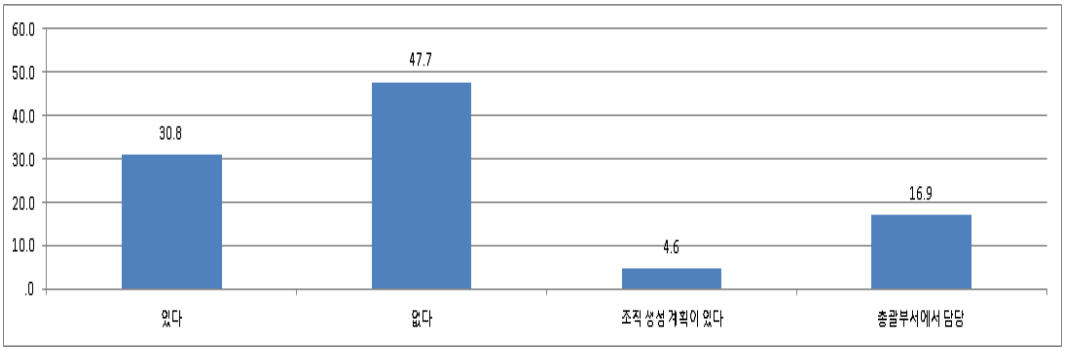
없다(47.7%) > 있다(30.8%) > 총괄부서에서 답당(16.9%)

‘원산지 관리 전담 부서’에 대한 설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은 ‘없다’가 31개 업체(47.7%)가 응답. 앞서 원산지 관리를 절반이상의 기업이 겸직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원산지관리 전담자와 전담부서가 부재한 기업이 대부분

표 99 응답기업의 FTA 전담부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20	30.8	30.8
없다	31	47.7	47.7
조직 생성 계획이 있다	3	4.6	4.6
총괄부서에서 담당	11	16.9	16.9
합계	65	100.0	100.0

그림 56 응답기업의 FTA 전담부서



- 원산지관리 업무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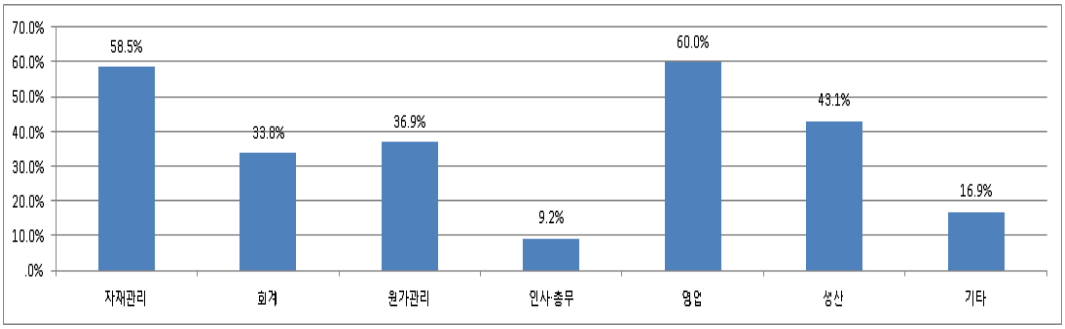
영업(60%) >자재관리(58.5%) > 생산(43%) >원가관리(3.69%)> 회계(33.8%)

‘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협의하거나 공유하는 부서(복수응답)’의 설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이 도출된 부서는 ‘영업’으로 39개 기업, 전체 응답 기업의 60%가 여기에 응답. 다음으로 자재관리가 38개 기업(58.5%), 생산 28개 기업(43%), 원가 관리 24개 기업(36.9%) 회계 22개 기업(13.1%) 순으로 나타남

표 101 응답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협의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자재관리	38	22.6%	58.5%
회계	22	13.1%	33.8%
원가관리	24	14.3%	36.9%
인사·총무	6	3.6%	9.2%
영업	39	23.2%	60.0%
생산	28	16.7%	43.1%
기타	11	6.5%	16.9%
합계	168	100.0%	258.5%

그림 57 응답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협의



(5) FTA 원산지증빙 서류관리 부담

- 원산지 증명 담당자 교육

관세청 FTA 교육 및 세미나 (86.9%)> 원산지 관리사 교육(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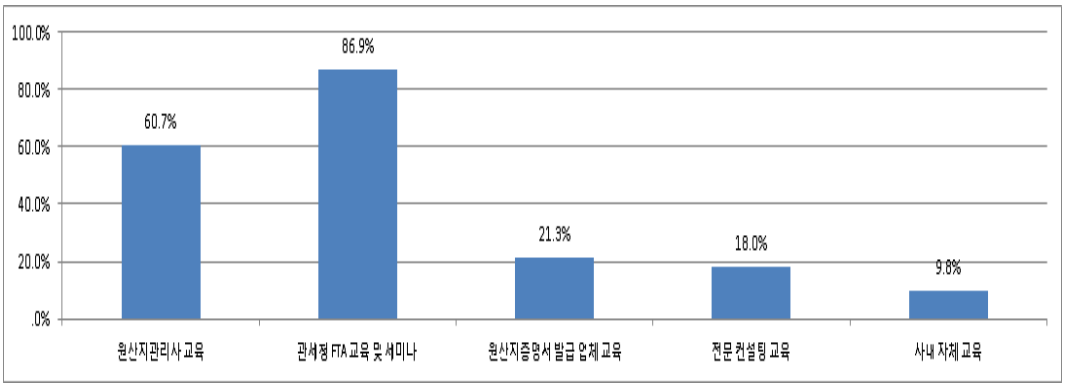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의 설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이 도출된 교육은 관세청FTA 교육 및 세미나로 53개 기업이 응답하여 86.9%의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원산지관리사 교육(60.7%), 원산지증명서 발급업체 교육(21.3%), 전문 컨설팅 교율(18.%), 사내 자체교육(9.8%)순으로 나타남

표 103 응답자의 원산지 증명 담당자 교육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원산지관리사 교육	37	30.8%	60.7%
관세청 FTA 교육 및 세미나	53	44.2%	86.9%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체 교육	13	10.8%	21.3%
전문 컨설팅 교육	11	9.2%	18.0%
사내 자체 교육	6	5.0%	9.8%
합계	120	100.0%	196.7%

그림 58 응답자의 원산지 증명 담당자 교육 구분



- 원산지 증명 서류보관 매뉴얼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보관 매뉴얼 86.2%기업이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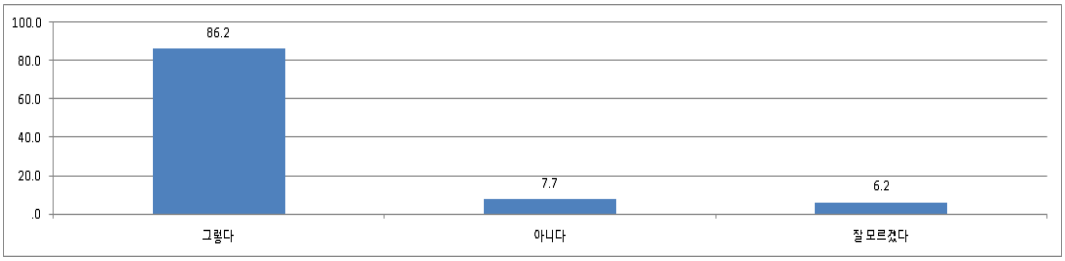
기업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서류보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산지증명 서류 보관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

응답자의 56개 기업이 서류보관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86.2%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기업들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증명 서류의 보관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05 응답자의 원산지 증명 서류보관 매뉴얼 유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56	86.2	86.2
아니다	5	7.7	7.7
잘 모르겠다	4	6.2	6.2
합계	65	100.0	100.0

그림 59 응답자의 원산지 증명 서류보관 매뉴얼 유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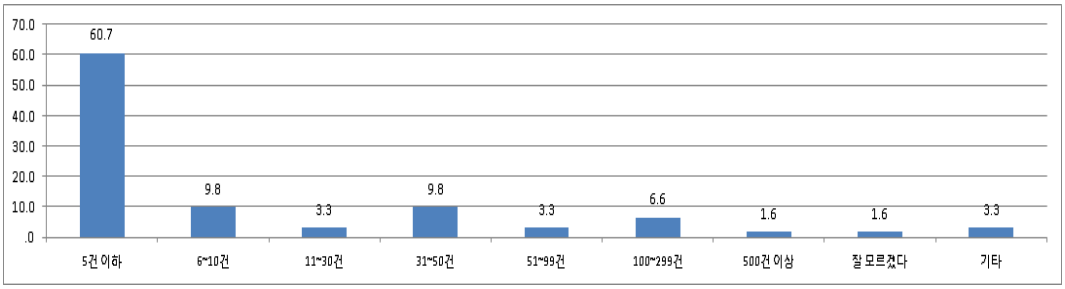
월평균 10건 이하가 70.5%

기업의 월평균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발급건수에 대해 '5건 이하' 발급에 37개 기업이 응답하여 전체 응답의 약 60.7%에 달함. 전체적으로는 응답 기업의 약 70.5%가 월평균 10건 이하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7 응답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건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건 이하	37	56.9	60.7
6~10건	6	9.2	9.8
11~30건	2	3.1	3.3
31~50건	6	9.2	9.8
51~99건	2	3.1	3.3
100~299건	4	6.2	6.6
500건 이상	1	1.5	1.6
잘 모르겠다	1	1.5	1.6
기타	2	3.1	3.3
합계	61	93.8	100.0
시스템 결측값	4	6.2	
합계	65	100.0	

그림 60 응답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건수



- 원산지 증명 서류관리 소요업무 시간

‘1주일 미만’에 응답한 기업이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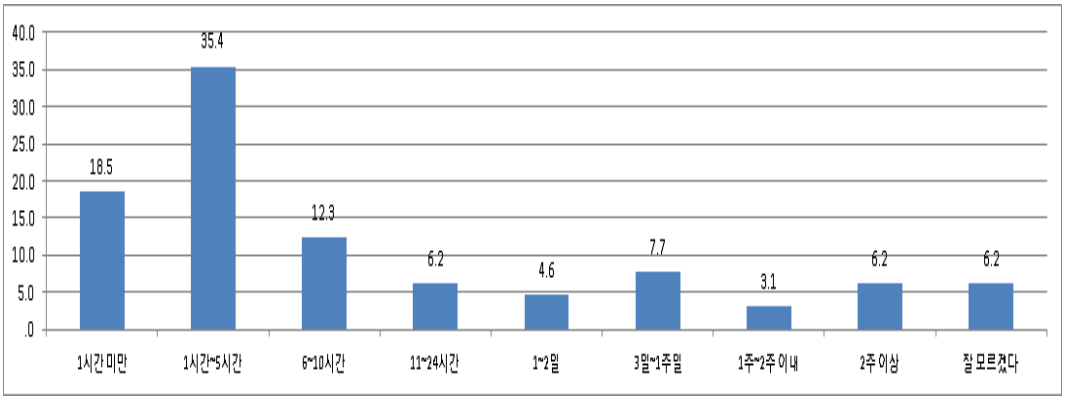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확인서)가 완벽한 형태로 최초 발급되었을 때까지 소요되었던 업무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질의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발급시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응답한 기업이 23개(5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1시간 미만’에 응답한 기업이 12개(18.5%).

누적기준으로 1주일 미만에 응답한 기업은 84.6%로 대다수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주일 안팎의 수준으로 보임

표 109 원산지 증명 서류관리 소요업무 시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시간 미만	12	18.5	18.5
1시간~5시간	23	35.4	35.4
6~10시간	8	12.3	12.3
11~24시간	4	6.2	6.2
1~2일	3	4.6	4.6
3일~1주일	5	7.7	7.7
1주~2주 이내	2	3.1	3.1
2주 이상	4	6.2	6.2
잘 모르겠다	4	6.2	6.2
합계	65	100.0	100.0

그림 61 원산지 증명 서류관리 소요업무 시간



- 원산지 관련 업무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원산지증명서 서식 기재내용 파악이 23개 기업(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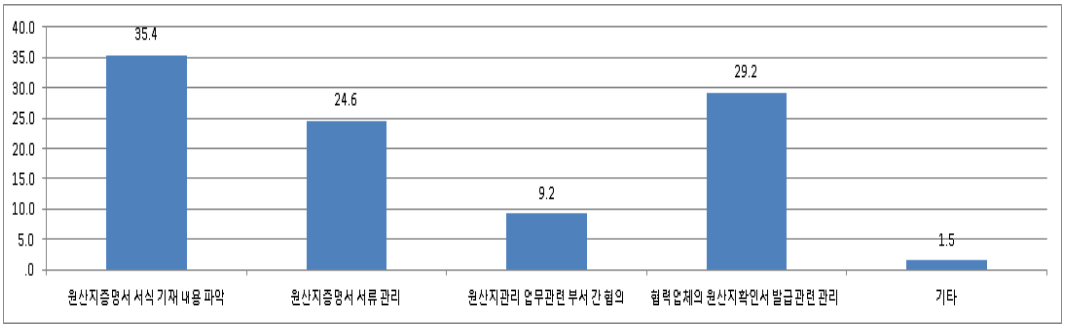
원산지관리 업무 관련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기재내용이 23개 업체(35.4%),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관리 19개 업체(29.2%), 원산지증명서 서류 관리 16개 업체(24.6%) 순으로 고르게 나타남.

특정한 업무에 원산지 관리능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증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모두 원산지 관리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표 111 원산지 관련 업무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원산지증명서 서식 기재 내용 파악	23	35.4	35.4
원산지증명서 서류 관리	16	24.6	24.6
원산지관리 업무관련 부서 간 협의	6	9.2	9.2
협력업체의원산지확인서발급관련관리	19	29.2	29.2
기타	1	1.5	1.5
합계	65	100.0	100.0

[그림] 원산지 관련 업무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방법

> 종이 서류와 전자보관 병행(50.8%) >종이서류로 보관(20%) >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관(16.9%) > 스캔문서로 전자저장(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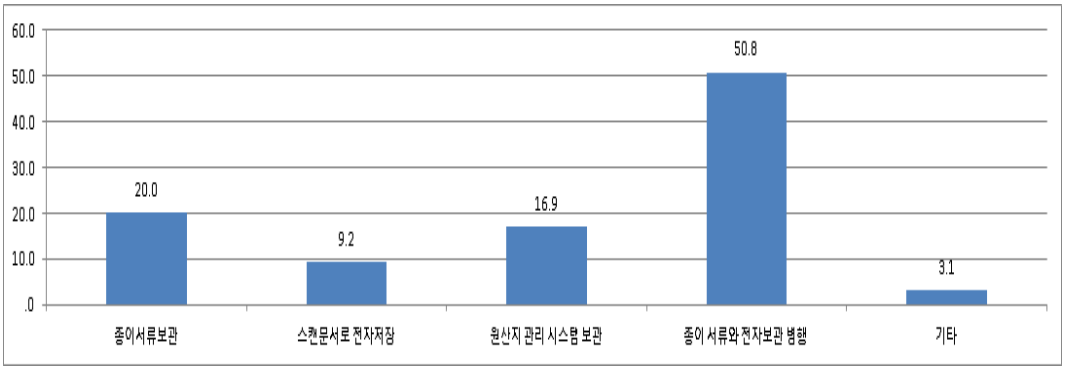
원산지 관련 서류 보관 방법과 관련된 질의에 가장 높은 응답은 종이서류와 전자보과 병행방식으로 총 33개 기업이 응답하여 50.8%의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종이서류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3개로 20%의 비중을 보임. 스캔 문서로 전자 보관하는 방식은 6개 업체(9.2%).

이로써 기업의 원산지 관련 서류 보관 방식은 아직까지는 담당자가 직접 관련 문건을 보관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응답기업의 기업규모 분포를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종이서류의 보관방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113 응답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방법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종이서류보관	13	20.0	20.0
스캔문서로 전자저장	6	9.2	9.2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관	11	16.9	16.9
종이서류와전자보관병행	33	50.8	50.8
기타	2	3.1	3.1
합계	65	100.0	100.0

그림 63 응답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방법 구분



- 원산지 관련 서류관리 업무 애로

서류의 체계적 관리 부재(30.8%) >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업무량 및 시간(26.2%) > 장기적 서류의 증가에 따른 자료분실(15.4%) 등 고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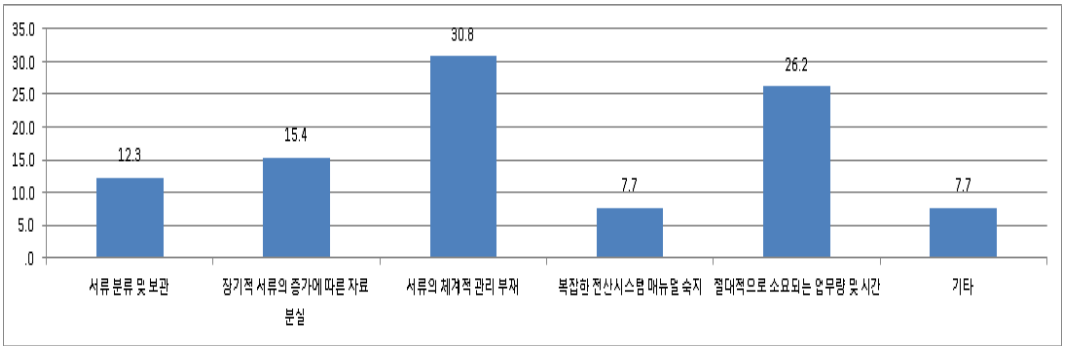
원산지 증빙 서류 관리 업무 애로 사항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부문은 '서류의 체계적 관리 부재'로서 20개 업체(30.8%). 이어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업무량 및 시간'에 17개 업체(26.28%)가 응답. '장기적 서류의 증가에 따른 자료분실'에도 10개 업체(15.4%)가 응답

이외에 기타의견으로 협력 업체의 원산지 매뉴얼 관리, 협력업체의 파산 및 부도, 협력업체의 서류제출 미협조 등 협력업체의 서류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자료분실에 대한 애로사항을 답변한 기업도 존재하였음

표 115 응답자의 원산지 관련 서류관리 업무 애로사항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류분류및보관	8	12.3	12.3
장기적서류의증가에따른자료분실	10	15.4	15.4
서류의 체계적 관리 부재	20	30.8	30.8
복잡한 전산시스템 매뉴얼 숙지	5	7.7	7.7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업무량 및 시간	17	26.2	26.2
기타	5	7.7	7.7
합계	65	100.0	100.0

그림 64 응답자의 원산지 관련 서류관리 업무 애로사항 구분



(6) FTA 사후검증 대비 보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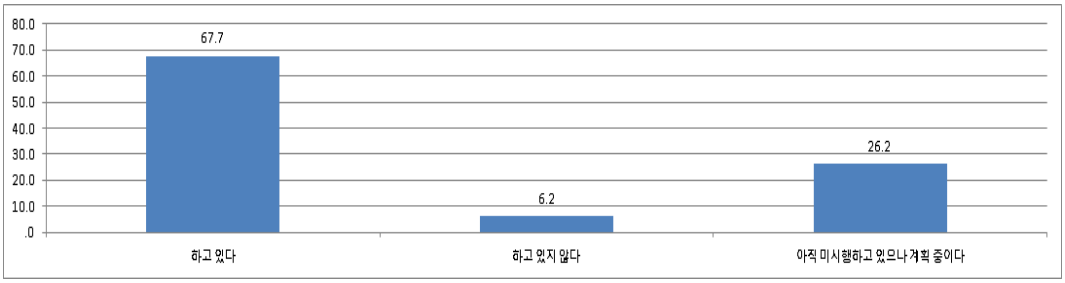
사후검증대비 서류관리 수행 및 계획기업 94%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서류관리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약 68%의 기업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시행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은 26%에 달함. 6%의 기업만이 사후검증대비 서류보관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서류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16 응답자의 사후 검증 대비 서류관리 수행여부 구분

규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다	44	67.7	67.7
하고 있지 않다	4	6.2	6.2
아직 미시행하고 있으나 계획 중이다	17	26.2	26.2
합계	65	100.0	100.0

그림 65 응답자의 사후 검증 대비 서류관리 수행여부 구분



업체현황 증빙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현황소개서 보관 기업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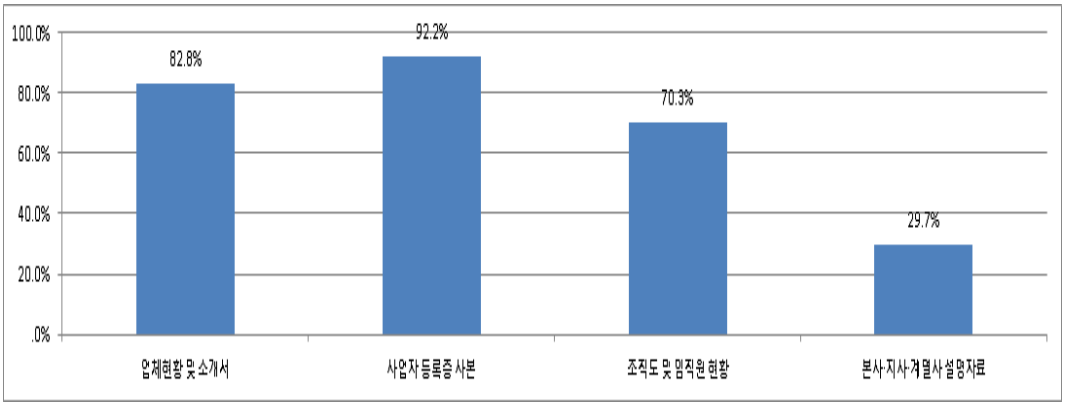
기업들이 기본적인 업체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업체현황 소개서 30%, 사업자등록증 사본 34%,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25%로 나타남. 반면 본지사 및 계열사의 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에 불과하였음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기업의 일반현황 자료로 사업자등록증과 업체소개서, 조직도 및 직원현황등을 기본자료로서 보유하고 잇는 것으로 판단됨

표 117 응답자의 업체현황 증빙자료 분포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업체현황 및 소개서	53	30.1%	82.8%
사업자 등록증 사본	59	33.5%	92.2%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45	25.6%	70.3%
본사·지사·계열사 설명자료	19	10.8%	29.7%
합계	176	100.0%	275.0%

그림 66 응답자의 업체현황 증빙자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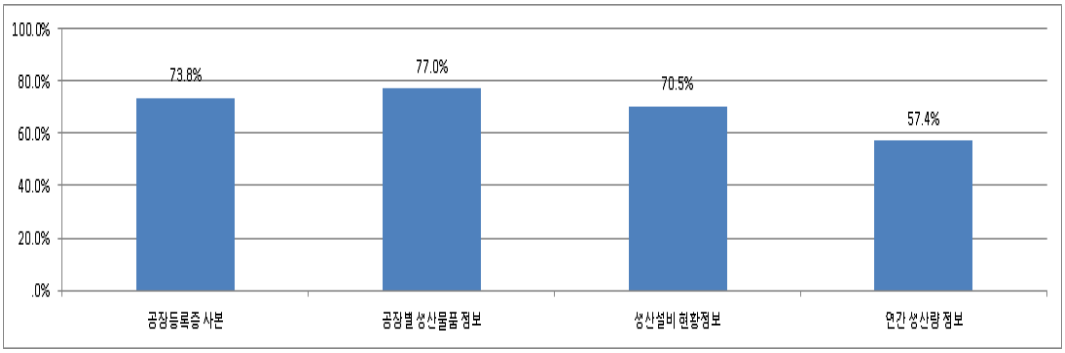
생산능력 증빙 보유자료, 공장등록증 및 생산물품정보 73%이상

기업이 실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74%), 공장별 생산물품의 정보(77%), 생산설비 현황정보(70.5%)등이고, 연간생산량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은 57%에 그쳐

표 118 응답자의 생산능력 증빙자료 분포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공장등록증 사본	45	26.5%	73.8%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47	27.6%	77.0%
생산설비 현황정보	43	25.3%	70.5%
연간 생산량 정보	35	20.6%	57.4%
합계	170	100.0%	278.7%

그림 67 응답자의 생산능력 증빙자료 분포



원산지관리 현황 증빙위해 원산지관리 매뉴얼 비치 83%

사후 검증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원산지관리 현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는 원산지관리 매뉴얼이 83%를 차지. 사후검증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 매뉴얼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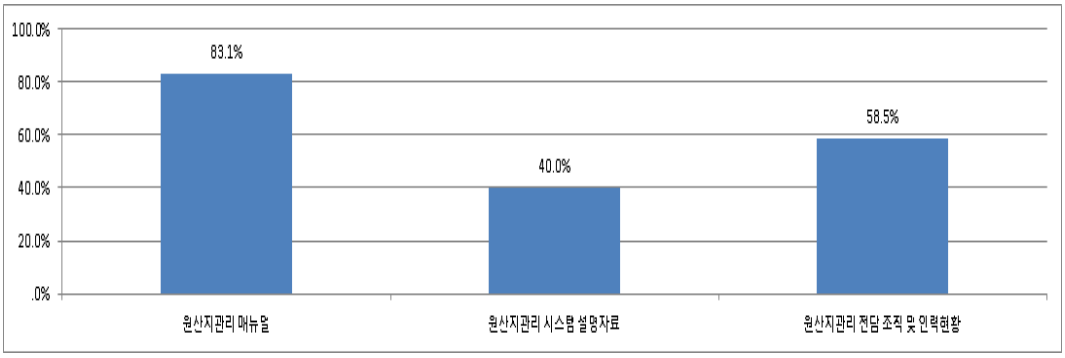
이외에 원산지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0%로 나타남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기업의 원산지 증명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원산지관리 현황은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 따라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원산지관리 매뉴얼 뿐만아니라 응답률이 다소 낮은 원산지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과 시스템 설명 자료의 사전준비 및 보관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하여 해당 서류를 관리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119 응답자의 원산지관리 현황 증빙자료 분포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원산지관리 매뉴얼	54	45.8%	83.1%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자료	26	22.0%	40.0%
원산지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현황	38	32.2%	58.5%
합계	118	100.0%	181.5%

그림 68 응답자의 원산지관리 현황 증빙자료 분포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보유 93%이상

원산지검증의 대상물품에 대한 증빙자료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기본소개 자료로서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홍보자료등은 80%이상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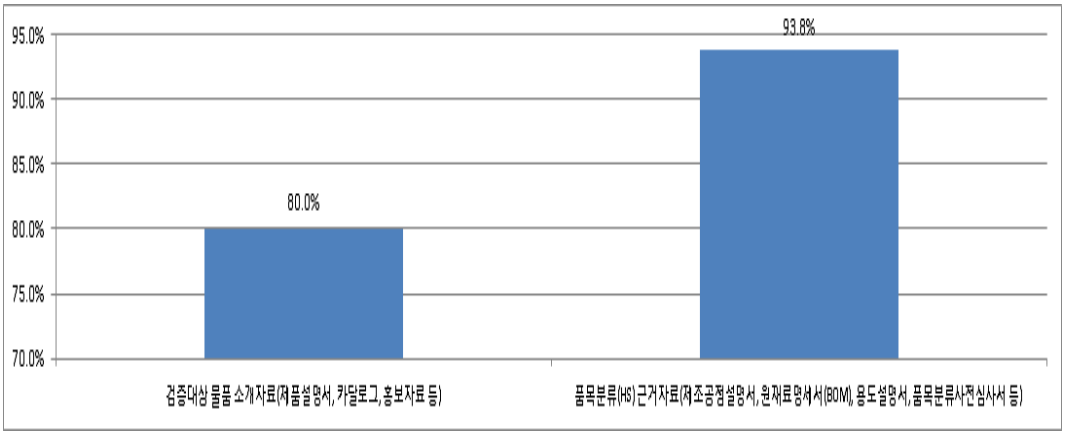
원산지판단의 핵심에 해당하는 품목분류 근거자료인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등의 보유현황은 93%를 넘에 FTA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을 판단됨.

이외에 물품정보를 증빙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서류로서 물품의 입출고 내역서를 관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존재하였음

표 120 응답자의 물품정보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검증대상 물품 소개자료(제품설명서, 카달로그, 홍보자료 등)	52	46.0%	80.0%
품목분류(HS) 근거자료(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61	54.0%	93.8%
합계	113	100.0%	173.8%

그림 69 응답자의 물품정보 증빙자료 구분



거래관계 증빙 대표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입신고서

사후검증시 거래당사자 파악을 위해 거래관계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 수출입신고서, 거래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반면 기납증, 포장명세서, 구매주문서, 신용장, Local L/C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수에 해당하였고 이외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서 **COA(contract pf affreightment:: 장기운송계약)를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존재하였음

표 121 거래관계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거래계약서	32	8.4%	49.2%
구매주문서	24	6.3%	36.9%
세금계산서	51	13.5%	78.5%
신용장	17	4.5%	26.2%
구매확인서	33	8.7%	50.8%
기납증	16	4.2%	24.6%
송품장	24	6.3%	36.9%
거래명세서	41	10.8%	63.1%
Local L/C	10	2.6%	15.4%
포장명세서	17	4.5%	26.2%
수출입신고서	44	11.6%	67.7%
운송경로확인서류(B/L 또는 AWB)	30	7.9%	46.2%
원산지증명서	40	10.6%	61.5%
합계	379	100.0%	583.1%

농축수산물 생산여부 증빙자료 보유 부족

• 농산물 완전생산 증빙자료

응답기업 중 7개 기업이 농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응답하였음

응답기업중 생산공정 설명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생산자와 수출자간의 거래관계를 증빙하는 자료(5개기업), 생산지와 집하지간의 운송증빙자료(3개 기업)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수 있었지만 생산여부나 생산능력 확인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개 기업에 불과하였음

농산물 등 완전생산기준으로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 제반에 대하여 아직 기업들의 인식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작지등록증, 조합원확인서류 등을 갖출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122 농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 분포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생산여부 확인자료	1	1.4%	1.5%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생산능력 확인자료	1	1.4%	1.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증빙자료	3	4.1%	4.6%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증빙자료	5	6.8%	7.7%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물리적 구분 증빙 또는 재고관리 증빙자료	1	1.4%	1.5%
생산공정 설명자료(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7	9.5%	10.8%
해당없음	56	75.7%	86.2%
합계	74	100.0%	113.8%

- **수산물 완전생산 증빙자료**

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응답한 기업은 2개 기업만 존재하였음

두기업 모두 생산공정 설명자료는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원양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확인서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또한 근해생산증빙자료인 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 수매확인서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23 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 분포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원양생산 증빙자료	1	1.5%	1.5%
근해생산 증빙자료	1	1.5%	1.5%
생산능력 증빙자료	1	1.5%	1.5%
생산공정 설명자료	2	2.9%	3.1%
해당없음	63	92.6%	96.9%
합계	68	100.0%	104.6%

- **축산물 완전생산 증빙자료**

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응답한 기업은 1개 기업만 존재하였음

해당기업은 축산물의 생산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연간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등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또한 생산자와 수출자간의 거래증빙자료와 재고관리 현황자료, 생산공정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함

그러나 도축기준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역증이나 생산자 및 생산증빙자료에 해당하는 농장등록증 및 조합원확인서류등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들이 생산자와 수출자간의 거래관계 증빙자료는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1차적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자료에 대한 증빙능력은 약한 것으로 판단됨

표 124 응답자의 특혜수출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인지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생산능력 증빙자료(연간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1	1.5%	1.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증빙자료	1	1.5%	1.5%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물리적 구분 증빙 또는 재고관린증빙자료	1	1.5%	1.5%
생산공정 설명자료(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1	1.5%	1.5%
해당없음	64	94.1%	98.5%
합계	68	100.0%	104.6%

가공공정기준 임가공 증빙자료 보유 부족

가공공정기준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원재료 구매증빙자료,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 또는 증명서,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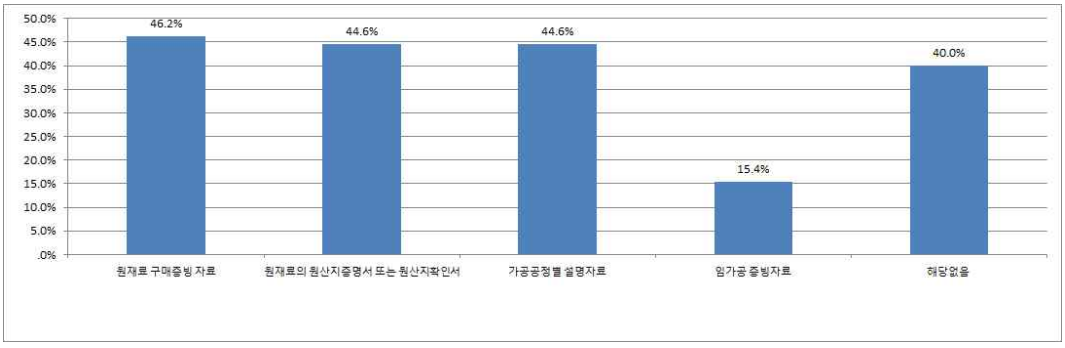
원재료 구매증빙자료로 거래명세서, 원재료수불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세금계산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임가공내역을 증빙하는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지불증빙, 납품서 등을 보유하고 응답한 기업은 15%에 불과하여 섬유산업의 경우 임가공에 의한 생산방식이 존재하므로 임가공증빙자료 보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표 125 응답자의 특혜수출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인지도 일단 패스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원재료 구매증빙 자료	30	24.2%	46.2%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29	23.4%	44.6%
가공공정별 설명자료	29	23.4%	44.6%
임가공 증빙자료	10	8.1%	15.4%
해당없음	26	21.0%	40.0%
	124	100.0%	190.8%

그림 70 응답자의 특혜수출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인지도



세번변경기준 증빙자료 보유상태 양호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71%, 국내조달 원재료의 구매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6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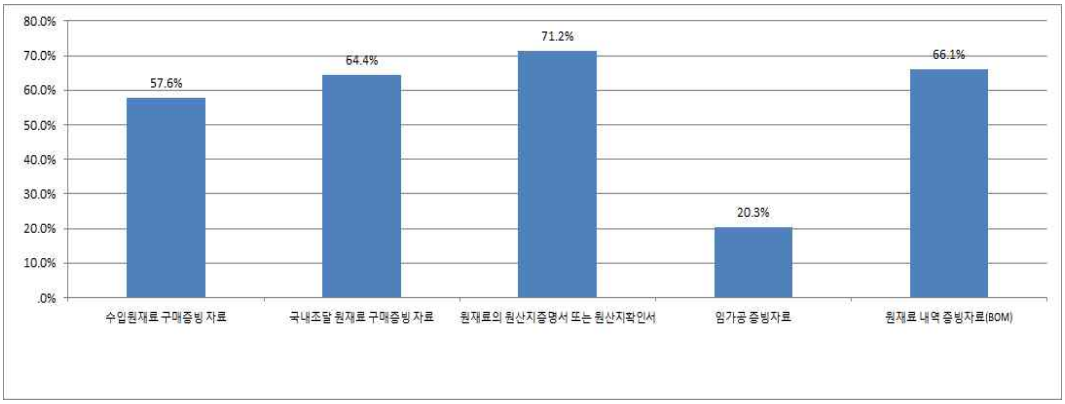
수입원재료의 경우에 원재료 구매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7%, 원재료의 세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BOM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66%로 나타남

세 번변경기준으로 적용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근거가되는 서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가공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에 부과하였음

표 126 응답자의 세번변경기준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수입원재료 구매증빙 자료	34	20.6%	57.6%
국내조달 원재료 구매증빙 자료	38	23.0%	64.4%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42	25.5%	71.2%
임가공 증빙자료	12	7.3%	20.3%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BOM)	39	23.6%	66.1%
	165	100.0%	279.7%

그림 71 응답자의 세번변경기준 증빙자료 구분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보유상태 양호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인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을 위해 증빙하여야 할 서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설문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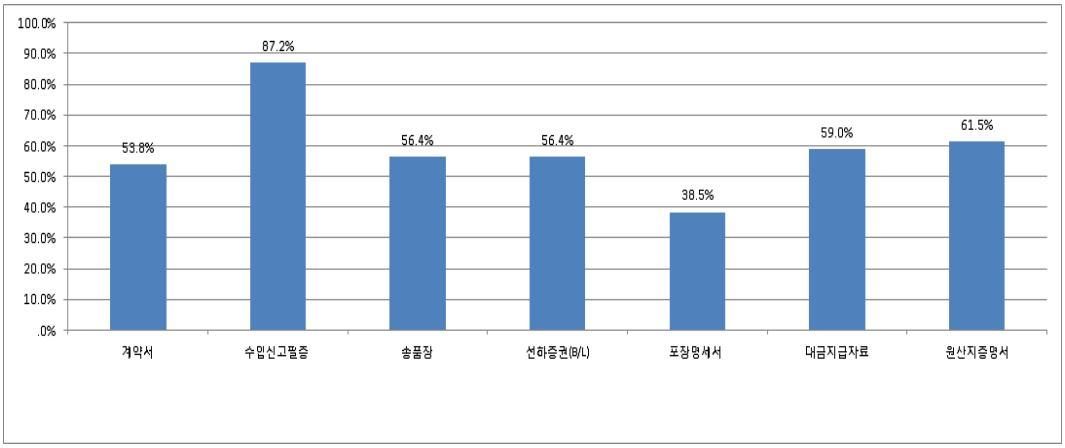
- **수입원재료 구매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수입원재료 구매단계시에 보유하고 있는 서류로 수입신고필증의 비중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원산지증명서 61%, 송품장 56%, 선하증권 56%로 나타남. 그러나 포장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기업은 38%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표 127 응답자의 수입원재료 구매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계약서	21	13.0%	53.8%
수입신고필증	34	21.1%	87.2%
송품장	22	13.7%	56.4%
선하증권(B/L)	22	13.7%	56.4%
포장명세서	15	9.3%	38.5%
대금지급자료	23	14.3%	59.0%
원산지증명서	24	14.9%	61.5%
합계	161	100.0%	412.8%

그림 72 응답자의 수입원재료 구매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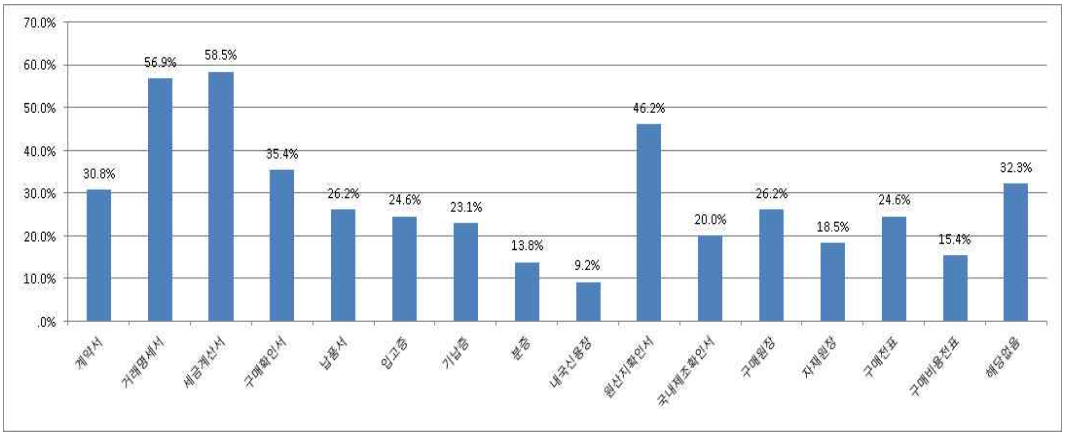
- **국내조달 원재료 구매 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국내조달 원재료 구매시에 부가가치기준을 증빙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서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58%와 거래명세서 57%임

표 128 응답자의 국내조달 원재료 구매 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계약서	20	6.7%	30.8%
거래명세서	37	12.3%	56.9%
세금계산서	38	12.7%	58.5%
구매확인서	23	7.7%	35.4%
납품서	17	5.7%	26.2%
입고증	16	5.3%	24.6%
기납증	15	5.0%	23.1%
분증	9	3.0%	13.8%
내국신용장	6	2.0%	9.2%
원산지확인서	30	10.0%	46.2%
국내제조확인서	13	4.3%	20.0%
구매원장	17	5.7%	26.2%
자재원장	12	4.0%	18.5%
구매전표	16	5.3%	24.6%
구매비용전표	10	3.3%	15.4%
해당없음	21	7.0%	32.3%
합계	300	100.0%	461.5%

그림 73 응답자의 국내조달 원재료 구매 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구분



- **생산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생산단계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원재료 증빙자료(BOM)과 제조공정설명자료가 각각 63%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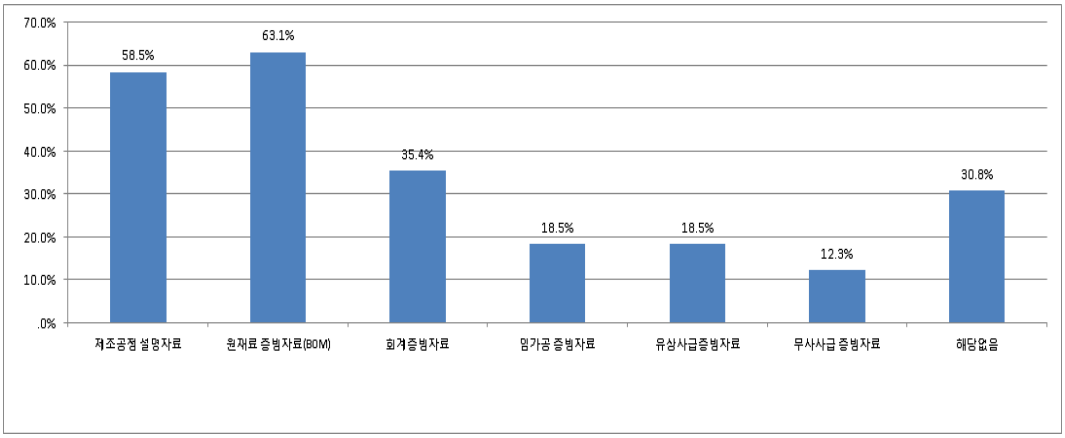
그 외에 회계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5%, 입가공 증빙자료 보유기업 18%, 유상사급증빙자료 보유기업 18%로 나타남

무상사급 증빙자료의 경우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개 기업으로 12%에 불과하였음

표 129 응답자의 생산 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제조공정 설명자료	38	24.7%	58.5%
원재료 증빙자료(BOM)	41	26.6%	63.1%
회계증빙자료	23	14.9%	35.4%
임가공 증빙자료	12	7.8%	18.5%
유상사급증빙자료	12	7.8%	18.5%
무상사급 증빙자료	8	5.2%	12.3%
해당없음	20	13.0%	30.8%
합계	154	100.0%	236.9%

그림 74 응답자의 생산 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구분



- **판대단계시 부가가치기준 증빙자료**

판매단계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시된 자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과 같은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46%수준

그 외 판매관련 회계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0%로 다소 적은 수준이었으나 원산지상품을 판매하는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경우 생산 및 유통의 단계보다는 관련서류 보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130 응답자의 판매단계시 부가가치 기준 증빙자료 구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검증대상물품 판매증빙자료	31	29.5%	47.7%
검증대상 물품 원산지기준 충족자료	30	28.6%	46.2%
판매관련 회계증빙자료	20	19.0%	30.8%
해당없음	24	22.9%	36.9%
합계	105	100.0%	161.5%

그림 75 응답자의 판매단계시 부가가치 기준 증빙자료 구분

